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II)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기획재정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8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

Ⅱ. 사업별 검토 ····· 12

【총 괄】

1. 국제부담금(340-02): 대규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 12
2. 정책연구비: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 공개 및 수의계약 지양 필요 ····· 15
3.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후대응기금: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의 이원화 문제 개선 필요 ····· 21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 국회 제출 필요 ····· 25

【일반회계】

<세 입> ····· 30

5. 교통·에너지·환경세: 목적세 취지에 맞는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0

6.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배당결정 기준 공표 필요 ····· 36

<세 출> ····· 41

7.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한 조세지출 정비 필요 ····· 41

8.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매년 반복되는 상반기 신속집행의 이자비용 고려 필요 ····· 47

9.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기관 지정·구분 기준 개선 필요 ····· 53

10.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58

11.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타 면제사업 최소화 및 예타 대상사업 기준 명확화 필요 ····· 61

12.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저연차 직원의 인력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등 ····· 69

13.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예비비 배정 및 집행부진 부적절 ····· 73

14.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75

1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기금의 재무건전성 관리강화 필요 ····· 77

【대외경제협력기금】

<총 괄> ····· 79

16.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 운용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 등 ····· 79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괄> ····· 83

17.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다 부적절 ····· 83

<지 출> ····· 89

18.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한 임차료 증액의 부적정 ····· 89

【기후대응기금】

<총 괄> ····· 93

19.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확대 및 수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 93

<지 출> ····· 102

20.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102

21.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적극적인 수요발굴 노력 필요 ····· 105

22.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 109

23.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소요를 고려한 기평비 편성 및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 112

【복권기금】

<지 출> ····· 116

24.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법정배분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 필요 ····· 116

【기 타】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20

❖ 국 세 청 ·····122

Ⅰ. 개 관 ····· 122

1. 결산 개요 ····· 12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2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6

Ⅱ. 사업별 검토 ····· 127

【일반회계】

<세 출> ····· 127

1.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27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종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에 따른 예산액 이용 부적절 ····· 131
3. 확정채무 지급: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 134
4.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상용근로 소득자료 제출 시행 유예에 따른 불용예산의 이용 부적절 ····· 137
5. 징수위탁수수료: 국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39
6.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마련 필요 ····· 142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146

❖ 관 세 청 ·····148

Ⅰ. 개 관 ····· 148

1. 결산 개요 ····· 14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5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2

Ⅱ. 사업별 검토 ····· 153

【일반회계】

<세 입> ····· 153

1. 과태료·가산금: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53

<세 출> ····· 157

2. 관세탈루심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등 ····· 157

3. 특송화물 통관지원: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 단속강화 필요 ····· 162

4. 감시정 운영: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 165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68

❖ 조 달 청 ·····169

Ⅰ. 개 관 ····· 169

1. 결산 개요 ····· 16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73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74

Ⅱ. 사업별 검토 ····· 175

【조달특별회계】

<세 입> ····· 175

1.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175
2.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81

<세 출> ····· 184

3.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회전자금을 통한 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184
4.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계약 변경 관련「국고금 관리법」준수 필요 ····· 189
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등 ····· 192
6.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 196
7.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시 제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1

8.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사업: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위반 ····· 206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8

❖ 통 계 청 ·····209

Ⅰ. 개 관 ····· 209

1. 결산 개요 ····· 20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13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4

Ⅱ. 사업별 검토 ····· 215

【일반회계】

<세 출> ····· 215

1.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부적정 등 ····· 215
2.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응답률 하락 및 조사 불응률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 223
3.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신속한 통계조사 이전 추진 필요 ····· 230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33

교 육 위 원 회

❖ 교 육 부 ····· 237

Ⅰ. 개 관 ····· 237

1. 결산 개요 ····· 237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4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3

Ⅱ. 사업별 검토 ····· 244

【총 괄】

1.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부적정 등 ····· 244

【일반회계】

<세 출> ····· 251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 시 교부금 미교부 부적절 ····· 251
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부적절 등 ····· 256
4.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추계 부적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반복 ····· 261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등 ····· 264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비 분담주체 변경 시 면밀한 준비를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 268

7. Global Korea Scholarship: 지역 내 취업·정주 가능성과 연계한 R-GKS 장학생 선발·관리 필요 등 ····· 272
8. 한일교육교류협력: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275
9. 취업연계 장려금: 직업계고 학생 수 추이 및 제도변경 효과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2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281

10.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통폐합 예정 학교 대상 시설공사 시행 부적절 ··· 28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283

11. 산학연협력 고도화: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전 준비 필요 등 ····· 283
12. 대학혁신지원: 예체능 계열 학과(학부) 적정 수 전임교원 확보 필요 ····· 289
13. 한국장학재단 출연: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98
14.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대학별 예산 배정 시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필요 ····· 303
1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각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일정 지연 최소화 필요 ····· 3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 출> ····· 311

16. 연금급여: 추계 오류로 연례적인 연급급여 변경 부적정 ····· 311

【기 타】

1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314

❖ 국가교육위원회 ·····316

Ⅰ. 개 관 ····· 316

1. 결산 개요 ····· 31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1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20

Ⅱ. 사업별 검토 ····· 321

【일반회계】

<세 출> ····· 321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업무포털 구축용역계약 지연 체결에 따른 예산 이월 부적절 등 ····· 3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27

Ⅰ. 개 관 ····· 327

1. 결산 개요 ····· 327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3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35

Ⅱ. 사업별 검토 ····· 337

【총 괄】

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일원화 필요 ····· 337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관련: 법률상 위임 근거 보완 필요 등 ····· 343
3.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 ····· 347

【일반회계】

<세 출> ····· 353

4.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사업(신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 안내 강화 필요 등 ····· 353
5. 혁신도전프로젝트(R&D) 사업(종료): 사업목적 달성 저조 ····· 358
6.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사업: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 362

7.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신규):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 마련 필요 ····· 365
8.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장비구축 지연 및 축소에 대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68
9.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선급금 전액 지급 문제 등 ····· 372
10. 융합연구 사업: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에 대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제도 적용 검토 등 ····· 379
11.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의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387
12.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 사업 참여 기업 수요 저조 문제 개선 필요 ····· 392
1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 394
1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회계·기금의 혼용 부적정 ····· 3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401

15.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0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 출> ····· 405

16.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 행사 확대를 위한 예산 전용 부적정 ····· 405

【우편사업특별회계】

<세 입> ····· 408

17.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408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 412

18.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투자개시 필요 ····· 412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 416

19.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종료): AI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기업 관리 강화 필요 등 ····· 416

20.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필요 ····· 420

【기후대응기금】

<지 출> ····· 423

21.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 423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공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426

❖ 방송통신위원회 ·····430

Ⅰ. 개 관 ····· 430

1. 결산 개요 ····· 43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3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5

Ⅱ. 사업별 검토 ····· 436

【일반회계】

<세 입> ····· 436

1.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 436

<세 출> ····· 440

2.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미흡 등 ····· 440
3.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개선 필요 등 ····· 44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 449

4.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회차별 공익광고 제작 편차 축소 필요 ····· 449
5.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종료): 사업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 453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지적 관련 조치 미흡 ····· 455

❖ 원자력안전위원회 ·····458

Ⅰ. 개 관 ····· 458

1. 결산 개요 ····· 45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6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62

Ⅱ. 사업별 검토 ····· 464

【총 괄】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464

【일반회계】

<세 출> ····· 468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감시기 설치·운영 대상 확대 필요 ····· 468

3.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사업: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별 파견 공무원 지정을 통한 동시 사고 대응능력 강화 필요 등 ····· 471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475

❖ 우주항공청 ····· 476

Ⅰ. 개 관 ····· 476

1. 결산 개요 ····· 47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7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79

Ⅱ. 사업별 검토 ····· 481

【총 괄】

1. 우주항공진흥기금: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481
2. 우주항공청 소관 직할연구기관: 관리·감독 체계 및 특례 근거 보완 필요 ····· 485

【일반회계】

<세 출> ·····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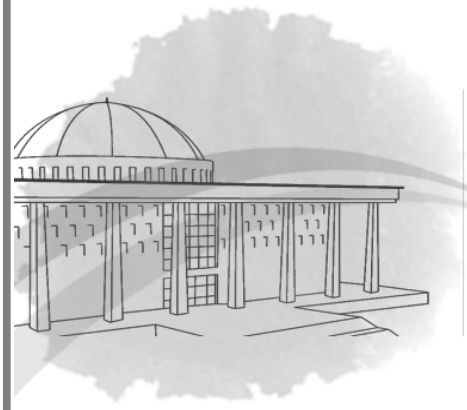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3.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신규): 예비비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 ····· 490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신규): 집행관리 철저 및 시설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필요 ····· 493
5.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동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연계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등 ····· 497
6.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등 ····· 502
7.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종료):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매몰비용 재발 방지 필요 등 ····· 506

8.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10
9.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 513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1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0조 1,660억 8,500만원(△8.1%)이 적은 342조 8,016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4,893억 3,400만원(△2.1%)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5,882,017	395,882,017	340,347,348	△55,534,668	362,374,750	362,374,750	332,112,585	△30,262,165	△8,234,763
기 금	9,978,482	9,929,963	9,943,658	13,695	10,487,623	10,593,007	10,689,087	96,080	745,429
총수입	405,860,499	405,811,980	350,291,006	△55,520,974	372,862,373	372,967,757	342,801,672	△30,166,085	△7,489,334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9,917억 6,900만원(△7.4%)이 적은 37조 2,190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4,683억 100만원(25.1%)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169,894	5,169,894	1,152,660	△4,017,234	5,199,290	5,199,290	1,733,929	△3,465,361	581,269
기 금	29,199,916	29,166,982	28,598,083	△568,899	35,520,246	35,011,523	35,485,115	473,592	6,887,032
총지출	34,369,810	34,336,876	29,750,743	△4,586,134	40,719,536	40,210,813	37,219,044	△2,991,769	7,468,30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3조 8,524억 4,800만원으로, 515조 3,784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40조 6,220억 9,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5.5%)되고, 72조 8,395억 1,000만원은 미수납되어 1조 9,168억 7,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40,810,232	440,810,232	-	440,810,232	502,476,132	427,719,745	72,839,510	1,916,8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042,216	13,042,216	-	13,042,216	12,902,347	12,902,347	-	-
- 지역자율계정	2,953,605	2,953,605	-	2,953,605	2,951,397	2,951,397	-	-
- 지역지원계정	9,742,366	9,742,366	-	9,742,366	9,595,041	9,595,041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92,763	292,763	-	292,763	297,192	297,192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3,482	53,482	-	53,482	58,717	58,717	-	-
합 계	453,852,448	453,852,448	-	453,852,448	515,378,478	440,622,091	72,839,510	1,916,87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1조 2,237억 4,600만원으로, 28조 3,543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8%)되고 21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8,672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2,031,687	32,031,687	3,864	-	△1,015,661	31,019,889	28,150,519	2,131	2,867,2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3,857	203,857	-	-	-	203,857	203,857	-	-
- 지역자율계정	203,857	203,857	-	-	-	203,857	203,857	-	-
합 계	32,235,544	32,235,544	3,864	-	△1,015,661	31,223,746	28,354,376	2,131	2,867,24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50조 7,223억 3,000만원으로, 525조 6,935억 5,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17조 1,223억 3,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4%)되고 8조 5,712억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공공자금관리기금	322,666,693	328,606,839	334,744,896	327,410,977	7,333,920	-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3,270,503	4,194,008	3,068,404	1,125,604	-
기후대응기금	2,391,807	2,287,277	2,317,531	2,305,830	11,700	-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208,746	2,116,734	2,019,275	97,459	-
복권기금	8,358,048	8,415,550	8,437,936	8,435,406	2,530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13,266	813,266	789,915	789,915	-	-
외국환평형기금	205,120,149	205,120,149	173,092,532	173,092,532	-	-
합 계	544,829,212	550,722,330	525,693,551	517,122,339	8,571,21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50조 9,548억 1,900만원으로, 517조 1,223억 3,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3.9%)되고 1,805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조 4,146억 7,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공자금관리기금	322,666,693	328,606,839	-	328,606,839	327,410,977	-	2,670,832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3,270,503	158,142	3,428,645	3,068,404	160,285	42,630
기후대응기금	2,391,807	2,287,277	59,949	2,347,226	2,305,830	9,101	46,451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208,746	14,398	2,223,144	2,019,275	11,128	204,086
복권기금	8,358,048	8,415,550	-	8,415,550	8,435,406	-	43,35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13,266	813,266	-	813,266	789,915	-	14,019
외국환평형기금	205,120,149	205,120,149	-	205,120,149	173,092,532	-	1,393,298
합 계	544,829,212	550,722,330	232,489	550,954,819	517,122,339	180,514	4,414,671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3,037억 8,400만원이 증가한 505조 769억 9,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55조 5,326억 2,500만원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57조 9,910억 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4조 7,515억 3,900만원 증가한 1,087조 1,825억 3,3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47조 1,805억 6,3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2조 4,477억 5,500만원이 감소한 △582조 1,055억 4,1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3조 8,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527억 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조 6,237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2,925억 8,1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05,076,992	502,773,208	2,303,784	0.5
		유동자산	60,127,759	115,660,384	△55,532,625	△48.0
		투자자산	410,269,979	352,278,976	57,991,003	16.5
		일반유형자산	34,209,425	34,343,669	△134,244	△0.4
		무형자산	71,207	82,687	△11,480	△13.9
		기타비유동자산	398,622	407,492	△8,870△	△2.2
	부 채		1,087,182,533	1,032,430,994	54,751,539	5.3
		유동부채	128,055,460	120,420,215	7,635,245	6.3
		장기차입부채	957,580,593	910,400,030	47,180,563	5.2
		장기충당부채	75,642	75,218	424	0.6
		기타비유동부채	1,470,838	1,535,530	△64,692	△4.2
	순자산		△582,105,541	△529,657,786	△52,447,755	9.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3,802,000	18,754,708	△4,952,708	△26.4
	재정운영순원가		7,469,635	14,765,608	△7,295,973	△49.4
	재정운영결과		9,623,766	16,916,347	△7,292,581	△43.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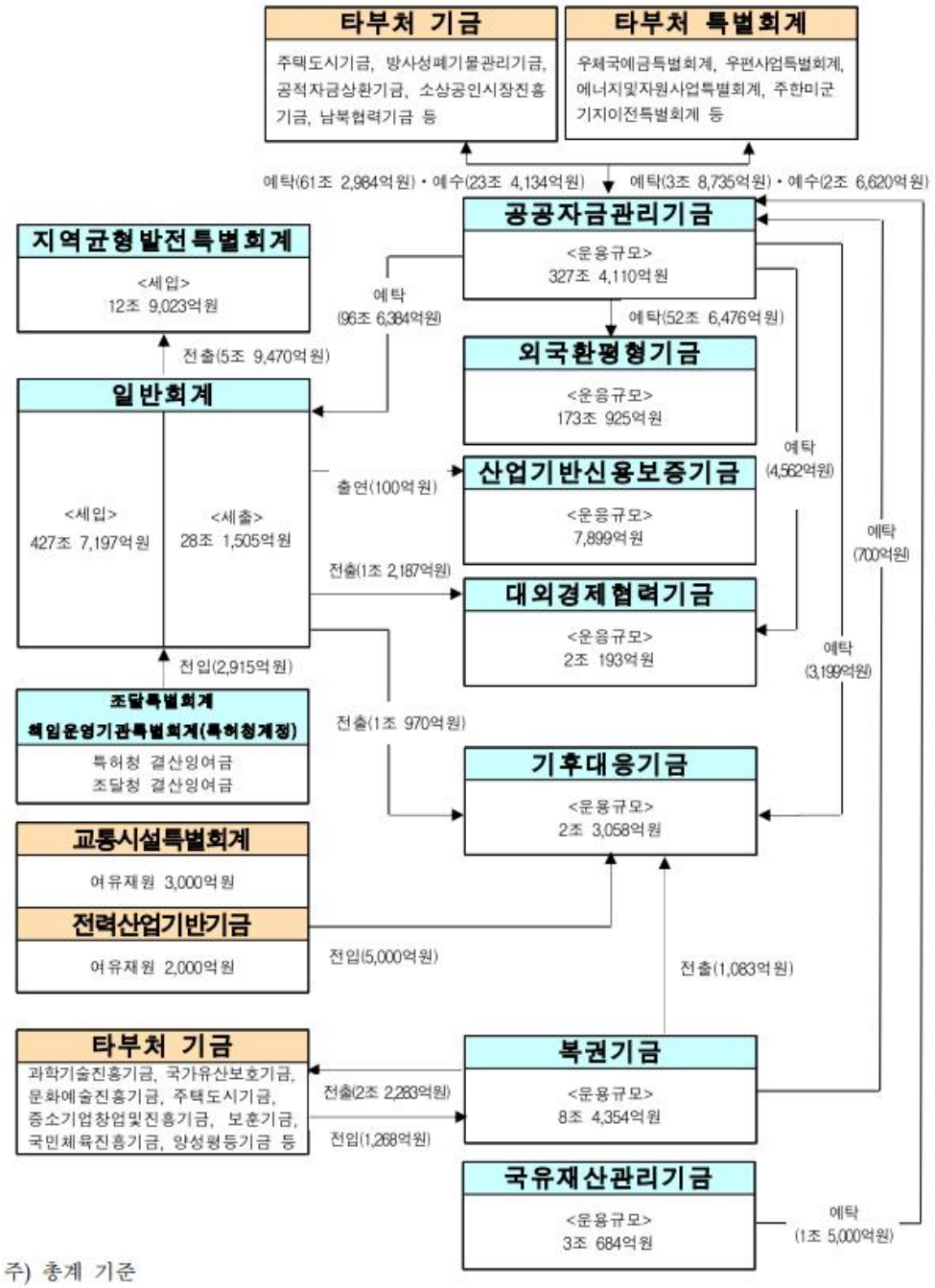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5조 9,470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2,187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97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일반회계는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로부터 2,915억원을 전입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96조 6,384억원을 예수하였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52조 6,476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4,562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199억원을 예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5,0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700억원을 예수하였음. 또한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1,083억원을 전출하였음.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61조 2,984억원을 예탁하고 23조 4,134억원을 예수하였으며, 타부처 특별회계로 3조 8,735억원을 예탁하고 2조 6,620억원을 예수하였음. 복권기금은 타부처 기금으로 2조 2,283억원을 전출하고 1,268억원을 전입받았으며, 기후대응기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2,000억원을 전입받았음.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조세정책의 수립·추진,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재정제도 혁신 및 집행관리, 국고의 관리·운영, 공공기관 관련 정책 기획·조정, 복권정책 기획·집행 등을 470개 세부사업으로 수행하였음.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기구 출연 등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의 집행 주체가 다른 이원적 구조로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기금 운용의 객관성·투명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전체를 군사보안을 이유로 예·결산 첨부서류에 작성·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비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사업설명자료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4개 회계·기금별 법정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나,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산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법정 전출금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재 정부배당 결정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배당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익잉여금 기준 및 재무건전성 조건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을 공표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세수부족 전망에 따라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주로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의 차입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여덟째,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202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비율(면제 요구 대비 선정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8.4%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이 필요해 보임.

아홉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5월 기금의 대위변제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보증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기금의 보증운용배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열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공자기금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이 대부분이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금 운용규모의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임.

열한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로 기금 여유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제부담금(340-02): 대규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가. 개 요

국제부담금은 법령·조약 및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을 의미함.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은 총 13개 세부사업의 예산액 4,574억 6,100만원 중 4,561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13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340-02)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일반회계	경제협력기구활동	246	245	1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996	1,082	3
	국제 재정협력 강화	390	-	390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345,054	344,109	945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585	601	2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201	157	43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8,200	8,200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45,500	45,496	4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	35,293	35,293	-
	역내 금융협력사업	4,351	4,347	4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ODA)	13,000	13,000	0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ODA)	781	780	1
기금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2,864	2,864	-
합계		457,461	456,175	1,39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기구 출연 등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의 결산 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은 1,053억 6,7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은 4,574억 6,1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 특히 2024년의 경우 전년(2,305억원) 대비 98.5%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2020	105,367	102,679	2,777
2021	262,611	256,375	6,236
2022	206,013	211,494	663
2023	230,487	208,534	22,074
2024	457,461	456,175	1,39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부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2]으로, 2024년 전체 국제부담금 예산 중 75.4%를 차지하고 있음. 동 사업의 예산 추이를 보면, 2020년 예산은 829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451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제금융기구 출연	82,883	217,302	155,436	159,348	345,05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 ODA 확대 전략에 맞추어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 예산의 전년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였던 것에 비교하면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을 포함한 국제부담금의 증가속도(98.5%)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일반회계-국제금융기구 출연(3334-301)(개발금융국)

특히 국제부담금의 경우 정부 대표자 등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출연대상 기금 및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결정하고, 이후 예산안에 편성하여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국회는 출연금 결정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미 결정된 국제부담금에 대한 예산심사 시 사실상 이를 감액할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제약을 받게 됨.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국제부담금의 의사결정마다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기구 출연 등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시에는 대략적인 액수 및 납부기간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

참고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외교부장관이 자체평가 결과와 납부실적·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

다만 같은 법 제2조[5)]에서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국제금융기구 출연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올해부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3)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가 진행 중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제기구와 협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2. 정책연구비: 연구용역 결과의 적극적 공개 및 수의계약 지양 필요

가. 개 요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과목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126억 700만원 중 101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5%)되고, 14억 1,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정책연구비(260-02)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책연구비 합계	10,923	10,943	1,529	135	12,607	10,154	1,418	1,035	12,840
일반회계	7,314	7,314	1,268	135	8,717	6,716	1,047	955	8,145
기후대응기금	3,379	3,379	209	-	3,588	3,142	372	74	4,459
대외경제협력기금	200	200	52	-	252	246	-	6	206
복권기금	30	50	-	-	50	50	-	-	30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기획재정부의 정책연구용역 중 결과보고서 비공개 비율은 2025년 6월말 기준 76.1%로 공개 대상 연구용역의 3/4 이상이 비공개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4조[6]는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7]는 "기술 · 전산 ·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인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0~2025년 기획재정부의 정책연구용역 중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의 2024년 6월 기준 결과보고서 공개 현황을 보면, 2020년 비공개 비율은 28.6% 였으나,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비공개 비율이 76.1%에 이르고 있음.

[2020~2024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현황]

(단위: 건, %)

연도	정책연구용역 건수(A)	등록 비대상[1] 건수(B)	등록 대상건수 (A-B)	공개(일부공개 포함)		비공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87	3	84	60	71.4	24	28.6
2021	94	5	89	32	36.0	57	64.0
2022	98	2	96	28	29.2	68	70.8
2023	101	4	97	36	37.1	61	62.9
2024	105	13	92	22	23.9	70	76.1

주 1) 비대상은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이 아닌 연구용역
2) 각 연도에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을 대상으로 작성
3) 공개 여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 · 연구
4. 기술 · 전산 ·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 · 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2024년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내역 및 비공개 근거를 보면, 대부분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8]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따른 비공개였으며, 같은 항 제2호(국가안보·외교에 관한 사항)에 따른 비공개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내역을 보면, '2024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분석과 업무 개선 방안', '민간투자사업 백서', '주요 선진국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등과 같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2024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주요 비공개 내역 및 근거]

연구용역 건명	비공개 근거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보, 외교에 관한 사항)
범부처 공급망 EWS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 대비 신규 기후 재원 조성 목표(NCQG) 논의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과잉생산 원인·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미국 경제·통상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녹색기후기금 등 이사회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한-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과제 발굴 연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MDB 성과관리 방안	
결혼서비스산업 지원법 제정 연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부동산 유동화 촉진방안 연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투자 지원방안	
2024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분석과 업무 개선 방안	
경쟁 관련 제도 및 관행 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용역 건명	비공개 근거
지역관점에서의 투자유치체계 수립 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연구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공동계약, 타부처 주관)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연구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연장 방안 연구	
2025 APEC 재무장관회의 의제2(디지털 금융 시대의 금융 안정성 강화)에 대한 연구	
2025 APEC 재무장관회의 의제3(New FMP 로드맵 수립)에 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 백서	
민간투자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연구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	
첨단산업 정책금융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ASEAN+3 재무트랙 회의 준비 지원	
디지털채권시장포럼(DBMF) 운영 및 아세안+3 역내 디지털녹색채권시장에 관한 연구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비(감리비)산정 방식 비교 연구	
저출산 재정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AI 반도체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방안 및 국내외 암호화자산 업계 현황 분석	
금융·보험업자 관련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급여지급주기 해외사례 연구 및 다양화 방안	
기획재정부 직원 직무 및 경력관리방안 연구	
디지털 등 신종투자형태 시장 현황 및 해외 과세체계 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정 분야 협력강화 방안 연구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의 국내시장 영향 분석 및 발전방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 개선방안	
자본시장 과세제도 변화에 따른 과세 대상 및 세수 영향 분석	
주요 선진국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도 현황 및 시사점	
증여예시·의제규정 보완방안 연구	
해외지급결제서비스 글로벌 동향 및 제도개선 연구	
신탁에 대한 외국 상속·증여세 제도 연구	
국가 R&D 중장기 효과성 제고 방안	
모험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 복지 분야 과제 심층연구	
우수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 개편 방안	
정책 거버넌스 혁신	
중장기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 방안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관리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	

연구용역 건명	비공개 근거
조달특례제도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혁신제품 2차연장 평가체계 개발 및 도입방안 연구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단순 반복적인 조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제4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비공개 관행에 대해 과거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제도개선)을 채택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비공개 관행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공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9)]

둘째, 2024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중 81.0%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0)]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함.

2020~2025년 기획재정부의 정책연구용역 중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의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전체 101건 중 경쟁입찰이 8건(7.9%)에 불과하고 93건(92.1%)이 수의계약이었으며, 2024년에는 전체 105건 중 85건(81.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9)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개율 제고에 노력중이며, 2024년 종료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 조세회피행위, 부당이익 추구행위 우려 등 현재도 내부의사 결정과정인 경우도 있어 정책결정 등 비공개 사유 해소시 즉시 공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연도별 공개율, %) (2022) 29.2 → (2023) 37.1 → (2024) 23.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024년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수의계약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11)]

[2020~2024년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체 정책연구용역 계약		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87	100	5	5.7	82	94.3
2021	94	100	6	6.4	88	93.6
2022	98	100	6	6.1	92	93.9
2023	101	100	8	7.9	93	92.1
2024	105	100	20	19.0	85	81.0

주) 각 연도에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연구 수행 기관의 특수한 지식·기술 요구 및 축적된 전문성 등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높은 편이나, 2023.1월 정책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이후 경쟁입찰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연도별 경쟁입찰율, %) (2022) 6.1% → (2023) 7.9% → (2024) 19%

3.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후대응기금: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와 사업 집행주체의 이원화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12]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3조 684억원으로, 전년(2조 6,829억원) 대비 14.4% 증가하였음.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13]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2조 3,058억원으로, 전년(2조 2,267억원) 대비 3.6% 증가하였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3,068,404	93.8	2,682,940	14.4
기후대응기금	2,287,277	2,305,830	100.8	2,226,698	3.6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실제 사업의 집행 주체가 다른 이원적 구조로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기금 운용의 객관성·투명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2)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공공청사 취득을 위한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 등 각 부처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혼재하여 2024년 기준 전체 26개 부처에 176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각 부처 집행사업]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2024 예산 기준)	2024	
		예산	결산
국회	1	3,102	46
대법원	9	93,620	94,288
국가인권위원회	1	5,380	3,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15,066	21,442
감사원	1	3,420	5,597
대통령경호처	2	7,442	5,164
외교부	5	23,730	16,762
법무부	24	169,920	196,588
행정안전부	6	49,576	29,633
농림축산식품부	1	9,726	6,979
식품의약품안전처	2	5,508	3,838
고용노동부	1	10,114	13,182
질병관리청	2	4,707	4,885
국토교통부	2	5,271	705
국가보훈부	1	4,021	2,544
국세청	12	60,858	49,754
관세청	3	5,501	5,581
통계청	4	3,834	5,391
병무청	1	10,161	6,405
경찰청	57	291,615	286,155
농촌진흥청	1	495	449
산림청	3	5,858	6,070
기상청	2	17,885	12,315
해양경찰청	9	48,414	38,918
소방청	2	21,950	16,199
기획재정부	20	68,795	69,207
합계	176	945,969	901,216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이나, 기금 사업의 실제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6개 부처에서 총 145개의 세부사업을 각각 집행하고 있음.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 수 (2024 예산 기준)	2024	
		예산주1)	결산주2)
고용노동부	5	28,489	23,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66,029	66,029
국토교통부	17	165,488	162,837
금융위원회	2	84,000	84,000
기상청	1	876	852
기획재정부	1	2,550	2,550
농림축산식품부	1	4,868	4,565
산림청	6	162,632	142,666
산업통상자원부	46	800,669	793,377
새만금개발청	1	480	119
소방청	1	99	99
중소벤처기업부	9	103,895	107,794
특허청	1	600	544
해양수산부	7	23,808	23,793
행정안전부	1	19,758	16,381
환경부	36	795,948	731,147
합계	145	2,260,189	2,160,063

주 1) 당초 예산 기준
2) 이월예산을 포함한 현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실제 각 사업별 집행 주체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정보가 각 부처에 비해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이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소관부서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특성상 이원화 구조는 불가피하나, 기금 관리주체와 사업 수행부처 간 협업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금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게 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처 사업이 아니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게 됨.[14)]

예를 들어 기후대응기금 중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산업부)’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사를 받게 되어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국유재산관리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 시 기획재정위원회에만 회부가 될 뿐 집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회부되지 않아 관련위원회 의견제시도 불가능함.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내역 국회 제출 필요

가. 개 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임.[15]

「국가재정법」 제34조제3호의2[16]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1항제8호의2[17]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5)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16)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17)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 부처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 996개[18]로,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292조 2,486억원, 누적 집행액은 132조 751억원이며, 이 중 109개 사업은 종료되었고, 887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2025년 이후 집행예정액은 160조 1,200억원임.

[2024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 현황(예산+기금)]

(단위: 개, 억원)

소 관	사업 개수	총사업비	'24년까지 집행액	2024년					'25년이후 집행예정액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996**	**2,922,486**	**1,320,751**	**175,021**	**202,607**	**161,459**	**27,925**	**13,224**	**1,601,200**
(계속)	887	2,740,806	1,139,606	166,730	192,149	151,536	27,925	12,689	1,601,200
(종료)	109	181,680	181,145	8,290	10,458	9,923	-	535	-
예산	**776**	**2,704,910**	**1,218,264**	**162,958**	**189,064**	**150,868**	**26,191**	**12,005**	**1,486,481**
(계속)	681	2,532,598	1,046,116	156,288	180,529	142,498	26,191	11,840	1,486,481
(종료)	95	172,312	172,148	6,670	8,534	8,370	-	164	-
기금	**220**	**217,576**	**102,487**	**12,063**	**13,543**	**10,591**	**1,734**	**1,219**	**114,719**
(계속)	206	208,208	93,489	10,442	11,620	9,037	1,734	848	114,719
(종료)	14	9,368	8,997	1,620	1,924	1,553	-	370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2025.5.

나.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전체를 군사 보안을 이유로 예·결산 첨부서류에 작성·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비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사업설명자료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18) 2024회계연도의 총사업비관리대상 집행명세서 작성 시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 중인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대상사업은 작성 제외

기획재정부는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별도 관리 중인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의 대상 사업은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예산안 첨부서류에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제외하여 제출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관한 예·결산 첨부서류 작성에 있어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2항[19]은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 보안에 관련된 사업은 규정된 바가 없는 상황임.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이미 사업설명자료 등에 포함되어 제출되고 있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보면, 증평 병영시설(431억원), 계룡 간부숙소(938억원), 장성 교육시설 2차(903억원)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사업 전체에 대하여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1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 · 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 · 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한국폴리텍대 -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3개	995
② 국방시설	**증평 병영시설(431), 계룡 간부숙소(938), 장성 교육시설 2차(903)**	**3개**	**2,272**
소 계		6개	3,26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하수처리시설	대전시(1,022), 울릉군(1,765)	2개	2,787
② 하수관로시설	대구시(5,789), 삼척시(1,781) 청도군(2,025)	3개	9,595
소 계		5개	12,382
□ 예비한도액주)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782
합 계		11개	16,431

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9.

물론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전체가 공개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며, 병영생활관·관사숙소·간부숙소 및 군 교육시설 등은 군사 보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 중 군사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20]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국방분야는 제외되어 있고,[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군사 보안 관계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액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호[22]에 따라 국방분야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에 국방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나목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분야의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는 국방분야의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할 뿐 국방분야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아니며, 국방 분야와 동일하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통일·외교관계 분야의 정보는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일반회계】

〈세 입〉

5. 교통·에너지·환경세: 목적세 취지에 맞는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23]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반출, 수입 시 등 부과되는 국세로, 2024년 징수결정액 11조 4,086억 7,000만원 중 11조 3,890억 8,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미수납액 138억 400만원, 불납결손액 57억 8,400만원이 발생되었음.[24]

[2024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교통・에너지 ・환경세	15,325,800	15,325,800	11,408,670	11,389,082	13,804	5,784	99.8	14,001,19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신설되었고, 「교통세법」 제정 당시에는 10년간(~2003.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연장이 계속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25]

---

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일반회계-교통・에너지・환경세(33-331~333)(예산실)

25) 2009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휘발유·경유에 대한 과세가 201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이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으며, 현행법 기준으로 2027년 말까지 운용될 예정임.(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2025.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연장 연혁]

구분	유효기간	비 고
교통세법 제정(1993. 12. 31.)	2003. 12. 31.	-
1차 연장(2003. 12. 30.)	2006. 12. 31.	-
2차 연장(2006. 12. 30.)	2009. 12. 31.	- 2009년 1월 폐지법률 통과 - 2009년 12월 폐지법률 시행일 연장
3차 연장(2009. 12. 31.)	2012. 12. 31.	-
4차 연장(2013. 01. 01.)	2015. 12. 31.	-
5차 연장(2015. 12. 15.)	2018. 12. 31.	-
6차 연장(2018. 12. 31.)	2021. 12. 31.	-
7차 연장(2021. 12. 21.)	2024. 12. 31.	-
8차 연장(2024. 12. 31.)	2027. 12. 31.	-

자료: 기획재정위원회,「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24.11.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4개 회계・기금별 법정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나,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법정 전출금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회계연도마다「교통시설특별회계법」등 각 근거법률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68%[26], 환경개선특별회계 23%[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8], 기후대응기금 7%[29]로 각각 배분되도록 되어 있음.

---

26)「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27)「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0893호) 부칙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배분 비율]

(단위: %)

구분	1994~2000년	2001~2006년	2007~2013년	2014~2019년	2020~2021년	202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6	80	80	73	68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	14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2	2	2	2
환경개선특별회계	-	-	15	15	25	2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	3	-	-	-
일반회계	-	-	-	3	-	-
기후대응기금	-	-	-	-	-	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재정」, 2025.3.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현황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납액이 각 회계・기금별로 법정 배분비율에 맞게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2024의 경우 총 수납액은 11조 3,891억원이므로, 4개 회계・기금의 법정 배분비율대로 배분하면, 교통시설특별회계 7조 7,446억원(68%), 환경개선특별회계 2조 6,195억원(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78억원(2%), 기후대응기금 7,972억원(7%)이 배분되어야 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액을 포함한 전체 일반회계전입금 규모만 확인할 수 있어 법정 배분비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각 회계・기금별로 일반회계전입금 세입항목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얼마나 배분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각 근거법률[30] 및 회계・기금의 상황에 따라 필요예산을 법정 배분액보다 크게 전입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3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수납액	교특[주3]		환특		지특		기후기금	
		법정 배분액[주1]	최종 배분액[주2]	법정 배분액	최종 배분액	법정 배분액	최종 배분액	법정 배분액	최종 배분액
2015	140,546	112,437	174,078	21,082	39,133	2,811	10,099	-	-
2016	153,030	122,424	154,836	22,955	38,498	3,061	16,988	-	-
2017	155,526	124,421	144,627	23,329	33,674	3,111	13,706	-	-
2018	153,348	122,678	155,181	23,002	34,063	3,067	18,723	-	-
2019	145,627	116,502	138,495	21,844	39,849	2,913	18,708	-	-
2020	139,379	101,747	136,868	34,845	50,899	2,788	3,153	-	-
2021	165,984	121,168	132,847	41,496	53,449	3,138	3,138	-	-
2022	111,164	75,592	115,748	25,568	55,738	2,223	3,076	7,632	7,632
2023	108,436	73,736	79,054	24,940	50,385	1,858	1,858	7,591	12,223
2024	113,891	77,446	120,118	26,195	53,117	2,278	3,065	7,972	10,970

주 1) 법정배분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납액에 법정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임
2) 교특·환특·지특 차차년도 정산분 포함,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의 추가 전입금 포함
3) 교통시설특별회계 최종배분액은 개별소비세·관세의 일부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그 사용목적별 배분비율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배분이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배분을 위한 법정 전출금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31]

둘째, 각 회계·기금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정전입금과 임의전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을 위한 각 회계·기금별 일반회계전출금 또는 전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 근거법률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31)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계정별 전출금에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분'을 표기하여 법정전출금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2026년 정부안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함.

68%, 환경개선특별회계 2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기후대응기금 7%로 각각 배분되도록 되어 있고,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3개의 회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 정산 관련 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③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④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정산규정의 취지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배분비율에 맞게 최종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을 위한 법정전입금과 추가로 전입하는 임의전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정산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각 회계·기금별 일반회계 전출금 또는 전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32)]

참고로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2024년 6조 1,625억원의 세입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1조 6,797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조 2,414억원) 등 특별회계에 전출함에 있어 교육세분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타 전출금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33)]

32)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계정별 전출금에 '교통세·에너지·환경세 분'을 표기하여 법정전입금과 임의전입금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2026년 정부안을 편성중이며 차후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33) 교육세 세입액(A) = 유특회계 전입금(B) + 고특회계 전입금[(A-B)/2] + 보통교부금 일부[(A-B)/2]
※ B는 예산으로 정함 (2025년: 1조 7,022억원)

[2024년도 교육세 배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통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	2,159,192	2,159,192	-	-	2,159,192	2,159,192	-	-	2,450,14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1,679,676	1,679,676	-	-	1,679,676	1,679,676	-	-	1,702,17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2,241,412	2,241,412	-	-	2,241,412	2,235,443	-	5,969	2,037,15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 배당결정 기준 공표 필요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1조 6,033억 4,700만원 전액(수납률 100.0%)이 수납되었음.[34]

[2024년도 정부출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정부출자 수입	982,344	982,344	1,603,347	1,603,347	-	-	100.0	1,045,44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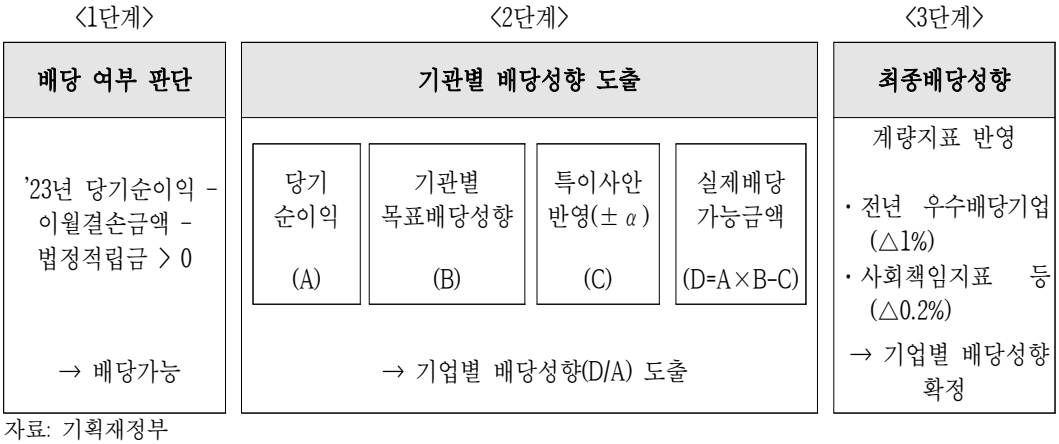
정부배당의 절차를 살펴보면,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재무제표 등 정부배당수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여건·민간배당수준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과 배당수준을 협의한 후 배당규모를 확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35]

---

34) 일반회계-정부출자수입(52-521)(국고국)

35)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정부 배당 결정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현재 정부배당 결정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배당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익잉여금 기준·재무건전성 조건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을 공표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배당성향 목표를 상향(25% → 40%)하여 왔고, 2021년에는 2022~2026년 배당성향 중기목표를 산술평균 기준 40%로 설정하여 운용 중이며, 2022년 40.38%로 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40.0% 내외를 유지 중임.[36]

그러나 실제 정부배당액을 보면, 2022년 2조 4,54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조 2,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2조 1,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가 증가하여 큰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평균 배당성향 40%를 매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평균 배당성향이 기관별 배당성향을 단순 산술평균한 것에서 기인함.[37]

---

36) 2014년 정부는 해외 주요국 공기업 배당수준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2015년 25%에서 2020년에는 40%로 매년 3%p씩 상향하는 중기목표를 제시함. 당시 해외 공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

37) 2025년 정부배당금액은 2조 2,987억원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39.72%임.

예를 들어, 2024년 8,781억원을 배당한 한국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5.00%지만, 37억원을 배당한 대한송유관공사의 배당성향은 90.02%로 높게 나타나며, 실제 배당액과는 무관하게 두 기관의 배당성향이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 배당성향에 기여하게 되므로 약 20개의 배당기관별 배당성향을 조합하여 평균 40%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최근 5년간 정부출자수입 및 배당성향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배당기관 수	정부출자액	총 당기순이익(A)	정부배당액 (B)	배당성향	
					산술평균	가중평균
2020	22	1,123,574	65,286	14,040	32.58	26.34
2021	22	1,146,787	80,694	14,396	36.92	29.68
2022	19	1,203,011	108,324	24,541	40.38	28.61
2023	19	1,359,889	65,652	12,387	39.93	25.74
2024	19	1,410,438	76,873	21,322	39.87	33.70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의 정부배당은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및 유사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등 대강의 기준[38]만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배당결정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배당의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내부 절차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각 기관별 정부배당의 실시 여부 및 배당성향을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표 배당성향을 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목표 배당성향을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적절한 정부배당을 통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배당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익잉여금 기준·재무건전성 조건 등 세부적 배당결정 기준을 공표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8)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둘째, 기획재정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하여 평균 배당성향을 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출자기관별 배당 규모· 배당성향 및 평균 배당성향의 산출방식 등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정부배당액 및 배당성향을 보면, 평균 배당성향은 39.93으로 19개 배당기관의 배당성향을 산술평균한 것인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부배당액이 없음에도 배당기관으로 포함하여 평균 배당성향을 도출하고 있음.[39)]

[2023년 정부배당액 및 배당성향]

(단위: 억원, %)

	기관명	정부 출자액	당기순이익	정부배당액	배당성향
1	한국토지주택공사	407,834	14,707	2,625	20.00
2	중소기업은행	23,722	24,548	4,555	31.19
3	한국산업은행	239,266	4,650	1,647	35.43
4	한국주택금융공사	17,424	1,240	292	35.00
5	한국수출입은행	107,878	3,869	932	35.00
6	한국가스공사	1,207	8,529	0	0.00
7	부산항만공사	28,790	404	162	45.90
8	한국자산관리공사	26,207	791	272	39.77
9	울산항만공사	3,846	317	127	46.00
10	인천항만공사	16,680	96	27	34.80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102	28	27.00
12	한국조폐공사	66	50	21	42.00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55	22	40.00
14	한국부동산원	44	109	22	41.44
15	한국농어촌공사	15,098	222	112	50.37
16	한국수자원공사	100,326	4,165	619	15.79
17	한국도로공사	369,074	584	248	48.73
18	한국투자공사	1,000	801	641	80.00
19	대한송유관공사	193	414	36	90.18
합계		1,359,889	65,652	12,387	39.93
배당기관 수(19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는 정부배당 실시기관이 17개 기관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평균 배당성향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식회사에스알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균 배당성향을 산출하고 있음.[40)]

39) 2023년 정부배당 보도자료에는 19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18개 기관임.
※ 기획재정부, 「2023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 2,387억원 확정」 보도자료, 2023.5.

40) 기획재정부, 「2024년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2조 1,322억원 확정」, 2024.5.

[2024년 정부배당액 및 배당성향]

(단위: 억원, %)

기관명		정부 출자액	당기순이익	정부배당액	배당성향
1	한국토지주택공사	418,256	5,395	943	19.90
2	중소기업은행	23,722	24,115	4,668	32.54
3	한국산업은행	263,166	25,089	8,781	35.00
4	한국수출입은행	128,878	7,228	1,847	35.00
5	부산항만공사	28,790	348	176	57.90
6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7	1,103	362	37.43
7	울산항만공사	3,846	365	185	58.00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130	30	23.08
9	한국조폐공사	66	63	33	52.38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83	55	26	46.32
11	한국부동산원	44	164	37	45.14
12	한국농어촌공사	15,175	257	35	13.81
13	한국수자원공사	104,202	3,013	451	15.89
14	한국도로공사	350,776	1,207	519	49.42
15	인천국제공항공사	37,294	4,913	2,248	45.75
16	한국투자공사	1,000	944	944	100.00
17	대한송유관공사	193	424	37	90.02
18	한국지역난방공사	200	1,994	0	0.00
19	주식회사에스알	3,590	67	0	0.00
합계		1,410,438	76,873	21,322	39.87
배당기관 수(19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주식회사에스알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기업의 자본금·내부자금 적립 규모·부채비율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평균 배당성향의 산출에는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41)]

그러나 실제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까지 포함하여 평균 배당성향을 산출하는 것은 자의적인 통계치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출자기관별 배당 규모, 배당성향 및 평균 배당성향의 산출방식 등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음.

41) 평균 배당성향(39.87) = 기관별 배당성향 합계(757.58) / 19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2개 기관을 제외하고 평균 배당성향을 산출하면, 정부 배당액은 동일함에도 평균 배당성향은 44.56으로 상승하게 됨.

〈세 출〉

7.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한 조세지출 정비 필요

가. 개 요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은 재정지원 수단 중 하나인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9,800만원 중 1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4년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1,498	1,498	-	-	1,498	1,487	-	10	1,69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43]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44]

---

42) 일반회계-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2131-306)(세제실)

43)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세수부족 전망에 따라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세감면액은 71.4조원으로 전망되고,[45] 2025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8.0조원으로 20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할 전망임.

[2023~2025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잠정	2025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69.8	71.4[1)]	78.0
○ 국세수입총액[2)] (B)	370.4	364.4	412.2
○ 국세감면율 [A/(A+B)]	15.8	16.3[1)]	15.9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14.3	14.6	15.2

주 1) 2024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작성한 2024년 전망치이며, 2025년 8월에 확정됨
2)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5.3.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46]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수입총액[47]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45) 2024년 확정적인 국세감면액은 2025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46)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4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국세수납액(또는 국세수입 예산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임

그러나 2023~2025년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48)]

[2018~2025년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실적	2019실적	2020실적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잠정	2025전망
국세감면액	439,533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액	2,935,704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43,847	4,122,410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3	15.9
법정상한	14.0	13.3	13.6	14.3	14.6	14.3	14.6	1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대비 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62.5%에 이르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4.1%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4년 16.3%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49)]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10.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로 2025년 국세감면율은 2025년 3월 전망치 15.9%보다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둘째, 2021~2025년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0조 4,94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조 6,72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0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50)]

---

48)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임.

49) 예컨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새로운 조세지출의 신설 및 기존 조세지출의 연장을 제한하거나, 부처별 일정비율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음

50)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주1]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257,853	71.1	269,883	68.3	291,472	67.7	312,419	66.8	332,469	66.6
	고소득자	104,940	28.9	125,080	31.7	139,076	32.3	155,059	33.2	166,724	33.4
	계 (총계 대비)	362,793	100.0 (63.6)	394,963	100.0 (62.2)	430,547	100.0 (61.7)	467,478	100.0 (65.4)	499,192	100.0 (64.0)
기업	중소기업	143,594	70.9	160,895	68.1	180,546	68.8	182,886	75.6	188,983	68.5
	중견기업	6,587	3.3	9,378	4.0	10,194	3.9	9,615	4.0	9,989	3.6
	상호출자 제한기업	22,133	10.9	38,878	16.5	43,804	16.7	23,475	9.7	49,364	17.9
	기타기업	30,285	14.9	27,159	11.5	27,872	10.6	26,054	10.8	27,574	10.0
	계 (총계 대비)	202,598	100.0 (35.5)	236,311	100.0 (37.2)	262,417	100.0 (37.6)	242,031	100.0 (33.9)	275,910	100.0 (35.4)
구분곤란[주2]		4,857		4,210		4,700		4,796		5,075	
총 계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주 1) 2021~2023년은 실적치, 2024년 및 2025년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임
2)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51]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2조 2,133억원에서 2023년 4조 3,80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반도체 등 영업실적 악화로 2조 3,47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다시 4조 9,36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임.[52]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9%, 2022년 16.5%, 2023년 16.7%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17.9%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51)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1.6조원(2025년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52)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조세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대기업의 경우 실적 회복에 따라 세금감면액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소득 8,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2023년 기준 상위 7~8%[53]에 해당함에도 2025년 개인 대상 조세지출의 33.4%가 귀착되고 있고, 202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46개, 소속회사 수는 2,093개로, 전국 사업체 수 약 694만개[54] 대비 0.03%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17.9%가 귀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조세감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근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역진적으로 귀착되고 있는 모습이므로, 향후 조세지출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의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제1호는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인해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제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55]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

53)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2024.12.31.

54) 통계청,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보도자료, 2024.2.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심의를 거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면제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가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1	2	3	1	1	1	2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9	3	2	3	7	6	6
면제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제1호						

자료: 기획재정부

8.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매년 반복되는 상반기 신속집행의 이자 비용 고려 필요

가. 개 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금 출납시 발생하는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07억 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56]

[2024년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99,209	99,209	-	111,500	210,709	210,709	-	-	99,2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2024년 당초 예산은 992억 900만원이었으나, 일시차입금 이자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서 총 1,115억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4.9.2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10-05	70,700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272-561)	510-03
이용 (2024.12.23.)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10-05	40,800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272-561)	510-03
합계			111,500	-	

자료: 기획재정부

56) 일반회계-일시차입금 이자상환(2272-561)(국고국)

나. 검토의견

첫째,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주로 재정의 신속집행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의 차입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신속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반기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재정의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재원의 부족분은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2015~2024년 중앙부처 신속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연간 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초과달성분	
		금액 (B)	집행률 (C=B/A)	금액 (D)	집행률 (E=D/A)	금액 (D-B)	집행률 (E-C)
2015	260.2	152.5	58.6	156.5	60.1	4.0	1.5
2016	229.6	137.1	59.7	140.5	61.2	3.4	1.5
2017	233.8	135.7	58.0	139.2	59.6	3.5	1.6
2018	238.6	138.9	58.2	149.3	62.6	10.4	4.4
2019	252.6	155.9	61.7	166.2	65.8	10.3	4.1
2020	261.4	164.6	63.0	175.6	67.2	11.0	4.2
2021	293.3	187.4	63.9	203.2	69.3	15.8	5.4
2022	199.4	125.6	63.0	128.3	64.4	2.7	1.4
2023	242.9	157.9	65.0	159.7	65.7	1.8	0.7
2024	252.9	164.4	65.0	167.5	66.2	3.1	1.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의 경우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기금(40개)의 재량지출 중 주요사업비 내 관리 실익이 있는 주요 비목을 대상으로 연간계획(252.9조원) 대비 65.0%인 164.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고, 연간계획 대비 66.2%(167.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였음.

그 결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국고금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이자상환액 4,86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2,107억원을 예산을 통해 상환하였음.

[2020~2024년도 일시차입 및 이자상환 현황]

(단위: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시차입 한도		3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142.5	36.4	50.5	162.1	214.8
- 한은차입		97.2	7.5	16.3	117.6	165.0
- 재정증권		45.3	28.9	34.2	44.5	49.8
■ 차입실적(평잔)		12.5	5.0	4.5	12.0	14.2
- 한은차입		4.8	0.1	1.8	4.4	5.9
- 재정증권		7.7	4.9	2.8	7.6	8.2
이자 상환 (억원)	운용수익	951	212	668	4,244	2,758
	예산	182	81	-	-	2,107
	〈소계〉	1,133	293	668	4,244	4,865

자료: 기획재정부

2022~2024년도 월별 일시차입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상반기 차입실적이 46.5조원으로 연간 차입실적 50.5조원 대비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및 2024년에는 상반기 차입실적이 각각 113.7조원, 124.4조원으로 전체 차입실적 대비 비중은 각각 70.1%, 57.9%를 나타내고 있음.

[2022~2024년도 월별 차입실적 현황]

(단위: 조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 차입실적 월별 누계	0.0	4.0	20.4	23.8	30.8	46.5	46.5	50.5	50.5	50.5	50.5	50.5
	(비중)	0.0	7.9	40.4	47.1	61.0	92.1	92.1	100.0	100.0	100.0	100.0	100.0
	- 한은차입	0.0	0.0	11.5	11.5	18.5	30.2	30.2	34.2	34.2	34.2	34.2	34.2
	- 재정증권	0.0	4.0	8.9	12.3	12.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2023	■ 차입실적 월별 누계	3.5	24.0	57.1	78.2	90.3	113.7	133.3	153.6	158.1	158.1	158.1	162.1
	(비중)	2.2	14.8	35.2	48.2	55.7	70.1	82.2	94.8	97.5	97.5	97.5	100.0
	- 한은차입	3.5	20.0	48.1	65.2	71.3	87.2	100.8	113.6	113.6	113.6	113.6	117.6
	- 재정증권	0.0	4.0	9.0	13.0	19.0	26.5	32.5	40.0	44.5	44.5	44.5	44.5
2024	■ 차입실적 월별 누계	0.0	17.4	52.6	75.5	96.2	124.4	141.9	169.7	194.4	209.8	209.8	214.8
	(비중)	0.0	8.1	24.5	35.1	44.8	57.9	66.1	79.0	90.5	97.7	97.7	100.0
	- 한은차입	0.0	9.9	37.1	52.0	62.7	83.6	97.1	119.9	144.6	160.0	160.0	165.0
	- 재정증권	0.0	7.5	15.5	23.5	33.5	40.8	44.8	49.8	49.8	49.8	49.8	49.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일시차입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일시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출연·출자 및 보조사업 등으로 집행해도 지자체와 출연·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이루어져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실집행실적 또한 정부가 관리·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는 재정의 신속집행이 성장률 제고와 불용 축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의 가정·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균등집행 보다는 신속집행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신속집행률 1%p 상승 시 연간 불용액 △0.11%, 불용률 △0.07%p가 각각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함.[57)]

그러나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자금 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의 목표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연간 재량지출 중 관리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과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4/4분기 이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0년 이후 4년만에 한국은행으로부터 8조원을 일시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4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일자	차입액	상환액	차입잔액	이자율	이자상환액
2024.03.25	2,500,000	-	2,500,000	3.623	495
2024.03.26	-	-	2,500,000		
2024.03.27	2,000,000	-	4,500,000	3.623	445
2024.03.28	300,000	-	4,800,000	3.623	475
2024.03.29	3,200,000	-	8,000,000		
2024.03.30	-	-	8,000,000	3.623	2,376
2024.03.31	-	-	8,000,000		
2024.04.01	-	900,000	7,100,000	3.563	691
2024.04.02	-	7,100,000	-		
합계	8,000,000	8,000,000	-	-	4,482

자료: 기획재정부

57) 한국재정정보원,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2025.2.
*예시: 상반기 50% 집행시 GDP +0.037%p
상반기 60% 집행시 GDP +0.512 ~ +0.57%p

둘째, 「국고금 관리법」에서 재정증권을 한국은행 일시차입보다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정증권의 경우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고금 관리법」 제32조[58]는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의 발행·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비해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9]

[2020~2024년도 일시차입 및 이자상환 현황]

(단위: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
■ 일시차입 한도		3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142.5	36.4	50.5	162.1	214.8
- 한은차입		97.2	7.5	16.3	117.6	165.0
- 재정증권		45.3	28.9	34.2	44.5	49.8
■ 차입실적(평잔)		12.5	5.0	4.5	12.0	14.2
- 한은차입		4.8	0.1	1.8	4.4	5.9
- 재정증권		7.7	4.9	2.8	7.6	8.2
이자상환 (억원)	운용수익	951	212	668	4,244	2,758
	예산	182	81	-	-	2,107
	〈소계〉	1,133	293	668	4,244	4,865

자료: 기획재정부

58)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59)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매년 부대조건을 붙여 의결하는데, 2024년의 경우 아래 3가지 부대조건을 의결하였음.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일시차입 현황을 보면, 누계 기준으로 2021년 36.4조원에서 2024년에는 214.8조원으로 전체 차입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 상환액도 293억원에서 4,86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평잔 기준으로도 2021년 5.0조원에서 2024년 14.2조원으로 증가하였음.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누계)를 비교해 보면, 2021·2022년은 한국은행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더 컸으나, 2023·2024년에는 한국은행 차입 규모가 재정증권 발행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2024년에는 한국은행 차입 규모가 165.0조원으로 재정증권 발행 규모 49.8조원에 비해 3배가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은 통상 63일물로서 단기간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한국은행의 부대조건에 따라 재정증권 평잔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으며, 잦은 차입·상환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누계보다는 이자 부담과 비례하여 실제 차입 규모를 나타내는 평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에서 재정증권을 한국은행 일시차입보다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정증권의 경우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져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기관 지정·구분 기준 개선 필요

가. 개 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6억 1,600만원 중 66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5%)되고 2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60]

[2024년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7,304	7,304	312	-	7,616	6,661	264	692	7,18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61]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62]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나머지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

60) 일반회계-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공공정책국)

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공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공공기관 유형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 colspan="3">분류기준</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td><td rowspan="4">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이상</td><td>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중 85% 이상</td></tr>
<tr><td>준시장형</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td><td rowspan="2">자체수입 비중
50% 미만</td><td>「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관리 또는 위탁관리</td></tr>
<tr><td>위탁집행형</td><td>정부업무의 위탁집행</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td><td colspan="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임원의 임면, 재무 등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어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됨.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체계 비교]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임원	「공공기관 운영법」상 임면절차* 적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운위 의결 등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재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건 및 유형 분류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이 1을 초과하는 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명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정 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64]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항[65]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 중 미지정된 기관이 201개로 나타났고, 지정 요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도 40개에 이르고 있음.

---

63) 이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상 기준이 불명확한 공공기관 지정(미지정) 사례]

부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심사 결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5개, 금융위원회 소관 23개 등 총 201개 기관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총 40개 기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건 및 유형 분류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66]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총수입액 및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300명 정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임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① 직원 정원, ② 총수입액, ③ 자산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의 상향 조정[67]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4개가 정원 기준(300명)에 미달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현황]

연도	변경 유형	기관 현황
2023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
2025년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대한석탄공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66)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여부를 기재부장관 재량으로 규정하고, 개별 구체적인 기관별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67) (정원) 50명 → 300명, (총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 30억원

기관의 총수입액과 자산규모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변경된 다수의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68]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42년에 기금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기관]

<table>
<tr><th>기관명</th><th colspan="2">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th></tr>
<tr><td>대한석탄공사</td><td colspan="2">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 존재 및 금융부채 2.4조원</td></tr>
<tr><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d><td colspan="2">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의 소진 등이 추정됨</td></tr>
<tr><td>서민금융진흥원</td><td colspan="2">부채비율 급증(2018년 29% → 2023년 614.2%)</td></tr>
<tr><td>부산항만공사</td><td rowspan="2">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능조항</td><td>금융부채(억원): 2019년 19,025 → 2023년 36,334</td></tr>
<tr><td>인천항만공사</td><td>금융부채(억원): 2019년 9,174 → 2023년 14,402</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68)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 ·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 · 분석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재정사업평가’ 사업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운용,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억 2,100만원 중 29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6%)되고 1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69]

[2024년도 재정사업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정사업평가	3,257	3,257	70	△6	3,321	2,943	116	262	3,3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성과관리제도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정부 업무수행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국가재정법」은 ① 성과목표관리, ②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0]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각 기관별 임무·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71]

---

69) 일반회계-재정사업평가(2644-300)(재정관리국)

70)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71)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검토의견

국회의 예·결산 과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 국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성과정보의 예산으로의 환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1년까지는 성과목표관리의 대상을 '단위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이유로 2022년부터 성과계획서·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사업의 대상을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으로 상향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5,349개였던 성과지표의 수는 2022년 1,047개로 1/5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부터는 '1 프로그램 1 지표' 설정 원칙에 따라 성과지표의 수가 509개로 대폭 감소하였음.

[2022~2024년도 성과목표관리 현황]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022	58	179	473	1,047
2023	58	179	473	1,068
2024	60	187	476	509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체계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수 과다 문제를 해소하여 성과관리 부담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핵심적 성과목표에 역량을 결집하게 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의 미시적 지표(예산지원건수 등)에서 국민체감형 지표(청년 고용률, 수출액 등)로 대체하여 부처의 재정성과 파악이 용이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의 심사가 기본이 되며, 더 나아가 내역사업 단위까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성과관리의 대상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예·결산 심사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연계시키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작성·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활용하지 못한 채로 국회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게 되어 국회의 심의 대상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됨.

이로 인해 성과관리의 목표인 '성과정보의 예산편성으로의 환류'가 어렵고, 환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 중 어느 단위사업, 어느 세부사업에 하여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 예산요구의 기준을 세부사업으로 운용하고 있고,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기준도 세부사업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역시 세부사업 기준임.

11.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타 면제사업 최소화 및 예타 대상사업 기준 명확화 필요

가. 개 요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제도운영을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6억원 중 84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2%)되고 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4년도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8,571	8,571	29	-	8,600	8,444	26	131	12,93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2021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비율(면제 요구 대비 선정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8.4%에 이르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의 정비 및 엄격한 적용이 필요해 보임.

「국가재정법」 제38조[73)]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

72) 일반회계-재정사업 타당성조사(2646-301)(재정관리국)

73)「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라 함)를 받아야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타 면제현황을 보면, 2020년 43.7%였던 면제비율은 2021년 40.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68.4%로 나타나 예타 대상인 신규사업 중 3분의 2 이상이 예타를 받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타 면제 기준의 정비와 함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면제 사업 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74]

[최근 5년간(2020~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건, %)

연도	예타면제 요구 사업 수(A)	예타면제 선정 사업 수(B)	면제 비율(B/A)
2020	70	31	43.7%
2021	77	31	40.3%
2022	60	26	43.3%
2023	55	28	50.9%
2024	57	39	68.4%

주) 과기부 이전 사업 및 도중 철회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4)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비율의 증가는 예타의 실익이 없는 공공청사, 법령에 따른 면제사업 등 재량의 여지가 낮은 분야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함.

참고로 최근 5년간 예타 면제사업을 면제 사유별로 보면, 2020년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7건(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제8호를 사유로 면제한 사업 수가 14건(35.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합계
2020	건수	5	-	-	1	2	2	-	4	-	17	31
	(비중)	(16.1)	-	-	(3.2)	(6.5)	(6.5)	-	(12.9)	-	(54.8)	(100.0)
2021	건수	7	-	2	-	1	4	-	11	2	4	31
	(비중)	(22.6)	-	(6.5)	-	(3.2)	(12.9)	-	(35.5)	(6.5)	(12.9)	(100.0)
2022	건수	6	-	6	-	-	1	4	7	1	1	26
	(비중)	(23.1)	-	(23.1)	-	-	(3.8)	(15.4)	(26.9)	(3.8)	(3.8)	(100.0)
2023	건수	8	-	2	-	1	-	-	7	4	6	28
	(비중)	(28.6)		(7.1)		(3.6)			(25.0	14.3	21.4	(100.0)
2024	건수	10	-	-	-	-	-	3	14	4	8	39
	(비중)	(25.6)	-	-	-	-	-	(7.7)	(35.9)	(10.3)	(20.5)	(100.0)

주) 과기부 이전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10호 사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0년에는 제10호 사유로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 국회의 지적으로 2022년 1건으로 감소한 후 2024년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근거로 면제받은 사업은 2020년 4건(12.9%)에서 2024년 14건(42.4%)로 증가하였음.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목록]

(단위: 억원)

사업명	예산액	면제사유
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1,309	제1호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867	제1호
부산 연제경찰서 신축	505	제1호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914	제1호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신축 사업	521	제1호
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564	제1호

(단위: 억원)

사업명	예산액	면제사유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	675	제1호
광주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신설	1,068	제1호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964	제1호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990	제7호
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584	제7호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779	제7호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2,917	제8호
당진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933	제8호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 전업지원	3,562	제8호
대구광역시 달서천(5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694	제8호
순천시 차세대 에너지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2,809	제8호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14	제8호
고성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1,621	제8호
청도군 공공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969	제8호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2,103	제8호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792	제8호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1,951	제8호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BTL)	2,471	제8호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신도시 리츠(기금 출자)	59,000	제9호
주택정비사업(융자)	900	제9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4,000	제9호
AI 혁신펀드	1,000	제9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14,677	제10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9,743	제10호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11,971	제10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7,292	제10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	5,483	제10호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	9,790	제10호
국도45호선(용인 이동~남동) 건설	8,843	제10호
경북대 의대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874	제10호
합계	**173,701**	-

주) 과기부 이전 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과 일부 내역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은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타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75]은 예타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사업단위에 관해서는 정한 바 없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에서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76][77]

또한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 등의 구분 기준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고, 전적으로 정부 내부 결정에 맡겨져 있는 상황임.

---

7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 조사수행기관 ·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지침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하위인 내내역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타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5년 제1회 추경안에서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각 공항의 시설개선 사업을 “일반공항시설관리”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예타를 우회한 것으로 판단됨.[78)]

당초 추경안 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 1차 검토안에서는 “제주항공참사 후속지원“(신규 세부사업) 사업이었으나, 이 경우 예타를 받아야 하므로 기존 세부사업 안에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전국 공항별로 내내역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기획재정부 1차 검토안]

부문	세부사업	추경안	주요내용
항공	① 제주항공참사 후속 지원	2,362억원	방위각 개선, 활주로 이탈방지장치 등
도로	② 도로 유지보수	500억원	포트홀 등 포장 보수사업 대폭 확대
	③ 도로 안전·환경 개선(총액)	180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노후 교량개선 등
	④ 도로 안전·환경 개선(비총액)	610억원	교통사고 대비 인도 가드레일 보강
	⑤ 위험도로 개선	165억원	’27년까지 잔여 설계물량 전부 반영

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단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 훈령에서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으로 사업단위를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에서 규정한 재정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은 모두 예타를 실시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 등 「국가재정법」에서 예타 대상으로 규정하는 분야는 2008년 법률 개정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분야들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통신 분야에 이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해당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각 호[79)]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으로

78)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항별 특성에 따라 신설·개량하는 시설물 종류가 상이하여 독립적인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7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80]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81]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8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정부는 신규 세부사업 중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1조 6,194억원)’과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300억원)’은 통신 분야의 사업으로 분류하여「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현행「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분야’는 2008년 법률 개정 당시의 재정지출이 급증한 분야들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 및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타 대상사업 분야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80)「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8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82)「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 · 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변화]

구분	2007년 1월1일 ~ 2008년 2월28일	2008년 2월29일 ~ 2008년 7월22일	2008년 7월23일 ~ 현재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
예타 조사 대상	**(공통기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개별기준)** ①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②「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③「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

주) 정보화 사업의 경우 근거 법률이 「정보화촉진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용 법률은 달라졌으나 내용은 유사하게 유지되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저연차 직원의 인력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03억 5,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83)]

[2024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56	40,356	-	-	40,356	40,356	-	-	37,0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재정정보원은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퇴직자 비율이 60.4% 수준이며,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조직융합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최근 5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퇴직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97명의 정원 중 24명이 퇴사하여 퇴직률이 8.1%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2024년에도 여전히 5.7%의 퇴직률을 나타내고 있음.[84)]

83) 일반회계-한국재정정보원 운영(2713-504)(재정정책국)

84) 한국재정정보원과 설립목적 및 규모가 유사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2024년 퇴직률은 각각 3.6%, 3.3%임.

[2020~2024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정원 대비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원	퇴직	정원	퇴직	정원	퇴직	정원	퇴직	정원	퇴직
1급	6	-	6	-	5	-	5	-	5	-
2급	20	4	21	-	20	-	20	-	20	-
3급	47	1	51	-	48	1	48	-	48	-
4급	99	4	109	3	109	5	104	4	104	5
5급	83	7	92	7	72	13	77	10	77	9
선임연구위원	14	-	14	1	17	-	17	-	17	-
연구위원		-		-		-		-		-
부연구위원		-		1		2		-		2
연구원	9	2	9	1	8	1	8	1	8	-
책임	19	1	19	-	17	-	17	1	17	-
전임		-		1		-		-		-
주임		5		2		1		3		1
총계	**297**	**24**	**321**	**16**	**296**	**23**	**296**	**19**	**296**	**17**
퇴직률		**8.1**		**5.0**		**7.8**		**6.4**		**5.7**

주) 임기에 의한 퇴직(임원), 정년 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대상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특성상 IT 개발자들을 다수 채용하고 있으나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대규모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경력을 쌓은 후 보수 등 조건이 좋은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근속연수별 퇴직 현황을 보면, 5년간 전체 106명의 퇴직자 중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는 60.4% 수준으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자가 많아지고 있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방안 및 조직융합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20~2025.4. 연도별 근속연수별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4.	합계	
								%
1년미만	5	7	5	4	2	1	24	22.6
1년이상~2년미만	4	4	9	2	1	-	20	18.9
2년이상~3년미만	1	2	7	6	4	-	20	18.9
3년이상~4년미만	8	1	1	1	2	1	14	13.2
4년이상~5년미만	6	2	-	2	1	2	13	12.3
5년이상~6년미만	-	-	-	-	4	1	5	4.7
6년이상~7년미만	-	-	1	3	1	1	6	5.7
7년이상~8년미만	-	-	-	1	1	-	2	1.9
8년이상	-	-	-	-	1	1	2	1.9
총계	**24**	**16**	**23**	**19**	**17**	**7**	**106**	**100**

주) 임기에 의한 퇴직(임원), 정년 퇴직을 제외한 퇴직자 대상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 수입의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개도국 수출 등 정부 출연금 외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재정정보원법」[85]은 재정정보원의 사업범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과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재정정보원은 그간 경험전수, 초청연수, 자문, MOU, KSP, 범정부 수출개척단,

85) 「한국재정정보원」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컨설팅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실적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의 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액 821억원 중 정부출연금이 743억원(90.5%)으로 기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탁사업비, 기타수입 및 전기이월금도 정부 출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기관의 모든 수입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2024년 한국재정정보원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Ⅰ. 출연금 수입	74,307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12,802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17,679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2,917
4. 재정정보분석	565
5.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40,344
Ⅱ. 수탁사업비 수입	162
Ⅲ.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846
Ⅳ. 전기이월금	6,786
1. 전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6,781
2. 기본재산	5
총 계	82,101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6년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된 이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외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 출연금으로 수입구조가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타 기관의 연구용역 사업 등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예비비 배정 및 집행부진 부적절

가. 개 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정부, 국부펀드 및 연기금 등 타국 투자 관련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위한 국제투자협력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억 1,100만원 중 2억 6,300만원(집행률 51.6%)이 집행되고 2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86)]

[2024년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	-	-	511	511	263	-	247	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카타르 국부펀드 관계자의 방한이 순연됨에 따라 5억 1,100만원 예비비 배정액의 48.4%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UAE 정상회담(2023.1월)에서 약정한 UAE 국부펀드의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투자지원단이 2023.2월 설치되었고, 이를 승계하여 중동·캐나다 및 싱가포르 등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연기금 등과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투자협력단이 2024.2월 설치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이전 조직인 금융투자지원단의 운영 종료(2024.2월) 이후 관련 업무 및 조직의 지속 여부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아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종료 시점까지만(2024.2월) 본예산을 편성하고,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예산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86) 일반회계-국제투자협력단 운영(3135-309)(국제금융국)

이로 인해 동 사업의 2024년 당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5억 1,100만원의 예비비 배정을 통해 국제투자협력단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카타르 등 주요 국부펀드의 방한이 순연됨에 따라 관련 행사의 취소 및 국외출장 취소 등으로 인해 예비비 배정액 5억 1,100만원 중 2억 4,700만원(48.4%)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	511	511	263	-	247	86
- 일반수용비	-	-	23	23	23	-	-	3
- 특근매식비	-	-	1	1	1	-	-	-
- 임차료	-	-	77	77	21	-	56	16
- 일반용역비	-	-	90	90	40	-	50	15
- 기타운영비	-	-	4	4	2	-	2	1
- 국내여비	-	-	8	8	5	-	3	2
- 국외업무여비	-	-	256	256	119	-	137	37
- 사업추진비	-	-	30	30	30	-	-	4
- 관서업무추진비	-	-	23	23	23	-	-	8
합 계	-	-	511	511	263	-	247	86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금융투자지원단의 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음에도 배정액의 48.4%가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에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예비비 13억 8,7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연구용역 지연에 따라 12억 1,800만원(87.8%)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임시조직 활용을 위한 예비비의 배정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14.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일반계정으로 금융제공이 곤란한 국가의 사업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7]

[2024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사업은 2024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출자사업의 특성상 감자 등을 통한 출자금의 반납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은 출자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계정 사업의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라 함) 특별계정은 국가신용도가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조성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승인이 가능함.

2024년까지 정부 출자금 6,250억원, 수은 재원 6,875억원으로 1조 3,125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승인액은 2019년 5,131억원, 2022년 3,481억원, 2023년 410억원 등 총 9,022억원으로, 전체 조성액 대비 68.7% 수준이며 2024년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87) 일반회계-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3236-301)(대외경제국)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조성액	정부	2,300	1,600	1,100	250	-	1,000	-	2,750	9,000
	수은	2,300	1,600	1,100	375	-	1,500	-	4,125	11,000
	소계	4,600	3,200	2,200	625	-	2,500	-	6,875	20,000
지출(승인)액		5,131	-	-	3,481	410	-	-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집행내역]

(단위: 억원)

연도	사업명	집행액
2019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건설사업	5,131
2022	탄자니아 철도차량 공급사업	2,062
	앙골라 원유운반선 수출사업	1,419
2023	나이지리아 비료플랜트 건설사업	410
합계		9,0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4년 특별계정 예산 1,000억원은 전액 집행되어 수은의 자본금 확충에 사용되었고, 출자금은 일단 집행되고 나면 감자 등을 통한 기 집행예산의 반납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배당 외에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은 출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부진한 특별계정 사업의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후보사업]

국가	프로젝트	총사업비	지원가능액
이라크	소방차량 및 소방용 장비 수출사업	US$2.4억	US$2억
몽골	울란바토르 메트로 사업	US$24억	US$3억
투르크메니스탄	AMI(지능형검침미터기) 공급사업	US$1.2억	US$1.0억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기금의 재무건전성 관리강화 필요

가. 개 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0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88]

[2024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출연	10,000	10,000	-	-	10,000	10,000	-	-	1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2025.5월 기금의 대위변제 사례가 최초로 발생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보증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의 보증운용배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4.12.31. 현재 1조 272억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80억원~150억원 수준의 정부 출연금을 기금의 기본재산에 적립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정 운용배수는 20배임.[89]

---

88) 일반회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4110-880)(재정관리국)

8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최근 10년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 및 운용배수 현황을 보면, 보증잔액은 2015년 8.3조원 수준에서 2024년 15.7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용배수는 12.0배에서 15.3배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활성화 대책(2024.10월)으로 사업당 보증한도를 확대[90]하였고, 보증잔액이 증가[91]함에 따라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보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실적 및 운용배수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증승인	17,833	25,905	20,286	20,832	18,102	20,513	25,642	23,106	26,543	31,399
보증잔액(A)	82,868	93,325	98,536	105,539	111,559	114,001	127,402	128,873	140,689	157,000
기본재산(B)	6,884	7,183	7,416	7,753	8,025	8,345	8,635	8,789	9,557	10,272
- 정부출연	4,480	4,660	4,840	5,020	5,120	5,200	5,340	5,490	5,590	5,690
운용배수(A/B)	12.0	13.0	13.3	13.6	13.9	13.7	14.8	14.7	14.7	15.3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에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증가와 건설사 워크아웃 등 PF시장 악화로 민간투자사업의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5월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에서 기금 최초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등 보증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최초 대위변제 발생 현황]

사업명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BTO)		
시행자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주무관청	전라남도
운영기간	2012. 7월 ~ 2023. 12월 [기존 2030. 7월]	채권은행	광주은행
보증기간	2011. 10월 ~ 2028. 7월	대위변제금액	18.2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0) 사업당 보증한도 추이 : (2021) 5천억원 → (2022) 7천억원 → (2023) 1조원 → (2024) 2조원

91) 보증잔액: 2020년 11.4조원 → 2024년 15.7조원, 37.7%↑

【대외경제협력기금】

〈총 괄〉

16. 대외경제협력기금: 기금 운용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 등

가. 개 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92]에 따라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실적은 2조 193억원으로 수정계획액 2조 2,087억원 대비 91.4%를 집행하였고, 전년도 결산액 1조 5,151억원 대비 33.3%가 증가하였음.

[2024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대외경제협력기금	2,208,746	2,019,275	91.4	1,515,114	33.3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규모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이 대부분이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금 운용규모의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임.

9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규모를 보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1조 1,427억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1조 5,151억원으로 3년 동안 32.6%가 증가하였고, 2025년 예산은 2조 3,527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임.[93]

[2020~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2024		2025예산
					예산	결산	
○자체 수입	197,805	224,770	256,881	331,314	303,667	303,486	354,062
- 기타재산이자수입	2,556	1,621	4,847	11,208	3,742	9,190	13,748
- 기타민간이자수입	37,440	39,358	44,304	45,441	53,968	50,923	62,430
- 면허료및수수료	-	-	-	-	66	-	269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57,809	183,789	207,546	258,905	245,891	243,373	277,615
- 정부출자주식매각대	-	-	-	15,760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	184	-	-	-	-
○정부 내부수입	913,058	1,052,918	1,007,268	1,147,299	1,874,998	1,674,998	1,951,330
(비중)	**(79.9)**	**(80.2)**	**(77.0)**	**(75.7)**	**(84.9)**	**(83.0)**	**(82.9)**
- 일반회계 전입금	588,058	752,918	662,268	787,299	1,218,749	1,218,749	1,317,379
- 공자기금 예수금	325,000	300,000	345,000	360,000	656,249	456,249	633,951
○여유자금회수	31,805	34,915	44,009	36,501	30,081	40,791	47,343
- 통화금융기관회수	4,205	115	159	265	11,830	191	838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27,600	34,800	43,850	36,236	18,251	40,600	46,505
합계	**1,142,668**	**1,312,603**	**1,308,158**	**1,515,114**	**2,208,746**	**2,019,275**	**2,352,73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현황을 보면, 2020년 정부 내부수입은 9,131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79.9%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1조 9,513억원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82.9%로 상승하였음. 정부 내부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0년 5,881억원에서 2025년 1조 3,17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공자기금 예수금도 3,250억원에서 6,34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93) 같은 기간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31.4%(2020년 512.3조원 → 2025년 673.3조원)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규모의 80% 이상의 재원이 정부 내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은 추가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한 기금운용계획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94]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2024년 기준 2조 702억원의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함.[95]

실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아시아차관 사업은 당초 대비 1,321억원(△15.5%), 중동-CIS차관은 212억원(18.9%), 중남미차관은 87억원(△19.7%),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1,196억원(19.6%)을 변경하였음.

---

9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9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2024년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결산]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결산
			당초(A)	수정(B)	C=B-A	C/A	
[3300] 대외경제협력 지원			2,070,164	2,070,164	-	-	1,886,484
	[3331] 대개도국차관		2,031,979	2,031,979	-	-	1,848,544
		[301] 아시아차관	849,890	717,780	△132,110	△15.5	631,608
		[303] 아프리카차관	416,981	416,981	-	-	405,278
		[305] 중동-CIS차관	112,383	133,575	21,192	18.9	107,143
		[306] 중남미차관	43,864	35,206	△8,658	△19.7	23,849
		[309]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608,861	728,437	119,576	19.6	680,666
	[3337] 경협증진자금지원		1,470	1,470	-	-	1,431
		[301]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525	525	-	-	522
		[641]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945	945	-	-	909
	[3376] 대개도국차관지원		36,715	36,715	-	-	36,509
		[302] 사업진행컨설팅	30,182	29,032	△1,150	△3.8	30,916
		[632] 사업심사평가연구	4,027	5,177	1,150	28.6	3,741
		[633] 개발협력증진	2,506	2,506	-	-	1,85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2024년 9월에 신설하였으나, 2024년 결산 결과를 보면 각 세부사업별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에서 결정한 기금운용계획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을 뿐,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괄〉

17.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활용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다 부적절

가. 개 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96]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3조 684억원으로, 전년(2조 6,829억원) 대비 14.4% 증가하였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수정계획액(A)	결산액(B)	(B/A)		
국유재산관리기금	3,270,503	3,068,404	93.8	2,682,940	14.4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로 기금 여유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20년 1조 6,082억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3조 68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예산은 3조 4,820억원으로 2020년 결산에 비해 2배

96)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서 주로 기인함.

[2020~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결산	2021결산	2022결산	2023결산	2024		2025예산
						예산	결산	
수입	○ 자체수입	1,250,412	1,311,756	1,702,426	1,946,354	2,057,212	2,186,269	2,042,888
	- 재산수입	151,520	163,503	166,978	188,714	216,346	195,043	198,222
	- 경상이전수입	59,086	47,210	66,037	47,733	66,960	42,080	66,788
	- 관유물매각대	1,039,806	1,101,043	1,469,408	1,709,907	1,773,906	1,949,146	1,777,878
	○ 정부내부수입	8,603	13,767	324,165	501,153	558,797	558,973	978,278
	- 예탁원리금회수	8,603	13,767	324,165	501,153	558,797	558,973	978,278
	○ 여유자금회수	349,140	334,187	215,962	235,434	654,494	323,162	460,829
	- 정부예금회수	349,140	334,187	215,962	235,434	654,494	323,162	460,829
합계		**1,608,155**	**1,659,710**	**2,242,553**	**2,682,941**	**3,270,503**	**3,068,404**	**3,481,995**
지출	○ 사업비	1,003,239	929,612	833,746	986,160	1,021,581	986,160	1,082,624
	- 공용재산취득	898,782	817,343	717,677	848,898	882,881	848,899	909,072
	- 통합청관사	47,963	42,303	24,063	57,277	68,795	69,207	73,552
	- 비축토지 매입	56,494	69,966	79,961	79,984	80,000	79,996	100,000
	○ 기금운영비	2,648	2,726	2,494	2,617	2,795	2,779	2,686
	- 인건비	1,615	1,715	1,546	1,648	1,814	1,814	2,053
	- 경상운영비	1,033	1,011	948	970	981	965	633
	○ 정부내부지출	451,581	475,000	860,876	960,000	1,250,000	1,500,000	1,350,000
	- 공자기금 예탁	451,581	475,000	860,876	960,000	1,250,000	1,500,000	1,350,000
	○ 여유자금운용	150,687	252,373	545,434	734,162	991,739	584,413	1,046,685
	- 통화금융기관예치	31,477	15,068	190,363	156,744	5,500	172,155	5,55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9,210	237,305	355,071	557,418	986,239	412,258	1,041,185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수입만 증가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최근 10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보면, 연중 평잔을 기준으로 2015년 6,303억원에서 2024년 1조 7,461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고, 2015년 55.0% 수준이었던 중장기자산 비중은 2024년 90.8%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15~202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기자산(A)	283,723	212,810	257,961	81,416	90,551	74,122	78,971	139,349	178,521	160,192
-현금성자금	189,860	73,348	83,937	56,771	59,000	74,122	78,971	104,262	133,213	129,421
-유동성자금	93,863	139,462	174,024	24,645	31,551	-	-	35,087	45,308	30,771
중장기자산(B)	346,527	631,648	854,005	1,020,213	1,212,370	859,584	815,827	784,583	1,153,995	1,585,907
합계(A+B)	630,250	844,458	1,111,966	1,101,629	1,302,921	933,706	894,798	923,932	1,332,516	1,746,099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3,000억원이었던 예탁규모는 2024년 1조 5,000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출 사업의 다변화 등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5~202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	-	-	3,000	4,516	4,750	8,609	9,600	15,000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97]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9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프로그램)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며,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4년 프로그램별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변경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21개의 프로그램 중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20%의 한도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한 프로그램이 9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2024년 국유기금 프로그램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계획		증감 (B-A)	증감률 (%)
	당초(A)	수정(B)		
공용재산취득(경찰청)	291,615	317,062	25,447	8.7
공용재산취득(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066	18,079	3,013	20.0
공용재산취득(통계청)	3,834	4,600	766	20.0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69,920	177,749	7,829	4.6
공용재산취득(국회)	3,102	2,482	△620	△20.0
공용재산취득(인권위원회)	5,380	4,900	△480	△8.9
공용재산취득(감사원)	3,420	2,736	△684	△20.0
공용재산취득(외교부)	23,730	18,984	△4,746	△20.0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49,576	39,661	△9,915	△20.0
공용재산취득(농림축산식품부)	9,726	8,382	△1,344	△13.8
공용재산취득(질병관리청)	4,707	4,629	△78	△1.7
공용재산취득(국가보훈부)	4,021	3,571	△450	△11.2
공용재산취득(국세청)	60,858	52,659	△8,199	△13.5
공용재산취득(병무청)	10,161	9,169	△992	△9.8
공용재산취득(농촌진흥청)	495	450	△45	△9.1
공용재산취득(산림청)	5,858	4,688	△1,170	△20.0
공용재산취득(기상청)	17,885	14,308	△3,577	△20.0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48,414	45,404	△3,010	△6.2
공용재산취득(행정안전부,소방청)	21,950	21,752	△198	△0.9
통합 청관사	68,795	67,248	△1,547	△2.2
기금간거래(예탁금)	1,250,000	1,500,000	250,000	20.0
여유자금운용	991,739	741,739	△250,000	△25.2

자료: 기획재정부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공용재산취득 프로그램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과다한 변경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자체변경이 가능한 한도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상환일정은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에 관한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위탁개발임차료[98] 조기상환을 이유로 총 8개 사업에서 194.8%(523억 5,800만원)를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하였음.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257억원(272.9%)를 증액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동구 복합청사신축’ 사업은 25억원(1,239.4%)를 증액하는 등 당초 계획액 대비 과도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적으로 위탁개발임차료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개발임차료의 조기상환은 이자비용 등 제반비용의 절감으로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실질적으로 유사함에도 임차료의 구체적인 상환일정 등은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98)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은「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공청사의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된 청사의 사용료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4년 총 8개의 사업에 계획현액 792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증감 (B-A)	증감률 (%)
	당초(A)	수정(B)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9,419	35,121	25,702	27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영등포 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770	1,927	1,157	15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33	333	-	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주동구 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98	2,652	2,454	1,239.4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9,435	22,555	13,120	139.1
국세청 중부세무서 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028	5,394	2,366	78.1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3,039	9,816	6,777	223.0
통계청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655	1,437	782	119.4
합계	**26,877**	**79,235**	**52,358**	**194.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 출〉

18.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한 임차료 증액의 부적정

가. 개 요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은 「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2019. 2.)에 따른 위탁개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51억 2,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99)]

[2024년도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 사업	9,419	35,121	-	35,121	35,121	-	-	12,8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용현황〉

- 건물현황(2019년 완공): 지상 1~19층(19개층), 지하 1~3층(지하주차장 포함)

구 분	청사시설 (수원고등, 지법,회생)	부대시설(전용면적)						합계
		전기차 충전소	1F ATM	1F 은행	1F 우체국	1F 카페테리아	3F 식당	
면적 (㎡)	87,142.41	2.897	1.674	275.23	142.50	92.48	1,783.87	89,441.06
비고	대법원 유상사용	민간임대			대법원 유상사용			

자료: 대법원

99) 국유재산관리기금-대법원 수원법원 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1331-617)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임차료 지급에 있어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으로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증액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적정 규모의 임차료를 편성하여 임차료 증액을 위한 기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원법원종합청사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른 위탁개발방식으로 신축되어 대법원은 신축일로부터 25년간(2019~204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음.

2024년도 임차료 지급 계획액은 94억 1,900만원이나 기금변경을 통하여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257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총 895억원을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기금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020.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21,707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217억 7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2.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10,020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100억 2,0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3.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32,071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320억 7,1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자체변경 (2024.12.)	210	07	수원법원 위탁개발	25,702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장 및 타 기관의 불용예상액 257억 200만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위탁개발 임차료로 집행
합 계				89,500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수원법원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2043년까지 임차료 및 관리비를 한국자산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부납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기금 집행률 제고 등의 목적으로 타 사업의 불용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계획액을 증액하여 임차료로 납부하고 있음.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집행내역: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1	11,268	11,268	-	11,268	11,268	100.0	100.0	-	-
2022	9,883	19,903	-	19,903	19,903	100.0	100.0	-	-
2023	9,890	41,971	-	41,971	41,971	100.0	100.0	-	-
2024	9,419	35,121	-	35,121	35,121	100.0	100.0	-	-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임차료 집행내역: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사용면적(연면적)	연 차	연 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89,161.26㎡ (1층 은행, 전기차충전소, ATM 사용분 279.801㎡ 제외)	1년	2019	11,879
	2년	2020	33,590
	3년	2021	11,268
	4년	2022	19,903
	5년	2023	41,971
	6년	2024	35,121
	7년	2025	32,800
	8년	2026	36,771
	합 계		186,532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 사업 관리비 집행내역: 2019~2024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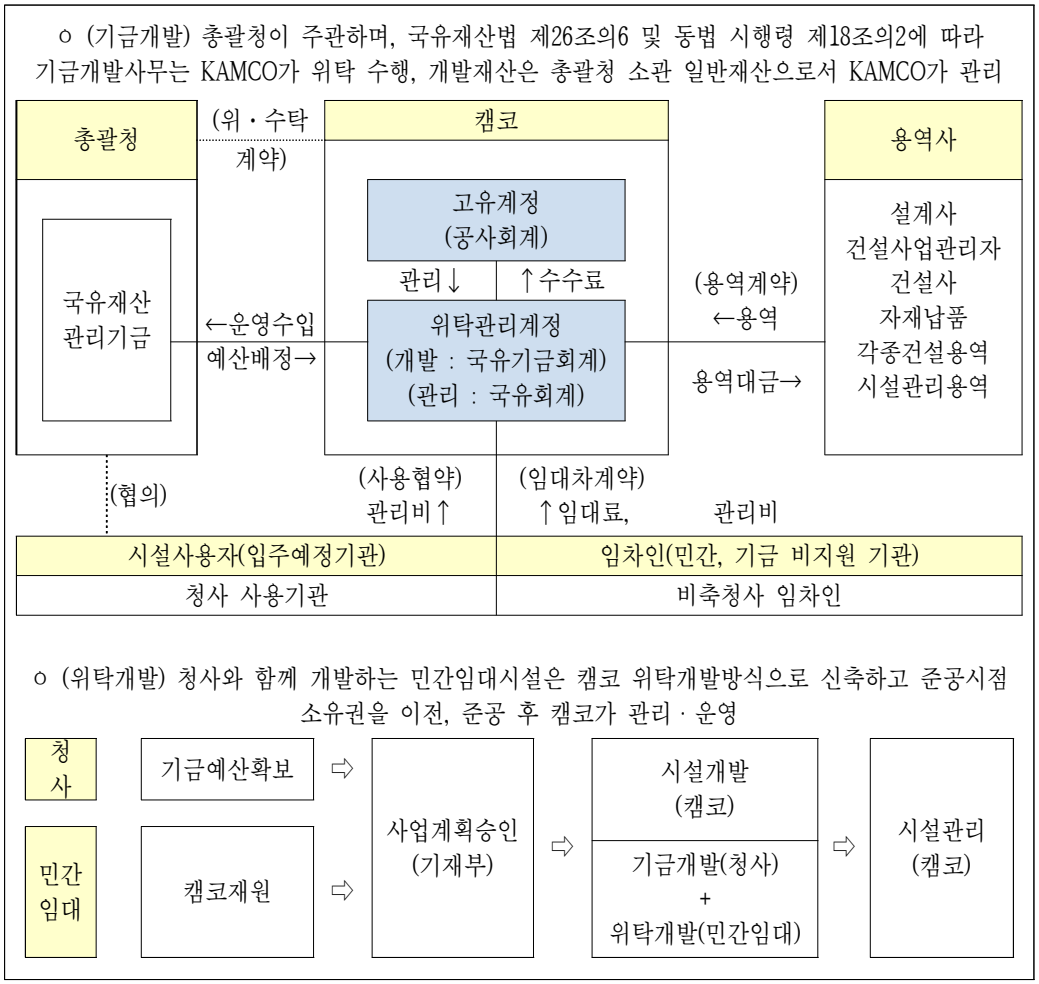
기 관 명	사용면적(연면적)	연차	연도	관리비(연액) (부가가치세 포함)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89,161.26㎡	1년	2019	2,810,708
		2년	2020	7,296,300
		3년	2021	6,900,000
		4년	2022	5,521,000
		5년	2023	4,967,000
		6년	2024	4,967,000
		7년	2025	4,967,000
		8년	2026	미정
		합계		37,429,008

자료: 대법원

수원법원 위탁개발에 따른 임차료 지급액을 연례적으로 타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을 기금변경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은 조기상환을 통해 향후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임차료 지급에 있어 연례적으로 기금 변경으로 집행이 부진한 타 사업의 불용액을 활용하여 임차료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적정규모의 임차료를 편성하여 임차료 증액을 위한 기금변경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국유자산관리기금 개발사업과 위탁개발 사업의 비교]



【기후대응기금】

〈총 괄〉

19.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확대 및 수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100]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부터 운용되었고, 2022년 2조 465억원 규모에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2조 3,05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예산은 2조 6,217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8% 증가하였음.[101]

[2022~2025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			2025계획
				계획		결산	
				당초	수정		
수입	○ 자체수입	323,250	113,533	301,962	249,844	264,723	363,027
	-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318,826	85,233	289,694	202,121	187,677	348,700
	- 기타	4,424	28,300	12,268	47,723	77,046	14,327
	○ 정부내부수입	1,263,154	1,817,901	1,757,746	1,705,334	1,705,334	1,938,780
	- 일반회계전입금	763,154	1,222,255	1,149,413	1,097,001	1,097,001	1,331,187
	- 특별회계전입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기금전입금(복권기금, 전력기금)	200,000	295,646	308,333	308,333	308,333	307,593
	○ 공자기금예수금	460,105	272,597	319,910	319,910	319,910	319,910
	○ 여유자금회수	-	22,668	12,189	12,189	15,863	-
합계		2,046,509	2,226,698	2,391,807	2,287,277	2,305,830	2,621,717

자료: 기획재정부

1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1) 기후대응기금(미래전략국)

나. 검토의견

첫째,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미전입,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 기금 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운용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 확대를 비롯한 기금의 수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후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2023년 852억원에서 2024년 1,87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1,020억원(35.2%) 감소한 수치이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평균 매각단가를 보면, 매년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기후기금의 자체수입이 단기간에 증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2020~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연도별 평균 매각단가]

(단위: 원/톤)

연도	평균매각단가	비고
2020년	30,385	2022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로 이전
2021년	26,373	
2022년	23,243	
2023년	10,672	
2024년	10,355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은 전체 수입에서 외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정부내부수입 1.7조원과 공자기금 예수금 0.3조원을 합한 외부재원의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기금의 총수입 2.3조원 대비 87.8%를 차지하고 있음.

기금의 자체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지출사업의 확대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외부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의 당초계획은 1조 1,494억원이었으나 실제 전입은 1조 970억원으로, 524억원이 세수부족으로 미전입되었음.

당초계획 대비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기후대응기금의 2024년 수입은 당초계획 2조 3,918억원에서 2조 3,058억원으로 86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기금수입의 감소로 전체 24개 사업에서 △1,045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음.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미전입,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 기금 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운용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부족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 확대를 비롯한 기금의 수입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4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330	03	공공열분해시설설치	△493	기후대응기금 자체수입인 배출권 매각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등에 따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4개 사업비 감액
320	08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산업부)	△4,866	
460	01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2,000	
320	07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21,588	
320	08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200	
330	03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870	
430	0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36	
320	07	스마트생태공장구축	△9,601	
320	02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환경부)	△5,206	
330	03	수열에너지활성화지원	△2,979	
320	07	재활용가능자원수거선별인프라확충	△1,402	
330	03	재활용가능자원수거선별인프라확충	△7,763	
260	01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	△102	
330	03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	△3,260	
420	03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	△2,800	
330	03	산림탄소흡수원복원	△600	
320	02	탄소중립도시숲조성	△279	
330	03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6,060	
420	02	탄소중립도시숲조성	△44	
420	03	탄소중립도시숲조성	△707	
420	04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0	
340	01	REDD+국제감축사업	△300	
320	02	생태계기후대응종합관리체계구축	△300	
260	01	도시생태축복원사업	△113	
330	03	도시생태축복원사업	△600	
110	04	습지보전관리	△28	
210	01	습지보전관리	△147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210	09	습지보전관리	△127	
210	14	습지보전관리	△11	
260	01	습지보전관리	△19	
410	00	습지보전관리	△2,158	
420	03	습지보전관리	△130	
430	01	습지보전관리	△63	
210	01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39	
210	09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42	
210	14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265	
320	01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800	
460	01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750	
260	01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450	
420	02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605	
420	03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6,144	
420	04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308	
420	05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11	
330	03	청정수소활용수소모빌리티보급기반구축사업	△833	
260	01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21	
330	03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1,399	
310	04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2,000	
310	04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697	
320	01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8	
320	02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45	
320	07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250	
합 계			△104,530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규모가 미미하여 대부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회계·기금의 사업들을 명확한 기준 없이 이관하여 운용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타 회계·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금 용도에 맞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편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당시 전체 139개 세부사업 중에서 79개(56.8%) 사업을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하여 편성하였고, 그 규모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기금 전체 사업비 2조 3,540억원 중 72.4% 차지하였음.[102)][103)]

[2022년 기후대응기금 사업 구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전체(운영비 등 제외)	타 회계·기금 이관사업	신규사업
세부사업 수	139	79	60
(비중)	(100.0)	(56.8)	(43.2)
계획액	2,353,953	1,703,295	650,658
(비중)	(100.0)	(72.4)	(27.6)

주) 운영비 등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수이자상환, 반환금, 여유자금운용 사업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11.

이후 2024년에 8개 사업, 2025년에 23개 사업이 이관되어 기후대응기금 신설 이후 총 110개 사업이 타 회계·기금에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04)]

[연도별 신규사업 유형분류]

(단위: 개)

구 분	신규사업 수 (A+B+C)	순수 신규 (A)			통폐합·분리 (B)	타 회계 이관 (C)
			R&D	일반사업		
2022	139	60	40	20	0	79
2023	17	16	6	10	1	0
2024	15	7	0	7	0	8
2025	41	16	15	1	2	23
합 계	212	99	61	38	3	110

주) 각 연도 계획 기준, 2025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11.

102) 이하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11.를 참조하여 작성함.

103) 79개 이관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38개(5,85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0개(7,126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3개(3,549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6개(34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개(102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 1개(53억원) 사업을 각각 이관함.

10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수는 136개이며, 이 중 타 회계에서 이관한 사업이 66개, 기후대응기금 설치 후 신설된 사업이 70개임.

이렇듯 기후대응기금의 신설 당시부터 타 회계·기금 사업의 이관으로 인해 기존 사업들과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는 기후대응기금의 용도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용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용도[105]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함.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들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과의 용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9개 사업을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던 23개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였음.

[2025년도 이관사업 현황 및 이관사유]

연번	회 계	세부사업명	이관 사유	소관기관
1	기후대응기금 → 환경개선 특별회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기후기금 성격 미부합	환경부
2		습지보전관리	기후기금 성격 미부합	환경부
3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탄소중립 연관성 부족	환경부
4		환경교육강화	탄소중립 연관성 부족	환경부

1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 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 · 노동 · 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 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 ·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연번	회 계	세부사업명	이관 사유	소관기관
5	기후대응기금 → 일반회계	제로에너지건축신산업육성	탄소중립 연관성 부족	국토부
6		산림특성화대학원지원을통한 인재양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흡	산림청
7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흡	중기부
8		산악벽지용친환경전기열차기술개발(R&D)	기후기금 성격 미부합	국토부
9	기후대응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탄소중립 연관성 부족	산업부
1	일반회계 → 기후대응기금	(혁신도전형)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R&D)	해당 양자시뮬레이터를 통해 수소에너지 활용 신소재 개발에 적용 가능	과기부
2		DACU원천기술개발(R&D)	CCUS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과기부
3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R&D)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전기차, ESS, 스마트그리드 등 활용 가능	과기부
4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R&D)	그린수소 생산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과기부
5		H2 NEXT ROUND(R&D)	그린수소 생산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과기부
6		C1가스리파이너리밸류업기술개발(R&D)	CCUS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과기부
7		한국형GreenNCAP평가기술개발(R&D)	모빌리티 부문 전주기 탄소배출량 종합평가 시행을 통해 탄소감축 유도	국토부
8		수소도시용수소배관망국산화및실증기술개발(R&D)	수소도시 관련 기후기금 기존 사업과 연계	국토부
9		미활용자원기반바이오매스플랜트실증기술개발(R&D)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기후기금 기존 사업과 연계	국토부
10		대도시권수요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R&D)	국정과제 관련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국토부
11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및실증(R&D)	그린수소 생산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농진청
12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	온실가스 김축효과 기대	농진청
13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친환경 목조건축 기술 확보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	산림청
14		세라믹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지원사업(R&D)	FEMS 관련 기후기금 기존사업과 연계	산업부
15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 활용방안기술실증(R&D)	회생전력 활용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산업부

연번	회 계	세부사업명	이관 사유	소관기관
16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R&D)	다배출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 개발 사업	산업부
17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고부가 재자원화 관련 기후기금 기존 사업과 연계	산업부
18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친환경선박 관련 기후기금 기존사업과 연계	해수부
19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R&D)	친환경선박 관련 기후기금 기존사업과 연계	해수부
20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그린수소 생산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해수부
2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R&D)	해양 재생에너지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해수부
22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수소추진선박 분야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사업	해수부
23		해양탄소재순환가치사슬 실현을 위한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R&D)	메탄올 연료기반 친환경선박 활성화 기여 등 연료대체 효과 기대	해수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 2024.11.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한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 성격에 맞지 않거나 탄소중립 연관성부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미흡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이관한 사업들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온실가스 김축효과 기대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사업임에도 일부 사업은 타 회계로 이관되고, 일부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에 남아 있는 등 이관기준이 불명확한 사례[106]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이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인 온실가스배출권 매각대금의 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감소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 회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명확한 기준 없이 이관받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타 회계·

106) 예를 들어 인력양성 사업 중 탄소흡수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과,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양성 등을 위한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각각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였으나, 유사하게 인력양성 사업인 에너지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에너지인력양성(R&D)’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남아있음.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금 용도에 맞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편성해나갈 필요가 있음.

셋째,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아래 5개 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사전절차 시행 및 수요부족 등으로 2024년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50.0% 미만인 사업들로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반영과 함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해 보임.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2024년 당초계획 대비 50.0% 미만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들은 '새만금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이 중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과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사업은 2024년 집행실적이 없음.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계획		결산액 (B)	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당초(A)	수정			
새만금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480	480	119	24.8	설계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계약 지연 및 용역사의 선금 미신청으로 준공일(2025.5월)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2,422	2,422	-	-	특구 지정기준 등 관련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바, 특구 지정기준 등 고시마련 및 모집 일정이 2025년 이후로 순연되어 당초 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3,742	1,742	560	15.0	산업전환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훈련수요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산업전환 준비 기업들도 재직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위한 직무훈련을 하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등에 따라 집행이 부진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2,500	1,803	743	29.7	2023년 신규승인 곤란(2022년 승인기업의 계속지원분이 2023년 예산을 모두 사용해야할 상황)하였고, 2024년도 신규승인을 진행한 결과 컨실팅 및 지원간 시차발생
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2,000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국토부) (6131-410)으로 통합

자료: 기획재정부

<지 출>

20.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4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07]

[2024년도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400	400	-	400	400	-	-	1,703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R&D 사업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교부현액 4억 4,400만원 중 3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6%)되고 7,3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 (이화대학교 등 2개 기관) ※3개 과제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400	400	400	44	0	444	371	73	-	83.6

주) 연구개발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기후대응기금-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R&D)(6431-308)(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4년에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축소하였다가 2025년에 일부 복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제 중단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부 과제는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재개되는 등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문제가 있음.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3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4년 계획액이 4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액되면서 국비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음.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과제별 국비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원스텝-원팟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	667	1.334	133.4	568
2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	666	1.332	133.2	567
3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 기술개발	667	1.334	133.4	568
합계		2,000	4,000	400	1,70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에 따라 각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 대부분이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음.

① 원스텝-원팟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2개의 공동연구과제와 2개의 위탁연구과제가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②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3개의 공동연구과제와 1개의 위탁연구과제 중 공동연구과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③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공동연구과제 4개가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예산 축소로 인하여 중단된 공동·위탁 연구과제에서 수행하던 연구 일부에 대하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이어가거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이관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거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이관받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고, 특정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가 일부 중단됨에 따라 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요 연구목표가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사업 효과가 저해된 문제가 있음.

또한 2024년에 중단되었던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과제의 위탁과제'는 2024년에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재개되기도 하였는데, 2023년까지 추진되던 과제가 2024년에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가 1년 만에 다시 추진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동 과제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1.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적극적인 수요발굴 노력 필요

가. 개 요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7억 4,2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2.1%)되고 11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108)]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8억 300만원 중 7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41.2%)되고 10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9)]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3,742	1,742	-	1,742	560	-	1,182	-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500	1,803	-	1,803	743	-	1,0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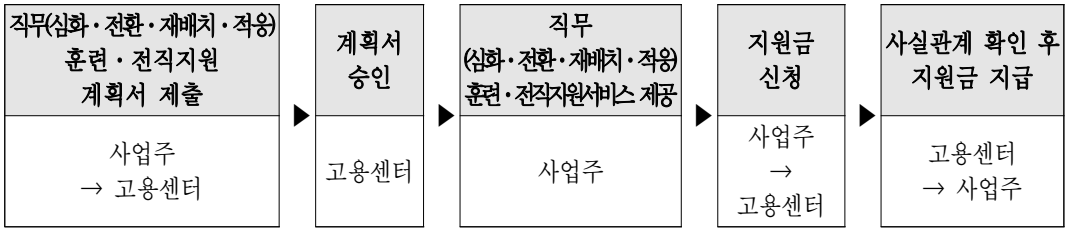
주) 2025년도부터 두 사업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이나 전직지원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받고, 실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108) 기후대응기금-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6332-301)(노동시장정책관)

109) 기후대응기금-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6332-302)(노동시장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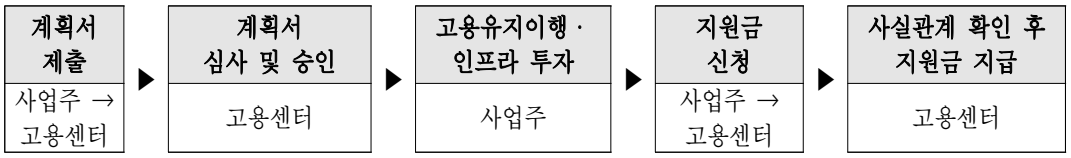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이행·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받고, 실제로 고용유지를 이행하고 인프라 투자를 한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모두 산업전환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직무훈련·장비·시설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4년 당초 37억 4,200만원을 계획하였다가 저조한 수요로 20억원을 자체변경하여 삭감하였으나, 5억 6,000만원만 집행되고 11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5.0%,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32.1%로 부진하였음.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2024년 당초 25억원을 계획하였다가 저조한 수요로 6억 9,7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삭감하였으나, 7억 4,300만원만 집행되고 10억 6,000만원이 불용되어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9.7%,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41.2%로 부진하였음.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4.12.2.)	320	01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2,000	현장수요 및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4.12.6.)	320	0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697	현장수요 및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2,69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2년(2.0%)~2024년(32.1%)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2023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16.8%), 2024년(41.2%) 집행이 부진하였음. 특히 두 사업 모두 매해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지출계획액을 연도 중 감액하였음.

[2022~2024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일자리 전환지원금	2022	5,260	2,760	-	2,760	54	2.0	2.0	-	2,706
	2023	5,260	2,180	-	2,180	478	21.9	21.9	-	1,702
	2024	3,742	1,742	-	1,742	560	32.1	32.1	-	1,182
산업・일자리 전환고용환경 개선지원금	2022	5,000	4,350	-	4,350	730	16.8	16.8	-	3,620
	2023	2,500	2,500	-	2,500	2,113	84.5	84.5	-	387
	2024	2,500	1,803	-	1,803	743	41.2	41.2	-	1,06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두 사업 모두 산업전환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훈련수요가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산업구조 전환은 원청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기업은 훈련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지원 수요가 적으며 중소기업은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훈련수요가 저조하다고 설명하였음.[110]

110) 추가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의 경우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현장체감도가 낮고, 사업도입기간이 비교적 짧아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등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정부가 기후전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시켜야 산업계 전반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선제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전환・심화・재배치・적응 등의 훈련수요와 시설개선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루어짐에 따라 훈련수요가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산업구조 전환은 원청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기업은 훈련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지원 수요가 적으며 중소기업은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훈련수요가 저조하다고 설명하였음.[111]

111) 추가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의 경우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현장체감도가 낮고, 사업도입기간이 비교적 짧아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등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추계한 목표인원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였음.

22.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의 정액 사업비 편성 필요

가. 개 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게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2,236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2]

[2024년도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223,600	223,600	-	223,600	223,600	-	-	217,000

통상 융자사업은 융자취급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융자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융자사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수취하게 됨.

이 사업의 전담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공단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를 1.00%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단의 위탁수수료도 0.10%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12)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6232-400)(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별표1> 대출금리]

대출 방식	대출금리	융자취급수수료
간접대출	매년 3분기「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공단 0.10%p)

주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정액의 관리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을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취한 0.10%의 위탁수수료는 2022년 355만원, 2023년 9,010만원, 2024년 1억 8,424만원이 발생하였는데,「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단 정규직 및 계약직 인건비로 집행되었음.[113]

[융자취급수수료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정규직A	정규직B	정규직C	정규직D	계약직 A	합계
2022	-	-	-	-	3,552	3,552
2023	-	-	-	55,400	34,704	90,104
2024	414	71,183	65,749	35,587	11,307	184,240
합계	414	71,183	65,749	90,987	49,56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 사업은 개요에서 설명하였듯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1.00%의 융자취급수수료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0.1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

113)「탄소중립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24-193호)」
제7조(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①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사업 : 융자사무 수수료(기획평가관리비) 및 자금운용 수익
2. 이차보전지원 사업 : 기획평가관리비

행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융자사업에서는 전담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 현황]

(단위: %)

사업명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금융기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1.00
가스안전관리(융자)	-	1.5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	0.70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융자	-	1.50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1.50
녹색혁신금융(융자)	-	1.50

자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별표 2]

에특회계의 융자사업에서 전담기관이 수취하는 융자취급수수료가 없는 이유는 그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융자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며,「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융자취급수수료를 모두 금융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114)]

그러나 이 사업은 융자 대출금리의 0.1%p를 융자취급수수료로 산정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융자 예산금액이 늘어날 때 관리비 증액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취급수수료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이 사업은 융자 규모가 2022년 912억원, 2023년 1,470억원, 2024년 2,236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융자취급수수료도 증가한 상황임.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관리와 무관한 외부 사유에 의하여 인건비 등 관리비로 집행되는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취급수수료가 사업 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R&D 사업이나 보조사업과 같이 정액의 관리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11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3.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소요를 고려한 기평비 편성 및 철저한 정산관리 필요

가. 개 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저탄소 및 친환경 산업 집적지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1,095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15]

[2024년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109,500	109,500	-	109,500	109,500	-	-	113,700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하는 출연사업(사업출연금 350-02목)으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산단특화 탄소저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내역사업별 사업비 중 약 4.97%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음.

[2024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기평비 현황]

내역사업명	부처 (A)		전문기관 (B)		사업수행자	기평비율 (B/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220억원)	=> (22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0억 9,300만원)	=> (209억 700만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외 8개 컨소시엄	4.97%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840억원)	=> (840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41억 7,500만원)	=> (798억 2,600만원)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외 9개 컨소시엄	4.97%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산업통상자원부 (35억원)	=> (35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 7,400만원)	=> (33억 2,600만원)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4.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15) 기후대응기금-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6131-303)(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실집행 실적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개 내역사업 총 1,095억원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4년 탄소중립형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22,000	22,000	22,000	22,000	-	22,000	22,000	-	-	100.0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84,000	84,000	84,000	84,000	-	84,000	84,000	-	-	100.0
산단 특화 탄소저감	3,500	3,500	3,500	3,500	-	3,500	3,500	-	-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 공통요구자료)

나.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여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결산 자료와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지출부에 근거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100%에 미달하고 있고, 특히 2024년 3개 내역사업에 배정된 기획평가관리비는 총 54억 4,200만원 중 37억 8,7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9.6%에 불과함.[116]

[2024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출부에 따른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흐름	예산액(A)	집행액 또는 교부액(B)	집행률 또는 교부율(B/A)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외 8개 컨소시엄	20,907	20,906	99.9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산단공 →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외 9개 컨소시엄	79,826	79,825	99.9

116)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상 실집행률은 100.0%이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출부에 따른 실집행률은 미집행액이 있어 100.0%에 미달하여 상호 간 차이가 있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흐름	예산액(A)	집행액 또는 교부액(B)	집행률 또는 교부율(B/A)
산단 특화 탄소저감	산단공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	3,326	3,326	100.0
기획평가관리비	산단공 직접집행	5,442	3,787	69.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로 내역사업별 실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의 약 4.97%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서도 보이듯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어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은 2022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귀속되는 기획평가관리비도 그 필요성 여부와 무관히 함께 커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2022~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A)	기획평가관리비 (B)	비율(B/A)
2022년	43,000	2,134	4.96
2023년	54,400	2,702	4.97
2024년	109,500	5,442	4.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실소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잔액 16억 5,500만원을 내역사업별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함께 반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며, 2025년 7월 초 기준 아직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로 기획평가관리비 집행잔액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음.

특히「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제10조의2 및「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회계연도 중 불용액 등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수행부처는 원칙적으로 발생연도 말일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동 사업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117][118]

117)「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의2 (집행지침의 작성 · 통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18)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Ⅳ. 기금의 집행・정산・반납・이월・결산
□ 회계연도 중 불용액 등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수행부처는 원칙적으로 발생연도 말일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함
ㅇ 회계연도 중에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반납할 수 있음

【복권기금】

〈지　출〉

24.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법정배분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 필요

가. 개　요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음.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지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사업이 있음.[2]

---

1)「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문화재보호기금법」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복권기금-지방자치단체지원(5531-3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5532-30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8910-890),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8911-891),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89121-89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8914-894),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8920-8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6440-3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6541-31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6642-313)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은 전체 계획현액 1조 401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합계	1,040,150	1,040,150	-	1,040,150	1,040,150	-	-	1,105,145
지방자치단체지원	169,863	169,863	-	169,863	169,863	-	-	190,63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79,600	179,600	-	179,600	179,600	-	-	190,825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055	125,055	-	125,055	125,055	-	-	137,447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1,954	91,954	-	91,954	91,954	-	-	92,044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63,513	63,513	-	63,513	63,513	-	-	61,699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72,752	72,752	-	72,752	72,752	-	-	82,620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152,611	152,611		152,611	152,611			144,8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70,138	70,138	-	70,138	70,138	-	-	80,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41,697	41,697	-	41,697	41,697	-	-	47,40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72,967	72,967	-	72,967	72,967	-	-	77,528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당시 배분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2025년 현재 여러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복권기금의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009년에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배분비율을 유지한 채 한차례 조정되었을 뿐 2004년과 사실상 동일함.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변경 현황]

구 분	2004년	2010년 이후
총 법정배분비율	30%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4.680%	12.583%
국민체육진흥기금	12.100%	10.371%
근로복지진흥기금	6.195%	5.31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15%	6.356%
문화재보호기금 (現 국가유산보호기금)	-	14.286%
지방자치단체	20.145%	17.26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45%	17.2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0%	4.28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6.820%	5.8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500%	6.428%

주) 각 기금 등의 법정 배분비율은 총 법정배분비율 내에서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의 법정배분비율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1년이 경과하여 각 기금 및 회계의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상당부분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 복권발행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까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수입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복권기금까지 지원하고 있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등 여러 차례 법정배분제도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 하에서 복권수익금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비율의 가감제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최종적으로는「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정배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만큼, 그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시정요구 118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8건·주의 36건·제도개선 6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8	34	65	3	114
예비비	-	-	-	2	2	-	4
합계	-	-	18	36	67	3	118

기획재정부는 시정요구사항 118건에 대해 9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3.1%)하고 2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4	94	82.5	20
예비비	4	4	100.0	-
합계	118	98	83.1	20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기획재정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21)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고,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진행 경과를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22) 기획재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기상환의 규모·시기를 결정한다.
	(23) 기획재정부는 재정용어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24)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날 행사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5)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KDI,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 결산	(11) 기획재정부는 지역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편성방향 조정을 검토한다.
	(12)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액의 합계 및 분야별 요구액 현황 등의 정보를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한다.
	(13)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14)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필수 공공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국세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7억 2,400만원(0.7%)이 많은 3,66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800만원(△5.3%)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8,539	428,539	387,206	△41,333	364,074	364,074	366,798	2,724	△20,408
총수입	428,539	428,539	387,206	△41,333	364,074	364,074	366,798	2,724	△20,408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5억 6,600만원(△0.8%)이 적은 1조 9,346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억 300만원(2.2%)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24,078	1,924,078	1,893,573	△30,505	1,951,242	1,951,242	1,934,676	△16,566	41,103
총지출	1,924,078	1,924,078	1,893,573	△30,505	1,951,242	1,951,242	1,934,676	△16,566	41,10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40억 7,400만원으로, 4조 5,877억 6,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67억 9,800만원이 수납(수납률 8.0%)되고 3조 9,850억 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358억 9,5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64,074	364,074	-	364,074	4,587,766	366,798	3,985,073	235,895
합 계	364,074	364,074	-	364,074	4,587,766	366,798	3,985,073	235,895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512억 4,200만원으로, 이 중 1조 9,346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65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951,242	1,951,242	-	-	-	1,951,242	1,934,676	-	16,566
합 계	1,951,242	1,951,242	-	-	-	1,951,242	1,934,676	-	16,566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7,710억원이 증가한 36조 6,633억 3,600만원으로, 이는 기타비유동자산과 무형자산이 각각 1조 7,758억 4,500만원, 108억 2,0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4조 5,176억 3,9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400억 2,6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721억 6,600만원 증가한 32조 2,708억 1,300만원으로 유동부채 2조 6,334억 5,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011억 6,500만원이 감소한 4조 3,925억 2,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619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조 3,79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2억 7,0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6,663,336	33,892,336	2,771,000	8.2
		유동자산	23,611,735	19,094,096	4,517,639	23.7
		투자자산	-	-	-	0.0
		일반유형자산	3,114,426	3,074,400	40,026	1.3
		무형자산	64,521	75,341	△10,820	△14.4
		기타비유동자산	9,872,654	11,648,499	△1,775,845	△15.2
	부 채		32,270,813	29,298,647	2,972,166	10.1
		유동부채	30,364,321	27,730,869	2,633,452	9.5
		장기차입부채	39,166	44,616	△5,450	△12.2
		장기충당부채	1,867,326	1,523,162	344,164	22.6
		기타비유동부채	-	-	0	0.0
	순자산		4,392,523	4,593,688	△201,165	△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61,984	258,915	3,069	1.2
	재정운영순원가		2,379,210	2,463,480	△84,270	△3.4
	재정운영결과		2,379,210	2,463,480	△84,270	△3.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세청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성실납세문화 확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중점과제로 하여, 총 7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4년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신고건수 중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비율은 17.8%에 불과하므로,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요금 부족액으로 자체 이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예산의 이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징수를 하는 방안 및 징수위탁 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구도의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관세청·조달청 및 특허청 등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들과 달리 국세청은 해외주재세무관의 선발절차·담당업무 및 업무실적 평가 등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외주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5억 2,400만원 중 45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4,524	4,524	-	-	4,524	4,523	-	1	9,59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3)]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2) 일반회계-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1133-303)(자산과세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함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절차로 추진됨.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추진절차]

절차	내 용
신고서 접수	○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서 전산입력 및 신고서 오류 검증 실시
감정평가대상 선정	○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 추출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
조사착수 및 감정평가 실시	○ 신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협조안내문 발송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 착수 ○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완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고지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2024년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신고건수 중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비율은 17.8%에 불과하므로, 국세청은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근 5년간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신고 및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2020년 48,295건에서 2024년 45,039건으로 3,256건(6.7%) 감소하였으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는 같은 기간 4,314건에서 8,022건으로 3,708건(86.0%) 증가하여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8.9%에서 17.8%로 증가하였음.

동 사업의 시행으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 및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17.8%에 불과하고,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실시하는 감정평가 건수까지 합한 전체 감정평가 신고비율도 18.2%에 불과함.

또한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의 상승은 전체 신고건수가 2021년 57,351건에서 2024년 45,03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주로 기인하며,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는 2022년 8,120건에서 2024년 8,022건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20~2024년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 및 감정평가 실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 신고건수 (A)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 (B)	국세청 감정평가 실시건수 (C)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B/A)	전체 감정평가 비율 ((B+C)/A)
2020	48,295	4,314	113	8.9	9.2
2021	57,351	7,367	248	12.8	13.3
2022	53,980	8,120	174	15.0	15.4
2023	48,182	8,074	192	16.8	17.2
2024	45,039	8,022	169	17.8	18.2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의 목적이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국세청 감정평가까지 포함하여 전체 신고건수 중 18.2%에 불과한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억원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경우 전체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2024년 93.2%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억원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건수는 2024년 42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45,039건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예산상의 제한으로 국세청이 실시하는 감정평가도 한계가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20억원 이상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 및 감정평가 실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 신고건수 (A)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 (B)	국세청 감정평가 실시건수 (C)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B/A)	전체 감정평가 비율 ((B+C)/A)
2020	287	53	113	18.5	57.8
2021	401	128	248	31.9	93.8
2022	493	198	174	40.2	75.5
2023	483	221	192	45.8	85.5
2024	425	227	169	53.4	93.2

자료: 국세청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얻는 혜택은 자신이 부담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 외에는 없고,[4] 신고 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제도적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은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종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에 따른 예산액 이용 부적절

가. 개 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사업은 금융투자소득세 세목 신설·시행에 따라 과세 시행 홍보, 성실납세 지원, 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정신고 안내 등 과세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900만원 중 4억원이 타 사업으로 이용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409	409	-	△400	9	-	-	9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 및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이 2020.12월 개정[6)]됨에 따라 2022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후 2022.12월 시행시기가 2025.1월로 2년 연기되었고, 2024.12월 최종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음.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요금으로 자체 이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일반회계-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1135-300)(자산과세국)

6) (입법 경과) 2020.12.29.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도입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주요 내용) 상장주식, 펀드, 채권 양도, 파생상품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포괄·분류과세*, 원천징수, 이월결손금 공제 등 새로운 과세체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임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포괄(손익통산)하되 다른 소득과 구분(분류)하여 과세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4년 12월 취소[7]됨에 따라 대외 홍보비와 신고안내 비용 등 관련예산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공공요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자체 이용(4억원)하였음.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이용 (2024.12.10.)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210-01	98	중부청 기본경비	210-02
이용 (2024.12.10.)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210-01	202	대전청 기본경비	210-02
이용 (2024.12.10.)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210-01	100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10-02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됨에 따라 과세제도 홍보·성실납세 지원·직무능력향상·신고서식 준비 등을 위해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에 따라 예산의 주된 항목인 대외 홍보비와 신고안내 비용을 지방청 및 소속기관 공공요금 예산 부족액으로 자체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국세청은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1.5~2.0%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용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8]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 원칙 하에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전용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취소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사업비의 불용액을 기본경비로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24.12.10.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2022년 및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국세청은 과세시행을 위해 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모두 불용하였음.

[2022~2024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440	440	-	-	440	95	21.6	21.6	-	345
2023	409	409	-	-	409	9	2.2	2.2	-	400
2024	409	409	-	△400	9	-	-	-	-	9

자료: 국세청

3. 확정채무 지급: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확정채무 지급’ 사업은 납세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국가패소가 확정된 경우 패소비용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8억 100만원 중 47억 7,900만원(집행률 99.9%)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도 확정채무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확정채무 지급	3,716	3,716	-	1,085	4,801	4,797	-	4	4,33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국가패소 확정으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감정료 및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 패소확정 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확정채무 지급 예산은 37억 1,600만원이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지급된 확정채무는 매년 37억원을 초과하여 이·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확정채무 지급액이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이·전용 비율도 2021년 39.9%, 2023년 56.4%, 2024년 29.1%로 높은 수준임.

9) 일반회계-확정채무 지급(2133-300)(징세법무국)

[2021~2024년 확정채무 지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3,656	3,656	-	1,459	5,115	5,115	139.9	100.0	-	-
2022	3,656	3,656	-	44,035	47,691	47,691	1,304.5	100.0	-	-
2023	3,716	3,716	-	2,093	5,812	5,812	156.4	100.0	-	-
2024	3,716	3,716	-	1,085	4,801	4,797	129.1	99.9	-	4

자료: 국세청

최근 10년간 국세청의 소송 패소현황을 보면, 전체 15,803건의 소송 중 1,730건을 패소하여 패소율은 10.9%를 나타내고 있고, 건당 패소금액은 41.5억원 수준임. 확정채무 지급액을 보면, 2015년 및 2016년은 각각 31억원, 3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매년 최소 40억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청 소송 패소현황]

(단위: 건, 억원, %)

연도	전체 판결수 (A)	패소건수 (B)	패소금액 (C)	확정채무 지급액	패소율 (B/A)	건당 패소금액 (C/B)
2015	2,036	237	6,266	31	11.6	26.4
2016	1,946	223	5,458	30	11.5	24.5
2017	1,842	210	10,960	130	11.4	52.2
2018	1,469	170	10,624	40	11.5	62.5
2019	1,421	163	4,197	42	11.4	25.7
2020	1,309	128	8,383	62	9.8	65.5
2021	1,341	149	5,087	51	11.1	34.1
2022	1,325	159	5,427	477	12.0	34.1
2023	1,494	135	9,477	58	9.0	70.2
2024	1,620	156	5,957	48	9.6	38.2
계	15,803	1,730	71,836	969	10.9	41.5

주) 패소건수에 일부패소 포함
자료: 국세청

2024년 확정채무 지급 예산은 37억 1,600만원에 불과하나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실제 지급된 확정채무는 모두 37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전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소송의 패소여부 및 소송물가액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정확한 예산규모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확정채무 지급추세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 확정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청이 담당하는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지난 10년간 약 2.0%p 개선된 반면, 조세소송 판결수는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기준자문 등 사전 검증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 국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소송 제기 건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청 조세소송 현황을 보면, 판결수는 2015년 2,036건에서 2020년 1,30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1,620건을 나타내고 있음.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2015~2019년까지 11.4~11.6% 수준이었으나 최근 2023년 및 2024년에는 각각 9.0%, 9.6%로 개선되어 10년간 평균 10.9%의 패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청 조세소송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판결수	2,036	1,946	1,842	1,469	1,421	1,309	1,341	1,325	1,494	1,620	15,803
패소건수	237	223	210	170	163	128	149	159	135	156	1,730
패소율	11.6	11.5	11.4	11.5	11.4	9.8	11.1	12.0	9.0	9.6	10.9

주) 일부패소 포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국세청이 담당하는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지난 10년간 약 2.0%p 개선되어 왔으나, 조세소송 판결수는 2020년 1,309건 이후 2024년 1,62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기준자문 등 사전 검증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 국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소송 제기 건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국세청 사전 검증제도]

제도명	시행근거	시행일자	담당과	내 용
과세전적부 심사제도	국세기본법 §81의15	1999.08월	심사2 담당관실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과세사실 판단자문제도	과세사실 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2005.10월	심사2 담당관실	본·지방청·세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 결정
조 사 사전심의	조사사무처리 규정 §32④	2014.3월	조사 분석과	조사 중 과세쟁점 발생 시 조사 심의팀이 제3자의 입장에서 법령·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
과세기준 자문제도 (법령해석자문)	법령사무 처리규정 §27~§28의5	2005.06월	법규과	신청관서에서 본청 법규과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 등 결정

자료: 국세청

4.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상용근로 소득자료 제출 시행 유예에 따른 불용예산의 이용 부적절

가. 개 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은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10]에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7,200만원 중 1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6%)되고, 1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4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390	3,390	-	△1,618	1,772	1,659	-	113	2,5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의 시행이 2026년 1월로 2년간 유예되었음에도 관련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는 당초 2024.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12월「소득세법」개정으로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었음. 그럼에도 국세청은 관련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16억 1,800만원을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 집행하였음.

---

10) 사회보험기관(고용·산재·건강 보험, 국민·공무원 연금),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11) 일반회계-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3137-300)(복지세정관리단)

[2024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4.4.29.)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429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2	2024.4.29. 압류재산공매 대위등기비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
이용 (2024.9.2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1,114	조사활동지원 (2131-302)	310-03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에 따른 이용
이용 (2024.12.10.)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	75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210-02	지방청 및 소속기관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이용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용근로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시행이 유예되어 이용을 통해 예산현액을 낮추는 등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불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수집 관련 경과]

일시	내용
2023.9.15.	○ 상용근로 소득자료를 반기 제출로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더블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23.11.22.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 (정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제출 유지하고,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체안 건의 * 사유: '노사정협의체' 합의안 미도출로 고용보험법 개정 지연 - (고용진 의원) 정부 대체안 수용
2023.11.30.	○ 기재위 전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 상용근로소득 매월 제출 시행시기 2년 유예('26.1월 시행)
2023.12.21.	○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자료: 국세청

5. 징수위탁수수료: 국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개인별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고 징수실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억 2,300만원 전액이 집행(100.0%)되었음.[12)]

[2024년도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징수위탁수수료	1,623	1,623	-	-	1,623	1,623	-	-	1,62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징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징수를 하는 방안 및 징수위탁 기관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구도의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국세징수법」제11조[13)]에 따라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① 체납자의

12) 일반회계-징수위탁수수료(2232-303)(징세법무국)

13)「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소 또는 거소 확인, ② 체납자의 재산 조사, ③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 단순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14]는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두 가지를 위탁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을 보면, 2015년 위탁금액은 3조 1,553억원에서 2024년 5조 7,6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최근 10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2024년 0.72%로 저조한 상황임.

[최근 10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총 위탁금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위탁수수료 지급액
2015	3,155,322	15,555	0.49	997
2016	4,623,082	29,215	0.63	1,496
2017	5,829,306	37,846	0.65	2,000
2018	6,127,475	39,036	0.64	1,946
2019	6,340,757	42,901	0.68	2,000
2020	6,147,171	39,713	0.65	1,732
2021	6,326,740	43,522	0.69	1,523
2022	6,251,867	47,698	0.76	1,569
2023	6,129,553	45,258	0.74	1,522
2024	5,764,433	41,347	0.72	1,623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15]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징수위탁을 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낮으며, 그간 징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유인체계의 문제가 국회에서 주로 지적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5.1.1. 이후 납부 또는 징수분부터 수수료율을 상향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5) 무재산, 행방불명, 강제징수 후 부족예상 등의 정리보류 체납액

[위탁 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현황]

(2024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백만원 초과금액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

(개정) 2025.1.1. 이후 납부 또는 징수분부터 적용

징수금액	수수료율
5백만원 이하	10%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8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자료: 국세청

그러나 최근 10년간 징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을 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체납액 1원억 이상,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체납자의 주소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임.

다음으로, 국세청이 직접 징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다양화하여 경쟁구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 「국세징수법」은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특정하고 있으나, 단순 사실행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통해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16]

16) 국세청은 상향된 위탁수수료율이 2025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액체납 건의 위탁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징수율 제고 등 제도개선 효과의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는 국제회의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가,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재외공관 주재 파견관의 해외과세자료 및 세정동향 수집활동 등 국제조세분야 업무를 위한 기본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4,200만원 중 21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2,142	2,142	-	-	2,142	2,112		30	2,57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관세청·조달청 및 특허청 등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들과 달리 국세청은 해외주재세무관의 선발절차·담당업무 및 업무실적 평가 등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외주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해외 과세자료 및 세정동향 수집 등을 위해 해외주재세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및 OECD에 총 9인을 파견 중임.

해외주재세무관은 ① 해외 진출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무애로 방지·해결 지원, ② 주재국 과세당국과의 협력·교류 지원, ③ 주재국의 주요 세제, 세정동향 자료 수집 및 우리나라의 세제, 세원동향 자료에 대한 안내·홍보, ④ 경제·통상 관련 업무지원

17) 일반회계-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국제조세관리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24년에는 세무애로 해결 지원 194건, 주재국 세제·세정 동향 파악 423건 등 총 968건의 업무를 수행하였음.[18)]

[2024년도 해외주재세무관 업무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세무애로 해결 지원	과세당국 간 협력·교류 지원	주재국 세제·세정 동향 파악	기타 (경제·통상지원등)	합계
건수	194	87	423	264	968

자료: 국세청

다만 관세청(「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조달청(「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특허청(「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등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들과 달리 국세청은 해외주재세무관의 선발절차, 담당업무, 업무실적 평가 등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외주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주재관 운영규정 현황]

	운영규정명	유형	기관명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3	문화부 주재관 선발운영 등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예규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부 주재관 선발·운영 지침	보건복지부예규	보건복지부
5	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6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국방부
7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조달청훈령	조달청
8	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	환경부훈령	환경부
9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관세청
10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경찰청
11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특허청예규	특허청
12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13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14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5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18) 해외주재세무관 업무실적은 외교부에서 주재관의 업무성과평가 목적으로 관리하는 수치로, 동일 사안에 대해 시차를 두고 여러 건의 전문을 작성·송부한 경우 각각 1건으로 집계되는 등 정확한 업무 수행 건수와는 일치하지 않음.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연례적으로 전액 불용되고 있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여전히 포상금 지급기준은 개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 예산도 전액 불용되는 등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19)]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20)]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국세청 훈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일정비율로 포상금이 지급됨.[21)22)]

2024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2,85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9년 이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으로 계좌보유자 성명·계좌번호 및 잔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잔액 등

2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1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제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요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누리집·세무서 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음.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2023.1.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2024년 예산도 전액 불용되는 등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청은 국회 시정요구를 조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세청에 대해 시정요구 13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11	-	13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11	-	13

국세청은 시정요구사항 13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2.3%)하고 1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3	12	92.3	1
예비비	-	-	-	-
합계	13	12	92.3	1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여전히 동일하며, 2024년 예산도 전액 불용되고 있어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세청은 동 시정요구에 대해 누리집·세무서 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음.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2023.1.1.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이 개정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2024년 예산도 전액 불용되는 등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2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0)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국세청은 누리집·세무서 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중임 ㅇ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23) ‘6.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두 번째 검토의견 관련

관세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27억 2,700만원(△68.9%)이 적은 37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억 7,000만원(△50.2%)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4,624	94,624	75,015	△19,609	120,072	120,072	37,345	△82,727	△37,670
총수입	94,624	94,624	75,015	△19,609	120,072	120,072	37,345	△82,727	△37,670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1억 2,600만원(△0.5%)이 적은 6,592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억 7,600만원(6.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40,249	640,249	622,173	△18,076	662,375	662,375	659,249	△3,126	37,076
총지출	640,249	640,249	622,173	△18,076	662,375	662,375	659,249	△3,126	37,076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00억 7,200만원으로, 7,541억 6,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73억 4,500만원이 수납(수납률 5.0%)되고 7,112억 2,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5억 9,1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20,072	120,072	-	120,072	754,162	37,345	711,226	5,591
합 계	120,072	120,072	-	120,072	754,162	37,345	711,226	5,591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95억 5,100만원으로, 이 중 6,592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4억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98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62,375	662,375	7,176	4,433 △4,433	-	669,551	659,249	441	9,861
합 계	662,375	662,375	7,176	4,433 △4,433	-	669,551	659,249	441	9,86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관세청 자산은 전년 대비 5,081억 1,400만원이 증가한 4조 7,151억 5,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969억 7,600만원, 무형자산이 104억 1,1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067억 3,800만원 증가한 3조 2,966억 7,800만원으로, 이는 유동부채 4,794억 3,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억 7,700만원이 증가한 1조 4,184억 8,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관세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805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87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3억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관세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715,158	4,207,044	508,114	12.1
		유동자산	3,199,959	2,702,983	496,976	18.4
		투자자산	1,590	1,096	494	45.1
		일반유형자산	1,455,047	1,454,772	275	0.0
		무형자산	49,279	38,868	10,411	26.8
		기타비유동자산	9,282	9,324	△42	△0.5
	부 채		3,296,678	2,789,940	506,738	18.2
		유동부채	3,183,076	2,703,640	479,436	17.7
		장기차입부채	70,618	68,245	2,373	3.5
		장기충당부채	42,984	18,055	24,929	138.1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418,480	1,417,103	1,377	0.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80,505	147,132	33,373	22.7
	재정운영순원가		787,617	668,317	119,300	17.9
	재정운영결과		787,617	668,317	119,300	17.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관세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관세청은 ① 수출입 통관 및 물류 촉진, ② 국가 재정수입 확보, ③ 대외 경제질서 확립, ④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등을 총 52개의 세부사업으로 수행하였음.

2024년도 관세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회의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관련규정의 정비 및 패널티 부과 등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둘째, AEO 업체들은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각종 검사 및 절차 간소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AEO 업체들의 법령 위반 사례 적발 시 AEO 공인취소를 활성화하고, 일반업체 대비 제재를 가볍게 하는 혜택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셋째, 감시정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전체 감시정 수 대비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 비율이 2020년 17.6%에서 2024년 36.7%까지 증가하여 1/3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노후된 감시정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가산금: 연례적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876억 7,800만원 중 121억 5,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3.9%)되고 미수납액 749억 8,000만원, 불납결손액 5억 4,200만원이 발생되었음.[2)]

‘가산금’ 은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체납 가산금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6,337억 800만원 중 11억 700만원이 수납(수납률 0.17%)되고 미수납액 6,314억 6,600만원, 불납결손액 50억 400만원이 발생되었음.[3)]

[2024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8,892	8,892	87,678	12,156	74,980	542	13.9	39
가산금	1,319	1,319	633,708	△2,763주1)	631,466	5,004	0.17	1,042

주 1) 가산금 수납액은 11억 700만원이나 환급액이 △38억 7,000만원 발생
2)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과태료(56-563)(심사국)

3) 일반회계-가산금(58-581)(심사국)

나. 검토의견

첫째, 관세청은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과태료 수납률은 2022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패널티 부과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관세청의 최근 4년간 과태료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1~2024년 각각 12.7%, 19.0%, 16.7%, 13.9%로 저조한 상황이며, 저조한 수납실적으로 인해 매년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수납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2021~2024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9,247	9,247	9,247	41,469	5,279	57.1	12.7	34,992	1,198
2022	4,813	4,813	4,813	54,887	10,421	216.5	19.0	44,273	194
2023	7,426	7,426	7,426	64,433	10,780	145.2	16.7	53,515	138
2024	8,892	8,892	8,892	87,678	12,156	136.7	13.9	74,980	542

자료: 관세청

[관세청의 과태료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역]

일시	건명	시행근거	주요내용
2021.9.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과태료 과징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과태료 과징금 법령 개정안 건의 과태료: 보전압류 및 명단공개제도 과징금: 체납가산금 제도
2022.10.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과태료 과징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과태료 과징금 법령 개정안 건의 과태료: 보전압류 및 명단공개제도 과징금: 체납가산금 제도
2024.12.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제고방안」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상시 체납정리 실시 과태료 과징금 법령 개정안 건의 과태료: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제도 과징금: 출국금지 제도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로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등 제도개선을 수차례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19.0% 이후 매년 낮아져 2024년에는 13.9%에 불과하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패널티 부과 등 과태료 수납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둘째, 관세청은 그간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수납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부 개인사업자의 대규모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 등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징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1~2023년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년 0.3~0.4% 수준이고, 2024년에는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11억 700만원으로 수납률은 0.17%까지 하락하였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6,315억원까지 증가하였음.

[2021~2024년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260	1,260	1,260	459,429	1,473	116.9	0.3	454,501	3,455
2022	1,000	1,000	1,000	515,459	1,972	197.2	0.4	504,916	8,572
2023	1,356	1,356	1,356	573,525	1,675	123.5	0.3	568,953	2,896
2024	1,319	1,319	1,319	633,708	△2,763주)	△209.5	△0.4	631,466	5,004

주) 체납소송에 따른 법원 조정권고(7.8억원) 및 경정청구(30.8억원)에 따른 환급 가산금 발생으로 수납액 감소
자료: 관세청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내역]

ㅇ 체계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및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 실시 -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지자체와의 합동단속* 등 * 서울세관-서울시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4.3.) 및 합동수색(2024.11.) -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및 감치*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한 납세 유도 * 관세정보위원회 의결(2024.10.) → 감치 30일 결정(2024.12.) → 감치 30일 집행(2025.1.8.~2.6.) ㅇ 가산금 제도개선 추진 -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과세자료 공유 확대*(2025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 (현행)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매매계약 자료 →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그간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수납실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4년 가산금 미수납액 규모 상위 10건을 보면, 미수납액은 총 4,369억 5,9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6,314억 6,600만원 중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건은 모두 '참깨 양허추천세율 위반' 건으로 전체 가산금 미수납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상위 3건의 가산금은 부과시기가 2013년으로 10년 이상 대규모 가산금이 체납되고 있는 것이므로,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일부 개인사업자의 대규모 체납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가산금 미수납액 규모 상위 10건]

(단위: 백만원)

위반사항	가산금 부과일	부과가산금 총액(A)	기 납부액 (B)	미수납액 (C=A-B)
참깨 양허추천세율 위반	2013.1.27., 2013.2.13., 2013.4.11.	193,102	655	192,447
참깨 양허추천세율 위반	2013.1.27., 2021.12.8.	104,659	-	104,659
참깨 양허추천세율 위반	2013.1.27., 2022.4.15.	86,913	-	86,913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	2017.3.29., 2021.4.30.	11,874	5	11,869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	2017.2.4., 2017.4.9.	7,922	-	7,922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신고 위반	2021.12.15.	7,315	-	7,315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	2017.4.9.	7,188	-	7,188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신고 위반	2021.2.14.	6,633	-	6,633
주류 저가신고	2013.7.24.	6,612	-	6,612
주류 저가신고	2013.7.24.	5,401	-	5,401
합계		**437,619**	**660**	**436,959**

자료: 관세청

〈세 출〉

2. 관세탈루심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등

가. 개 요

‘관세탈루심사’ 사업은 다국적기업·고세율 농산물 등 관행적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수요에 따라 민간기관에 공인심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2억 4,600만원 중 22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4)]

[2024년도 관세탈루심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관세탈루심사	2,246	2,246	-	-	2,246	2,216	-	30	2,25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의미하며, AEO는 2005.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범상 민·관 협력 제도로서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임.

AEO 업체들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경우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

4) 일반회계-관세탈루심사(1231-300)(심사국)

AEO 공인 업체는 수출업체·수입업체·관세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2025.4월말 기준 962개 업체가 공인을 유지 중이며, 등급[5]별로는 AAA 등급 39개, AA 등급 137개, A 등급 786개 업체임.

[2020~2025.4월 AEO 공인 현황]

(단위: 개)

연도	공인신청	공인 업체 수	공인취소[주]	연도말 공인 업체 수
2020	196	198	28	851
2021	137	157	36	873
2022	231	162	48	896
2023	233	203	34	917
2024	288	242	20	970
2025.4.	97	56	20	962

주)「관세법」 제255조의5에 따른 공인 취소 외에 유효기간 만료, 공인 반납 등 포함
자료: 관세청

[2025.4월 현재 등급별 업종별 AEO 공인 현황]

(단위: 개)

등급	수출 업체	수입 업체	관세사	화물운송 주선업자	보세운송 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선박 회사	항공사	하역 업자	합계
AAA	20	18	-	-	-	1	-	-	-	39
AA	51	49	11	6	3	12	4	-	1	137
A	220	118	91	242	43	61	3	2	6	786
합계	291	185	102	248	46	74	7	2	7	962

자료: 관세청

5) 공인심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됨.

공통	A	AA	AAA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 충족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 우수사례 또는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실적

나. 검토의견

첫째, 관세청은 AEO 업체들이 각종 검사,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AEO 업체들의 법령위반 사례 적발 시 AEO 공인취소를 활성화하고, 일반업체 대비 제재를 가볍게 하는 혜택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AEO 업체들의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위반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60건, 금액으로는 2,117억원 규모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2020년 87억원 수준의 법령위반 규모가 2023년 1,15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192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020~2024년 AEO 공인 업체의 법령위반 현황]

(단위: 건수,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법위반	밀수출입	3	54	1	12	-	-	1	380	1	1	6	446
	부정수출입	1	2	4	47	1	214	-	-	2	36	8	299
	가격조작	1	5	-	-	1	12	-	-	-	-	2	17
	포탈/부정감면	-	-	1	-	-	-	2	477	-	-	3	477
	허위신고 등	7	1	11	11	7	215	4	238	1	-	30	465
	소계	12	62	17	70	9	441	7	1,095	4	37	49	1,705
외국환거래법 위반		1	-	1	167	-	-	1	55	1	120	4	342
대외무역법 위반		1	3	-	-	1	10	-	-	1	35	3	48
기타 법률 위반		3	22	1	-	-	-	-	-	-	-	4	22
합계		**17**	**87**	**19**	**237**	**10**	**451**	**8**	**1,150**	**6**	**192**	**60**	**2,117**

자료: 관세청

AEO 업체들은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각종 검사 및 절차 간소화, 각종 편의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에서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관세법」 위반 등 법령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AEO 업체들의 법령위반 사례 적발 시 AEO 공인취소를 활성화하고, 일반업체 대비 제재를 가볍게 하는 혜택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둘째, 관세청은 AEO 공인심사 지원 업무를 매년 (사)한국AEO진흥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단일응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관세법」제255조의2[6]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하며, 사전심사·서류심사 등 심사의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탁기관을 보면 (사)한국AEO진흥협회[7]에 매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음.[8]

[2020~2024년 AEO 공인심사 민간위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수탁기관	계약방식	공인심사 건수
2020	990	952	(사)한국AEO진흥협회	수의	301
2021	990	947	(사)한국AEO진흥협회	수의	329
2022	990	954	(사)한국AEO진흥협회	수의	335
2023	990	954	(사)한국AEO진흥협회	수의	288
2024	1,190	1,174	(사)한국AEO진흥협회	수의	357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관세법 시행령」[9]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 고시를 통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이후에는 지정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이며, 올해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6)「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7) (사)한국AEO진흥협회는 AEO제도를 통한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지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상임이사로 재직 중임.

8) 2024년 AEO 공인심사 위탁 예산은 11억 9,000만원이며, 이 중 11억 7,500만원이 집행됨.

9)「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⑪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사)한국AEO진흥협회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해도 단일응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셋째, AEO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한국AEO진흥협회가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등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다른 연구기관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의 최근 10년간 AEO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총 6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었고, 이 중 4건을 (사)한국AEO진흥협회가, 2건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음.

(사)한국AEO진흥협회는 AEO 업체 및 AEO 공인을 받기위한 업체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데, '수요자 중심의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AEO 기업의 사후관리 공인기준 효율화 방안 연구', '2020년 AEO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AEO 제도의 수요자인 협회가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합리화를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다른 연구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AEO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건명	예산액	집행액	수행기관	계약방식
2015	수요자 중심의 AEO 공인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연구	50	50	(사)한국AEO진흥협회	제한경쟁
2016	AEO MRA 효과 측정 및 이행 강화 방안 연구	40	39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경쟁→수의
2017	AEO MRA 체감도 제고 및 국경관리기관 협업시스템 구축 연구	60	5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반경쟁→수의
2018	AEO 기업의 사후관리 공인기준 효율화 방안 연구	40	40	(사)한국AEO진흥협회	제한경쟁
2020	2020년 AEO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50	50	(사)한국AEO진흥협회	일반경쟁
2023	AEO 효과의 정량적 측정 방법 연구	30	30	(사)한국AEO진흥협회	일반경쟁→수의
합계		270	267	-	-

자료: 관세청

3. 특송화물 통관지원: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 단속강화 필요

가. 개 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지원’ 사업은 특송화물의 통관 처리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임차료,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억 3,900만원 중 53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송화물 통관지원	5,439	5,439	-	-	5,439	5,385	-	54	6,58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특송화물의 불법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2015년 약 13만건에서 2024년 44만건 수준으로 2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관시간의 단축노력과 함께 마약류 등 국민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관세청의 특송화물[11)] 통관 현황을 보면, 특송화물 건수는 2024년 1억 9,211만건으로 2015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평균 통관시간은 2020년 7.9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3.3시간으로 2020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10) 일반회계-특송화물 통관지원(1132-302)(통관국)

11) 특송화물은 상품의 신속한 국제 이동을 위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특송업체)에 의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의미함.

[최근 10년간 특송화물 통관 현황]

(단위: 천건, 백만불, 시간, 명, 억원)

구분	특송화물 건수	특송화물 금액	평균 통관시간	관련업무 종사자수주)	예산액
2015	23,501	15,806	6.1	134	-
2016	26,929	16,874	5.4	138	5
2017	33,341	18,518	7.4	155	21
2018	42,107	19,508	6.9	162	32
2019	52,536	19,952	7.6	184	42
2020	73,066	22,216	7.9	275	53
2021	97,902	23,654	7.0	288	56
2022	105,088	24,491	6.7	304	71
2023	141,128	23,669	4.6	315	63
2024	192,110	24,462	3.3	309	54

주) 특송통관 X-ray 검색, 검사, 심사 직원 포함

자료: 관세청

그러나 관련업무 종사자 수는 2015년 134명에서 2024년 309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쳐 1인당 담당하는 특송화물 건수는 2015년 약 17만 5,380건에서 2024년 62만 1,715건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 그럼에도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종사자 수는 34명 증가에 불과하고, 연간 예산은 2020년 53억원, 2024년에는 54억원으로 1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최근 10년간 특송화물 불법 위해물품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세관장 확인대상주1)	법령위반주2)	사회안전 위해물품주3)	기타주4)	합계
2015	25,353	2,672	741	100,370	129,136
2016	26,746	7,508	738	77,897	112,889
2017	36,099	10,006	1,344	63,805	111,254
2018	36,391	10,910	1,279	66,368	114,948
2019	34,564	13,857	2,365	74,969	125,755
2020	61,768	44,792	3,416	115,711	225,687
2021	56,408	34,886	4,483	144,396	240,173
2022	80,989	62,459	8,011	142,080	293,539
2023	90,563	67,779	7,557	94,152	260,051
2024	174,659	84,685	9,388	170,818	439,550

주 1) 검역대상 등

2) 대외무역법(원산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

3) 마약, 총포·도검류 등

4) 품명상이·수량과다 등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검사결과 적발된 건수

자료: 관세청

또한 특송화물의 불법 위해물품 단속 현황을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2015년 약 13만건에서 2024년 44만건 수준으로 24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법령위반 건수는 30배 이상,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1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마약밀수 단속 추이]

(단위: 건, kg,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약밀수 단속건수	696	1,054	771	704	862
마약밀수 단속중량	148	1,272	624	769	787
마약밀수 단속금액	1,592	4,499	600	613	866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

4. 감시정 운영: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감시정 운영’ 사업은 공항만·해상에서 「관세법」 위반 적발,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감시정[12]의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1억 8,000만원 중 30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1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감시정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항만감시지원	16,632	16,632	-	-	16,632	16,029	-	603	14,937
감시정 운영	3,180	3,180	-	-	3,180	3,069	-	111	3,24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감시정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전체 감시정 수 대비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 비율이 2020년 17.6%에서 2024년 26.7%까지 증가하여 1/4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노후된 감시정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시정의 종류는 선체의 재질에 따라 강화플라스틱선, 알루미늄선 및 강선으로 구분되고, 내구연한은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는 선령 15년이며, 강선은 20년임.[14]

---

12)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시정“이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일반회계-공항만감시지원(1131-305)(통관국)

14)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정 수[15]는 2020년 34척이었으나 2021년 32척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 이후 30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감시정 수는 2020년 6척에서 2022년 8척으로 증가한 후 2024년까지 감소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감시정 수 대비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 비율은 2020년 17.6%에서 2024년 26.7%로 증가하여 1/4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임.

[2020~2024년 관세청 감시정 보유 현황]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감시정 수(A)	34	32	30	30	30
내구연한(년)	15	15	15	15	15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 수(B)	6	7	8	8	8
B/A(%)	17.6	21.9	26.7	26.7	26.7
감시정 관련 예산액	4,380	5,969	5,053	5,831	5,738

주) 감시정 내용연수는 (FRP, 알루미늄) 15년, (강선) 20년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된 감시정은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으나,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 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 운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16]

제67조(감시정의 종류) 감시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강화플라스틱선"(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FRP 船)은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알루미늄선"(Aluminum 船)은 선체의 재질이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강선"(鋼船)은 선체의 재질이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69조(감시정의 내용연수) 감시정의 안전운항에 지장 없이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사용연수(이하 "내용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2. 강선: 선령 20년

15)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68조(감시정의 정수) ① 감시정의 정수는 세관의 업무량, 조직 및 운용인력의 규모, 업무 관할구역,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며 별표 5와 같다.

16)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0조(감시정의 교체) ① 세관장은 제69조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감시정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박검사에 합격하고 운항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성능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까지 계속 운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시정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 등으로 선박이 파손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과다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2. 공인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선체의 경도(硬度), 두께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계속 운항시 사

그러나 예산상의 한계로 내구연한이 지난 감시정을 모두 신규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련규정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감시정은 항만·해상에서 법률 위반사항의 적발,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된 감시정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의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감시정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새로운 선박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관세청에 대해 시정요구 10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4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4	6	-	10
예비비	-	-	-	-	-	-	-
합계	-	-	-	4	6	-	10

관세청은 시정요구사항 10건에 대해 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0.0%)하고 1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	9	90.0	1
예비비	-	-	-	-
합계	10	9	90.0	1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관세청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관세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26) 관세청은 장비구입을 위한 수요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등 대량구매를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조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81억 6,100만원(19.2%)이 많은 4,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 7,000만원(6.9%)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20,228	320,228	394,630	74,402	354,039	354,039	422,200	68,161	27,570
총수입	320,228	320,228	394,630	74,402	354,039	354,039	422,200	68,161	27,570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2억 4,700만원(1.7%)이 많은 2,467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8,900만원(2.6%)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63,074	263,074	240,444	△22,630	242,486	242,486	246,733	4,247	6,289
총지출	263,074	263,074	240,444	△22,630	242,486	242,486	246,733	4,247	6,28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026억 8,800만원으로, 9,783억 8,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125억 3,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2%)되고 658억 5,300만원은 미수납 되었음.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조달특별회계	802,688	802,688	-	802,688	978,384	912,531	65,853	-
- 손익계정	446,953	446,953	-	446,953	619,770	553,917	65,853	-
- 자본계정	355,735	355,735	-	355,735	358,614	358,614	-	-
합 계	802,688	802,688	-	802,688	978,384	912,531	65,85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178억 7,000만원으로, 이 중 8,008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33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5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조달특별회계	802,688	802,688	15,182	±6,373	-	817,870	800,885	3,390	13,595
- 손익계정	446,953	446,953	6,648	±6,373	-	453,601	445,535	434	7,632
- 자본계정	355,735	355,735	8,534	-	-	362,269	355,350	2,956	5,963
합 계	802,688	802,688	15,182	±6,373	-	817,870	800,885	3,390	13,59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조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99억 600만원이 감소한 2조 5,895억 7,6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85억 9,5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274억 5,7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1,300만원 증가한 87억 7,400만원으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각각 4,400만원, 7,0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00억 1,900만원이 감소한 2조 5,808억 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조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123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 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7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7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589,576	2,609,482	△19,906	△0.8
		유동자산	1,766,455	1,793,912	△27,457	△1.5
		투자자산	4,334	4,199	135	3.2
		일반유형자산	792,339	793,744	8,595	1.1
		무형자산	21,482	23,703	△2,221	△9.4
		기타비유동자산	4,966	3,294	1,042	26.6
	부 채		8,774	8,661	113	1.3
		유동부채	3,543	3,499	44	1.3
		장기차입부채	5,228	5,158	70	1.3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3	4	△1	△2.1
	순자산		2,580,802	2,600,821	△20,019	△0.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12,315	△98,018	△14,297	14.6
	재정운영순원가		△195,966	△162,321	△33,645	20.7
	재정운영결과		17,433	△115,361	132,794	△1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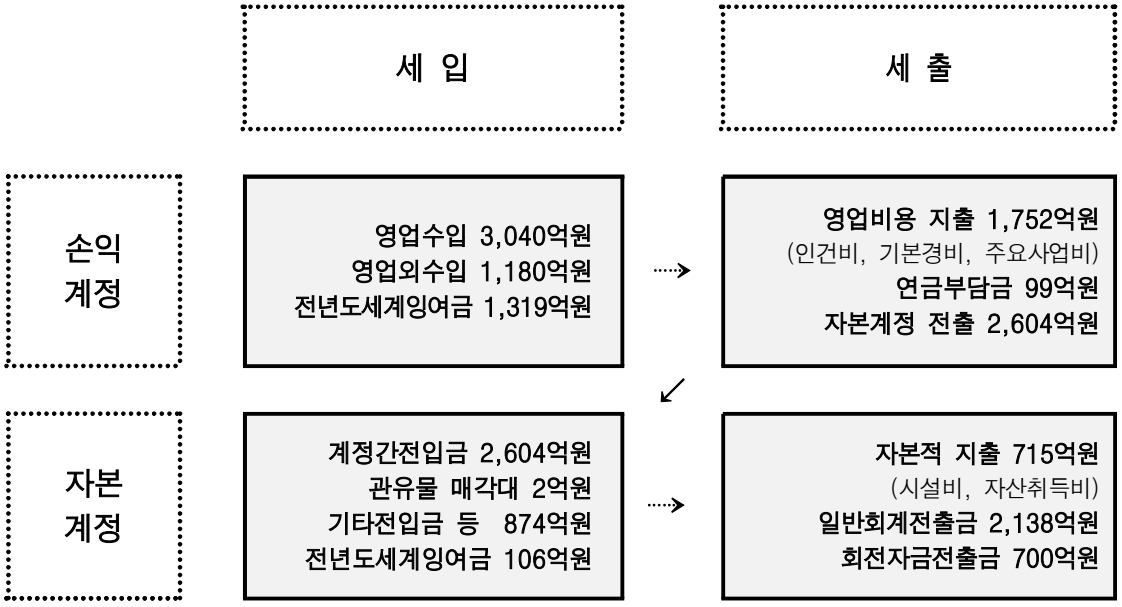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조달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외에 별도로 보유하는 회전자금으로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익금은 조달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함.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138억원, 회전자금으로 7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조달특별회계 재정흐름은 다음과 같음.

[2024 회계연도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 조달청은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글로벌 조달을 통한 신 수출시장 개척,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성공적 개통을 정책목표로, 총 27개의 세부사업에서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 혁신제품 해외실증, 조달시스템 연계 수출지원, 국민안전물자의 강도 높은 품질 대책 시행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는 한편 미수납액 증가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은 매년 과소계상됨에 따라 초과수납이 발생하여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이 과다보유되고 있으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회전자금 전출금은 2024년에 알루미늄 8,000톤, 구리 1,800톤, 니켈 700톤 확충을 위하여 회전자금 전출금 7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니켈을 제외한 알루미늄과 구리의 확충량이 이에 미달하고 지급예비시재액을 계획 대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철금속 구매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넷째,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4종)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운영하면서, 내역변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 없이 유지보수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을 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조달특별회계】

〈세　입〉

1.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증가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06억 8,600만원이고, 610억 3,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51억 8,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4%)되었음.[2)]

‘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 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929억 1,400만원이고, 1,318억 7,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3)]

[2024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시설계약 사업수입	40,686	40,686	61,033	55,189	5,844	-	90.4	52,869
전년도 세계잉여금	92,914	92,914	131,871	131,871	-	-	100.0	93,08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조달특별회계-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45-454)(시설사업국)

3) 조달특별회계-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89-893)(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첫째,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는 한편 미수납액 증가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의 최근 4년 예·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이 110%가 넘고 2024년에는 135.6%에 달하여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2021년~2024년 시설계약사업수입(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37,869	37,869	-	37,869	45,709	43,449	114.7	95.1	2,260	-
2022	38,917	38,917	-	38,917	46,321	43,023	110.6	92.9	3,298	-
2023	39,306	39,306	-	39,306	49,752	45,355	115.4	91.2	4,397	-
2024	40,686	40,686	-	40,686	61,033	55,189	135.6	90.4	5,844	-
2025	52,869		-							

자료: 조달청

시설계약사업수입 항목별 세부적인 예산 대비 수납액을 보면, 공사계약, 총사업비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및 기술용역계약 검토에서 초과수납이 크게 발생하였음.

[2022년~2024년 시설계약사업수입 항목별 예산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공사계약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기술용역 계약	총 계
2022	예산(E)	179.05	90.57	32.78	7.14	20.17	59.46	389.17
	수납액(F)	180.40	101.42	28.43	6.55	37.25	76.18	430.23
	차액(F-E)	1.35	10.85	-4.35	-0.59	17.08	16.72	41.06
2023	예산(G)	180.79	89.70	35.10	6.46	23.46	57.55	393.06
	수납액(H)	182.68	98.01	42.01	8.82	46.05	75.98	453.55
	차액(H-G)	1.89	8.31	6.91	2.36	22.59	18.43	60.49
2024	예산(G)	172.66	100.75	36.75	5.61	28.48	62.61	406.86
	수납액(H)	245.29	69.32	53.86	5.64	50.63	127.14	551.89
	LH 관련	44.78	-	-	-	-	42.25	87.03
	차액(H-G)	**72.63**	-31.43	**17.11**	0.03	**22.15**	**64.53**	145.03

자료: 조달청

이러한 초과수납에 대해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관련 계약업무가 2024년 4월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계약 및 기술용역계약의 수납이 크게 증가하여 시설계약사업수입 전체의 초과수납 규모가 크게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LH 공공주택 관련 수납내역을 제외하더라도 초과수납의 규모가 58억원으로 큰 편임.

또한 조달청은 2025년 예산부터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예산 추계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개선된 추계 방식도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5년 시설계약사업수입 중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물량을 3년 평균 실적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2022년 실적이 포함됨에 따라 실적에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계적정성 검토도 최근 3년 실적으로 계산하였는데 기존 산식과 차이가 없어 세입예산 추계 방식의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시설계약사업수입은 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설계약사업수입은 미수납액 규모가 2021년 22억 6,000만원에서 연차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에는 58억 4,400만원에 달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중은 2021년 4.9%에서 2024년 9.6%로 4.7%p 증가하였음.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별 현황을 보면,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2024년 미수납액 규모 및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요기관 예산부족	**412**	**1,267**	**2,221**	**2,855**
납기미도래	1,848	2,031	2,176	2,988
합계	**2,260**	**3,298**	**4,397**	**5,844**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중	**4.9**	**7.1**	**8.8**	**9.6**

자료: 조달청

이와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조달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시설계약 요청 시 조달수수료 납부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도록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음에도 미수납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수납액 증가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 상위 10개 기관]

(단위: 백만원)

기관명	미수납액	미수납액 규모 상위 3개 사업	사업명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620	111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109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86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76	41	영동-용산1-2 도로건설공사
		40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36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84	101	대전대동2 1,2BL 공동주택 및 조성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67	울산다운2 A-1, 2, 10BL 아파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62	완주삼봉 S-1BL 및 익산송학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365	365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05	205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매립공사부문)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59	32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20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19	안마항 정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154	67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61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
		18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장기계속2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16	48	일산병원 건강 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건축)
		42	일산병원 건강 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0	일산병원 건강 통합관리센터 건립공사(전기)
국방시설본부	113	56	23-D-00부대 설계용역(고양병원 개편 B584)
		20	22-국-00부대 설계용역(B596)
		13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 시설공사(육군항공학교)(B573)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9	26	국도3호선 동이천IC 도로건설공사
		24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6-2공구)
		18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자료: 조달청

둘째, 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은 매년 과소계상됨에 따라 초과수납이 발생하여 조달특별회계 내 여유재원이 과다보유되고 있으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년~2024년 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의 수납실적을 보면 수납률이 최고 208.5%, 최저 116.4%로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2024년의 경우 예산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수납률이 141.9%에 달하고, 초과수납액은 389억 5,700만원임.

[2021년~2024년 전년도 세계잉여금(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초과 수납액 (C-A)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21	26,090	26,090	26,090	28,601	30,384	4,294	116.4	100.0
2022	29,548	29,548	29,548	56,568	56,568	27,020	191.4	100.0
2023	37,519	37,519	37,519	78,237	78,237	40,718	208.5	100.0
2024	92,914	92,914	92,914	131,871	131,871	38,957	141.9	100.0

자료: 조달청

이는 2023년 기타영업외잡수익 중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약 700억원 초과수납된 것에 주로 기인함.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은 2022년에 2021년 대비 결산 기준 2.7배 증가하고,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결산 기준 5.2배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2021년~2023년 동안 큰 변동이 없어 초과수납이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음.

[2020년~2024년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12,655	12,877	12,655	15,845	11,875	43,218	13,284	82,044	48,200	96,382

자료: 조달청

회전자금 예치이자 수입에서 이처럼 초과수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도 초과수납이 발생하게 된 것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초과수납은 해당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어져 다음연도 결산 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초과수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과소 계상은 매년 조달특별회계 내 과도한 여유재원을 잉여금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재정운용상 비효율을 야기함.[4]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과도한 세계잉여금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조달청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이나 비축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고, 조달청은 이에 대하여 2024년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은 예상가능한 세입 증가분과 세출 불용분을 모두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시정요구사항을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은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없고, 8억 6,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500만원이 수납(수납률 2.8%)되었음.[5)]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은 국유재산 임대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없고, 2,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6)]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손익)	-	-	865	25	840	-	2.8	-
기타재산 이자수입 (손익)	-	-	24	24	-	-	100.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 조달특별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59-596)(기획조정관)

6) 조달특별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54-546)(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조달청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의 최근 4년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의 경우 매년 8억원 이상이 징수결정되어, 최소 600만원, 최대 9,000만원 수납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2,5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1년~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865	25	-	0.3	840	-
2022	-	-	-	-	846	6	-	0.7	840	-
2023	-	-	-	-	930	90	-	9.6	840	-
2024	-	-	-	-	865	25	-	2.8	840	-

자료: 조달청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2,4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1	1	-	100.0	-	-
2022	-	-	-	-	2	2	-	100.0	-	-
2023	-	-	-	-	21	21	-	100.0	-	-
2024	-	-	-	-	24	24	-	100.0	-	-

자료: 조달청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의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하여 조달청은 예산 편성 당시 수납액 발생 여부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세입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당 세입과목에서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세입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과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의 경우 조달청 예산에 2023년부터 R&D 사업이, 2024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가 반납되고 있고 향후 국고보조사업의 잔액 및 이자도 반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이 더욱 필요함.

〈세　출〉

3.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회전자금을 통한 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700억원 전액을 집행(집행률 100.0%)하였음.[7)]

[2024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회전자금 전출금	70,000	70,000	-	-	70,000	70,000	-	-	8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조달청은 2027년까지 비축대상 비철금속의 재고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재고목표로 설정하여 재고량 확대를 위해 2024년 비철금속 구매자금 700억원을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여 회전자금의 규모를 확충하였음.

동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알루미늄 8,000톤 확충을 위하여 261억원, 니켈 700톤 확충을 위하여 239억원 등 총 5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구리 1,800톤 확충을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되었음.

7)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전출금(9701-971)(공공물자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에 알루미늄 8,000톤, 구리 1,800톤, 니켈 700톤 확충을 위하여 회전자금 전출금 7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니켈을 제외한 알루미늄과 구리의 확충량이 이에 미달하고 지급예비시재액을 계획 대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철금속 구매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2023년~2024년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8], 2024년 알루미늄 재고량은 전년 대비 6,243톤, 구리는 456톤, 니켈은 883톤이 각각 증가하여 알루미늄과 구리의 경우 예산상 계획 대비 재고 확충이 각각 1,757톤 및 1,344톤 부족하였음.

특히 구리의 경우 재고량 확충을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것임에도 재고량 확충이 예산상 계획 대비 25.3%에 불과한 문제가 있음.

한편 비축물자 사업자금의 지급예비시재액은 계획 대비 1,513억원 증가한 2,024억원으로, 비철금속 확충을 위하여 증액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지급예비시재액으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중 비축물자 사업자금 운용계획 발췌]

(단위: 억원)

구 분	'23년 실적	'24년 계획(A)	'24년 실적(B)	B-A
비축물자 자금규모	14,010	13,837	13,833	△4
비축물자 재고 자산	10,720	12,780	11,250	△1,530
비축사업 소요 자금	362	362	374	12
파생상품 거래 자금	184	184	185	1
지급예비시재액	**2,744**	**511**	**2,024**	**1,513**

주) 2024년 비축사업 자금규모는 마스크 비축자금 873억원 반납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자료: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사업자금 내 지급예비시재액은 매년 계획 대비 과다하게 보유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지급예비시재액은 여유자금 성격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되는데,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이나 MMDA 형태로 예치된 여유자금에 비하여 운용수익률이 낮아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과다 보유 시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저해됨.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조달청 회전자금 내 비축물자 사업자금 지급예비시재액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A)	620	266	1,397	511
실적(B)	2,266	3,517	2,744	2,024
B-A	**1,646**	**3,251**	**1,347**	**1,513**

자료: 조달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회전자금을 통한 비철금속 구매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급예비시재액 규모를 고려하여 향후 회전자금 전출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비철금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과 구리의 재고 확충량 실적이 예산상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비철금속 전체의 목표재고일수상으로는 연간 재고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목표재고일수의 산정 방식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달청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7년까지 비축대상 비철금속의 재고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2023년에는 50일, 2024년에는 53일로 목표재고를 확대하고,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의 비축량을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임.[9)]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2024년에 비철금속 전체의 재고량이 계획된 목표재고일수 53일을 충족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60일분까지 재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년 예산상 계획과 대비하여서는 비철금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루미늄과 구리의 재고 확충량이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비철금속 전체 목표재고일수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9) 조달청 보도자료, 「비철금속 '27년까지 60일분 확보('23년 50일분→'24년 53일분) 긴급수급조절물자는 올해 안에 60일분 이상 확보」(2024. 2. 29.) 및 「'25년 비축 계획 확정, 비철금속 비축량 55일분으로 확대, 복합비료 원료 신규 비축 추진」(2025. 2. 21.)

[2024년 비철금속 재고일수]

(단위: 일)

품명	2024년 계획	2024년말 재고	과부족
알루미늄	65	64	△1
구리	50	48	△2
납	31	33	1
아연	36	36	-
주석	69	70	1
니켈	70	70	-
합계	53	53	-

자료: 조달청

이는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체 목표재고일수 및 실제 재고일수가 비철금속 6종의 각 재고일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것에 따른 것임. 이에 따라 비철금속 재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루미늄과 구리의 재고 확충량이 부족하여도 연말에 비철금속 중 비중이 적은 납과 니켈 등을 집중 확충할 경우 비철금속 전체의 목표재고일수를 달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비철금속의 목표 대비 재고 확충 여부를 관리할 경우 금속별 재고 확충량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금속별 목표재고일수를 관리하는 등 현행 목표재고일수 산정 방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비철금속의 재고목표 및 실제 달성 여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회전자금 운용계획의 작성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보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025년 회전자금 운용계획 중 비축사업의 2024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비축은 계획 대비 364억원 미달하고 방출은 계획 대비 440억원 초과하며 방출 규모가 비축 규모보다 커 연간 순비축량은 (-)인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중 조달사업계획 일부 발췌]

(단위: 억원)

구 분		'24년 계획(A)	'24년 실적(B)	B-A
내자 사업(물품・서비스)		443,000	453,504	10,504
비축 사업	비축	4,068	3,704	△364
	방출	3,852	4,292	440
	소계	447,068	7,996	△76

자료: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그러나 동일한 회전자금 운용계획 중 비축물자 사업자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비축물자 재고 자산은 전년 대비 530억원 증가하여 연간 순비축량이 (+)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운용계획의 연간 순비축량 실적이 상충되는 결과를 보임.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중 비축물자 사업자금 운용계획 발췌]

(단위: 억원)

구 분	'23년 실적(A)	'24년 계획	'24년 실적(B)	B-A
비축물자 재고 자산	10,720	12,780	11,250	530

자료: 2025년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운용계획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① 방출실적의 경우 회전자금 운용계획상 실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보유재고로 관리되는 대여방출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 ② 비축실적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방출실적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작성하여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연간 순비축량이 (+)가 되고 ③ 2024년에는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되어 구매보다 방출가격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축실적과 방출실적에 있어 부가세 포함 여부를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다르게 작성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계획 작성상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4.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계약 변경 관련 「국고금 관리법」 준수 필요

가. 개 요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공공조달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운영유지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66억 8,900만원 중 262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2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정보화(정보화)	22,249	22,249		4,440	26,689	26,298	208	183	18,59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의 경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4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운영되었는데, 내역변경 등을 통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변경(유지보수 연장)을 하라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의 취지에 벗어나 계약 변경 이후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조달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4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2024년 6월 개통 예정임에 따라 2024년 예산에 운영 및 유지관리비 6개월분이 반영되고 2024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조달청은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4종)을 연장운영하기로 하고, 2024년

10) 조달특별회계-조달정보화(정보화)(1131-501)(공정조달국)

6월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 연장을 위해 계약을 변경체결하였음.

[(구)나라장터 시스템 및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상대자 소관업무	구 분	계약금액	계약기한	수정 계약사유	비고
소****텍 (구나라장터 운영유지)	최 초 (2024.01)	4,481	2024.06.30.	-	
	1차 조정 (2024.06)	**8,963**	**2024.12.31.**	**구 나라장터 운영 사업 연장**	**구 나라장터 운영유지비(추정치) 37억 3,200만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유지)	최 초 (2023.01)	7,035	2023.12.31.	-	-
	1차 조정 (2024.01)	10,580	2024.06.30.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시스템 4종의 운영유지 사업 연장**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관리 대상 4종 시스템 운영유지비(추정치) 12억 6,600만원**
	2차 조정 (2024.06)	**14,125**	**2024.12.31.**		
	3차 조정 (2024.8)	**12,772**	**2024.10.22.**		
	4차 조정 (2024.10)	**12,944**	**2024.10.31.**		
	5차 조정 (2024.10)	**14,125 (2024년 7,089)**	**2024.12.31.**		

자료: 조달청

그런데 (구)나라장터 시스템 등의 연장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계약체결 시점에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조달청은 2024년 8월, 10월 및 11월에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음.

[(구) 나라장터 시스템 연장운영 관련 예산 내역변경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2024.8.2.)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131-505)	210-15	3,700	조달정보화 (1131-501)	210-15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지연에 따른 구 나라장터 운영유지예산 부족분 충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 조정 (2024.8.8.)	조달정보화 (1131-501)	210-02	56	조달정보화 (1131-501)	210-15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지연에 따른 (구) 나라장터 운영유지예산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024.10.23)	조달정보화 (1131-501)	210-02	82	조달정보화 (1131-501)	210-15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지연에 따른 조달정보지원 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통합대상 시스템) 운영유지예산 부족분 충당
내역 변경 (2024.11.22)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131-505)	210-15	920	조달정보화 (1131-501)	210-15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지연에 따른 조달정보지원시스템 운영유지예산 부족분 충당
세목 조정 (2024.11.27.)	조달정보화 (1131-501)	210-01	20	조달정보화 (1131-501)	210-15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지연에 따른 조달정보지원 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 통합대상시스템) 운영유지예산 부족분 충당
		210-02	244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의 개통일 확정 없이는 예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유지보수 계약기한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확보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1] 조달청은 (구)나라장터 시스템 등의 연장운영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계약을 변경체결하여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음.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예산 확보 없이 계약 변경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등

가. 개 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AI, 모바일분야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8억 6,700만원 중 151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6%)되고,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정보화)	15,843	15,843	6,464	△4,440	17,867	15,117	55	2,695	14,43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구축 지연에 따라 2024년 예산 중 44억 4,0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고, 26억 9,5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 추진 과정과 특이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2024년 6월 개통을 전제로 유지관리비 6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내 개통이

12) 조달특별회계-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1131-305)(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되지 못하고 2025년 1월 개통됨에 따라 40억 1,9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고, 잔액 25억 700만원이 불용됨.

임차료의 경우도 2024년 6월 개통을 전제로 6개월분 9,300만원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고,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 및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하여 편성된 인쇄비 3억 2,800만원도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707만원만 집행되었음.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3차 계약이 당초 2023년 12월 31일 완료되고, 마지막인 4차 계약이 2024년 1월 시작되어 5월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업 추가 등에 따라 3차 계약이 연장되고 이후 4차 계약도 연장되어 부득이하게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장기 2차~4차 계약의 계약기간과 변경 사유 등]

ㅇ 장기 2차 계약
- 최초: 2022. 3. 21. ~ 2022. 12. 31. 277억 8,400만원(2022. 3. 21.)
- 변경: 2022. 3. 21. ~ 2023. 3. 31. 302억 8,800만원(2022. 12. 27.)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변경 사유〉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 업무가 조달청으로 위탁됨에 따라 국방물자 품질보증시스템 신규 개발 필요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9조(조달방법 등)
- 이에 따른 물량 증가로 계약기간 연장

ㅇ 장기 3차 계약
- 최초: 2023. 1. 1. ~ 2023. 12. 31. 296억 7,900만원(계약일 2023. 1. 11.)
- 변경: 2023. 1. 1. ~ 2024. 3. 31. 296억 7,900만원(변경계약일 2023. 12. 28.)

〈계약기간 연장사유〉
- 계약기간 중 코로나 19확산
- 대규모 DB변경에 따른 난이도 상승 등
- 과업 추가에 따른 2차 계약연장 기간(3개월) 고려

ㅇ 장기 4차 계약
- 최초: 2024. 5. 2. ~ 2024. 10. 22. 71억 2,200만원(계약일 2024. 5. 16.)
- 1차 변경: 2024. 5. 2. ~ 2024. 12. 31. 71억 2,200만원(변경계약일 2024. 10. 18.)

〈계약기간 연장사유〉
ㅇ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4.6.18) 등에 따라 공공시스템의 안정성의 중요도가 확연히 높아져,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높여 안정적 개통 필요

ㅇ 추가 테스트 실시
- 낙찰방법 등 특별 케이스 별도 점검
- DB화면 비교검증, 복잡도가 높은 공사분야 입찰 심사 추가 검증 등

- 2차 변경: 2024. 5. 2. ~ 2025. 2. 20. / 71억 2,200만원(변경계약일 2024. 12. 19.)

〈계약기간 연장사유〉
ㅇ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활동 실시
- 3차 리허설 추가 실시
- 사용자 테스트 추가 실시 등

ㅇ 연말 개통 시에는 연말 업무 쏠림·사용법 미숙에 따른 연도 내 계약 미체결, 그에 따른 예산 불용 등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등을 고려 계약자와 연장 합의

자료: 조달청

그러나 2차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음에도, 3차 계약은 당초 예정대로 2023년 1월 1일 시작됨에 따라 3개월간 2차와 3차 계약이 중첩 수행되어 2023년 내 3차 계약이 완료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3차 계약의 변경이 2023년 12월 28일 이루어졌고, 계약 변경 이전부터 업무 난이도 상승 및 과업 추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 논의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3차 계약의 지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달청은 실제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적정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 추진 과정과 특이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PMO[13]와 계약기간 연장을 하면서 자체전용을 통한 예산 확보 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조달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3) PMO(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프로젝트 관리 조직)

조달청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었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PMO와 계약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2024년 12월 26일 체결하였음.

그러나 PMO 연장운영을 위한 예산은 수정 계약체결 시점에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조달청은 PMO 추가 계약대금 확보를 위한 자체전용을 2024년 12월 30일 실시하였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PMO 계약기간 연장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230)	차세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구축 (1131-505)	210-15	35	차세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구축 (1131-505)	260-01	2024년 차세대 나라장터 PMO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계약대금 확보

자료: 조달청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4] 조달청은 해당 조항의 취지와 달리 PMO 연장운영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확보 없이 수정계약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6.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글로벌 조달시장의 개방 추세에 따라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7억 6,900만원 중 26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2%)되고, 1억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4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3,585	3,585	-	-	3,585	3,440	-	145	4,505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759	2,759	-	-	2,769	2,635	-	134	2,4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해외조달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에 대하여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8억 8,000만원과 일반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 구성됨.

15) 조달특별회계-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첫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중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조달청이 40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일반용역계약을 통하여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조달청이 40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나, 실제로 조달청은 기본계획 수립·관리기관 감독 및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급 업무만 실제로 수행하고, 이외에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억 1,466만원을 지급하였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제안요청서상 용역범위]

가.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로드맵 및 사업 운영 방안 마련 나.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기업선정 방안 마련 다. 선정기업 지원 및 수출서비스 제공업체 관리 운영 방안 마련 라. 선금 지급, 정산, 업체 간 계약 등 보조금 지출 방안 마련 마. 종합지원사업 현황 보고 및 성과평가

자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2024~2025) 제안요청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16]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17]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그런데 조달청의 실제 보조사업 운영 방식을 보면 보조사업자인 참여 기업이 한국조달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조달연구원이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후보 기업을 선정하며, 조달청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됨.

[선정절차 흐름도]

❶ 신청·접수	❷ 신청 서류 검토	❸ 타당성 평가	❹ 최종 검토·승인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청
참여기업이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해당 확인	서비스별 적정성, 지원타당성 평가로 최종 후보 기업 선정	관리기관의 검증을 종합 판단 후,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한국조달연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조사업 수행방식이 간접보조사업이 아님에도 간접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정보공시를 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자 관련 다양한 규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달청의 이러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은 사실상 보조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사업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동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한국조달연구원 위탁 없이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또는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동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둘째,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용역을 위해 한국조달연구원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사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장기계속계약 요건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계약 체결 시 법령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을 위해 한국조달연구원과 일반용역계약을 하면서 2024년~2025년 2개년에 걸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거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8)]

그러나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용역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수행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계약법령상의 장기계속계약 체결 요건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면 용역수행기관의 성과 또는 수행능력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업 수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은 현행 법령상의 요건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계약체결 방식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국가계약법령상의 규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7.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시 제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가. 개 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제안제품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을 평가하여 지정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을 통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7억 6,300만원 중 547억 6,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4년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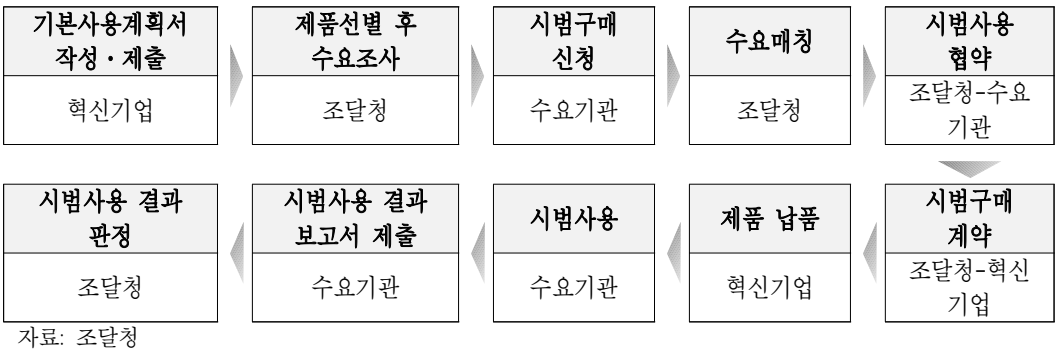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53,000	53,000	1,763	-	54,763	54,761		2	49,4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①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② 조달청은 해당 수요를 혁신기업과 매칭하여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③ 혁신기업이 수요기관에 시범구매용 제품을 납품, ④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절차]



자료: 조달청

19)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신성장조달기획관)

나. 검토의견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시 제출이 필수적이나, 기한 내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제출 시의 제재도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36조에 따르면,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0]

그러나 2022년 이후 전체 1,186건 중 163건이 1개월 이내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022년~2024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현황]

구분	1개월 이내 제출	1개월 이내 미제출	합계
시범사용완료보고서 제출(건)	1,023	163	1,186

자료: 조달청

그리고 이 중 16건은 2025년 4월 기준으로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현황(2025년 4월 기준)]

연번	제품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1	정전상황에도 구동이 가능한 의료용냉장고	7,700	2024.8.30.~2024.12.28.
2	광케이블식 감지기를 포함하는 복합형 화재감지시스템	140,000	2024.8.23.~2025.2.19.
3	솔케어 1, 2, 솔폰드 1, 2	190,000	2024.8.26.~2024.12.24.

20)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연번	제품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4	여과·역세 동시처리 방식의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89,100	2024.8.5.~2024.12.3.
5	Wireless XR Streaming 기술 기반의 다자간 고품질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기반 Walking XR 솔루션	29,500	2024.8.1.~2025.2.27.
6	Wireless XR Streaming 기술 기반의 다자간 고품질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기반 Walking XR 솔루션	29,500	2024.8.1.~2025.2.27.
7	고효율 하베스팅 시스템을 구비한 수배전반	334,500	2024.8.1.~2025.1.9.
8	CT 활용도 제고, 대사성 질환 기회검진을 가능케 하는 CT 체성분 분석 AI 기술 딥캐치(DeepCatch)	33,400	2024.7.9.~2024.10.23.
9	딥러닝 영상/이미지 합성기술으로 생성된 AI Human 기반 영상 제작 솔루션	27,600	2024.4.19.~2025.2.28
10	자율주행&자율충전이 가능한 복합 살균 AI로봇	85,400	2024.3.7.~2024.12.2.
11	영상감지 지능형 경관조명	235,200	2024.2.21.~2025.1.28.
12	바른 자세에 필요한 근육과 관절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교정 운동기구 및 운동앱	58,000	2023.11.21.~2025.2.14.
13	바른 자세에 필요한 근육과 관절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교정 운동기구 및 운동앱	58,000	2023.11.21.~2024.12.31.
14	스마트 안전게이트 통합 관리 및 제어 시스템	213,428	2023.9.5.~2024.3.23.
15	전기화재 사전 감지장치 배전반	99,700	2023.9.1.~2025.2.28.
16	차량중량 계측감시시스템	513,040	2023.7.18.~2024.11.29.
합 계		2,144,068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2024년 7월 1일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163개 수요기관은 시범사용 수요매칭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21]

21)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수요매칭) ⑧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해당 심의가 있는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시범사용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3. 시범사용 수행 완료 후 해당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제40조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품을 회수한 경우는 제외)
4. 시범사용기관의 사정으로 시범사용수행계획서의 내용(수량, 설치비 분담 등)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러나 조달청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장기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하였더라도 추후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다시 시범사용 수요매칭을 신청하면 수요매칭 대상에 즉시 포함되므로, 시범사용 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시범구매 사용 의사가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실제 해당 규정 신설 후에도 제출기한이 1년을 경과하고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기한 내 충실히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충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또는 제35조(사업참여 제한)에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향후 시범사용 대상기관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2)]

---

5.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지 않은 기관

6.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7. 제40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물품관리가 미흡한 기관
8. 그 밖에 시범사용기관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경우

22)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
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5조(사업참여 제한)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범사용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시범사용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관한 행정지원을 협조하지 아니하여 시범사용 수행이 되지 않은 경우
2.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경우
3. 시범사용 완료보고서가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4. 시범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5.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7. 그 밖에 불성실하게 시범사용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결정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다.

8.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사업: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위반

가. 개 요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사업은 신기술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억 500만원 중 9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4년도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0,097	10,097	-	±22	10,097	9,388	171	538	15,007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909	909	-	△4	905	901	-	4	9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사업은 2023년도 우수제품 심사 수당을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제3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당해연도 심사 수당 등은 당해연도에 지급완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하고,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라 우수제품 규격추가를 위한 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함.[24)]

23)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기술서비스국)

2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심사 절차)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청은 2023년도 제4회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관련 기술심의위원회를 2023년 12월 개최하여 12월 22일까지 진행하였음.

[2023년 제4회 우수제품 심사 현황]

•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위원회 - 심사 기간: 2023. 12. 4. ~ 2023. 12. 22. - 심사 대상: 317개 제품 • 우수제품 규격 추가 기술심의위원회 - 심사 기간: 2023. 12. 7. ~ 2023. 12. 22. - 심사 대상: 124개 제품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관련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제4회 우수제품 심사 관련 수당 지급을 연내 완료하지 못하고 수당 중 부족분 6,235만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수당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그동안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2023년에는 예산 조정이 불가하여 부득이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이는 당해연도에 지급완료하여야 할 수당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또한 예산 확보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도 위반하였음.[25]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당해연도에 지급완료하여야 할 수당 등을 예산 부족을 사유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 중 기술 · 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③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④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기　타】

9.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조달청에 대해 시정요구 15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0건·제도개선 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0	5	-	15
예비비	-	-	-	-	-	-	-
합계	-	-	-	10	5	-	15

조달청은 시정요구사항 15건에 대해 1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3.3%)하고 1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5	14	93.3	1
예비비	-	-	-	-
합계	15	14	93.3	1

통계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억 4,400만원(△6.8%)이 적은 3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2.6%)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400	4,400	3,457	△943	3,610	3,610	3,366	△244	△91
총수입	4,400	4,400	3,457	△943	3,610	3,610	3,366	△244	△91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51억 7,600만원(△3.7%)이 적은 4,100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100만원(6.7%)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93,704	393,704	383,990	△9,714	425,267	425,267	410,091	△15,176	26,101
총지출	393,704	393,704	383,990	△9,714	425,267	425,267	410,091	△15,176	26,10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6억 1,000만원으로, 33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3억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610	3,610	-	3,610	3,379	3,366	13	-
합 계	3,610	3,610	-	3,610	3,379	3,366	1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53억 6,700만원으로, 이 중 4,100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6,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2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25,267	425,267	-	100	-	425,367	410,091	65	15,211
합 계	425,267	425,267	-	100	-	425,367	410,091	65	15,21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통계청 자산은 전년 대비 43억 3,900만원이 감소한 2,911억 2,4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80억 9,700만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20억 1,400만원 감소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1억 3,6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600만원 증가한 5억 900만원으로 유동부채 4,6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3억 8,400만원이 감소한 2,906억 1,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통계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342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336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8억 3,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통계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1,124	295,463	△4,339	△1.5
		유동자산	11,122	23,136	△12,014	△51.9
		투자자산	3,196	3,261	△65	△2.0
		일반유형자산	200,571	201,707	△1,136	△0.6
		무형자산	71,972	63,875	8,097	12.7
		기타비유동자산	4,262	3,483	779	22.4
	부 채		509	463	46	9.9
		유동부채	259	214	46	21.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249	249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90,615	294,999	△4,384	△1.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34,297	198,738	35,559	17.9
	재정운영순원가		433,638	395,802	37,836	9.6
	재정운영결과		433,638	395,802	37,836	9.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통계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통계청은 국가정책 뒷받침, 국민과 기업의 미래설계 지원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역동경제와 기업경영 지원,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3개의 세부사업에서 통계 제공, 국가통계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하여 부적정하므로, 향후 세목조정 등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등 추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둘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 교육 및 홍보 업무 수행 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한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후 집행하여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셋째,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비하여 2022년~2024년에 실시한 시험조사 및 2024년 실시한 시범예행조사에서 응답률이 하락하고 조사 불응률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부적정 등

가. 개 요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이용자가 공공·민간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5,000만원 중 36억 3,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고 1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7,740	7,740	-	-	7,740	7,398	-	342	10,316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3,750	3,750	-	-	3,750	3,632	-	118	5,77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2032-308)(통계데이터허브국)

나. 검토의견

(1)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부적정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 확충을 추진하여 부적정하므로, 향후 세목조정 등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등 추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 예산에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확대를 위하여 10억 2,2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중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설유지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었음.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중 센터 운영 및 확대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23년	2024년	증감	산출내역
시설 확충	일반수용비	18	**-**	△18	-
	시설장비유지비	-	**-**	-	-
	자산취득비	56	**-**	△56	-
	소계	**74**	**-**	**△74**	-
시설 유지	일반수용비	100	100	-	-
	임차료	121	125	4	임차료 소비자물가 인상률 반영 (+3%)
	공공요금	75	60	△15	(전용회선)5개소×88만원×12개월 (전화전기)13개소×45,000원×12개월
	관리용역비	10	15	5	출입통제및CCTV운영·보안관리 13개소×115만 4,000원
	소계	306	300	△6	
센터 운영	일용임금	547	547	-	19명×240만원×12개월
	고용부담금	60	100	40	(일용근로임금×11.787%)+ 퇴직금(7명×570만원)
	일반수용비	62	57	△5	- 센터기본운영 13개소×400만원 - 협의회및자문 10회×50만원
	국내여비	3	3	-	3명×10만원×10회
	사업추진비	15	15	-	- 이용자협의회20명×10회×3만원 - DB구축및서비스제공협의회 30명×10회×3만원
	소계	687	722	35	
합 계		1,067	1,022	△45	

자료: 통계청

그러나 통계청은 2024년 4월 통계데이터센터 대전센터 교육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11월~12월에는 통계데이터센터(SDC) 서울대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통계데이터센터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였음.

이를 위하여 통계청은 2024년 4월과 11월 두 차례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를 감액조정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344만원을 증액조정하였음.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4.29.)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0.44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대전센터 교육장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이전설치
세목조정 (2024.11.17.)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10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서울대센터 확장으로 시설개선 및 경사연 RDC 통합SDC 설치를 위한 시설보수 및 네트워크 설치
		임차료 (210-07)	13			

자료: 통계청

그리고 증액조정한 시설장비유지비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자금이체금액	건명
2024-5-9	440,000	통계데이터센터 대전센터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위치 이동 대금 지급
2024-12-9	9,427,000	통계데이터 서울대센터 확대 이전설치를 위한 사무환경 보수공사 사업
2024-12-19	6,930,000	세종국책연구단지 통계데이터센터(SDC) 설치를 위한 사무환경 보수공사
2024-12-20	1,038,40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사연) 통합 통계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포설 작업 대금 지급
2024-12-20	2,176,900	통계데이터센터 서울대센터 확대 이전 설치 네트워크 포설 작업 대금 지급
2024-12-26	473,00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사연) 통합 통계데이터센터 가상화시스템 설치 작업 대금 지급

자금이체일자	자금이체금액	건명
2024-12-26	473,000	서울대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이전 관련 가상화시스템(VDI) 이동 설치 작업 대금 지급
합계	20,958,30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일 내역사업 내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 4,400만원 중 3,300만원을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이전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금액을 연말에 집행하였음.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확대 이전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단위: 원)

자금이체일자	자금이체금액	건명
2024-2-23	579,480	통계데이터센터 화면녹화 소프트웨어(반디캠) 구매
2024-5-16	1,520,000	통계데이터 서울대센터 좌석확대를 위한 가상화단말기 구매
2024-8-9	579,480	통계데이터센터 화면녹화 소프트웨어(반디캠) 구매
2024-12-24	6,963,000	통계데이터 서울대센터 확대 이전 관련 운영물품(냉난방기) 구매
2024-12-27	550,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복합기)
2024-12-27	157,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잡지꽂이)
2024-12-27	7,403,4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데스크톱컴퓨터)
2024-12-27	386,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접이식의자)
2024-12-27	751,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탁자, 서랍)
2024-12-27	8,910,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노트북)
2024-12-27	3,038,6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책상, 캐비닛 등)
2024-12-27	426,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책상)
2024-12-27	1,600,000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모니터)
2024-12-27	48,110	[조달수수료]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노트북컴퓨터)
2024-12-27	2,970	[조달수수료]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 등) 필요 물품 구매(다기능복사기)
2024-12-27	4,050	[조달수수료] 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회의용탁자)

자금이체일자	자금이체금액	건명
2024-12-27	8,640	[조달수수료]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LCD패널 또는 모니터)
2024-12-27	16,400	[조달수수료]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캐비닛)
2024-12-30	2,080	[조달수수료]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접이식의자)
2024-12-30	2,300	[조달수수료]통계데이터센터(서울대, 경사연등) 필요 물품 구매 (책상)
합계	32,948,510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 확충을 세목조정 및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적정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2년~2023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세목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 센터 신규 구축 및 확장 등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 연례적으로 부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됨.

[2023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3.2.24)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15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제주, 전북)센터 신규 구축 시설비
세목조정 (2023.10.26)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임차료 (210-07)	33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대구센터 이전 및 KDI센터 확장 시설비
세목조정 (2023.11.30)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9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대전센터 시설개선 및 서울대 RDC-SDC 통합 시설비
세목조정 (2023.11.30)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임차료 (210-01)	15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자료: 통계청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2.4.12.)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25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강남, 국회센터 구축 (사무환경 조성)
세목조정 (2022.5.20.)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7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강남, 국회센터 구축 (전기통신공사)
세목조정 (2022.12.9.)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임차료 (210-07)	29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2032-3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구축 및 대전센터 사무환경 개선

자료: 통계청

이와 같은 통계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확장은 향후 센터 운영비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그 내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목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계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 및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기존 센터의 통합 및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였고, 2025년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설 확충 예산이 반영되어 세목조정 등 없이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기존 센터 통합 및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산에 미리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례적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해 센터 확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통계청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3)]

3)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통계청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통합내검실 구축을 세목조정 등을 통하여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자체적인 세목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과 '향후 자체적인 세목조정을 통해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였음.

(2)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미이행 부적정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통계 교육 및 홍보 업무 수행 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한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 후 집행하여 부적정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통계청은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정기통계품질진단, 국제협력, 통계 작성 및 홍보, 통계정보화 업무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집행과정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고, 통계청은 해당 위탁사업을 2023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였음.

그러나 통계청은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통계간행물, 통계교육, 정기통계품질진단 등의 사무를 일반경쟁방식으로 전환함을 사유로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로 변경하였고,[4] 특히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의 교육 및 홍보는 직접 추진할 예정으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음.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2024년 3월 일반수용비 9,600만원을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한 후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음.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3.4.)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일반 수용비 (210-01)	96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2032-308)	일반 용역비 (210-14)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업체의 기술 협조 등 효율적인 운영

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발주한 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하였으나, 단일응찰(한국통계진흥원)로 유찰되어 통계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4)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국회는 '통계청은 위탁사업 관련 사업비를 일반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라는 2020회계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 하였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5)]

[2024년 통계데이터센터 활성화 사업 용역 내용]

(사업기간) 2024. 4. 11. ~ 2024. 12. 10. (사업금액) 9,460만원 (과제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수기 공모전 개최, 동계데이터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통계데이터 활용 성과 세미나 개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자 영상교육 최신화 등

자료: 통계청

이러한 세목조정 및 수의계약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정함. 특히 국회 시정요구사항은 통계청이 한국통계진흥원과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기관 위탁사무 대부분을 위탁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후 재공고 없이 바로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우회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정성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당초 통계데이터센터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및 관련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통계데이터센터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직접 수행은 2024년 중 변경된 것이 아니라 2024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선행하지 않고 연도 중 일반용역으로 변경 추진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방증임. 또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은 사업 운영비 등 간접비 소요로 인해 사업 실적을 축소하게 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당초 예산상 계획에 따라 직접 수행하는 한편,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응답률 하락 및 조사 불응률 증가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63억 4,500만원 중 243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20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구주택총조사	26,326	26,326	-	19	26,345	24,309	-	2,036	115,826
시험조사	306	306	-	-	306	218	-	88	-
시험예행조사	1,079	1,079	-	44	1,123	1,022	-	101	-
가구주택 기초조사	23,688	23,688	-	△25	23,663	21,839	-	1,824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시험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사과정 점검 등 시험조사를 통해 최적의 수행방안을 도출하고 조사항목을 점검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600만원 중 2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2%)되고,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시범예행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3차례의 시험조사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을 총조사 전 최종 현장점검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2,300만원 중 10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0%)되고, 1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2025 총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을 작성하고 등록센서스 주택 관련 행정자료를 보완하는

6) 일반회계-인구주택총조사(3034-307)(조사관리국)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36억 6,300만원 중 218억 3,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3%)되고 18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비하여 2022년~2024년에 실시한 시험조사 및 2024년 실시한 시범예행조사에서 응답률이 하락하고 조사 불응률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비하여 2022년 1차 시험조사, 2023년 2차 시험조사, 2024년에는 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응답률은 하락하고 불응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시 응답률 하락 및 불응률 증가가 우려됨.

먼저 1차~3차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률은 각각 95.5%, 82.5%, 90.2%로 2차 시험조사 시 크게 하락하였다가 3차 시험조사 시 다소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1차 시험조사의 응답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시범예행조사 시 응답률은 3차 시험조사보다 낮은 89.8%로 1차 시험조사와 비교하면 5.7%p 하락하였음.

[2025 인구주택총조사 1~3차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응답률]

(단위: 가구, %)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부재	불응
			소계	모바일	PC		소계	태블릿	종이		
1차 시험조사 (2022.10.~11.)	7,911	7,556	2,984	2,352	632	542	4,030	3,921	109	241	114
	(100.0)	**(95.5)**	(37.7)	(29.7)	(8.)	(6.9)	(50.9)	(49.6)	(1.4)	(3.0)	**(1.4)**
2차 시험조사 (2023.10~11.)	8,107	6,685	2,065	1,782	283	158	4,462	4,025	437	1,300	122
	(100.0)	**(82.5)**	(25.5)	(22.0)	(3.5)	(1.9)	(55.0)	(49.6)	(5.4)	(16.0)	**(1.5)**
3차 시험조사 (2024.4.~5.)	5,207	4,696	2,000	1,297	703	298	2,398	2,325	73	376	**135**
	(100.0)	**(90.2)**	(38.4)	(24.9)	(13.5)	(5.7)	(46.1)	(44.7)	(1.4)	(7.2)	**(2.6)**
시범예행 조사 (2024.10.~11.)	46,216	41,515	12,033	10,572	1,461	1,679	27,803	27,698	105	3,180	**1,521**
	(100.0)	**(89.8)**	(26.)	(22.9)	(3.2)	(3.6)	(60.2)	(59.9)	(0.2)	(6.9)	**(3.3)**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의 미응답 가구는 부재와 불응으로 구분되는데, 불응률의 경우 각각 1.4%, 1.5%, 2.6%, 3.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3차 시험조사와 시험예행조사에서 불응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는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홍보가 부족하여 응답률이 하락하고 조사 불응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수행되는데,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은 97.8%, 불응률은 1.0%였으나,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시에는 응답률이 96.3%로 하락하고, 불응률은 1.1%로 증가하여, 차기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시에도 응답률 저하 및 불응률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인구주택총조사는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및 각종 표본조사의 조사틀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 응답률 하락 및 불응률 증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범예행조사 시 종이형태의 조사표, 시설조사표 및 조사홍보안내문의 미사용비율이 높았으므로,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시 불필요한 조사비용 방지를 위하여 적정 수량의 조사표, 시설조사표 및 조사홍보안내문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실시한 시범예행조사의 조사용품 배부 및 미사용수량 현황을 보면 국문용 일반 종이조사표, 시설조사표 및 외국어조사표의 미사용비율이 높고, 특히 태국어 및 우즈베크어 종이조사표의 미사용률은 92.5%에 달함.

[시범예행조사 조사용품 배부 및 미사용수량 현황]

구분	배부현황			미사용현황	
	배부(계)	최초 배부	추가 배부	미사용량	미사용률(%)
조사지침서	380부	380부	-	8부	2.1%
차세대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메뉴얼	70부	70부	-	12부	17.1%
조사관리수첩	70부	70부	-	8부	11.4%
조사사례집	380부	380부	-	9부	2.4%
안전메뉴얼	380부	380부	-	11부	2.9%

구분		배부현황			미사용현황	
		배부 (계)	최초 배부	추가 배부	미사용량	미사용률 (%)
일반 조사표	국문용	5,460부	5,160부	300부	2,809부	51.4%
	외국어통합용	350부	350부	-	51부	14.6%
외국어 조사표	영어	80부	80부	-	68부	85%
	중국어	480부	480부	-	97부	20.2%
	베트남어	80부	80부	-	56부	70%
	태국어	80부	80부	-	74부	92.5%
	우즈베크어	80부	80부	-	74부	92.5%
시설조사표	개인용	3,770부	3,670부	100부	1,923부	51%
조사안내문	부분출력용	4,890부	2,590부	2,300부	-	-
조사 홍보 안내문	일반용(A4사이즈)	20,430매	15,430매	5,000매	2,097매	10.3%
	일반용(A3사이즈)	200매	200매	-	30매	15%
	영어(A4사이즈)	530매	530매	-	117매	22.1%
	중국어(A4사이즈)	530매	530매	-	155매	29.2%
	베트남어(A4사이즈)	530매	530매	-	155매	29.2%
	태국어(A4사이즈)	530매	530매	-	155매	29.2%
	우즈베크어(A4사이즈)	530매	530매	-	150매	28.3%
	영어(A3사이즈)	60매	60매	-	17매	28.3%
	중국어(A3사이즈)	60매	60매	-	17매	28.3%
	베트남어(A3사이즈)	60매	60매	-	17매	28.3%
	태국어(A3사이즈)	60매	60매	-	17매	28.3%
	우즈베크어(A3사이즈)	60매	60매	-	17매	28.3%
조사원 연락전	고리형 (50장/1권)	650권	540권	110권	32권	4.9%
	부착형 (50장/1권)	810권	810권	-	33권	4.1%
메모장		320개	320개	-	6개	1.9%
리플렛		320개	320개	-	56개	17.5%
조사원모집 포스터	일반용(A4사이즈)	300매	300매	-	-	-
	일반용(A3사이즈)	300매	300매	-	73개	24.3%
조사 요원 용품	조사원 가방	320개	320개	-	6개	1.9%
	태블릿 터치펜	320개	320개	-	15개	4.7%
	태블릿 이어폰	320개	320개	-	11개	3.4%
	L자 화일	900개	900개	-	212개	23.6%
	조사요원증	384개	360개	24개	-	
안전용품	호루라기	320개	320개	-	11개	3.4%
	손전등	320개	320개	-	12개	3.8%
	sos발신기	12개	12개	-	10개	83.3%

자료: 통계청

조사홍보안내문의 경우에도 외국어용의 경우 미사용률이 20%를 초과하여 미사용률이 높은 편임.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조사표의 경우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에만 활용하여 사용률이 낮았고, 외국어조사표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용빈도가 낮았으며, 특히 통합용 외국어조사표는 휴대가 어려워 사용에 불편이 있어 사용률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조사홍보안내문의 경우 설명 내용이 많아 조사대상 가구 중 일부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워하여 사용이 저조하였다고도 설명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은 종이형태의 조사표, 시설조사표와 조사홍보안내문 제작 시 인쇄비용, 운반비용 등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조사비용 방지를 위해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시에는 적정 수량의 조사표 및 조사홍보안내문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등을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가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을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비로 집행하여 예산의 편성 목적과 집행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컨설팅’ 결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년도 홍보가 아닌 장기적·체계적인 단계별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전 해인 2024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예산에 신규로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일반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였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 내역]

구 분	2024 예산
(1) 등록센서스	8억 5,100만원 · DB구축 인건비 7억 6,600만원 · 기타운영비 8,500만원
(2) 시험조사	3억 600만원(3차 시험조사) · 조사원 인건비 1억 2,800만원 · 기타운영비 1억 7,800만원

구 분	2024 예산
(3) 시범예행조사	10억 7,900만원 · 조사원 인건비 5억 6,200만원 · 기타운영비 5억 1,700만원
(4) 가구주택기초조사	226억 8,800만원 · 조사원 인건비 167억 4,000만원 · 기타운영비 59억 4,800만원 ※ 일반용역비 5억 5,000만원
(5)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10억원** **· 홍보 용역 10억원**
(6) 국제인구통계협력	4억 200만원 · 국제협력 4억 200만원
합계	263억 2,600만원

자료: 통계청

그러나 통계청은 202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내역사업을 가구주택기초조사 내역사업과 병합하고, 기존에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을 위하여 반영된 일반용역비 10억원 중 6억 3,000만원을 활용하여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2,000만원으로 인구센서스 100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음.

[총조사 홍보 및 100주년 기념 내역사업에 반영된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구분	금액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 사업	6억 3,000만원
인구센서스 100년 홍보영상 제작 사업	2,000만원
합 계	6억 5,000만원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3억 5,000만원과 기존 가구주택기초조사 내역사업에 반영되었던 일반용역비 중 5,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고 이를 가구주택홍보조사 홍보 매체비로 집행하였음.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 일반용역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9.20.)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210-14	400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210-01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매체비 집행

자료: 통계청

이에 대하여 통계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와 연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사업 용역에 총조사 홍보를 포함하여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사업의 결과보고서상 사업의 주된 목적은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홍보로, 총조사 100주년 관련 홍보가 일부 포함되나 이는 시범예행조사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기념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고 제작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위한 홍보 위주로 진행되었음.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사업 개요]

(용역명) 2024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 사업
(홍보목적)
-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가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됨을 알리고, 중요성을 전달하여 본조사의 성공적 수행 기여
-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통계의 필요성을 알려 통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가구주택 기초조사 응답 협조 및 조사환경 개선을 통한 기관 신뢰도 향상, 국민 공감대 형성
- 가구주택기초조사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연계성 인지도 제고, 2025 총조사 실시 및 등록센서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수행

(홍보기간) 2024. 5. 8.~2024. 12. 13.
(홍보프로그램)
- 광고: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안내 및 참여 유도 위한 광고 제작 및 송출
- 온・오프라인 홍보: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맘카페 배너광고 등
- 언론홍보: 방송 PPL, 기획기사 등
-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물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시범예행조사 홍보물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고 제작
- 상시지원: 홍보 굿즈 제작 등

자료: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홍보 용역사업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과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홍보예산은 실소요 대비 과다 편성되었으며, 통계청은 이를 다른 목적의 홍보경비로 대부분 집행한 문제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다음 주기 가구주택기초조사 시에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면 적정 규모의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홍보과 같이 불요불급한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신속한 통계조사 이전 추진 필요

가. 개 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위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5억 2,400만원 중 64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6,524	6,524	-	-	6,524	6,454	-	70	8,76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2024년 기존 통계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단되는 등 통계조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운영 비용이 각각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디지털 전자조사 플랫폼 마련을 통해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통계시스템 활용으로 생산시간 감소, 유사·중복자료 생산을 방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2021년~2023년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통계청은 최초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도입 당시 2025년까지 470종의 통계를 기존

7) 일반회계-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203-305)(통계서비스정책관)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이 지연되어 2024년까지 이전된 통계는 112종에 불과하였음.

이는 특히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의 총사업비가 당초 4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4년 예산에는 운영 전환을 위한 비용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임.[8)]

[연도별 통계조사 이전 계획 및 이전 현황(2024.12.기준)]

(단위: 종)

연도	통계조사 이전계획 건수		
	당초 계획	변경 계획 (2024.12.기준)	이전완료
2021	5	-	-
2022	22	33	33
2023	58	79	79
2024	298	-	-
2025	87	235	-
2026	-	91	-
2027	-	-	-
2028	-	-	-
합계	470	438	112

자료: 통계청

이전 지연에 따라 기존 나라통계시스템과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유지보수 비용이 구축비의 10% 수준에서 연례적으로 편성·집행되기 때문임.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전에 따라 각 시스템의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가 매년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한 동일하게 지출됨.

8)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타당성 재조사 진행 당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3개년 구축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어 타당성 재조사가 2024년 6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변경 진행되었음.

[2023~2025년 기존 및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및 위탁운영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		422	343	331
	위탁운영 비용		3,832	2,669	2,616
	유지보수 비용		1,576	1,576	1,576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		32	121	123
	위탁운영 비용		462	1,912	1,992
	유지보수 비용	상용 SW	80	82	90
		응용 SW	-	-	1,039

주 1) 2024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이관된 통계 112종과 신규 구축 9종으로 구성됨
2) 2025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2024년 대행조사에 대한 신규 구축 통계 2종이 추가됨
자료: 통계청

위탁운영 비용의 경우에도 업무범위의 변경에 따라 지출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차세대 시스템이 모두 운영되면 2개 시스템 모두에 대하여 매년 지출이 발생하게 됨.

2025년 6월 기준 통계청은 2026년까지 관리대상 통계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나 이전이 지연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 위탁운영 비용의 이중 지출이 이후에도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전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통계청에 대해 시정요구 11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10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10	-	11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10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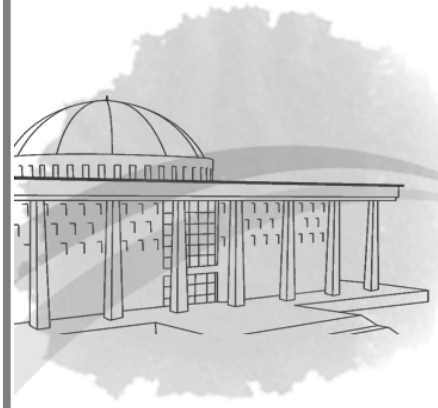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통계청은 시정요구사항 11건에 대해 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45.5%)하고 6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	5	45.5	6
예비비	-	-	-	-
합계	11	5	45.5	6

교육위원회



교육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6,874억 3,600만원(△9.5%)이 적은 6조 5,69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5억 2,800만원(2.3%)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46,194	246,194	673,519	427,325	354,156	354,156	561,173	207,017	△112,346
기 금	6,216,707	6,216,707	5,745,822	△470,885	6,903,149	6,903,149	6,008,696	△894,453	262,874
총수입	6,462,901	6,462,901	6,419,341	△43,560	7,257,305	7,257,305	6,569,919	△687,436	150,528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9,327억 7,900만원(△3.1%)이 적은 92조 8,56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96억 3,900만원(1.4%)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5,993,631	95,993,631	85,273,986	△10,719,645	89,614,625	89,614,625	86,363,800	△3,250,825	1,089,814
기 금	6,004,257	6,330,583	6,282,429	△48,154	6,174,208	6,174,208	6,492,254	318,046	209,825
총지출	101,997,888	102,324,214	91,568,842	△10,755,372	95,788,833	95,788,833	92,856,054	△2,932,779	1,299,63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9조 3,711억 6,200만원으로, 19조 4,282억 2,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조 4,256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5억 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42,903	342,903	-	342,903	498,192	495,619	2,57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24	3,824	-	3,824	3,982	3,982	-	-
- 지역지원계정	3,824	3,824	-	3,824	3,982	3,982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232,168	-	3,232,168	3,256,592	3,256,592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92,267	15,792,267	-	15,792,267	15,669,454	15,669,453	1	-
합 계	19,371,162	19,371,162	-	19,371,162	19,428,220	19,425,646	2,57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1조 1,633억 7,300만원으로, 이 중 106조 4,415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155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조 7,062억 3,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90,968,627	90,968,627	16,637	1,051,594	210,254	92,247,113	87,809,641	12,013	4,425,4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58,484	358,484	-	23,323	-	381,807	338,333	-	43,475
- 지역자율계정	-	-	-	2,000	-	2,000	2,000	-	-
- 지역지원계정	358,484	358,484	-	21,323	-	379,807	336,333	-	43,47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232,168	3,232,168	-	-	-	3,232,168	3,232,168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299,577	15,299,577	670	2,038	-	15,302,285	15,061,454	3,530	237,301
합 계	109,858,856	109,858,856	17,308	1,076,956	210,254	111,163,373	106,441,596	15,543	4,706,23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3조 4,539억 6,600만원으로, 12조 245억 4,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1조 9,442억 6,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3%)되고 798억 9,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8,6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146,698	13,146,698	11,602,268	11,565,015	36,866	386
사학진흥기금	307,268	307,268	422,276	379,246	43,030	-
합 계	13,453,966	13,453,966	12,024,544	11,944,261	79,896	386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3조 4,543억 5,000만원으로, 이 중 11조 9,442억 6,100만원이 지출(집행률 88.8%)되고, 681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146,698	13,146,698	-	13,146,698	11,565,015	-	62,292
사학진흥기금	307,268	307,268	384	307,652	379,246	-	5,865
합 계	13,453,966	13,453,966	384	13,454,350	11,944,261	-	68,15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교육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5,146억 6,600만원이 증가한 62조 6,200억 7,6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조 3,920억 4,3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6,486억 5,7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329억 2,100만원 증가한 2조 604억 2,000만원으로 기타비유동부채 2,582억 8,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2,817억 4,400만원이 증가한 60조 5,596억 5,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교육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8조 4,409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15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7조 77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92억 9,0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62,620,076	60,105,410	2,514,666	4.2 %
		유동자산	5,062,260	4,593,515	468,745	10.2 %
		투자자산	25,658,124	24,266,081	1,392,043	5.7 %
		일반유형자산	31,802,822	31,154,165	648,657	2.1 %
		무형자산	80,845	82,400	△1,555	△1.9 %
		기타비유동자산	16,024	9,250	6,774	73.2 %
	부 채		2,060,420	1,827,499	232,921	12.7 %
		유동부채	307,248	329,998	△22,750	△6.9 %
		장기차입부채	955,524	958,681	△3,157	△0.3 %
		장기충당부채	3,102	2,559	543	21.2 %
		기타비유동부채	794,546	536,260	258,286	48.2 %
	순자산		60,559,656	58,277,912	2,281,744	3.9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8,440,985	86,779,388	1,661,597	1.9 %
	재정운영순원가		87,003,677	85,614,285	1,389,392	1.6 %
	재정운영결과		87,007,714	85,618,424	1,389,290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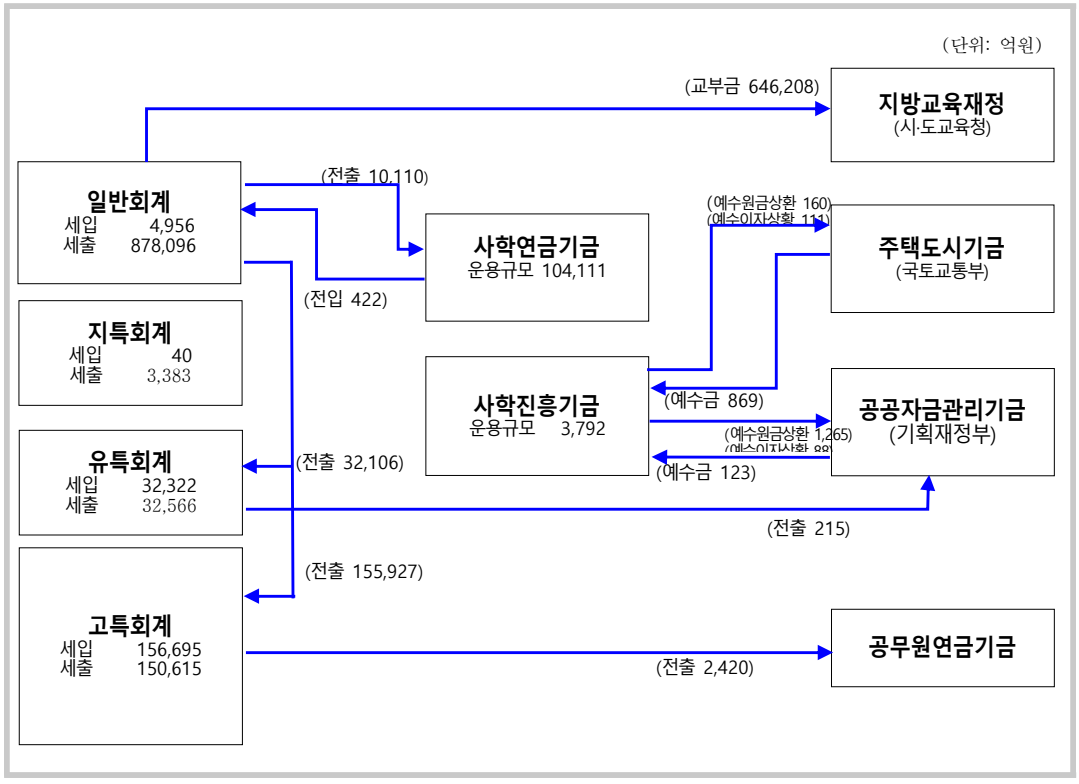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의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2,106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5조 5,927억원이 전출되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1조 110억원 전출되었음.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15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420억원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23억원을 전입받고, 예수원금 1,265억원과 예수이자 88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869억원을 받고, 예수원금 160억원과 예수이자 111억원이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교육부 재정흐름도]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국가책임 교육·돌봄 제공, 새학기 교육현장 전면 변화, 대학 개혁을 통한 역동적 지방시대 견인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45개 세부사업에서 글로컬 대학·RISE 체계 등 대학혁신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생애주기별 교육비 부담 완화, 평생교육 기회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등 3개 수입으로 구성되나, 각각의 수입에 대한 예산이 각각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중앙교육연수원 사업과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에서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지출하였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4.2조원 상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근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2022년도 이용률을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부족하여 2년 연속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교육부는 적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대학혁신지원’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서 일부 예체능 계열 학과의 전임교원이 수년째 미충원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행태는 시정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급여’ 추계 부적정으로 계획액을 과소편성한 후 증액변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금 급여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부적정 등

가. 개 요

2024년 교육부 수입대체경비 관련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수입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148억 2,7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② 일반회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비 수입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78억 4,1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③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96억 5,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2)]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 관련 세입예산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6,546	6,546	14,827	14,827	-	-	100.0	6,775
	기타잡수입	7,975	7,975	7,841	7,841	-	-	100.0	5,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6,402	6,402	9,656	9,656	-	-	100.0	6,04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5-651)(정책기획관),
일반회계-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정책기획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5-651)(정책기획관),

한편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 관련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① 일반회계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사업은 특수교육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집합연수 운영 비용 등으로 2024년 예산현액 7억 200만원 중 6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고, ② 일반회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사업은 교육분야 종사자 연수 운영 비용 등으로 2024년 예산현액 35억원 중 33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1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③ 일반회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원어민 영어·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연수시설(본원 및 제주) 운영 비용 등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4억 3,400만원 중 149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400만원이 이월되어 5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고, ④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은 연 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는 비용으로 2024년 예산현액 84억 4,300만원 중 81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2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3)]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 관련 세출예산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702	702	-	-	702	689	-	13	668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2,503	2,503	-	997	3,500	3,389	-	111	2,55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8,350	8,350	-	7,084	15,434	14,905	4	525	8,602
		한국어능력시험운영	6,546	6,546	-	5,948	12,494	12,105	4	385	6,78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970	970	-	896	1,866	1,775	-	91	973
		연수시설운영(본원)	391	391	-	44	435	424	-	11	397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 초청활용	327	327	-	-	327	295	-	32	330
		연수시설운영(제주)	116	116	-	196	312	306	-	6	116
고특회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6,405	6,405	-	2,038	8,443	8,145	-	298	6,40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 일반회계-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1234-650)(국립특수교육원),
일반회계-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1302-650)(중앙교육연수원)
일반회계-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4532-650)(국립국제교육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2448-651)(국사편찬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세입예산 중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등 3개 수입으로 구성되나, 각각의 수입에 대한 예산이 각각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중앙교육연수원 사업과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에서 수입대체경비를 초과지출하였음.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4]에서는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별도 “관”으로 편성하여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다른 세입예산과 구분 계상되도록 하여 실제 수입과 예산을 비교하고 초과수입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세입과목 구분]

관		항	목	내 역
14	수입대체경비수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교육부는 2024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으로 7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비 3개 수입으로 구성되나, 각 수입별 세입예산이 구분되어 계상되지는 않았음.

[2024년 예산 세입각목명세서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부분]

(단위: 천원, 1$)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14]수입대체경비		7,975,000	
[69]잡수입		7,975,000	
[691]기타잡수입		7,975,000	
1. 기타잡수입	1식*7975000000=	7,975,000	

자료: 교육부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그 결과, 2024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비의 실제 수납액은 각각 41억 4,800만원, 30억 200만원, 6억 9,100만원이었으나, 각 수입별 세입예산이 구분되어 산출되지 않은 채 편성된 결과 어느 기관에서 초과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4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사업에서 9억 9,700만원,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내역사업 중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 제외[5])에서 11억 3,600만원을 수입대체경비로 초과지출 승인하였고 이 중 상당액이 집행되었음.

[2024년 '기타잡수입' 관련 수입대체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입						세출				
사업	예산액	수입종류	징수결정액	수납액	초과수입	사업	예산액	초과지출승인	예산현액	집행액
기타잡수입(69-691)	7,975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	4,148	4,148	-	중앙교육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2,503	997	3,500	3,389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비	3,002	3,00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제외)	1,804	1,136	2,940	2,800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비	691	691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702	-	702	689
		계	7,841	7,841		계	5,009	2,133	7,142	6,878

자료: 교육부

결국, 수입대체경비에서 특정 수입별 세입예산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세출예산에서 초과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은 초과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경비를 초과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어능력시험운영’ 사업은 관련 수입이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로 편성되므로 ‘기타잡수입(69-691)’ 관련 사업예산 검토 시 제외하는 것임.

둘째, 교육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중앙교육연수원 연수 관련 사업에서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적정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0.8% 증액한 65억 4,6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세입예산('면허료 및 응시료')은 오히려 전년보다 24.8% 감액한 65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결과, 82억 8,1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초과지출 승인액은 세출예산의 90.9%인 59억 4,800만원에 이르렀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인원은 2020년 21만 8,869명에서 2024년 49만 3,28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응시료 수입은 2020년 53억 8,200만원에서 2024년 148억 2,700만원으로 관련 예산집행액은 2020년 57억 2,700만원에서 121억 500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최근 5년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 및 결산]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응시인원	세입			세출					
		예산(A)	결산(B)	초과수입 (B-A)	예산(C)	초과지출 승인액(D) 및 비율(D/C)		예비비등	예산현액	집행액
2020	218,869	7,929	5,382	△2,547	3,994	420	10.5%	1,577	5,991	5,727
2021	330,016	8,162	9,215	1.053	5,010	3,982	79.5%	44	9,036	8,769
2022	357,395	5,383	7,286	1,903	5,245	2,517	48.0%	2,272	10,034	9,568
2023	421,812	8,700	13,078	4,378	6,086	5,132	84.3%	-	11,218	10,635
2024	493,287	6,546	14,827	8,281	6,546	5,948	90.9%	-	12,494	12,105

주) 2020년,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추가인력 투입 등으로 예비비 편성
자료: 교육부

반면 세입예산은 2020년 79억 2,900만원에서 2024년 65억 4,6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고, 세출예산은 2020년 39억 9,400만원에서 2024년 65억 4,600만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실제 예산 집행액 증가 추세에는 크게 못 미쳐 본 예산 대비 초과지출 비율이 약 80~90%에 달한 경우가 최근 5년 중 3번이나 있었음.

특히 2024년의 경우, 연간 계획된 한국어능력시험(TOPIK) PBT 6회 중 1회를 시행한 시점(2024년 4월 9일)[6]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 초과지출 승인(59억 4,800만원)을 하였고 이후 예산현액(124억 9,400만원)의 96.9%를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연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6) 정확히는 2회차 접수를 마친 시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보더라도 연간 일정의 1/3 정도가 지났는데, 연간수요를 근사하게 예측한 것이므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유효할 것임.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일정 및 응시자 수는 다음과 같음.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최근 실적과 추이에 기초하여 적정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정부 편성과 국회 심의절차를 거친 예산 이외의 경비가 반복하여 과다 집행되는 사례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사업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세출예산액의 162.0%에 이르렀던 예산액 대비 초과지출 승인 비율이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2024년에도 세출예산액 대비 초과지출 승인 비율도 31.8%로 높은 수준이므로 실수요에 기초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7)]

[최근 5년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 및 결산]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응시자 수	세입			세출					
		예산(A)	결산(B)	초과수입 (B-A)	예산(C)	초과지출 승인액(D) 및 비율(D/C)		예비등	예산현액	집행액
2020	533,748	8,000	10,003	2,003	4,500	5,302	117.8%	969	10,771	10,596
2021	631,632	8,391	14,128	5,737	4,953	8,024	162.0%	0	12,977	12,955
2022	567,682	10,003	12,542	2,539	5,575	7,339	131.6%	0	12,914	12,450
2023	389,204	8,980	9,073	93	5,902	4,355	73.8%	0	10,257	8,821
2024	354,348	6,402	9,656	3,254	6,405	2,038	31.8%	0	8,443	8,145

자료: 교육부

(단위: 명)

TOPIK PBT			TOPIK IBT			TOPIK 말하기		
회차	시험일	응시인원	회차	시험일	응시인원	회차	시험일	응시인원
제92회	1.21.(일)	33,281	제2회	3.23.(토)	2,891	제4회	3.23.(토)	196
제93회	4.14.(일)	125,489	제3회	6.8.(토)	3,527	제5회	6.8.(토)	285
제94회	5.12.(일)	53,164	제4회	9.28.(토)	4,575	제6회	9.28.(토)	308
제95회	7.14.(일)	71,061						
제96회	10.13.(일)	133,663						
제97회	11.10.(일)	64,847						

주) 시험일은 대한민국 기준
자료: 교육부

7) 아울러, 최근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7급: '21년 이후, 경찰: '22년 이후, 소방: '23년 이후, 계리: '24년 이후 각 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수는 오히려 2021년 63만 1,632명에서 2024년 35만 4,348명으로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임.

또한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39.8% ~ 60.6%의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1] (결산)	세출					교육과정(인원)
		예산(A)	초과지출 승인액(B) 및 비율(B/A)		예산현액	집행액	
2020	2,534	1,950	240	12.3%	2,190	2,044	· 집합연수 27과정(7,023명) · 원격연수 312과정(1,432,214명)
2021	2,524	2,041	456	22.3%	2,497	2,365	· 집합연수 38과정(11,325명) · 원격연수 409과정(2,116,132명)
2022	3,267	2,047	876	42.8%	2,923	2,709	· 집합연수 39과정(7,611명) · 원격연수 476과정(2,073,708명), · 마이크로러닝(시범운영) 1,986과정(3,046명)
2023	3,718	2,288	1,386	60.6%	3,674	3,456	· 집합연수 37과정(9,451명) · 원격연수 529과정(1,971,335명), · 마이크로러닝(시범운영) 23,744과정(8,934명)
2024	4,148	2,503	997	39.8%	3,500	3,389	· 집합연수 43과정(9,488명) · 원격연수 535과정(2,038,631명) · 마이크로러닝 10,207과정(5,911명)

주) 동 사업과 관련된 세입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비로서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에 편성되나, 동 세입예산에는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비,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연수비 수입이 함께 수납되며, 각 수입별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각 수입별 초과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음.

자료: 교육부

【일반회계】

<세 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 시 교부금 미교부 부적절

가. 개 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8조 8,732억 900만원 중 64조 6,207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8%)되고 4조 2,524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보통교부금	66,338,469	66,338,469	-	-	66,338,469	62,224,931	-	4,113,538	69,659,57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00,426	600,426	-	-	600,426	567,529	-	32,897	743,71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00,142	200,142	-	-	200,142	189,177	-	10,965	247,905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00,852	1,200,852	-	-	1,200,852	1,135,058	-	65,794	1,067,409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20	533,320	-	-	533,320	504,078	-	29,242	560,839
계	68,873,209	68,873,209	-	-	68,873,209	64,620,773	-	4,252,436	72,279,43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9)]

8) 일반회계-지방교육재정교부금(1501-300, 1502-300~303)(교육자치안전정책관)

또한 동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되, 보통교부금 재원은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 총액 20.79%의 96.2%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이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내국세(목적세 등 제외) 총액 20.79%의 3.8%라고 규정하고 있음.[10][11]

아울러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디지털교육혁신 4종류가 있고, 각각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380분의 90, 380분의 30, 380분의 80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2]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10) 다만, 이는 2024년부터 3년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배분 비율(법 제5조의3)이며, 동 특별교부금이 없었던 2023년까지는 그 배분비율이 달랐음(법 제3조제3항).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2024년)]

구분		재원(규모)		내용
보통교부금		내국세[1] 20.79%의 96.2% + 교육세 일부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교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내국세[1] 20.79%의 3.8%	180/380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 등
	지역현안		90/380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
	재난안전관리		30/380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디지털교육혁신		80/380	-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주)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 내국세

나. 검토의견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4.2조원 상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9월 세수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고, 2024년 10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에서 ㉠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통상적 불용(7~9조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13] 그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68조 8,732억 900만원 중 6.17%인 4조 2,524억 3,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13)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 기본방향으로 ①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여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되, ②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③ 구체적 방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따라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고 설명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4)]

그러나 정부는 2023년에도 세수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3,970억원을 미교부하고 불용처리하였고, 국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15)]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세수결손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보통교부금(1501-300), 지역현안특별교부금(1502-3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1502-301), 국가시책특별교부금(1502-302)	시정
	지적 사항	○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 75조 7,606억원 중 10조 3,97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불용 처리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5) 참고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에 대해 시정요구한 바 있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65)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 시정필요 등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00-300)	시정
	지적 사항	○ 2013년 전체예산 41조 619억원 중 세수부족으로 인해 2,500억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정산규정 취지(예산교부 후 정산)에 어긋나는 것임. ※ 이월: 7,500억원 ○ 2015년 정산규모가 ' 13년 예산 대비 6.51%, ' 14년 예산 대비 6.54%에 달해 지방교육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산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교부금 정산 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향후 세수결손 등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	

즉, 현행법에서는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 내국세 또는 교육세 세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음 연도 또는 다음다음 연도의 교부금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거나, ㉡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내국세 또는 교육세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교부금 예산을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미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종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임.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당시) 시·도 교육청에 상당한 규모의 가용재원[16]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세수재추계 결과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에 연동되는) 교부금을 5.4조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지방교육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당해연도(2024년) 미교부분과 차차년도(2026년) 정산분으로 분산하기로 하고, 2024년에는 이 중 1.1조원(20%)을 교부하되, 약 4.3조원(80%)을 미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함.[17]

이는 일응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으로서 국회에서 확정한 교부금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시·도 교육청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 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수용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보이므로, 정부는 세수 결손 등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16)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 9조원 수준 등 활용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함.

17) 한편,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세수재추계 결과 4.3조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중 50%인 약 2.1조원을 미교부하였음.

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부적절 등

가. 개 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6,004억 2,600만원 중 5,675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5%)되고, 328억 9,700만원이 불용됨.[18)]

[2024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00,426	600,426	-	-	600,426	567,529	-	32,897	743,71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총 56개 교육발전특구에 1,892억 400만원을 교부하였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자체·교육청·대학 및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2월과 7월에 각각 1·2차 시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각 특구 지원금을 지급한 것임.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내역]

유형	신청단위	지정	예산지원
1유형	기초지자체	41건 (42개 기초지자체)	특구별 지원액 상이 (5천만원부터 304억원까지) - 특구운영계획 및 예산소요, 지방비 매칭 등에 따라 다름
2유형	광역지자체	7건 (7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8건 (5개 광역, 41개 기초지자체)	
계	56개 특구 (7개 광역 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		총 1,892억 400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18) 일반회계-지역현안 특별교부금(1502-300)(교육자치안전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그 동안의 국회 심의경과를 감안하면,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별다른 사회적 합의 없이 전국 단위의 사업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교육발전특구제도는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특구 내에서 차별화된 교육정책·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공교육체계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추진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이 종래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우선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당시 명칭은 교육자치특구) 관련 규정이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19] 등을 이유로 삭제[20]되었음.[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경과]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의결안(대안)	본회의 의결안
제36조(교육자유특구의 설치 · 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삭 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 명목의 "교육자유특구[22] 지정 지원" 신규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견이 있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음.[23]

---

19) 2023.3.24.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교육위원장 의견」에 따르면, "국가가 교육과정 교원자격, 교과용도서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는 교육 특구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호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일부 교육위원이 발견함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에 반영해 주기 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0) 제40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23년 5월 25일)

21)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2025년 7월 현재 소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895호, 2024.11.26. 발의,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874호, 2024.12.24. 발의,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22) 교육발전특구는 당초 '교육자유특구'로 추진되다가 명칭이 변경되었음.

23) 다만,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다"는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일부]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감액	비고
교육부	일반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	200	△2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따라서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그 동안의 국회 심의경과를 감안하면, 특별한 사회적 합의 없이 특별교부금을 이용하여 1,892억 4,000만원 규모의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위해 지원되는 교부금이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지역-대학 연계사업, RISE 연계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령[24]상 교육감이 소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시·도 교육감 소관사무가 아닌 고등교육 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부대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지정 지원사업이 감액되었고. 관련된 부대의견은 부기되지 않았음. 본심사와 다른 예비심사 제기 부대의견은 우월적 효력이 없음.

2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에 RISE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 대학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2024년 7월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주요 사업내용’에도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내 취창업 및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수 발견되는 등 각 교육발전특구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시·도교육감 소관을 벗어나는 고등교육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교육발전특구와 연계가능한 교육개혁 과제(예시) 일부]

지역혁신 대학지원	▸ RISE 시범지역 우수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교육발전특구에서 우수한 운영 모델이 만들어져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게 연계 ▸ 교육발전특구 중점추진분야 중 대학과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할 경우 RISE와 연계하여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 2025.3.2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주요사업 중에도 부트캠프, 계약학과, 외국인전담학과, 지역인재전형, 지·산·학·연 플랫폼, 지역-대학 연계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취·창업 프로그램 등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됨.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주요 사업내용 일부]

특구	사업내용
A시	부트캠프 운영, RISE체계 연계 등 A시-고교-대학-기반산업 맞춤인력 양성
B시	지·산·학·연 플랫폼 구축으로 산학연 연계사업 강화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 X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와 연계한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 전문인력 양성 -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 신설·운영 및 첨단 반도체 인재양성 캠프 운영
C시	RISE와 연계한 ‘로컬 헤리티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인재 취·창업 지원 - 지역대학 관련 학과(문화·역사·지리 등)와 Y연구원 협업 및 계약학과·대학(원) 개설
D군	지역-대학 연계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개발 및 지역인재 전형 확대 -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 등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E시	특성화고 해양분야 학과 신설 및 글로컬대학·RISE 연계 마이크로캠퍼스 운영 - 해군·함대-Z상고 현장실습·교육 협력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해양) 전문 교육과정 운영

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2024.7.30.

또한 2024년 각 특구 운영기획서(예산편성계획)를 살펴보면, 가령, X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고, Y군은 ‘글로컬대학 및 LiFE 2.0 사업과의 연계’에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Z시는 ‘대학-산업체 연계성 제고’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등 대부분 특구에서 지역-대학 연계과제를 특교-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2024년 각 특구 운영기획서 중 2024년 예산편성계획 부분 일부 발췌]

X시

구분	세부과제	재원별			
		계	특교	지방비(기초)	지방비(광역)
지역-대학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첨단산업분야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1,660	300	210 (+1,000)	90 (+60)

Y군

구분	세부과제	재원별				
		계	특교	지방비(기초)	지방비(광역)	기타
고교-대학-지역 산업 연계 지역인재 정주여건 마련	글로컬 대학 및 LiFE 2.0 사업과의 연계	500	250	250	-	-
	지역기업·공공기관 연계 취·창업 지원	1,740	20	1,320	-	400

Z군

구분	세부과제	재원별			
		계	특교	지방비(기초)	지방비(광역)
대학-산업체 연계성 제고	특화산업 분야 인재 양성	300	300	-	-
	대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200	-	200	-
	생애전주기 교육플랫폼 구축	300	-	300	-

자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운영기획서', 2024.7.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유·초·중등 분야의 교육혁신 등에는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고등교육 분야 등은 지자체 자금으로 추진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함.[25)]

다만 교육발전특구 주요사업은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26)]를 통해 추진되며, 2024년 상당수 특구에서 지역-대학 연계과제를 특교-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단계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재원을 사용하도록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구분되기 어려울 수 있음.

즉, 교육발전특구 지원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 소관사무를 위해 지원되는 교부금이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지역-대학 연계사업, RISE 연계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5) 교육부는 2024년 7월 각 교육청 및 지자체에 안내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운용 기준 및 유의사항"을 통해 특별교부금은 대학생·일반인 대상사업에 쓸 수 없고,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함. 다만, 동 안내 이후 실제 집행점검 내역이나 회수조치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26)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 2025.3.20.

4.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추계 부적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 반복

가. 개 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조 8,501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7)]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3,100	2,673,100	-	-	177,000	2,850,100	2,850,100	-	-	3,353,12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2022년도 이용률을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부족하여 2년 연속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교육부는 적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2조 6,731억원의 6.8%에 해당하는 1,770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2023년 본 예산 3조 251억 4,500만원의 4.6%인 1,383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된 후 2년 연속 예비비가 집행된 것임.

27) 일반회계-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영유아정책국)

[2021년~2024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C)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21년	3,395,239	3,395,239	△80,000	-	3,315,239	3,315,239	97.6
2022년	3,202,771	3,178,111	-	-	3,178,111	3,178,111	100.0
2023년	3,025,145	3,025,145	-	138,300	3,163,445	3,163,445	104.6
2024년	2,673,100	2,673,100	-	177,000	2,850,100	2,850,100	106.6

자료: 교육부

최근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 수(연말 기준)도 2020년 69만 1,000명에서 2023년 61만 1,000명, 2024년 58만 9,000명으로 감소하였음. 교육부는 2024년 0~2세 어린이집 이용인원을 월평균 52만명으로 보고 2024년 영유아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55만 9,000명이 이용함으로써 부족액이 발생하였음.

[2020년~2024년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수]

(단위: 천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수 (연말 기준)	691	663	639	611	589

자료: 교육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영유아(0~2세) 인구, 어린이집 이용률 및 지원단가 등을 기초로 추계할 수 있는데, 2024년에는 이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예상보다 높아서 예산이 부족했음. 즉, 0세반·1세반·2세반의 이용률을 각각 21.1%, 80.4%, 91.8%로 예측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실제로 그 이용률은 각각 22.9%, 85.7%, 91.5%이었던 것임.

[2020년~2024년 연령반별 어린이집 지원인원(연말 기준) 및 월평균 이용률]

(단위: 천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세반	인원	115	117	124	121	116
	이용률	17.0	18.7	21.1	22.4	22.9
1세반	인원	260	249	235	233	224
	이용률	74.6	76.3	80.4	85.0	85.7
2세반	인원	317	297	280	257	248
	이용률	88.9	89.4	91.8	90.9	91.5

자료: 교육부

다만 2020년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반·1세반·2세반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에서,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용률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22년도 실적치를 적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신 실적과 변동 추이를 근거로 소요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28)]

28) 특히, 유보통합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사업과 '부모급여'(3143-300)사업의 소관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면서 2025년부터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0세·1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0세·1세 영유가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정액의 아동수당(0세: 100만원, 1세:50만원)이 지급(부모급여 사업)되고, 0세·1세 영유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영유아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영유아보육료 사업)하되, 아동수당 지급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부모에게 그 차액만큼 추가로 아동수당(현금)이 지급됨(부모급여 사업).
따라서 0세·1세 영유아 인원 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0세·1세 영유아에 대한) 부모급여 사업예산과 영유아보육료 사업예산 총액을 정확히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0세·1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라 어느 한 사업예산은 부족하고, 다른 사업예산은 남을 수 있는 구조에서 집행되는 것임.
특히, 두 사업의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예산 프로그램도 달라졌으므로 어느 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옮겨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용"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게 되었으므로, 애초에 0세·1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임.

5.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충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9억 8,200만원이 전액 집행됨.[29)]

[2024년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82	982	-	-	982	982	-	-	0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82	982	-	-	982	982	-	-	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최근 예산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 및 교부단계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4년 서울 은평구와 경남 김해시에 각각 6억 3,200만원과 3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2024년 실집행률은 0%였음.

서울 은평구는 센터가 설치될 건물이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고, 경남 김해시는 센터가 설치될 ‘진영 빛 어울림센터’의 준공예정일이 당초 2025년 5월이었으므로,[30)]두 사업 모두 당초 계획에 따르더라도 2024년에는 센터 설치공간이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능했으므로, 예산 편성 및 교부단계에서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29) 일반회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1635-353)(영유아정책국)

30) 2025년 6월 현재는 준공예정일이 2026년 3월로 변경된 상황임.

[2024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실집행액	추진 현황	집행부진 사유
서울시 은평구	632	0	- 신축건물 공사(지하 2층~지상 7층) 진행중 - 공사기간(예정) : 2024. 7. ~ 2026. 7. - 공공복합시설 신축 준공 완료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 2026. 7월 이후	- 현재 건물 신축공사 진행중으로 신축건물 준공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함
경남 김해시	350	0	- 2021. 09. : 센터 설치 대상지 확정 - 2022. 02. : 센터 공간설계 협의 (도시디자인과, 건축사) - 2024. 06. : 「진영 빛 어울림센터」실시설계 준공 - 2024. 11. : 「진영 빛 어울림센터」조성사업 계약심사 완료	-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으로 으로 신축하는 「진영 빛 어울림센터」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진영 빛 어울림센터」 신축 공사 지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연 ※「진영 빛 어울림센터」 준공예정일 : 기존 2025. 5. → 변경 2026. 3.

자료: 교육부

동 사업예산을 교부받은 지자체의 실집행부진은 최근 매년 반복되고 있음. 2021년 예산을 교부받은 3개 지자체는 예산을 이월·재이월한 끝에 2023년에 그 집행을 완료하였고, 2022년 예산도 2024년에 실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부산 동구에 교부된 예산은 2025년 6월 현재까지 실집행률이 0%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교부년도	시도	시군구	국비 교부액	국비 실집행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2024.	
2021년	부산	서구	1,000	-	-	1,000	-	재이월 (완료)
	부산	남구	1,000	-	330	670	-	재이월 (완료)
	전북	전주시	1,000	-	5	995	-	재이월 (완료)
합계			3,000	-	335	2,665	-	-
2022년	부산	영도구	1,000		1	459	482	재이월 (완료)
	충남	당진시	1,000		-	1,000	-	이월 (완료)
	전북	김제시	700		-	260	440	재이월 (완료)
합계			2,700	-	1	1,719	482	-
2023년	부산	동구	1,000			-	-	이월 (반납 예정)
합계			1,000			-	-	-
2024년	서울	은평구	632				-	이월(진행중)
	경남	김해시	350				-	이월(진행중)
합계			982				-	-

자료: 교육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는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31]

둘째, 2024년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교부 시 국고보조율을 50%로 적용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20%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는 향후 유사한 사안 추진 시 보조율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 기준보조율을 "서울 20%, 지방 50%"로 하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 ±10%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32]

2024년 '서울시 은평구 신축이전 지원비' 12억 6,400만원의 "50%"인 6억 3,200만원이 은평구에 교부되었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31) 참고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최근 정부제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고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증액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제7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228개 시·군·구 중 설치된 곳은 121개(53%)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미설치 지역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 2024. 11. 5.)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아래와 같음.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95. 보육서비스 지원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마. 공공형어린이집		

[2024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 집행내역]

세사업명	예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982백만원 - (경상남도 김해시 설치비) 700백만원 × 1개소 × 50% = 350백만원 - (**서울시 은평구 신축이전 지원비**) 1,264백만원 × 1개소 × **50%** = 632백만원

교육부는 2024년 이전 사례 중에 서울지역 지자체에 지방육아종합센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사례가 없었고,[33] '2024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기준을 "국비 50%, 지방비 50%"라고 기재[34]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보조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202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 일부]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설치비 지원 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 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 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또한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35] 향후 예산 교부 시 '보조율 사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교육부는 각 업무지침에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보조금 예산 교부 시 법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3) 2025년 1월 현재 서울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6곳(광역 1곳, 기초 25곳) 설치되어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임.

34) 교육부에서 2025년 1월 만든 '2025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35) 교육부는 2025.7.31.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개정 완료하였음.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국비 20% 지원)

6.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비 분담주체 변경 시 면밀한 준비를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및 일반 성인 등의 역량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62억 1,900만원 중 243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9%)되고 18억 7,000만원이 불용됨.[36)]

[2024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6,219	26,219	-	-	26,219	24,349	-	1,870	28,56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1,042	21,042	-	-	21,042	19,757	-	1,285	20,948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985	1,985	-	-	1,985	1,407	-	578	2,64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기초·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10억 4,200만원 중 197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9%)되고, 12억 8,500만원이 불용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9억 8,500만원 중 14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0.9%)되고, 5억 7,800만원이 불용됨.

36) 일반회계-평생교육바우처 지원(4131-304)(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종래 국고사업에서 2024년 그 일부가 국고-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참여 지자체 부족으로 예산 일부가 불용되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참여 의향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2023년까지 국고사업으로 집행되다가 2024년에는 사업예산 중 179억 5,500만원은 100% 국고사업으로, 30억 8,700만원은 국고-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음.[37)]

그러나 2024년 국고-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당초 5개 광역지자체의 참여를 기대하고 국비: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을 7:3으로 하여 총 44.1억원(국비 30.87억원, 지방비 13.23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정하고 국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모 결과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실제 참여한 광역지자체는 3개(울산・충남・제주)에 그쳤고, 집행률과 실집행률은 각각 58.4%와 52.8%로 저조하였음.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2025.4.)	실집행률 (2025.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21,042	19,757	93.9%	19,131	90.9%
(국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7,955	17,955	100.0%	17,500	97.4%
(국고-지방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3,087	1,802	58.4%	1,631	52.8%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2년 4월 평생교육바우처 매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38)] 11개 시・도가 참여 희망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평생교육바우처 중장기 운영방식 협의(2023년 3월), 중앙・

37) 2025년부터는 동 사업을 전액 국고-지방비(광역)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음.

38) 2022년 4월 수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11개 시・도(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제주) 발급 희망
- (지원대상) 광역지자체별로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 선정
- (지원인원) 총 21,570명
※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제주: 2,500명, 세종: 570명, 충북: 1,500명, 경남 : 2,000명
- (지원규모) 총 75.75억원 (국비 44.14억원, 지방비 31.61억원, 충남 제외)
- (대상예시) ① 노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노인 평생교육 중심
② 퇴직기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퇴직 준비기(50대) 바우처 지원계획 수립 등 대상 확대

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협력회의(2024년 10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사전 안내(2024년 12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꾸준히 지속한 결과, 2025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동 사업을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사업과 국고-지방비 매칭사업을 병행 추진한 2024년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39] 동 예산 확정 시점까지 지자체 참여 및 매칭예산 확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국고사업과 매칭사업의 예산액 배분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체적인 집행률은 더 제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국고-지방비 매칭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 참여 의향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종래 국고사업으로 집행되었다가 2024년 국고-지방비(기초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인근 주민 간에도 차별이 생기고 종래 수혜를 받다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2023년 국고사업으로 집행되다가 2025년부터 국고-지방비(광역) 매칭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액 전부(19억 8,500만원)를 국고-지방비(기초)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음.

2024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초지자체는 전체 기초지자체 226개의 46.9%인 106개에 불과하여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각각 70.9%, 40.9%로 저조한 편이었고, 특히 참여 지자체 주민이 아닌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장애인 편생교육바우처 지원금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2025.4.)	실집행률 (2025.4.)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1,985	1,407	70.9%	813	40.9%

자료: 교육부

39) 교육부는 2022년 4월 수요조사에서 11개 지자체가 참여의향을 밝혔고 2023년 각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참여 지자체 5개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함. 다만,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5개로, 국고 지원금을 30억 8,700만원으로 설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음.

교육부는 당초 2023년 4월 광역지자체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광역지자체측에서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매칭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복지관 등)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초지자체 참여 여부에 따라 주민 수혜 여부가 달라져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제도 개편과정에서 종래 수혜를 받던 사람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 추진 시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7. Global Korea Scholarship: 지역 내 취업·정주 가능성과 연계한 R-GKS 장학생 선발·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은 세계 각국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학위취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47억 2,600만원 중 1,133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40]

[2024년도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119,093	119,093	11	-	119,104	116,969	-	2,135	134,464
	Global Korea Scholarship	114,726	114,726	-	-	114,726	113,323	-	1,403	130,09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부는 2024년 확대·개편된 R-GKS 전형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시 지역 내 취업·정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41]되어, 2024년 총 장학금 지급액은 2023년 909억원에 비해 23.1% 증가한 1,119억 7,200만원이고, 신규선발 장학생은 2023년 1,334명(학위과정)보다 74.1% 증가한 2,322명(어학연수 51명 포함)[42]에 달하였음.

40) 일반회계-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4531-300)(국립국제교육원)

41) 동 사업은 1967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0년 우수교환학생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하였으며, 신규 선발 장학생 규모는 2013년 연간 830명에서 2020년 연간 1,300명, 2024년 연간 2,400명 규모로 확대된 것임.

특히 종래 ‘지방대 전형’(2023년 304명)을 2024년부터 ‘R-GKS’ 과정(2024년 804명 계획, 785명 지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자체-대학이 연계 추천한 학생을 우대 선발한 것은 각 지역의 외국인 장학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2023년 및 2024년 Global Korea Scholarship(학위과정 등) 지원인원]

(단위: 명)

구분		2023			2024				
		전형	실적		전형	계획		실적	
학부	대학	지방대	**86**	235	R-GKS	283	466	**283**	466
		전문학사	20		전문학사	24		24	
		UIC(산학협력)	59		UIC(산학협력)	79		79	
	공관	일반	63		일반	68		68	
		재외동포	7		재외동포	6		6	
	외국정부추천	-	-		국제재건인재	6		6	
대학원	대학	일반	305	589	일반	314	1,230	500	1,206
		지방대	**218**		R-GKS	521		**502**	
		R&D(연구개발)	60		R&D(연구개발)	300		176	
		연구	6		연구	15		4	
		-	-		글로벌 네트워크	80		24	
	공관	일반	495	510	일반	550	560	553	561
		재외동포 ・입양인	6		재외동포 ・입양인	10		8	
		교원	8		-	-		-	
		연구	1		-	-		-	
	외국정부추천	-	-		국제재건인재	44	44	35	35
어학연수	외국정부추천	-	-	-	국제재건인재	100	100	51	51
계				1,334			2,400		2,322

주) 상기 실적은 학위과정(어학연수 포함)에 대한 것이며, 그 밖에 GKS 장학금 지원과정으로 교환학생 및 단기과정(초청학생, 자비유학 지원)이 있음. 교환학생 지원규모는 2023년 399명에서 2024년 58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초청학생(2023년 371명) 및 자비유학 지원(2023년 352명)은 사업효과 저조로 2024년 종료하였음.

자료: 교육부

종래 장학금 지원 취지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국에 우호적인 우수 인재의 양성에 있었다면, R-GKS 전형은 국내 취업・정주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있음.

42) 당초 2024년 신규선발 장학생을 2,4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78명 못미치는 2,322명을 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학금 예산(기타보전금(310-04목))에서 13억 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교육부는 R-GKS 장학금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과 산업계의 인력소요, 외국인 근로자 현황, 대학의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비자 발급절차 및 제한요소 등을 지속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고, 각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R-GKS 장학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43][44]

둘째, 교육부는 GKS 장학생 관리 등에 사용하는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의 연간 유지보수계약 예산을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는 2006년부터 GKS 장학생 자격과 현황(TOPIK 점수, 학교 재학 현황, 귀국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을 운용하고 있음. 또한 동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동 비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업체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계약금액: 2,180만원, 계약기간: 2024년 1월~12월)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도 국외인적관리시스템(HURIK) 유지보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 예산	사업계약 내역					사업유형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주업체	계약기간	
일반회계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4531-300)	30 (210-09)	국외인적자원관리 시스템(HURIK) 유지관리 용역	22	21.8	OOO	24.1. ~24.12.	유지보수

다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45]이라고 하므로 동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은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교육부는 향후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의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관련 지침에 따라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

43)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GKS 장학생에게 취업역량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채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44) 가령, ㉠ R-GKS 장학생 선발 시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분야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비자(F-2-R) 발급 분야 등을 고려하거나, ㉡ (현재 UIC 전형에 적용되는)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과 연계 범위를 확대하거나, ㉢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HURIK)을 통해 R-GKS 장학생의 국내 취업 (희망)여부 등을 추적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1

8. 한일교육교류협력: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은 일본 대학생의 한국 (전문)학사 학위과정 지원, 한일 양국의 직업계 고등학생 상호 방문, 한일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9억 4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집행(집행률 33.9%)되고 12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46]

[2024년도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학생교육교류지원	13,801	13,801	-	-	13,801	11,175	364	2,262	14,054
한일교육교류협력	1,904	1,904	-	-	1,904	646	-	1,258	1,71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 한일 실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규모가 조정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한일 양국간 학위과정 학자금 지원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교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나,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2024년 예산 집행단계에서 양국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결과, 2024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집행되지 못하였고 양국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와 단가 등이 일부 조정되면서 2024년 집행률은 33.9%에 불과하게 됨.

46) 일반회계-학생교육교류지원(4531-301)(국립국제교육원)

구체적으로 내내역사업인 ‘한일 미래인재 초청 (전문)학사’ 사업은 일본 국적 고교 졸업생의 한국 (전문)대학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무협의를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집행액이 1억 2,000만원에 그쳤음.[47)]

한편 내내역사업인 ‘한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사업은 당초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1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한일 협의과정에서 프로그램이 4개월로 축소되면서 집행잔액 7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음.

[한일교육교류협력 사업 세부내용 및 집행부진 사유]

구분	사업내용 및 집행부진 사유
한일 미래인재 초청 전문(학사)	○ 사업내용 : 일본 국적 고교 졸업생에게 한국 (전문)대학 학위과정 장학금 지원 ○ 예산액: 462백만원 (연간 23.1백만원x20명) ○ 집행액: 120백만원 (2024년 2학기 지원분 8백만원x15명), ○ 불용사유: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일본 사업예산 확인 후 2학기부터 시행되어 장학금 집행잔액 발생 * 예결위 부대의견: 교육부는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상호호혜의 원칙 하에 상대국이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한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 사업내용 : 한·일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 예산액: 1,192백만원(11.9백만원x100명) ○ 집행액: 402백만원(4백만원x100명) * 1인당 장학금: 입·출국 항공료 1백만원, 학업장려금 3백만원 ○ 불용사유: 당초 교환기간 1년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본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1년→4개월)되어 집행잔액 발생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국회의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상대국이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4월 일본측 사업예산이 반영된 점을 확인한 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이 33.9%에 불과한 것은 교육부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진의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양국 간 실무협의를 긴밀히 진행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48)]

47) 또한, 1인당 지원단가가 연간 2,310만원에서 학기당 800만원으로 감소하고, 지원인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는 등 실무협의 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예산소요에 변화가 발생함.

48) 참고로, 양측은 2024년 6월 한일교육교류협력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여 양국이 원활히 실무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사업예산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일정 부분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보임.

9. 취업연계 장려금: 직업계고 학생 수 추이 및 제도변경 효과를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3학년 학생에게 5백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20억원 전액이 교부되었음.[49]

[2024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121,480	-	-	121,480	121,480	-	-	102,380
취업연계장려금	102,000	102,000	-	-	102,000	102,000	-	-	83,61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직업계고[50] 3학년 학생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2024년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졸업자 감소 및 장려금 지급방식 일부 변경에 따라 예산 일부가 미집행되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직업계고 학생 수와 취업률 추이 등에 기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변경 시에는 그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 1,020억원이 전부 실집행되어 각각 20,400명이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2024년 한국장학재단에 교부된 예산 1,020억원 중 실집행액은 794억 2,500만원(2025년 5월말 기준, 집행률 77.9%)에 그쳤고, 장려금 수혜자 수는 15,885명으로

49) 일반회계-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50)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지원대상임.

전년에 비해 22.1% 감소하였음.

[2024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금액	40,000	133,000	102,000	102,000	**102,000**
	산출 기준인원	10,000	31,000	20,400	20,400	**20,400**
결산	금액	40,000	76,218	102,000	102,000	**79,425**
	집행률	100%	57.3%	100%	100%	**77.9%**
	실제 지원인원	10,000	18,479	20,400	20,400	**15,885**

자료: 교육부

2024년 장려금 지원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 주된 원인은 직업계고 졸업자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부가적으로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지원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우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현황 조사 결과(매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자 수는 2022년 22,709명에서 2023년 19,526명, 2024년 16,58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직업계고 졸업자 수가 2021년 78,894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4년 63,005명이 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남.

[2021년~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매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

연도	취업률[1]	진학률	졸업자 중 취업자비율	상세 자료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2]
2021	55.4	45.0	28.6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2022	57.8	45.2	29.6	76,760	**22,709**	34,686	1,873	942	16,550
2023	55.7	47.0	27.3	71,591	**19,526**	33,621	1,940	971	15,533
2024	55.3	48.0	26.3	63,005	**16,588**	30,216	1,716	1,059	13,426

주 1)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x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100
2) 졸업한 사람 중 취업자 및 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재구성

교육부는 2024년 동 사업예산 편성시 장려금 지원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20,4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직업계고 학년별 재학생 수와 최근 졸업자 취업률 추이에 기초하여 지원 인원을 산정하였다면 미집행 예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51]

한편 2023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년 5~6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되, 이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향후 12개월 의무종사를 조건[52]으로 500만원 장려금을 선지급하였고, 그 결과 일부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취업에 성공하면서 당해 연도에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음.

반면 2024년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9개월 재직이 확인되면 300만원을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에 신청한 학생이 2024년에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53]하게 되었음.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방식 변경]

구 분	2023년 이전	2024년 이후
신청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년 5~6월에 신청	
지급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 이후 12개월 의무종사 미이행시 환수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3개월 근무 시 200만원 지급 이후 추가 9개월 근무 시 300만원 추가 지급
비 고	2023년 신청 학생이 2023년 장려금 수령 가능	2024년 신청 학생이 2024년 장려금 수령 불가

따라서 교육부는 2024년 제도변경에 대비하여 매년 장려금 지급액 중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지급액의 비중을 기초로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액을 예측한 후 2024년 예산편성 시 해당 소요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종래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2024년 예산 불용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

51) 참고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수는 59,661명으로 더욱 줄었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가 2022년 182,801명에서 2024년 171,378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향후 직업계고 졸업자 수 및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자 수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e-나라지표 참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일반고	961,714	993,933	1,010,078
특수목적고	61,424	60,480	59,535
특성화고	**182,801**	**175,327**	**171,378**
자율고	56,409	48,529	63,334
계	1,262,348	1,278,269	1,304,325

52) 조건 불이행시 장려금을 환수하였음.

53) 중소·중견기업 재직기간을 고3 10월부터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10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2025년 1월이 되어야 3개월 재직요건을 채우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교육부는 직업계고 재학생 수 및 졸업자 수의 추이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제도변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0.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통폐합 예정 학교 대상 시설공사 시행 부적절

가. 개 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교육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 교육과정 실현과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3,584억 8,400만원 중 3,311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4%)되고 273억 1,900만원이 불용됨.[54]

[2024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58,484	358,484	-	-	358,484	331,165	-	27,319	288,60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에 대해 시설공사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 비율로 추진된 매칭사업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하였으며, 대상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1차 선정한 후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음.

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그린스마트 스쿨 조성(1604-300)(기획조정실)

202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55]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학교 중 향후 통폐합 계획이 있는 학교가 있음.

[통폐합 계획이 있는 학교 중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 대상인 학교]

(단위: 명, 백만원)

교육 지원청	학교	학생 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2021년	2024년 (학구 외)	2024년 통학버스 이용	선정일	사업유형	추정 사업비	단계
화성	팔탄초 대방분교	44	35(24)	30	2021.7.	리모델링	3,410	준공
고양	덕양중	195	187(37)	-	2021.7.	리모델링	6,456	공사중

자료: 감사원

통폐합 계획이 있는 학교는 전면적 시설개선을 목표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보다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했을 것이며, 교육부도 이 점을 유의하여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교육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2개 학교 외에는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사업예산이 지원된 학교 중 통폐합으로 폐교 예정인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56] 통폐합 계획과 관계 없이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 대상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적절성이나 향후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방안[57]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58]

교육부는 향후 폐교가 예정된 학교에 시설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55) 실제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예산사업명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으로 표기함.

56) 다만, 2024년 12월 수립된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대상학교 중 17개교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이중 10개교는 통합본교로 전환하고, 7개교는 적정규모육성학교로 지속 관리예정으로 폐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함.

57)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설계단계 이전의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고, 이미 공사중이거나 준공된 경우 소규모 학교 시설활용・운영계획 계획(주민 개방을 통한 시설활용이나, 공동교육과정, 공동학구 조정 등을 통해 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58) 또한, 2024년부터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재구조화사업에서도 통폐합 예정학교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11. 산학연협력 고도화: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전 준비 필요 등

가. 개 요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437억 6,500만원 중 4,403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3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59)]

[2024년도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산학연협력 고도화	443,765	443,765	-	-	443,765	440,375	-	3,390	184,950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117,500	117,500	-	-	117,500	114,110	-	3,390	116,700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201,001	201,001	-	-	201,001	201,001	-	-	(RISE 이관)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75억원 중 1,141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3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전공과 관계 없이 대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첨단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계·연구계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010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5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산학연협력 고도화(2256-300)(인재양성지원과 등)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부는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신청대학 미달로 인해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사업액 일부를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수요조사 등 사전 준비를 면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교육인력 채용이나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에는 2023년에 선정된 반도체 분야 8개 사업단(대학 단독 또는 대학 연합)에 대하여 420억원을 지원[60]하는 한편, 13개 사업단(반도체분야 10개, 이차전지 분야 3개)을 신규 선정하여 688.6억원을 지원하였음.

교육부는 2024년 3월 신규 사업단을 공모하면서 지원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 적시하였으나, 접수 결과 약 70억원의 지원예산이 배정된 비수도권(단독) 유형에서 신청대학이 없어 2024년 6월 재공모하였음.

[2024년도 특성화대학(반도체) 재정지원사업 공모 접수결과]

(단위: 개)

사업유형	구분	선정(안)	신청		경쟁률	지원 예산
			사업단	신청대학		
단독형	수도권	3	5	5	1.67:1	45억 내외
	비수도권	1	0	0	-	70억 내외
동반 성장형	수도권/비수도권	4	10	20	2.5:1	70억 내외
	비수도권	2	3	6	1.5:1	85억 내외
합 계		10	18	31	1.8:1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재공모 시 신청대상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1항[61]에 따른 대학”으로 확대하되, 재공모로 선정된 대학은 타 대

60)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단계평가를 거쳐 4년간(2년+2년) 지원을 받게 됨.

6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학에 비해 연내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모했던 지원액의 반액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며,[62] 재공모 결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추가 신청하여 선정되었음.

그러나 재공모 선정대학의 지원액을 불가피하게 감액함에 따라 33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재공모 시 신청자격이 새롭게 부여되어 사업에 참여한 울산과학기술원에 2024년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2025년 5월말 기준 18.9%로 저조하므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63]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생 략)

62)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아닌 대학이 선정될 경우에는 2~4년차(2025년~2027년)에는 대학의 규모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대학 소재지와 관계 없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대학 지원액을 적용한다고 공고함.

63) 2024년 각 사업단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2025년 5월말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교육부는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연구시설·장비 계약 체결 지연 및 납품 지연을 들었으며, 2025년 5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대학을 대상으로 장비 입고 예정일 및 이월금 사용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미집행분의 80~90%는 2025년 3분기 내로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단위: 백만원, %)

분야	선정 연도	유형		수행기관	대학별 교부액 (A)	실집행액 (25.2월 기준) (B)	이월액 (C)	실집행액 (25.5월말 기준*) (D)	실집행률 (D/A)
반도체	2024	단독	수도권	가천대	4,360	2,156	2,191	3,351	76.9
				서강대	4,360	2,544	1,815	2,639	60.5
				연세대	4,360	1,697	2,299	1,697	38.9
			비수도권	울산과학기술원	3,500	612	2,888	660	18.9
		동반	연합	고려대	4,180	3,198	961	3,198	76.5
				인제대	2,600	1,209	1,390	1,611	62.0
				아주대	3,450	2,106	1,338	2,113	61.2
				국립한밭대	3,330	2,314	1,016	2,615	78.5
				인하대	3,490	2,092	1,398	2,526	72.4
				강원대	3,290	1,016	2,274	1,065	32.4
				한국공학대	4,000	2,714	1,286	2,966	74.2
				국립공주대	2,780	1,479	1,301	2,126	76.5
			비수도권	국립금오공과대	5,761	3,437	2,323	4,023	69.8
				영남대	2,469	819	1,650	1,129	45.7
				경상국립대	4,530	2,309	2,221	4,236	93.5
				국립부경대	3,700	1,091	2,608	2,737	74.0
이차전지	2024	단독		한양대(에리카)	2,900	2,787	113	2,834	97.7
				국립부경대	2,900	1,762	1,138	1,942	67.0
				전남대	2,900	1,224	1,416	1,437	49.6
계					110,860	74,028	36,000	84,064	75.8

* 이월액 포함
※ 2024년 사업비 정산 이후 실집행액 및 이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

교육부는 2024년 사업준비과정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2024년 사업구조[64]가 2023년과 동일하였고, 2023년에는 비수도권 단독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학교(1개교)와 타 유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다수의 비수도권 대학(16개교)이 있었으므로 1개 대학만 선정하는 2024년 비수도권(단독) 유형에서 신청대학이 없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4년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예산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 준비를 면밀히 함으로써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컨소시엄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한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은 인공지능·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 대학(최대 5~7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40% 이상, 전문대 1개교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1년 8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고,[65] 2023년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5개 추가 선정하였으며, 2024년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을 5개 추가선정하여 2024년 총 18개 컨소시엄에 총 1,998억원을 지원하였음.[66]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컨소시엄 현황]

선정연도	연번	분야	주관대학	참여대학(전문대 밑줄)	지자체
2021년	1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
	2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자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
	3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
	4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
	5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
	6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

64) 수도권(단독), 비수도권(단독), 수도권-비수도권(연합), 비수도권(연합) 4개 유형으로 선정한다는 의미임.

65) 2021년에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으로 시작하였고, 2023년 지자체참여형 컨소시엄 도입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학대학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66) 2021년 선정된 컨소시엄은 총 6년(3+3년) 지원하며, 2023년과 2024년 선정된 컨소시엄은 총 4년(2+2년) 지원함.

선정 연도	연번	분야	주관대학	참여대학(전문대 밑줄)	지자체
	7	지능형로봇	한양대 (ERICA)	광운대, 국립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공학대, 영진전문대	-
	8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
2023년	9	항공드론	한국항공대	인하대, 경북대, 한서대, 연암공과대	대구
	10	반도체소부장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국공학대, 대림대	충남
	11	이차전지	충북대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	충북
	12	차세대통신	국민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	광주
	13	에코업	고려대(세종)	고려대, 건국대, 영남대, 전주비전대	세종
2024년	14	그린바이오	충남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연암대	대전
	15	첨단소재나노융합	중앙대	강원대, 한남대, 국립금오공과대, 인하공업전문대학	강원
	16	데이터보안활용융합	강원대	아주대, 충남대, 한양대(ERICA), 영남이공대	강원
	17	차세대디스플레이	단국대	경희대, 한서대, 호서대, 충북보건과학대	충남
	18	사물인터넷	세종대	대전대, 동국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4년 23만 3,327명이 동 사업을 통해 운영된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3~4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자도 9,613명에 이르며, 향후 각 컨소시엄에 대한 단계평가 과정에서 취업·창업 기여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교과목 운영 및 마이크로디그리 현황]

구분	컨소시엄	교과목 운영건수	교과목 이수자 수	마이크로디그리[1] 이수자 수
대학 주도형	인공지능	566	22,617	210
	빅데이터	882	32,913	2,192
	차세대반도체	226	7,234	346
	미래자동차	460	12,867	970
	바이오헬스	794	14,141	294
	실감미디어	295	12,234	705
	지능형로봇	1,079	36,605	1,181
	에너지신산업	157	6,290	1,025
지자체 참여형	항공드론	249	6,041	291
	이차전지	844	15,093	726
	반도체소부장	341	31,475	401
	차세대통신	685	26,358	988
	에코업	204	9,459	284

주) 마이크로디그리는 통상 9~12학점으로 3~4개의 교과목으로 구성
자료: 교육부

다만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을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67] 2024년 참여 지자체가 동 사업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68] 참여 지자체가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음.[69]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 소재하는 다수 대학의 협력·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및 소재 지역의 이해관계가 유연하게 조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특정 지자체의 구체적 역할이 요청됨.

특히 동 사업은 2025년부터 RISE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지역 플랫폼에 사업예산을 배분하고,[70] 지역 RISE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RISE 사업체계에서 전국 단위의 대학 간 융복합 교육과정 지원사업인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71] 이를 위해 컨소시엄 참여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67) 교육부는 특정 지자체가 참여하는 취지는 첨단분야 교육과정이 지역의 전략산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68)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이 첨단분야별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집행 등 하위보조사업자 역할을 수행함.

69) 가령, 교육부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시행한 'We-Meet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직접 촉진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참여 지자체는 특별한 역할이 없음.
참고로, 'We-Meet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이 협력하여 '기업 탐색 → 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참여 → 취업연계(We-Meet)' 원스톱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첨단분야 진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경험 및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통한 구체적 역량 함양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18개 분야별 500여개를 운영하였음(참여학생 4,000여명, 참여기업 400여개 사).

70)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2025.4. 개정) 등에 따르면, 동 사업예산은 2025년의 경우 출연금 비목(350-02)으로 편성하고, 교육부, 지역RISE센터, 지역대학이 협약을 맺은 사업수행기관(한국연구재단)에 예산을 교부하고 지역RISE센터를 거쳐 참여대학에 지원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2026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비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아닌)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동 사업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71) 교육부는 RISE 사업체계에서도 타 지역 대학·기업·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을 권장한다고 하며, 초광역 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그 예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소개하고 있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2025.4. 개정), p.16).

12. 대학혁신지원: 예체능 계열 학과(학부) 적정 수 전임교원 확보 필요

가. 개 요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난 등 대내외 환경 변화 가운데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재양성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조 34억 700만원 중 1조 29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학혁신지원	1,004,607	1,004,607	-	△1,200	1,003,407	1,002,906	-	501	796,111
대학혁신지원 (1유형)	885,200	885,200	-	△1,200	884,000	883,500	-	500	795,500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111	111	-	-	111	111	-	-	1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안정적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8,840억원 중 8,835억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억원이 불용되었음.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종전의 교육부 대학평가로 하던 고등교육 질 관리를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평가인증기관이 전문 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억 1,1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7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혁신지원(2301-300)(지역인재정책관・인재정책기획관)

나. 검토의견

첫째, 사립대학 예체능 계열 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저조하고, 일부 학과에서는 전임교원이 수년째 미충원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시정될 필요가 있음.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및 별표5에서는 대학이 계열별 학생정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이하 '교원정원'이라고 함)를 정하고 있으며, 예체능계열은 학생 20명당 1명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운영중인 대학은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정원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대학은 교원정원의 3분의 2보다 많은 수의 전임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학설립·운영 규정」(교원 확보기준 관련)]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8

그러나 사립대학 중 2024년 대학혁신지원(1유형)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상위 10개 학교의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보면, 동 기준(교원정원 67%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을 준수한 학교는 1개에 불과했고, 전임교원 수가 교원정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도 (10개 중) 7개나 되었음.

[각 학교의 계열별 교원정원 대비 확보한 전임교원 비율(2024년)]

(단위: %)

학교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	의학계열	합계
㉠대학교	71.0	121.2	90.0	**39.7**	379.7	104.8
㉡대학교	88.7	121.0	74.4	**39.3**	151.5	94.8
㉢대학교	83.8	84.7	51.6	**49.0**	310.5	82.0
㉣대학교	80.8	80.4	67.4	64.7	219.5	83.8
㉤대학교	79.9	80.6	55.5	**44.4**	348.7	80.4
㉥대학교	83.4	160.7	80.9	**42.3**	708.6	128.1
㉦대학교	89.6	139.1	76.6	71.9	238.7	119.8
㉧대학교	65.2	92.6	76.0	**43,.6**	227.1	81.3
㉨대학교	82.8	90.3	48.9	**46.2**	120.3	74.3
㉩대학교	91.5	93.3	71.4	50.9	349.2	93.3

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지원규모가 큰 상위 10개 사립대학에 대한 자료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대학알리미 자료 재구성

개별 학과별 상황을 살펴보면, 재직중인 전임교원의 수가 해당 학과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정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 중 전임교원 미충원 상황이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많음.

가령, A대학 무용과는 학생정원이 152명(2024년 재학생 166명)으로서 6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교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전임교원의 수는 계속 1명에 불과하고,[73] B대학 산업스포츠학과는 학생정원 115명(2024년 재학생 110명)으로 전임교원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교원을 두어야 하나, 전임교원 수는 2020년 이후 계속 1명에 불과한 실정임.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 적어도 4~6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필요한 학과에 실제 재직중인 전임교원은 수년간 1명에 불과하고, 그 부족분을 안정적인 채용이 보장되지 않은 강사 등 비전임교원이 보완해 왔다면, 해당 학과의 중장기 교육·연구역량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당장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73) 2024년 동 학과에는 겸임교원 2명, 강사 3명, 기타교원 11명 등 비전임교원 16명이 있었음.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예체능 학과 현황(일부)]

(단위: 명)

학교 (학과)	학생 정원[1]	교원 정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	
A대 무용과	152	8	4	8	3	8	1	10	1	13	1	16
			50%		37.5%		**12.5%**		**12.5%**		**12.5%**	
B대 산업스포츠학과	115	6	1	7	1	7	1	8	1	7	1	8
			16.7%		16.7%		16.7%		16.7%		16.7%	
C대 태권도학과	300	15	4	23	4	21	4	21	4	16	3	17
			26.7%		26.7%		26.7%		26.7%		**20%**	
D대 국제스포츠학부	370	19	3	18	2	25	2	23	3	18	3	20
			15.8%		**10.5%**		**10.5%**		**15.8%**		**15.8%**	
E대 공간디자인학과	145	8	1	15	1	15	2	17	1	18	1	18
			12.5%		**12.5%**		25%		**12.5%**		**12.5%**	
F대 사회체육학과	145	8	1	10	2	10	2	9	1	10	2	8
			12.5%		25%		25%		**12.5%**		25%	
G대 무용학과	148	8	3	30	3	29	3	27	3	30	2	28
			37.5%		37.5%		37.5%		37.5%		25%	
H대 체육학과	144	8	2	12	2	18	2	14	2	14	2	13
			25%		25%		25%		25%		25%	
I대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152	8	3	25	3	28	3	24	2	22	1	28
			37.5%		37.5%		37.5%		25%		**12.5%**	
J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270	14	4	17	3	17	3	16	3	13	2	16
			36.4%		27.3%		25%		23.1%		**14.3%**	

주 1) 학생정원은 2024년 기준이며 2020년~2024년 사이 학생정원이 변경된 학과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교원정원은 계속 동일하였음. 다만, J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는 학생정원이 220명(2020년)에서 230명(2022년), 250명(2023년), 270명(2024년)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원정원도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였음. 해당 학과의 2020년 ~2024년 전임교원 비율 수치는 해당 연도의 전임교원 수를 해당 연도 교원정원으로 나눈 값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대학알리미 자료 재구성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A대학 무용과는 2023년 1학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가 9.7%에 불과하였고, B대학 산업스포츠학과는 그 비율이 34%였으며, D대 국제스포츠학부는 같은 학기 모든 강의가 강사 또는 기타교원 등 비전임교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예체능 학과의 교원별 강의 담당비율(2023년 1학기)]

학교(학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기타
A대 무용과	9.7%	-	-	37.1%	53.2%
B대 산업스포츠학과	34%	15.1%	50.9%	-	-
C대 태권도학과	33.7%	43%	-	23.3%	-
D대 국제스포츠학부	0%	0%	4.5%	90.9%	4.5%
E대 공간디자인학과	32.7%	53.2%	-	11.5%	2.6%
F대 사회체육학과	19%	30.2%	-	47.6%	3.2%
G대 무용학과	26.7%	23.3%	16.7%	20%	13.3%
H대 체육학과	22.5%	-	5%	65%	7.5%
I대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18.5%	11.1%	7.4%	63%	-
J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	45.4%	15.1%	18.5%	21%	-

자료: 대학알리미 자료 재구성

대학이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90% 이상의 강의를 강사 등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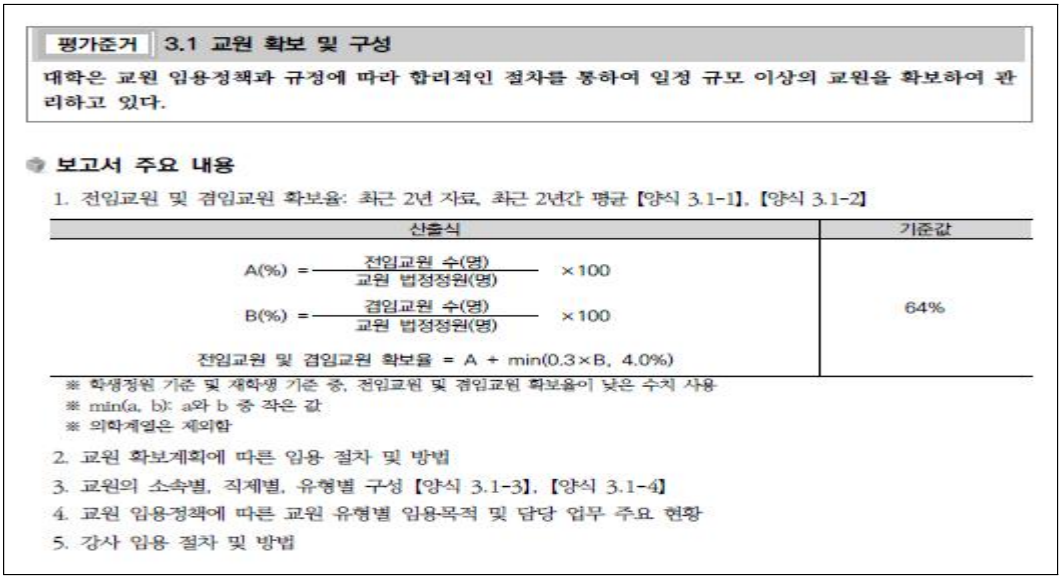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74]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예체능 계열 학과 전임교원 결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교육부는 대학설립인가, 대학 입학정원 조정 또는 대학 편입학전형 심사 등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시점 이후에는 동 기준을 장기간 위반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 기관인증평가에서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 전체의 교원 확보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점검하고 있지 않음.

74)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 · 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 · 감독을 받는다.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 중 교원 확보율 부분]



평가준거 **3.1 교원 확보 및 구성**

대학은 교원 임용정책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 주요 내용

1.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최근 2년 자료, 최근 2년간 평균 【양식 3.1-1】, 【양식 3.1-2】

산출식	기준값
$A(\%) = \frac{\text{전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B(\%) = \frac{\text{겸임교원 수(명)}}{\text{교원 법정정원(명)}} \times 100$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 = A + min(0.3×B, 4.0%)	64%

※ 학생정원 기준 및 재학생 기준 중,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수치 사용
※ min(a, b): a와 b 중 작은 값
※ 의학계열은 제외함

2. 교원 확보계획에 따른 임용 절차 및 방법
3. 교원의 소속별, 직제별, 유형별 구성 【양식 3.1-3】, 【양식 3.1-4】
4. 교원 임용정책에 따른 교원 유형별 임용목적 및 담당 업무 주요 현황
5. 강사 임용 절차 및 방법

자료: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기준'(2024.12.) p.66 (교육부 제출)

교육부는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정보를 매년 공시함으로써 각 대학에서 교원 확보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이 공시되지 않는 등 공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전임교원 장기 미충원 학과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실효적인 대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학교원 채용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75][76]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무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서 전임교원 장기 결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님.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및 강의 담당비율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75)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6) 구체적으로,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당수 대학은 학칙이나 정관에서 '학과 심의 후 본부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등 관계 법령에서는 각 단계별 심사위원 구성, 통과기준 등을 대학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둘째, 교육부는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하거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배분 시 전임교원 확보율을 가감점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전임교원 미충원을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각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준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전임교원 확보율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하고, 공시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교육부는 현재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 알리미'[77]를 통해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하고 있으나,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에게는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이 더 유용한 정보이며, 이를 공시할 경우 대학 간 경쟁을 통해 특정 학과 전임교원 장기결원 문제가 일부 해소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78]

또한 현재 「대학 공시정보-교육여건」에서 "전임교원 현황 및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이 공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공시정보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어 쉽게 찾기 어려우므로, 「학과정보」[79]에서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현황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함으로써, 학생·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시) 대학알리미 대학별 교원확보율 공시화면]

학교종류	설립구분	지역	상태정보	학교	계열	전임교원 현황		교원 법정정원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계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B)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B')	학생정원 기준(C)	재학생 기준(C')	학생정원 기준(A/B)	재학생 기준(A'/B')	학생정원 기준(B/C*100)	재학생 기준(B'/C'*100)
대학교	사립	경남	기존	가야대학교(김해)	인문·사회계열	27	27	29	17	26.11	15.11	93.1	158.82
					자연과학계열	43	43	73	68	33.84	31.3	58.9	63.24
					공학계열	0	0	0	0	0	0	0	0
					예·체능계열	0	0	0	0	0	0	0	0
					의학계열	0	0	0	0	0	0	0	0
		경기	기존	가천대학교	인문·사회계열	193	193	272	465	35.13	60.13	70.96	41.51
					자연과학계열	217	217	179	201	16.48	18.46	121.23	107.96
					공학계열	314	314	349	395	22.23	25.14	89.97	79.49
					예·체능계열	29	29	73	86	49.79	58.76	39.73	33.72
					의학계열	224	224	59	58	2.08	2.04	379.66	386.21

7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부(주무부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총괄관리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임.

78) 다만, 교육부는 최근 융·복합학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대학교육 학사구조가 학과제 중심에서 학부제, 융합학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학과가 아닌 계열별 교원확보율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실제로는 교원이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 중 한 곳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겸직 근무로 둘 이상의 학과 및 대학원 수업을 동시 진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할 경우 학과 전체 교원 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79) 2025년 7월 현재 대학알리미의 '학과정보' 란에서는 신입생경쟁률, 재학생수, 입학정원,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평균 등록금이 주요지표로 소개되어 있으나,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현황은 소개되지 않고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1유형)’ 사업으로 114개 사립대학 등 총 117개 대학[80]에 총 8,835억원을 지원하면서 각 대학별 지원금액은 포뮬러 배분액과 인센티브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은 세부지표로 활용되지 않았음.

[2024년 (1유형)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액 배분방식 – 포뮬러 배분]

구분	내 용
기준경비	■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규모지수	■ 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
교육여건	■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평균1, 표준편차0.4)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 산출 지표별 변환점수 = 1+((지표별 점수값 – 지표별 평균값) / 지표별 표준편차 X 0.4) ※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2점, 최고점 1.8점으로 설정(±2표준편차)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	■ 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 = 기초·차상위 학생수×1.0 + 1구간 학생 수×0.9 + 2구간 학생 수×0.8 + ····· + 8구간 학생 수×0.2

자료: 교육부

[2024년 (1유형)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별 지원액 배분방식 – 인센티브 배분]

영역	지표별 평가내용(배점)		비고
혁신 성과	1. 교육혁신 성과(80)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	정성지표 / 절대평가
핵심 교육성과	2. 유지충원율(10)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정량지표 / 표준점수
자체 성과관리	3.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10)		
		•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실적	정성지표 / 절대평가

자료: 교육부

그 결과, 예체능 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대학도 별다른 감점 없이 상당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81] 동 사업 취지가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대학 교육·연구역량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무관하게 동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82]

80) 사립대학 114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공립대학 1개교

8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동 사업예산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예체능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이 50%보다 낮았음.

교육부는 전임교원 결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82) 교육부는 2023년 이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대학 전체 기준)' 이 포뮬러 사업비 배분지표로 활용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 융복합 교육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임교원 충원을 유보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지표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학과별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기준)이 장기간 현저히 저조한 경우 감점 적용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후 동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학교당 지원금액이 2022년 48.8억원에서 2024년 75.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예산 투입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

구분	2021	2022	2023	2024
지원금액[1)]	6,540억원	7,460억원	8,000억원	8,800억원
지원대상 학교 수	총 131교	총 153교	총 117교[2)]	총 117교
학교당 평균 지원액	49.9억원	48.8억원	68.4억원	75.2억원

주 1) 대학혁신지원(1유형) 예산에서 사업관리비를 제외하고 작성
2) 국립대학(37교) 지원분이 2023년 예산부터 '국립대학육성' 사업으로 이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한국장학재단 출연: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학자금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673억 8,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83]

[2024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장학재단 출연	367,382	367,382	-	-	367,382	367,382	-	-	407,913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채권 대납이자	191,020	191,020	-	△5,391	185,629	185,629	-	-	186,86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26,684	26,684	-	6,151	32,835	32,835	-	-	46,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대납이자’ 사업은 취업후상환 학자금 재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재단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856억 2,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수준별 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28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정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특별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84] 등록금과 일정 규모의 생활비를 무담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적 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학생의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받은 학생에게 기준금액[85] 이상의 소득이 생기기 전에는 상환의무 및 이자가 면제되다가 소득이

8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84) 다만,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에게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발생하면 비로소 원리금 의무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제도로서 소득구간이 일정구간 이하인 경우[86]에만 대출받을 수 있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비교]

구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만 55세 이하	(학부) 만 35세 이하 (대학원) 만 40세 이하
소득	제한 없음	등록금 : 9구간 이내 생활비 : 8구간 이내 (9구간은 긴급생계곤란자)
대출조건	등록금 전액 (총한도 있음 (일반대학: 4천만원)) 생활비: 연 400만원	등록금 전액 (총한도 없음) 생활비: 연 400만원
대출금리	1.7% (고정금리)	1.7% (변동금리)
대출기간	최장 20년 (거치 10년 + 상환 10년) 내 선택	상환소득기준금액 초과 시 의무상환 * 2024년: 연소득 2,679만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과 원금균등분할 중 선택	소득에서 의무상환 (국세청)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보증 재단채[87]를 발행하여 학자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고예산에서 재단채 이자 등 재원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취업후상환 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사업은 각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재원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원의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024년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적이 예측치보다 많았던 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은 예측보다 적게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취업후상환 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사업에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으로 61억 5,100만원을 내역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85) 2024년 상환기준소득금액은 2,679만원임.

86)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기준은 2024년 1학기까지 학자금지원 8구간(학부생)이하였으며, 2024년 2학기부터 등록금대출은 9구간이하, 생활비대출은 8구간이하(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로 변경됨.

87)「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2024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한 결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부는 다양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실적은 2015년 1조 3,705억원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 8,000억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2018년 9,698억원 이후 감소하다가 2022년 8,082억원(대출인원 20만 2,402명)에서 2024년 1조 2,352억원(대출인원 30만 7,804명)으로 2년간 그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실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취업후상환	13,705	11,983	9,046	8,379	8,777	8,215	7,953	**8,264**	**7,918**	**8,762**
일반상환	7,549	7,145	8,391	9,698	9,555	8,940	8,610	**8,082**	**10,950**	**12,352**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증가한 원인으로 ㉠ 고정금리의 이점,[88] ㉡ 소득구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점,[89] ㉢ 신청이 간편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90]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가 1.7%를 유지한 점도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즉, 교육부는 2021년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유지하였는데,[91][92] 그에 따라 최대 20년간(10년 거치 10년 상황) 1.7%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던 것임.

---

88)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대응하여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보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호하여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89) 2020년대에 들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소득구간 제한이 없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임.

9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요건*이 있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약 8주)이 필요하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불필요함. 이에 대출 심사기간이 짧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가 불필요하여 이용이 간편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임.

9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과 재원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청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저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임.

92) 최근 10년간 학자금대출금리, 조달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연도별 물가상승률(CPI)은 다음과 같음.

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생의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이 일정구간 이하인 경우[93]에만 대출받을 수 있음.[9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출 금리	2.9% →2.7%	2.7% →2.5%	2.5% →2.25%	2.20%	2.20%	2.0% →1.85%	1.7%	1.7%	1.7%	1.7%
조달금리 (재단채)	2.15%	1.80%	2.14%	2.36%	1.56%	1.35%	1.82%	4.05%	3.85%	3.32%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도 말)	1.5%	1.25%	1.5%	1.75%	1.25%	0.5%	1.0%	3.25%	3.5%	3.0%
물가상승률 (CPI)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e-나라지표 자료

93)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기준은 2024년 1학기까지 학자금지원 8구간(학부생)이하였으며, 2024년 2학기부터 등록금대출은 9구간이하, 생활비대출은 8구간이하(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로 변경됨.

94) 참고로, 2024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22.5%(금액 기준)는 소득구간 9구간·10구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38.1%(금액 기준)는 대출채무자의 소득구간이 파악되지 않으나 이 중에도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024년 소득구간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명)

소득구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인원[1]		금액		인원	
기초	113	0.9%	4,565	1.5%	657	7.5%	24,319	7.9%
차상위	143	1.2%	5,622	1.8%	779	8.9%	29,117	9.4%
1구간	638	5.2%	20,179	6.6%	1,249	14.3%	44,831	14.5%
2구간	454	3.7%	13,917	4.5%	923	10.5%	33,616	10.9%
3구간	464	3.8%	14,261	4.6%	899	10.3%	32,800	10.6%
4구간	490	4.0%	14,907	4.8%	935	10.7%	31,948	10.3%
5구간	286	2.3%	8,084	2.6%	366	4.2%	13,076	4.2%
6구간	775	6.3%	22,068	7.2%	942	10.8%	33,785	10.9%
7구간	441	3.6%	12,284	4.0%	492	5.6%	17,357	5.6%
8구간	857	6.9%	23,673	7.7%	807	9.2%	28,444	9.2%
9구간	1,440	11.7%	37,903	12.3%	422	4.8%	11,917	3.8%
10구간	1,338	10.8%	33,078	10.7%	261	3.0%	7,279	2.4%
학점은행제	204	1.7%	7,663	2.5%	-	-	-	-
기타[2]	4,709	38.1%	89,616	29.1%	30	0.3%	1,160	0.4%
계	12,352	100.0%	307,804	100.0%	8,762	100.0%	309,647	100.0%

주 1) 인원은 학기별 단순합계
2) 기타는 ‘가구원 동의’ 미동의자 중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 승인하여 구간 미산정 상태로 대출 실행
자료: 교육부

양 대출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 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95]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비중(금액 기준)이 2021년 20.3%에서 2024년 36.7%로 증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비중은 2021년 79.7%에서 2024년 63.3%로 감소하는 등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용현황 변화(대출금액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7,795	7,593	7,733	7,261	8,049
	비중	76.8%	79.7%	74.6%	66.4%	63.3%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2,349	1,934	2,638	3,677	4,661
	비중	23.2%	20.3%	25.4%	33.6%	36.7%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회는 20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출요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청년층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소득 미만 시 상환의무 유예, 근로소득 원천공제,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유예제도 등의 장치를 두며 동 대출제도를 발전시켜 왔음.

또한 정부는 소득구간이 5구간 이하이거나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에게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에 다양한 정책효과를 결부시키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개선소요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청년층의 학업 지원과 자립 지원,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 방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 대출제도가 더욱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5) 2024년 초 기준임.

14.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대학별 예산 배정 시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은 국립대학의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여건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703억 400만원 중 2,679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22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96]

[2024년도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5,309	1,005,309	150	-	1,005,459	997,298	3,362	4,799	1,154,409
확충사업	270,304	270,304	-	-	270,304	267,912	134	2,258	354,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립대학시설 확충사업의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정이므로, 교육부는 대학별 예산 배정 시 학내 의사결정이나 행정협의 지연 등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2024년 예산액 2,703억 400만원 중 실집행액(대학회계 회계연도 종료일[97] 기준)은 770억 3,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8.5%에 불과하였으며, 실집행률은 2022년 59.5%, 2023년 39.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9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시설 확충(2740-300)(교육시설담당관)

9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최근 3년간 (국립대학 시설) 확충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267,890	287,469	270,304
실집행액	159,403	114,211	77,033
실집행률	**59.5**	**39.7**	**28.5**

주) 매년 2월말(대학회계 회계연도 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24년 동 사업예산이 배정된 총 94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23개 사업[98]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부지확정 지연 등 학내 의사결정 지연(8개 사업), 학내 의사결정으로 사업 취소(1개 사업), 수시배정 또는 사업확정 지연(3개 사업),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행정협의에 시간 소요(8개 사업) 등이었음.

[2024년도 실집행률 10% 미만인 확충사업의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충남대	Ⅳ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5,656	8	0.2%	의사결정 지연	· 청정실 조성 관련 용역 일시정지(5개월)에 따른 설계 지연
전북대	예술대 등 2개동 개축	1,067	0	0.0%		· 시설부지 확정 지연에 따른 설계공모 발주 및 용역 착수 순연 ※ 2025. 6월까지 100% 집행 예정
전북대	합동연구동 신축	9,000	436	4.9%		· 실시설계지연(VE검토)에 따른 공사발주 순연으로 지연
전남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5,740	0	0.0%		· 학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부지 변경으로 설계발주 지연(4개월)
경북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5,740	0	0.0%		· 중간설계 결과 공사비 과다로 관련 부서 협의 등 설계(용역중지) 지연(3개월)
충북대	의과대학1호관 리모델링	674	11	1.8%		· 학내 의사결정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그램 변동으로 설계 지연
군산대	공대 1,4호관 리모델링 공사	5,450	1	0.0%		· 학사 구조 조정에 따른 공간구성(안) 확정 지연으로 설계·공사 발주 일정 지연
순천대	첨단공학관	2,000	134	6.7%		·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따른 부지위치가 변경

98) 이 23개 사업예산 806억 8,000만원 중 2024년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788억 800만원으로, 확충사업 전체예산에서 실집행되지 않은 1,932억 7,100만원의 40.8%에 이른다는 점에서, 23개 사업의 실집행부진이 확충사업 실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단위: 백만원)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신축					(순천→광양)되어 6개월이 지연되었으나, 설계 용역 완료(2025.2.26.)
경북대	군위캠퍼스 글로벌 농산업교육관 신축	1,000	0	0.0%	사업취소	· 학내 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취소
충남대	바이오 클러스터	700	0	0.0%	수시배정	· 수시배정이 7월에 배정되어, 그 이후부터 사업 추진되어 집행 부진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증축	679	0	0.0%	사업확정 순연	· 2024년 8월 사업 확정에 따른 집행 순연 ※ 2025. 4월 설계 착수 2026. 1월까지 100% 집행 예정
강원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축	679	47	7.0%		· 2024년 8월 사업 확정에 따른 집행 순연 ※ 2025. 6월 설계 착수 예정 2026. 2월까지 100% 집행 예정
제주대	동물의료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3,345	93	2.8%	의사결정 및 행정협의 지연	· 동물병원 관계자 설계협의 지연 및 각종 예비인증제도 이행, 제주시 건축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발생 ※ 허가관청 허가업무 지연(도시계획 관련 지속적 협의 지연)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	6,005	12	0.2%	행정협의 지연	· 조달청 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순연(10개월)
부산대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5,425	0	0.0%		· 제6공학관 부지 내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에 따라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행(9개월),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검토 지연(4개월)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부산대	제6공학관 개축	3,689	2	0.1%		· 동일부지 내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에 따라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행(9개월), 조달청 기본설계 적정성검토 지연(4개월)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개축	1,261	0	0.1%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2023.10월)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완료(2024.8월)까지 10개월 소요 · 설계완료 후 공사 계약 체결 완료
목포대	미래 라이프관 신축	362	13	3.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심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설계공모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지연
강릉원주대	자연1호관 개축	6,013	517	8.6%		·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위한 기재부 협의 기간 등이 소요되어 공사 발주 지연

(단위: 백만원)

학교명	사업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	
서울과기대	도서관 학생회관 개축공사	10,000	289	2.9%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기재부 협의(6개월) 및 조달청 계약 지연(3개월)
경상국립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및 증축	510	0	0.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심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설계공모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지연
전북대	약학대학 리모델링	1,885	27	1.5%	선행공정 지연	·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사용자 이전이 늦어져 (이전 대상 건물 공사중) 공사 지연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신축	3,800	282	7.4%	현장여건으로 인한 지연	· 사면(법면) 안전성 보강(흙막이) 및 인허가에 따른 공사 지연(6개월)
계		80,680	1,872	2.3%		

주) 2025년 2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24년 확충사업 중에는 학내 의사결정이나 관련 행정절차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의사결정 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실집행되지 않은 사업들로 인해 확충사업 전체의 실집행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배정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보임.

이와 같은 집행단계에서 의사결정 지연이나 행정협의 지연 등 문제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별 예산 배정 시 학내 의사결정이나 행정협의 지연 등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5.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각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일정 지연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내 의료인력의 의료실습 등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76억 7,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99]

[2024년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대병원 지원	111,369	111,369	-	-	111,369	107,960	-	3,409	117,057
정책사업	24,022	24,022	-	-	24,022	21,943 [6,769]	-	2,079	3,940
임상교육훈련 센터 건립	17,672	17,672	-	-	17,672	17,672 [2,830]	-	-	23,04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은 보건의료계열 학생과 지역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로봇수술 및 복강경수술 등 최신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개 병원을 선정하여 총 10개 국립대병원에 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각 센터별 사업기간은 4~5년이고, 사업비 250억원 중 75%인 187억 5,000만원은 국고 지원(출연)하되 25%인 62억 5,000만원은 병원에서 자체 투자하도록 하며, 시설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국고지원금액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음.[100]

9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병원 지원(2743-301)(의대교육지원관)

100) ‘2025년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1년차 5억원, 2년차 40억원, 3년차 85억원, 4년차 57억 5,000만원으로 하되, 사업추진방식,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함.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추진 경과]

○ 2020.12.13,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 합동,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 2021~2024년까지 매년 2개 병원 선정 추진
  - (2021) 충남, 제주, (2022) 전남, 경북, (2023) 서울, 전북, (2024) 부산, 충북
○ 2022.1. 제주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
  ※ 제주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누적 훈련인원 3039명, 훈련 건수 483건 기록(2024.12.31. 기준)
○ 2024.12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개소
○ 2025년도 사업 대상으로 잔여 2개병원(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지정
  ※ 센터 완공(예정) 시기 : (2021) 제주대병원 → (2024) 충남대병원 → (2026)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 (2027) 부산대·충북대병원 → (2028)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

나. 검토의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교육부는 각 센터의 건립일정이 지연되어 지역의료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4년 동 사업예산을 당초 계획에 따라 각 병원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7개 병원 중 4개 병원에 2024년 교부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다른 3개 병원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도 각각 24.4%(충남대병원), 36.4%(칠곡경북대병원), 8.1%(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저조한 편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국고지원(누적)		
		계	국고	자체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충남대병원[1)]	2021~2024	25,000	18,750	6,250	4,556	1,113	24.4%	18,750	12,995	69.3%
칠곡경북대병원	2022~2026	23,399	17,532	5,867	3,916	1,425	36.4%	7,416	4,925	66.4%
전남대병원	2022~2026	25,489	18,750	6,739	1,000	-	-	4,500	909	20.2%
분당서울대병원	2023~2026	30,240	18,750	11,490	3,600	292	8.1%	4,600	1,292	28.1%
전북대병원	2023~2026	25,672	18,750	6,922	3,600	-	-	4,600	-	-
양산부산대병원	2024~2027	33,871	18,750	15,121	500	-	-	500	-	-
충북대병원	2024~2027	24,371	18,278	6,093	500	-	-	500	-	-

주1) 2025년 3월 집행완료
자료: 교육부

누적된 국고지원금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사업 3년차인 전남대병원에 교부된 45억원 중 9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20.2%)되었고, 사업 2년차인 분당서울대병원에 교부된 46억원 중 12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8.1%)되었으며, 사업 2년차인 전북대병원에 교부된 46억원과 사업 1년차인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각각 교부된 5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그러나 사업기획-설계-공사-사업관리로 이어지는 시설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초기 연도의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에 교부된 예산의 상당액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전남대병원은 병원 재정 문제로 센터 설치공간을 병원 외부(신축)에서 병원 내부(리모델링)로 변경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전북대병원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의 지반 불안정 문제 등으로 센터 부지를 근처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각 병원은 공모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 제반 사정을 검토하고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사업 집행 중 부지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각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병원 (사업기간)	국고지원(누적)			2024년 집행 부진 사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전남대병원 (2022년~2026년)	4,500	909	20.2%	-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병동 축소로 공간 운영 효율화 추진 필요 - 당초 원외 예정이었던 건립사업을 빛고을전남대병원 내에 설치(리모델링) 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유관부처 협의에 시일 소요(2024.8.~2025.4.,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광주시*, 국토부**) * 빛고을전남대병원 내 류마티스 센터 본원으로 이전 협의 진행 **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종합의료시설 해제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분당서울대병원 (2023년~2026년)	4,600	1,292	28.1%	- 2023. 4월 공모사업 선정 후 문화재 심의 등 절차 이행(~2023.9.) - 기본설계(2023.10.~2024.2.)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2024.3.) 절차 진행 ※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연면적 변경, 사업기간 연장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2024.4.) 실시설계(2024.4.~)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 요청(2024.11.) - 전체적인 설계 일정 지연으로 집행 부진

(단위: 백만원)

병원 (사업기간)	국고지원(누적)			2024년 집행 부진 사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전북대병원 (2023년~2026년)	4,600	0	0.0%	- 공모사업 선정(2023.4.), 총사업비 심의 자료 제출(2023.9.) 및 총사업비 심의 완료(2023.11.) 등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본관 옆 부지 선정(2024.1.) 후 내부공간 기획(2024.2.~.3.), 내부계획 수립 및 보고 ·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2024.7.) - 2024년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진행(2024.7.~2025.2.) - 기 선정 부지의 지반 불안정, 응급헬기 동선 부적합 문제로 인해 시설운영위원회 타당성 재검토 실시, 부지 이전이 합리적이라는 의사 결정에 따라 본관 근처 주차장으로 부지 변경(2025.1.) - 부지 변경에 따라 기존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수정(2025.2.~3.)
양산부산대병원 (2024년~2027년)	500	0	0.0%	- 2024. 8월 말 총사업비 심의 완료 후 건축기획 방식(민간업체 참여 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2025.1.)에 시일 소요
충북대병원 (2024년~2027년)	500	0	0.0%	- 2024. 8월 말 총사업비 심의 완료 후 2024.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자료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12월 최종 승인 받아 설계 착수가 지연되어 집행부진 발생

주) 2024년 기준, 누적 국고지원금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사업 공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결국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이 지연되어 지역의 학생들과 의료인력이 당초 예정된 시점에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교육부는 각 병원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어 각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예정된 일정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 병원의 사업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01]

101) 교육부는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사업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에서 국고지원금 누적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 ‘지연사업’으로 지정하여 신규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예산을 교부받은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의 누적 실집행률이 60% 미만이었으므로, 더욱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 출〉

16. 연금급여: 추계 오류로 연례적인 연금급여 변경 부적정

가. 개 요

‘연금급여’ 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4조 8,407억 7,900만원 중 4조 8,176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230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102)]

[2024년도 연금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연금급여	4,484,529	4,840,779	-	4,840,779	4,817,689	-	23,090	4,921,681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연금급여 추계 부적정으로 계획액을 과소편성한 후 증액변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연금급여 계획액은 당초 4조 4,845억 2,900만원이었으나, 7.9%인 3,562억 5,000만원이 증액 변경된 후 예산현액 4조 8,407억 7,900만원 중 4조 8,176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연금급여 증액변경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증액규모와 비율은 2021년 303억원(당초 계획액의 0.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3,562억 5,000만원(당초 계획액의 7.9%)에 이르렀음.

---

1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연금급여(6131-400)(교원학부모지원관)

[2021년~2024년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당초)	계획액(변경)	증액규모 (비율)		집행액
2021	3,407,725	3,438,025	30,300	(0.9%)	3,437,337
2022	3,703,240	3,860,491	157,251	(4.2%)	3,859,684
2023	4,108,274	4,378,413	270,139	(6.6%)	4,362,354
2024	4,484,529	4,840,779	356,250	(7.9%)	4,817,689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제3호[103]에서는 의무적 지출금액의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급여 계획액 변경 규모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사학연금공단은 공단이 매년 1월말 제출하는 연금급여 중기추계금액(A)은 실제 급여지급액(E)에 상당히 근접(오차범위 ±0.4%)하고 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104] 등을 거쳐 연금급여 계획액(B)이 낮게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학연금 중기추계액 및 예결산액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증가율
중기추계(A)[1] (전년 대비)		34,862 (11.2%)	38,277 (9.8%)	42,740 (11.7%)	48,278 (13.0%)	51,088 (5.8%)	10.0%
예산	최초 (B) (전년 대비)	34,077 (8.7%)	37,032 (8.7%)	41,083 (10.9%)	44,845 (9.2%)	49,217 (9.7%)	9.6%
	현액 (C) (전년 대비)	34,380 (8.4%)	38,605 (12.3%)	43,784 (13.4%)	48,408 (11.0%)	-	12.2%[2]
	변경 (C-B)	303	1,573	2,701	3,562	-	-
결산(E) (전년 대비)		34,373 (8.5%)	38,597 (12.3%)	43,624 (13.0%)	48,177 (10.4%)	-	11.9%[2]
추계대비 집행률 (E/A)		98.6%	100.8%	102.1%	99.8%	-	±0.4%p

10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104)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CPI 상승률을 2.0%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높았다고 함. 최근 CPI 상승률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21	2022	2023	2024	평균
CPI	2.5%	5.1%	3.6%	2.3%	3.4%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증가율
추계 대비 최초예산 (B/A)	97.7%	96.7%	96.1%	92.9%	-	-4.1%p

주 1) 중기 추계: (n-2)년도에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제출한 중기추계(최초 요구액) 기준
2) 예산현액, 결산금액 평균증가율: 4개년 (2021~2024년) 기준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2월 기금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였고,[105] 사학연금공단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따라 2025년 7월 현재 제6차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어,[106] 기금의 장래 전망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금급여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107]

또한 연금급여 계획액을 과소 편성할 경우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108]상의 의무지출 비중, 재정수지 등 재정지표에 오차가 생기고, 비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정부는 매년 사학연금 연금급여 소요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금급여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재정지표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금소진시점을 2045년으로 전망하였고, 2023년에는 2043년으로 전망하였으며, 올해는 소진예상시점이 더 앞당겨졌음.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p.68

106) 2020년 진행된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사학연금기금이 2049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었음.

107) 최근 감사원은 사학연금의 제5차 재정추계 모형에서 미래 보험료수입이 일부 과다 산정되고 있고, 폐교에 따른 퇴직연금 조기지급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사학연금공단은 제6차 재정추계 시 재정재계산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감사원, 사학연금공단 등 정기감사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방식 개선 필요', 2025.6.)
구체적으로 미래 연도별 신규가입자로부터 수취할 보험료수입 추계의 기초가 되는 과거 신규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규가입한 자 모두의 2019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원에 따르면, 동 사항을 반영할 경우 기금고갈시점이 2020년 제5차 재정추계에서 예측한 2049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46년이 된다고 함.

108)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　타】

1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시정요구 94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6건·주의 38건·제도개선 53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6	38	52	3	93
예비비	-	-	-	-	1	-	1
합계	-	-	6	38	53	3	94

교육부는 시정요구사항 94건에 대해 7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9.1%)하고 17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93	77	82.8	16
예비비	1	-	-	1
합계	94	77	81.9	17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교육부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교육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시 지방재정과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집행상 애로 요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격차 문제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교육부는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상호호혜의 원칙 하에 상대국이 관련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및 돌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 돌봄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2025년도 본예산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의 식생활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민원에 대해 전담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교육부·교육청·경찰청·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0원임.[1)]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억 9,7000만원(△8.7%)이 적은 93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900만원(19.7%)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9,891	9,891	7,533	△2,358	10,279	10,279	9,382	△897	1,849
총지출	9,891	9,891	7,533	△2,358	10,279	10,279	9,382	△897	1,849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0원임.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93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2.2%)되고 8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279	10,279	1,140	-	-	11,419	9,382	849	1,188
합 계	10,279	10,279	1,140	-	-	11,419	9,382	849	1,18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교육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30억 6,3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 사업 등 선급금이 18억 9,2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기대비 6억 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없음.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87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7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0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063	1,969	1,094	55.6
		유동자산	1,892	1,287	605	47.0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435	257	178	69.3
		무형자산	736	424	312	73.6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063	1,969	1,094	55.6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8,741	6,381	2,360	37.0
	재정운영순원가		8,741	6,381	2,360	37.0
	재정운영결과		8,741	6,381	2,360	37.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미래교육비전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전문성 및 중립성을 실현하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교육정책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국민참여 촉진 및 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에 업무포털 구축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일부가 이월되는 등 최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견 플랫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업무포털 구축용역 계약 지연체결에 따른 예산 이월 부적절 등

가. 개　요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및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5,100만원 중 16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6%)되고, 1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1,9222	1,922	229	-	2,151	1,690	133	328	1,917
일반연구비	450	450	111	-	561	450	69	1	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연구비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용역 계약’을 위해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억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6,1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2%)되고,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참여지원과)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10월에 업무포털 구축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일부가 이월되는 등 최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3년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구축용역,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용역에 이어 2024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용역사업'을 시행[3]하였으나, 동 사업의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로서 예산 일부(6,900만원)가 이월되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 2월 국가교육위원회 서버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부에 구축하는 협의를 했고, 업무포털 구축을 위한 행안부 사전협의(2024년 6월~7월)에도 시간이 소요되어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나, 제반 사정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였다면 계약체결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국가교육위원회의 최근 홈페이지, 플랫폼, 업무포털 구축 용역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1]	2021.12.29. ~2022.5.26.	49백만원	[신규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9월)에 따라 대국민대상 기관 대표 홈페이지 구축(교육부 추진)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구축 용역	2023.8.29. ~2023.10.31.	33백만원	[기능 추가] • 법령*에 따른 교육정책관련 국민의견 및 교육과정개정 요청 접수를 위한 게시판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에 추가 *「국교위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13조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국민의견 플랫폼 구축 용역	2023.11.27. ~2024.8.31.	297백만원	[홈페이지 및 소통게시판 기능 개선] • 국가자원관리원 입주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기능 추가(DB암복호화, 주요 웹취약점 대비 등) • 국민참여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확대를 대비하여 내부 소통게시판 및 일정공유 기능 등 구축 • 사용자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UI) 개편 및 간편인증(휴대전화, SNS 등) 기능 추가 • 접근성 확보를 위한 문서뷰어, 점자문서 생성기 추가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한 통계기능 및 이용자 권한 관리 등 관리자 기능 추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2]	2024.10.11. ~2025.5.9.	409백만원	[내부망 신규 구축]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망 주요 정보시스템(온나라, e사람 등)과의 로그인 연동(SSO), 위원회 자료 관리를 위한 회의관리 및 국회의정자료 관리 기능 등

주 1) 국가교육위원회 출범(2022.9.7.) 전 교육부 예산으로 사업 수행
2) 용역사업 종료 후 서버 안정화 작업중이며 2025.7월 중 개통 예정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사업 추진경과]

일 자	사업추진 내용
2024. 2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입주 협의
2024. 5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포털 구축 추진계획 수립
2024. 6~7월	업무포털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사전협의 진행
2024. 8월	조달청 중앙조달 의뢰
2024. 10월	용역계약 체결 (계약기간 : ~2025.5.9.)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이 있었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의 지연 및 예산 이월 개선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9-250)	제도 개선
	지적 사항	○ 2023년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은 2023년 11월에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24년 7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사업은 상반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행태는 적절하지 않음	
	시정 요구 사항	○ 국가교육위원회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의 지연과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둘째,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견 플랫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4]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민의견 소통게시판’(2023년 11월 ~ 2024년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 조정할 수 있다.

10월)과 ‘국민의견 플랫폼’(2024년 10월 이후)을 운영해 왔으나,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이나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의견 25건과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14건에 불과한 실정임.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은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를 얻는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은 9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는 경우에 각각 사전검토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으나,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 안건 중 동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다 동의를 받은 안건도 1,781명 동의에 그쳤고, 5건을 제외하고는 동의인원 수가 10인 이하였음.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또는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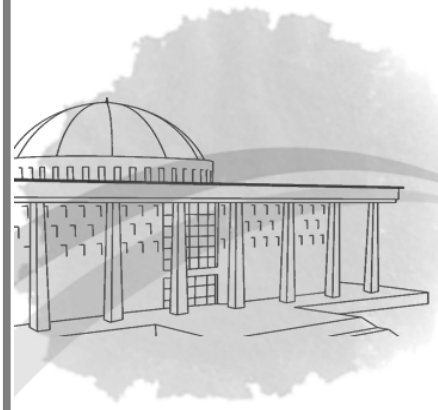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구분	접수일자	안건명	동의인원
국가교육과정(25)	24.6.17.	2022 개정 교5육과정에서 생활 교양 영역 교과 분리 및 필수 이수 단위 지정	1,781
	24.9.20.	제2외국어/한문 교과 필수 이수 단위 지정 및 융합 선택 과목 등급 폐지	942
	25.4.15.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한문 교과 융합선택과목 등급 폐지	494
	24.6.19.	제2외국어 교육과정 변경요청합니다	198
	24.6.19.	일본어	51
	…	제2외국어 등 20건	10 이하
교육정책(10)	…	대입에서의 자기소개서 재도입 등 10건	10 이하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국민의견 플랫폼이 법령 취지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5)]

5) 예를 들어, 2025년 6월 현재 교육부 또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의견플랫폼을 연결하는 링크(배너)가 게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를 게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288억 5,700만원(△2.4%)이 적은 9조 2,543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53억 4,900만원(△2.2%)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937,903	6,937,903	7,909,000	971,097	8,062,787	8,062,787	7,837,483	△225,304	△71,517
기 금	2,321,055	1,902,930	1,550,704	△352,226	1,458,017	1,420,425	1,416,872	△3,553	△133,832
총수입	9,258,958	8,840,833	9,459,704	618,871	9,520,804	9,483,212	9,254,355	△228,857	△205,349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827억 8,400만원(△1.0%)이 적은 18조 3,136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44억 7,800만원(△3.3%)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5,981,107	15,981,107	16,200,518	219,411	16,344,265	16,344,265	16,162,882	△181,383	△37,636
기 금	2,767,195	2,742,995	2,737,652	△5,343	2,152,211	2,152,211	2,150,810	△1,401	△586,842
총지출	18,748,302	18,724,102	18,938,170	214,068	18,496,476	18,496,476	18,313,692	△182,784	△624,47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조 9,065억 200만원으로, 12조 8,768억 6,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조 8,404억 9,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7%)되고 361억 3,900만원은 미수납되어 2억 3,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76,780	376,780	-	376,780	357,454	351,364	5,911	1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253	10,253	-	10,253	16,933	16,923	10	-
- 지역자율계정	-	-	-	-	3,062	3,062	-	-
- 지역지원계정	10,200	10,200	-	10,200	13,763	13,753	1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	23	-	23	92	92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0	30	-	30	16	16	-	-
우편사업특별회계	5,439,617	5,439,617	-	5,439,617	4,856,244	4,828,590	27,629	27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 자본계정	20,332	20,332	-	220,332	245,955	245,734	221	-
- 손익계정	5,219,285	5,219,285	-	5,219,285	4,610,289	4,582,856	27,408	2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940,827	5,940,827	-	5,940,827	6,677,386	6,675,119	2,235	31
- 자본계정	33,395	33,395	-	33,395	40,082	40,082	-	-
- 손익계정	5,907,432	5,907,432	-	5,907,432	6,637,304	6,635,037	2,235	3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61,590	1,061,590	-	1,061,590	890,877	890,846	3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7,973	37,973	-	37,973	37,386	37,170	215	-
- 자본계정	6,907	6,907	-	6,907	7,842	7,842	-	-
- 손익계정	31,066	31,066	-	31,066	29,544	29,328	215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9,462	39,462	-	39,462	40,588	40,480	109	-
- 자본계정	9,245	9,245	-	9,245	9,588	9,588	-	-
- 손익계정	30,217	30,217	-	30,217	31,000	30,892	109	-
합 계	12,906,502	12,906,502	-	12,906,502	12,876,868	12,840,492	36,139	23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2조 311억 200만원으로, 이 중 20조 6,686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8%)되고 725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1조 2,899억 6,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8,195,506	8,195,506	38,751	△380,017	68,342	7,922,582	7,874,268	9,197	39,11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87,195	387,195	-	-	-	387,195	380,712	-	6,483
- 투자계정	387,195	387,195	-	-	-	387,195	380,712	-	6,4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3,110	743,110	197	-	-	743,307	726,851	1,187	15,269
- 지역지원계정	99,519	99,519	-	-	-	99,519	99,519	-	-
- 지역자율계정	638,246	638,246	197	-	-	638,443	621,987	1,187	15,269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075	3,075	-	-	-	3,075	3,075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70	2,270	-	-	-	2,270	2,270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356,042	356,042	-	-	-	356,042	351,700	-	4,342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47,890	47,890	-	-	-	47,890	47,890	-	-
우편사업특별회계	5,439,617	5,439,617	45,472	-	-	5,485,089	4,712,959	52,776	719,356
자본계정	220,332	220,332	41,114	-	-	261,446	196,415	52,453	12,579
손익계정	5,219,285	5,219,285	4,358	-	-	5,223,643	4,516,544	323	706,77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940,827	5,940,827	7,862	-	-	5,948,689	5,613,398	6,760	328,530
자본계정	33,395	33,395	7,668	-	-	41,063	34,305	6,494	264
손익계정	5,907,432	5,907,432	194	-	-	5,907,626	5,579,093	266	328,26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61,590	1,061,590	383	-	-	1,061,973	888,678	536	172,758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37,973	37,973	840	-	-	38,813	35,048	1,380	2,384
자본계정	6,907	6,907	826	-	-	7,733	6,016	1,012	704
손익계정	31,066	31,066	14	-	-	31,080	29,032	368	1,68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39,462	39,462	60	-	-	39,522	37,134	665	1,723
자본계정	9,245	9,245	57	-	-	9,302	8,388	663	251
손익계정	30,217	30,217	3	-	-	30,220	28,746	2	1,472
합 계	22,249,212	22,249,212	93,565	△380,017	68,342	22,031,102	20,668,638	72,501	1,289,96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조 7,708억 5,300만원으로, 5조 2,556억 9,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조 2,515억 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41억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과학기술진흥기금	188,791	188,791	184,570	184,270	300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13,498	213,498	213,537	213,537	-	-
방송통신발전기금	1,252,674	988,826	2,114,673	2,111,360	3,312	-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38	1,379,738	2,518,707	2,518,126	581	-
합 계	3,034,701	2,770,853	5,255,695	5,251,501	4,19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조 7,710억 9,700만원으로, 이 중 2조 5,468억 1,200만원이 지출(집행률 91.9%)되고 85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과학기술진흥기금	188,791	188,791	-	188,791	184,270	-	3,412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13,498	213,498	-	213,498	213,537	-	63
방송통신발전기금	1,252,674	988,826	176	989,002	978,617	-	1,392
정보통신진흥기금	1,379,738	1,379,738	68	1,379,806	1,170,389	-	3,718
합 계	3,034,701	2,770,853	244	2,771,097	2,546,812	-	8,58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산은 전년 대비 6,946억 8,800만원이 증가한 19조 2,846억 2,3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5,067억 2,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이 8,781억 5,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480억 9,8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1,034억 2,500만원 증가한 8조 8,179억 3,3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7,673억 1,700만원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087억 3,700만원이 감소한 10조 4,666억 9,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1조 6,61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632억 2,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0조 2,797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96억 4,3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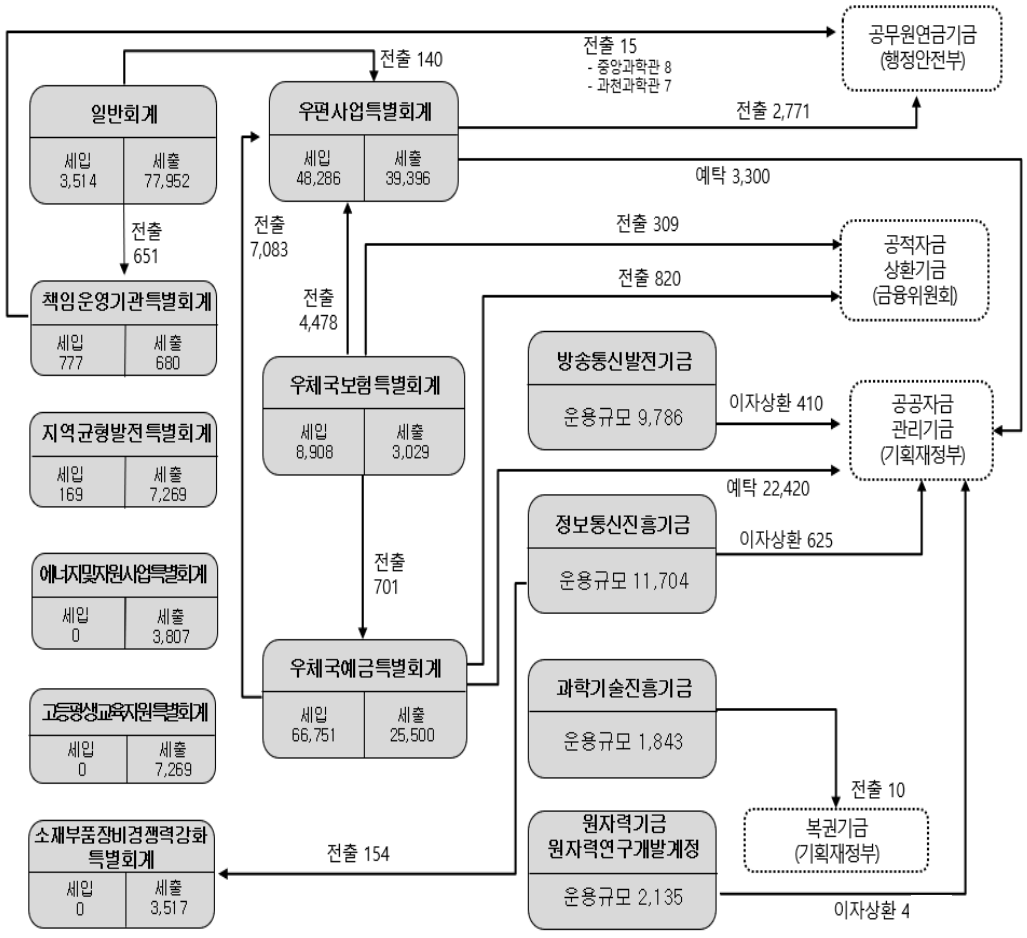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9,284,623	18,589,935	694,688	3.7
		유동자산	3,754,048	4,260,775	△506,727	△11.9
		투자자산	3,070,402	2,192,249	878,153	40.1
		일반유형자산	12,345,048	11,996,950	348,098	2.9
		무형자산	89,540	116,816	△27,276	△23.3
		기타비유동자산	25,585	23,144	2,441	10.5
	부 채		8,817,933	7,714,508	1,103,425	14.3
		유동부채	3,133,527	2,945,014	188,513	6.4
		장기차입부채	4,603,950	3,836,633	767,317	20.0
		장기충당부채	150,918	139,502	11,416	8.2
		기타비유동부채	929,539	793,359	136,180	17.2
	순자산		10,466,690	10,875,427	△408,737	△3.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1,661,841	12,825,070	△1,163,229	△9.1
	재정운영순원가		10,902,737	11,990,956	△1,088,219	△9.1
	재정운영결과		10,279,723	11,399,366	△1,119,643	△9.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의 9개 회계와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AI 일상화 등 디지털 확산,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양성,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실현을 2024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21개 세부사업에서 주력 분야 수출 동력 확보 및 신산업 주도 핵심기술 확보, 국내 ICT 기업들의 자생력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전략기술 수요 확대, AI 일상화, 연구개발기관·지역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특정평가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특정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민간차입금 등 추후 상환해야할 금액이 누적되고 있는 동시에,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이 부처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이라는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부처의 유인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넷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사업 환경변화 및 별정우체국 공무원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지원 등으로 인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일원화 필요

가. 개 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음.[2)3)]

그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는 선정평가를 우선 거치게 되고,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됨.[4)]

---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2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거치게 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5)]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53조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2022년 12월「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 이후부터는 동 지침 제48조에 따라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목표나 수행방식을 변경할때에는 특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6)7)]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 · 재기획한 계속사업은 제3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3. 기존 사업과의 유사 · 중복성
4.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제29조(대상사업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평가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5)「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수행과 관련된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
3.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4.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5.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6. 법 제38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및 결과에 관한 자료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할 수 있다.

6)「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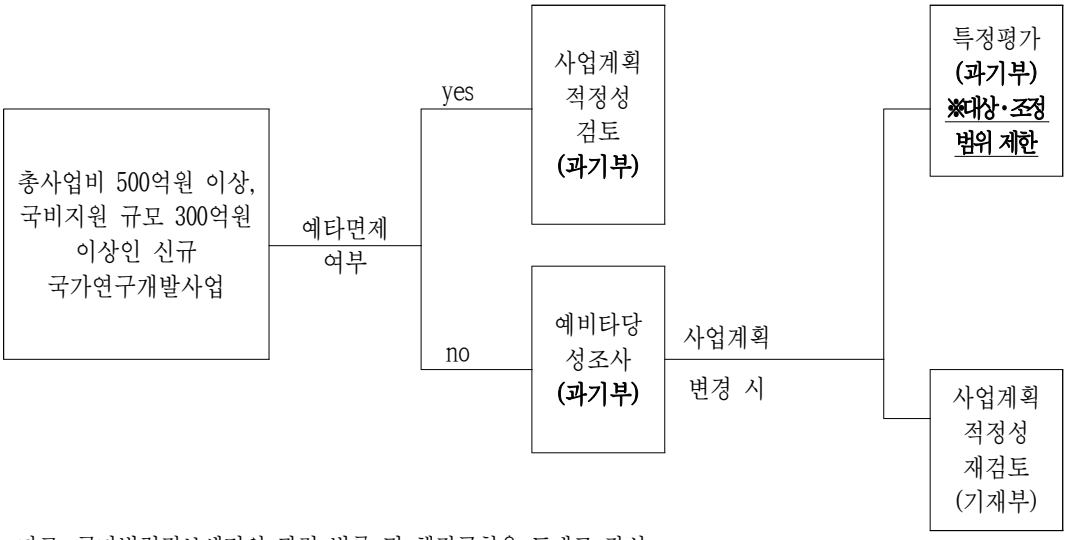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특정평가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특정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거칠 수 있는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순 사업계획 변경 등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활용하는 것은 어려워 특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절차가 이원화되어있다고 설명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적정 여부 검토 관련 절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을 토대로 작성

7)「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그런데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두 절차 중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2년 12월 특정평가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계획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앞서 특정평가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이후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변경 추진 중에 있음.

[예타 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활용 절차 현황(2023년 이후)]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예타 후 사업계획 변경 여부	사업계획 변경 시 활용 절차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플래그십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고도화(R&D)	448,257	2023~2031	변경(2024.10.)	적정성 재검토	특정평가 미대상 판단 후 적정성 재검토
다부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R&D)	658,061	2024~2028	변경(2025.5.)	특정평가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개발(R&D)	2,013,240	2023~2032	진행 중(2025.3.)	적정성 재검토(진행중)	특정평가 미대상 판단 후 적정성 재검토 진행 중
다부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R&D)	600,844	2025~2031	진행중(2025.6.)	특정평가(대상 선정 검토 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결정을 받고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GPU의 시장가격 상승으로 여러 차례 공고가 유찰되면서 총사업비 증액 소요가 제기되었음.

이후 2023년 11월 특정평가를 통한 총사업비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은 후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는데, 특정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평가를 거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된 문제가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모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두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범위 외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정평가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비교]

구분	특정평가[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
수행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정범위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사업규모
절차	예타에 준함(B/C, AHP 평가 제외)	타당성 재검토에 준함(B/C, AHP 평가 제외)
평균 소요기간	예타에 준함(B/C, AHP 평가 제외) ※ 단축평가 가능 : 대상선정 과정에서 경미한 계획변경(사업기간, 목표, 내역 등의 주요사항 변경 없이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단순 조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간 단축	통상 6~9개월 소요
적용사례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구축사업('25)	달탐사('20), ITER('20), 코로나19 백신임상지원('21) 등 다수

주 1)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2)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나 적정성 검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특정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432호, 정부 제출)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사업추진심사 절차를 규정하면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

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432호, 정부제출)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 ·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 · 시험 · 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 관제 · 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관련: 법률상 위임 근거 보완 필요 등

가. 개 요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이후 1973년 제정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근거로 핵심 기초·산업 기술 분야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로 소관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이 이루어졌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당시 근거 법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표준연구원	1975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기계연구원	1976년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
한국화학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전기연구원	1976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에너지연구원	1977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건설연구원	1983년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생명연구원	1985년 (KIST 부설센터로 출범)	·유전공학육성법(1995, 부설연구소) ·정부출연기관법(1999, 독립법인화)
한국식품연구원	1987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88년 (한국과학재단 부설센터로 출범)	·정부출연기관법(1999, 독립법인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 출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1996, 독립법인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89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법
한국철도연구원	1996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주) 기관명은 설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1996년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PBS제도[9] 도입 및 1999년 직할연 체계의 문제 해결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이라 함) 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

9)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는 R&D 재정지원 체계를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전환하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여 예산·과제를 편성하는 것으로, 과제비 편성시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연구자들을 실명화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과제비 편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현재의 출연연 제도가 자리 잡았음.[10)]

그리고 2004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 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이라 함)의 소관을 기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면서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합관리 체계가 수립되었음.

2004년 당시 과기출연기관은 3개 연구회 체제하에서 운영되다가 기술 분야 간 융합·협력연구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08년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체제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연혁]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이유
1966.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제정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산업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최초의 출연연 설립
1980.11월	과학기술 출연연 통합조정(16개→9개)	부처별 산하기관 통폐합 및 과학기술처로 관리 일원화
1996.1월	PBS제도 도입	연구생산성 제고
1999.1월	「정부출연기관법」 제정 (과기분야 3개 연구회 체제)	직할연 운영체계의 단점 보완
2004.9월	「과기출연기관법」 제정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수립
2007.1월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8.2월	2개 연구회 체제로 전환	기술분야 간 융합·협력 연구 필요성 증대
2014.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	기술분야 간 융합·협력 연구 필요성 증대
2024.1월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과기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독립적 운영 보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1999년 「정부출연기관법」 제정 이후 과기출연기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이 수 차례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는 과기출연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89호, 2025.3.4. 제정)을 제정하였음.[11)]

---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할연구기관이 개별 부처의 수요에만 대응함에 따라 △기관 간 연구개발 중복,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설정 미흡, △심층연구·전문성 제고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발령·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3.4. 배포)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영공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임원의 청렴의무 등 연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례와 같이 법률에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5장(경영혁신과 투명·윤리경영)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과기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임원의 청렴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하여 적용이 배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관계 법령에 담긴 사항 중 일부를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경영공시 등 관련 규정 비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관계 법령
제31조(경영공시)	법 제11조(경영공시)
제32조(이사회 회의록 공개)	
제33조(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지침 제20조(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제34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지침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제35조(장애인 고용개선)	지침 제21조의2(장애인 고용개선)
제36조(일·가정 양립지원)	지침 제23조(일·가정 양립지원)
제38조(임원의 청렴의무 등)	지침 제27조(임원의 청렴의무)
제39조(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지침 제7장 복리후생제도 합리화 등

주)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

해당 규정은 과기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현황·내규·감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을 공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실현, 일자리 창출 노력, 일·가정 양립지원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과기출연기관법」 제10조에서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 행정규칙인 훈령만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훈령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위기관 형태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과기출연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12][13]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동 조문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윤리 등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음.[14]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과기출연기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속력을 갖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사례와 같이 법률상 위임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

가. 개 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로 납부받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15)]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2022~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수입		1,994,168	1,472,241	1,170,389
	법정부담금	556,608	559,474	514,322
	공자기금예수금	889,200	325,821	450,000
	여유자금회수	248,645	202,125	113,320
	그 외	103,915	134,821	92,746
	일반회계전입금	195,800	-	-
	민간차입금	-	250,000	-
지출		1,994,168	1,472,241	1,170,389
	사업비	1753106	1295484	973009
	특별회계전출	15,480	17,648	15,400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23,104	45,789	62,530
	민간이자상환	-	-	9,325
	여유자금운용	202,478	113,320	110,1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로 납부받는 부담금과 방송사 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16]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2022~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수입		1,416,698	1,168,663	978,617
	법정부담금	648,046	644,331	578,369
	공자기금예수금	509,164	310,075	343,309
	여유자금회수	190,778	167,594	18,786
	그 외	68,710	46,663	38,154
지출		1,416,698	1,168,663	978,617
	사업비	1,235,238	1,123,456	904,207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3,257	26,421	41,035
	여유자금운용	168,203	18,786	33,37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두 기금 모두「전파법」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방송사 분담금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재원들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17]

1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전파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7)「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수입 실적(2019~2024)]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방송통신발전기금 (45%)	5,080	4,842	8,172	4,554	4,577	4,207
정보통신진흥기금 (55%)	6,211	5,918	9,988	5,566	5,594	5,143
합 계	11,291	10,760	18,160	10,120	10,171	9,3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매체 분담금 수입 실적(2019~2024)]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분담금	1,792	1,787	1,814	1,926	1,866	1,59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우체국보험적립금차입금 등 추후 상환해야할 금액이 누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중 공자기금예수금이나 우체국보험적립금차입금과 같은 추후 상환해야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실 수입으로 보고, 지출 중 여유자금운용 지출과 같이 추후 돌려받는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 지출로 보아 연도별 실 수입·지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실 수입 및 실 지출 현황(2022~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실 수입(A)	1,104,968	896,420	720,388
법정부담금	556,608	559,474	514,322
여유자금회수	248,645	202,125	113,320
그 외	103,915	134,821	92,746
일반회계전입금	195,800	-	-
실 지출(B)	1,791,690	1,358,921	1,060,264
사업비	1753106	1295484	973009
특별회계전출	15,480	17,648	15,400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23,104	45,789	62,530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금 이자상환	-	-	9,325
결손규모(A-B)	△686,722	△462,501	△339,87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년 발생하는 결손 규모가 작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으로 인하여 이자 상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누적 규모가 2024년 결산 기준 2조 6,296억원으로 2024년 기금 실 수입의 3.65배 수준임.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기금 수입 중 공자기금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입으로 보고, 지출 중 여유자금운용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지출로 보아 연도별 실 수입·지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실 수입 및 실 지출 현황(2022~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실 수입(A)	907,534	858,588	635,309
법정부담금	648,046	644,331	578,369
여유자금회수	190,778	167,594	18,786
그 외	68,710	46,663	38,154
실 지출(B)	1,248,495	1,149,877	945,242
사업비	1,235,238	1,123,456	904,207
공자기금예수이자 상환	13,257	26,421	41,035
A-B	△340,961	△291,289	△309,93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2024년 결산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누적 규모가 1조 6,527억원으로 2024년 기금 실 수입의 2.6배 수준임.

이와 같이 두 기금 모두 매년 상당규모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에 따른 이자 상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금의 주요 재원인 법정부담금은 감소하고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보통신 진흥기금	차입금	4,261	5,385	8,892	3,258	4,500
	누적	**4,261**	**9,646**	**18,538**	**21,796**	**26,296**
방송통신 발전기금	차입금	2,074	2,827	5,092	3,101	3,433
	누적	**2,074**	**4,901**	**9,993**	**13,094**	**16,527**
합 계	차입금	6,335	8,212	13,984	6,359	7,933
	누적	**6,335**	**14,547**	**28,531**	**34,890**	**42,8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두 기금 모두 2020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시작해서 원칙적으로 2030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원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함.[18]

18)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 · 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의 불필요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AI 투자 등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일반회계와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4.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사업(신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 안내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법정계획 수립 추진 및 12대 기술분야 검토·조정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9,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9)]

[2024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1,441	1,441	-	-	1,441	1,441	-	-	2,259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499	499	-	-	499	499	-	-	78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출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억 9,900만원 전액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하였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교부받은 금액 중 4억 8,9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8.5%)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19) 일반회계-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1031-407)(과학기술정책국)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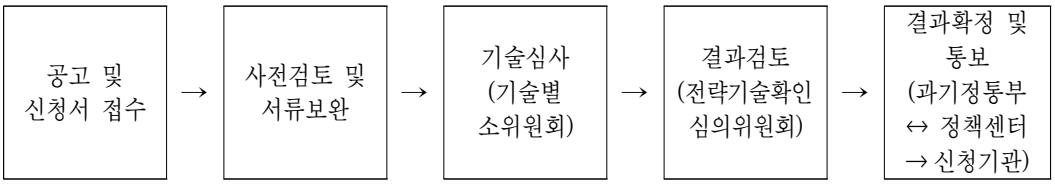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육성주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은 특정 기술 분야[20]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음.[21]

이러한 이유로 같은 법 제9조는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각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 있음.[22]

[국가전략기술 확인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 별표에는 12개의 분야와 50개의 중점기술이 명시되어 있음.

2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은 같은 법에 따른 기술육성주체에 해당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와의 협업 대상,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참여 대상이 되는 등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의무를 지게 됨.

2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및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해 동안 총 180건의 확인 요청 중 5건(2.8%)만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음.

[분기별 신청 및 선정 현황 표]

(단위: 건)

연도	2024.2분기	2024.3분기	2024.4분기	합계
신청수	130	33	17	180
선정수	1	3	1	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대비 인정 비율이 저조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도 있을 것이나, 제도 초기에 기업 등이 어떤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인지에 대한 확인 기준이나 선정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술육성주체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23]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은 중장기 목표하에 육성·지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는 입장인데,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육성주체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임.[24]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에 대한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을 시행령 또는 고시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수 연구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가적 허브로 육성하려는 것임.[25]

---

23) 예를 들어 특정 기관의 경우 보유 기술 25건에 대하여 확인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기도 하였음.

2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2차 공고부터 FAQ, 작성 모범 예시, 체크리스트 등을 첨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고,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2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 · 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은 그밖에 특화연구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특화연구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은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세부기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침에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였다고 설명함.[26)]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의 내용이 곧바로 국가기관이 아닌 특화연구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화연구소 지정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고시로 규정할 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 · 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 ·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시설 · 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자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간 협력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국가전략기술 허브구축을 위한 특화연구소 운영 방향」(2024.4.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건)

요가 있어 보임.[27]

27) 국립기상과학원과 같이 국가기관 중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사례도 있으나, 특화연구소 지정 대상은 국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

5. 혁신도전프로젝트(R&D) 사업(종료): 사업목적 달성 저조

가. 개 요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선도 산업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2024년도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1,000	1,000	-	-	1,000	1,00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0년부터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해결 및 미래 혁신선도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추진 되어, 2025년 3월에 종료되었음.[28)]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5년 3월
- (사업규모) 총 78억원(2024년 10억원)
- (추진방법 및 주체) 출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내용)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선도 산업 창출
  - (프로젝트 기획) 추진단장(총괄PM) 주도로 초고난도 연구테마 발굴 및 R&D 사업 기획하여, 개별 부처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 (프로젝트 추진체계 운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선도형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연구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형 R&D 추진 관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프로젝트 기획 내실화 등을 위하여 기존 2024년 12월 종료예정이던 사업 기간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였음.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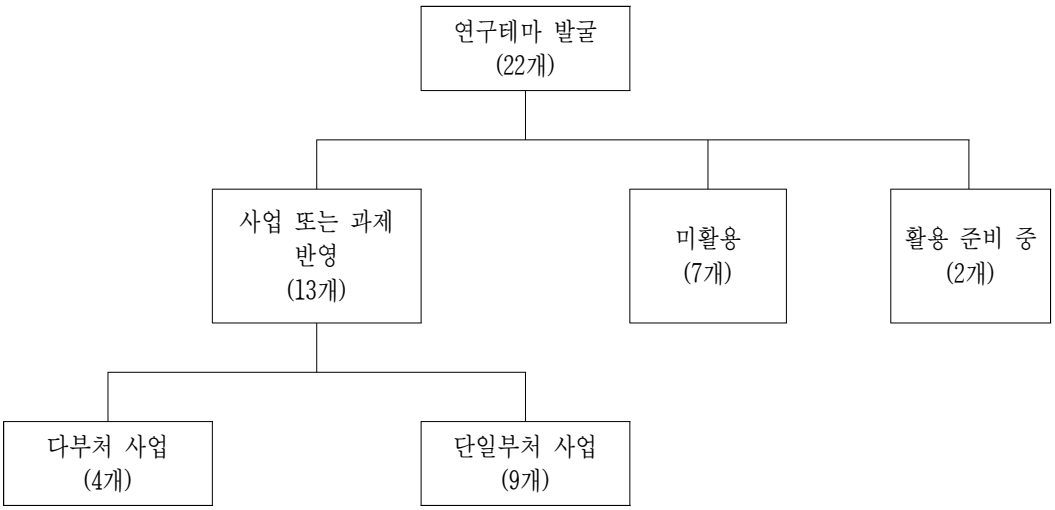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이 부처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이라는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부처의 유인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은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목표를 발굴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29)]

그러나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① 동 사업을 통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총 22개의 연구주제가 발굴되었는데, 그 중 7개 주제(약 32%)가 최종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연구테마 활용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 · 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 발굴한 연구개발 주제가 실제 다부처 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는 22개 중 4개뿐이어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산업을 창출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

③ 참여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기획 사업 중 11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참여 부처는 환경부·복지부·해수부 및 국토부 총 4개 부처만 있는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총 3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양한 부처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30)]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발굴된 연구테마가 활용된 사업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소관 부처
다부처	플라즈마활용폐유기물고부가가치기초원료화기술개발	**과기부**, 환경부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	**과기부**,복지부
	용융염원자로(MSR)원천기술개발	**과기부**, 해수부
	인공아체세포기반재생치료기술개발사업	**과기부**, 복지부
단일 부처	상시재난감시용성층권드론기술개발(R&D)	**과기부**
	초고속이동수단하이퍼튜브핵심기술개발	국토부
	소재혁신양자시뮬레이터개발	**과기부**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운영(R&D)	복지부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과기부**
	리튬메탈음극의범용적활용을위한모듈형LEA핵심기술개발사업	**과기부**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과기부**

주 1) 발굴한 연구테마가 해당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또는 과제의 형태로 반영된 경우에도 해당 세부사업명만 기재하였음
2) 소관 부처는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다부처 참여 과제를 기획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로 인해 신속 추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 이하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기초·원천 분야 중심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었고, 2024년 R&D 예산 축소의 여파로 타 부처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업기간 4 ~ 5년차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기획이 진행되었다는 입장임.

30) R&D 총괄 부분 개요 참고

그러나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 및 미래 혁신선도 산업을 창출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기획이 필요할 수 있는데, 기획한 연구테마와 연계되는 사업의 총 규모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50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6.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사업: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가. 개 요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사업은 개도국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실, 라운지, 영상회의실 및 PC, 3D 프린터 등 ICT 기자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4억 9,600만원 중 33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31)]

[2024년도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도국정보이용 환경개선사업	3,896	3,896	-	-	3,896	3,780	-	116	3,360
개도국정보접근 센터구축운영	3,496	3,496	-	-	3,496	3,380	-	116	2,9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예산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출연하고 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교부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개도국 수원기관과 MOU체결 및 정보접근센터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정보접근센터 개요]

o 규모 : 41개국 61개 센터(센터별 규모 : 약 350㎡) o 기능 : 개도국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교육실(ICT 교육), 디지털라운지(체험, 장애인 보조기기 등), 디지털회의실(영상회의) 등 다목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o 지원 예산 : 신규 센터 1곳 구축 시 약 6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일반회계-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정보화,ODA)(1946-502)(국제협력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운영 내역사업을 통하여 2024년 나이지리아·알바니아·부탄 및 파라과이에 신규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2024년 초 파라과이의 현지 정세 불안과 현지 기관의 내부 사정[32]으로 인하여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파라과이측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하였음.

[2024년 정보접근센터 신규 구축 일정]

구분	사업계획서상 추진 일정 (4개 국 공통)	현재 추진일정 (파라과이)
2024	o 1월 ~ 3월 : 정보접근센터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o 1월 ~ 3월 : 현지 사정(정세불안, 기관 사정) 등으로 일정변경 논의 o 4월 ~ 9월 : 사업 추진 관련 수행기관 간 실무 협의 o 10월 ~ 12월 :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협약 변경(기간 연장, ~2025년)
2025	-	o 1월 ~ 3월 :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현지 기관 협의 o 4월 ~ 6월 : 현지실사, 공사/기자재 업체 선정 및 운영진 초청연수 o 7월 ~ 9월 : 신규 구축 추진 o 10월 ~ 12월 : 신규 구축 추진(계속), 개소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5년에 다시 협의를 통하여 현지실사 및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에 출연금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교부하였음.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라과이는 2023년 대선 및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폭력시위 등으로 정세불안이 2024년까지 초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라 현지 기관(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센터) 내부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함.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행률은 96.7%로 집계되어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집행률은 76%이고,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만 고려하면 실집행률이 3.7% 수준으로 집계되어 실제 예산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였음.

[2024년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이월액	최종 집행률
628	512	116	512	23	489	3.7%

주) 2024년에 편성된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 관련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실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된 것처럼 집계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33]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과이 정보접근센터 구축이 이미 1년가량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28)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출연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교부시 사전에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신규):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은 임무지향형 변혁적 기술을 개발을 위한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4]

[2024년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10,000	10,000	-	-	10,000	10,000	-	-	11,7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였는데, 2024년 교부현액 106억 7,000만원 중 46억 4,400만원(최종 집행률 43.5%)이 집행되고 60억 2,6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 (서울대학교 등 13개 기관) ※21개 과제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10,000	10,000	10,000	-	670	10,670	4,644	6,026	-	43.5

주) 연구개발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일반회계-한계도전 R&D 프로젝트(R&D)(1158-450)(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책임확보 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설치하고, 전략센터 내에 기존의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이하 “PM”이라 한다)보다 권한을 확대한 책임PM을 두며, 책임PM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와 같이 책임 PM을 둔 이유는 도전적인 문제 발굴·기획·선정·평가 및 사업관리 전반을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책임PM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중간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4년 사업비 100억원 중 9억원(9%)이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전문기관의 사업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2% 수준인 것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35)]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획·평가·관리비				기획·평가·관리비 (사업비 대비 비율)	사업비
	인건비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		
2024	600	75.5	42.3	182.2	900(9%)	10,000
2025	600	30	120	150	900(7.7%)	11,7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별도로 「한계도전 R&D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8호, 2024.5.17. 제정)을 제정하여 책임 PM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

35) <다른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전문기관(2023년)			
	전체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리사업비	18,311,964	6,735,907	3,091,891	1,422,574
기평비	370,875	55,594	79,336	32,679
기평비 비율	2.0%	0.83%	2.6%	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록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책임PM 제도 운영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고, 책임PM의 권한에 대한 별도 훈령을 제정하였음에도 「한계도전 R&D 운영규정」에서는 책임PM의 책임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의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같은 법 제22조) 및 실태조사(같은 법 제23조) 등을 통한 관리 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책임PM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36]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업무수행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책임PM의 활동내역도 공개되고 있어 책임확보 수단이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이나. 한국연구재단 내의 평가는 일반 PM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내역 공개는 책임 PM이 수행한 면담·자문 및 회의 등의 일자와 내용을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 책임 PM의 업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점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PM의 권한과 대우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책임확보 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장비구축 지연 및 축소에 대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학부생·대학원생에게 공공분야 팹을 활용한 설계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CMOS 공정 장비 고도화 및 팹 연계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37]

[2024년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반도체설계검증인 프라활성화	6,000	6,000	-	-	6,000	6,000	-	-	1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국내 반도체 제작 인프라를 가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CMOS[38] 공정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고,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이후 반도체를 실제로 제작하여 그 기능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반도체 설계검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해당 기관들에 대해 CMOS 공정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고, 고도화한 장비를 활용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반도체설계검증서비스를 제공(2027년까지)할 계획임.

37) 일반회계-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R&D)(1139-424)(기초원천연구정책관)

38) CMOS(Comlen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는 집적 회로의 한 종류로, 마이크로프로세서나 SRAM 등의 로직 회로를 구성하는 데에 이용되며,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라는 용어도 통용됨.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4년에 계획 대비 36.4% 수준으로 축소하였는데, 그 결과 장비 구축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반도체 설계검증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 사업 착수 이후 2023년 및 2024년 예산 모두 집행되었으나, 연구개발기관의 실제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47억 1,000만원 2024년 36억 3,6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최종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2023년	12,000	-	12,000	7,290	4,710
2024년	6,000	4,710	10,710	7,074	3,6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예산 변동으로 인하여 장비 고도화와 관련된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2023년 연구비를 이월하였고, 이후 2024년에는 고가 연구장비(이온주입기 등) 도입에 따른 잔금과 부대비용 등이 이월되었다는 입장임.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165억원) 대비 105억원 감소한 60억원(36.4%)만 편성됨에 따라 CMOS 공정장비 고도화 대상이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서울대학교의 장비도입 일정이 지연되거나 장비 종류가 변경되면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39)]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 축소가 사업의 성과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의 축소가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39) 공동연구기관 중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는 반도체제작공정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모아팹*을 통해 이 사업에서 수행하는 '내 칩 제작 서비스'의 공고와 접수, 홍보, 지원방식 개선 및 이력 등의 사후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모아팹시스템 : 반도체 산업의 기반 조성과 나노인프라 기능 강화 및 활용기관을 확대하고, 산재된 나노인프라 역량(장비, 인력, 보유기술 등)을 연계·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아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었고, 계획대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이 축소되었음.[40]

그리고 그 결과 각 연구개발기관은 일부 장비의 도입을 포기하거나 장비의 기능을 하향하여 구축하였고, 장비 구축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온주입기 장비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였고, 일부 장비는 최종적으로 도입을 포기하였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비도입계획 변경 현황]

연구개발기관	장비명	당초 도입일정	변경 도입일정계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온주입장비	2023~2024	2023~2025
	프로브스테이션	2023~2024	미구축
	집속이온빔 시스템	2024~2025	미구축
	고온 열산화 시스템	2024~2025	미구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브스테이션이나 집속이온빔 시스템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이미 소유하고 있으나 도입 이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려던 것으로서, 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장비 고장으로 인한 MPW 제작 공정[41]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잔재해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도입 포기 장비의 구축 사유]

구축 장비명	역할 및 구축 필요성
반자동 프로브스테이션	MPW의 소자·공정 특성과 수율 평가 및 모델 파라미터의 온도 특성 추출을 위한 필수 장비이며, 기 보유 장비는 1998년 도입한 장비로 반자동 측정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여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음
집속이온빔 시스템	MPW 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불량·결함 분석을 통해 공정 및 소자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장비이며, 2004년 도입된 기존 장비는 성능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분석에 큰 제약이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주요 R&D 예산 규모 감소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이후 예산 확보(’24년 60억 → ’25년 130억)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임.

41) MPW(Multi-Project Wafer) 제작 공정은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설계를 동시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특히 반도체 설계 초기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주로 활용됨.

②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Metal Sputter, PR Track 등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입 지연으로 2025년까지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장비로 대체할 계획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비도입계획 변경 현황]

연구개발기관	당초 도입 예정 장비(도입일정)	대체 장비(도입일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Metal Sputter(2024~2025) · PR 트랙(2024~2025) · 고분해능 XRD(2024~2025)	· 자동세정 및 식각 시스템(2025) · BEOL-CMP(2025) · Cluster Oxide- Poly Etcher (2025) · Dpoly-Si LPCVD (20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공정 가능 웨이퍼규격이 최대 8인치인 장비를 웨이퍼 규격이 6인치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하게 되면서 구축 장비의 기능이 하향되었는데, 이를 활용한 MPW 제작 공정 지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42)]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도입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장비 도입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장비를 활용하여 반도체설계검증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반도체설계검증 제공 목표 횟수도 달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6년 이후부터는 반도체설계검증 제공 목표 횟수가 기존의 2배(연 6회 → 연12회)로 증가될 예정이므로, 장비고도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도체설계검증 제공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 실무인력 양성 효과 감소도 우려됨.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변화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이 수립한 CMOS 제작 장비고도화 계획을 보완하는 등 반도체설계검증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2)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도입장비의 스펙이 하양된 것은 사실이나, MPW 제작 공정 서비스는 초기 사업계획 당시부터 6인치 웨이퍼로만 제공하기로 계획하여 최대 공정가능 웨이퍼 인치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MPW 제작 공정 서비스 지원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임.

9.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선급금 전액 지급 문제 등

가. 개 요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에 인건비, 경상경비 및 기관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88억 9,600만원 중 587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43]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58,896	58,896	-	-	58,896	58,784	-	112	61,51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3) 일반회계-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9)(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급금을 전액 지급한 비율이 최근 3년간 매년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4)]

「국고급 관리법」에서 이와 같이 선급금 지급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급금을 100% 지급하는 경우에 과제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이나 계약상대가 기업인 경우 과업 수행 도중 폐업하거나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 33건 중 28건(84.8%)에 대하여 선급금을 100% 지급하였음.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2022 ~ 2024년)]

(단위: 건, %)

연도	계약 수(A)	선급금 100% 지급한 계약 수(B)	비율(B/A)
2022	14	12	85.7
2023	9	8	88.9
2024	10	8	80
합계	33	28	8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관 내규인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용역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45)46)]

---

44)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 · 제조 · 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5) 동 지침 제12조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용역비 지급 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괄 지급할

그러나 한국연구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내규 등에서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이 다른 기관과 달리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다른 전문기관의 선급금 지금액 제한 규정 사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선급금 지급액을 70%로 제한
· 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계약규칙」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라 보증조치 후 선급금 지급 가능하고, 선급금 지급액을 50%이하로 제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계약운영 요령」에 따라 보증조치 후 선급금 지급 가능하고, 선금과 중도금의 합계가 70% 이하가 되도록 지급 가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계약규칙」 및 「연구용역관리지침」에 따라 선급금 지급액을 70%로 제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관련 내용 발췌

수 있도록 하여 선급금 지급액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46)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리지침」(한국연구재단 내규)
제12조(연구용역비 지급) ① 재단은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연구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비 항목은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별 계상기준은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 협약체결 시의 조건에 따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초과이면서 연구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연구개발 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활용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임.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계약사무를 수행하여야 함.[47]

준정부기관의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6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사유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48]

---

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48)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계약 120건 중 83건(69.2%)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어, 수의계약 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계약 수	수의계약 수(비율)
	수의계약 사유(건,비율)
120건	83건 (69.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인 경우(58건, 69.9%)
	시행령 제27조인 경우(18건, 21.7%)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사목인 경우(2건, 2.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인 경우(2건, 2.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인 경우(1건, 1.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인 경우(1건, 1.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인 경우(1건, 1.2%)

주) 2024년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한 계약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수의계약 83건 중 58건(69.9%)의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은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조건만 만족하면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음.[49)]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

그러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단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계약을 경쟁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함.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중 환경개선 공사나 행사지원 용역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있음.

[2024년 한국연구재단의 수의계약 건 중 행사지원 및 환경개선 공사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과학기술계 신진연구자 교류회 지원	32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행사장 환경 정비 및 지원 용역	49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포럼 행사 운영 지원	49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3.0)사업 10년 기념 행사 지원	50	
2024년 선도연구센터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행사	25	
2024년 우리나라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 행사 운영 지원	29	
퀀텀코리아 2024 재단 홍보 부스 운영 대행	33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위탁 용역	50	
20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 개최 지원	5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은 계약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가급적 경쟁을 통한 계약체결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계약업무 수행 시 경쟁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금액의 규모와 계약상대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10. 융합연구 사업: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에 대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제도 적용 검토 등

가. 개 요

‘융합연구’ 사업은 출연(연)간 융합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융합연구사업 추진 및 출연(연) R&R 협업 지원과 목적지향적 융합연구 강화를 통한 국가·사회적 현안해결, 창의·도전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30억 7,200만원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0]

[2024년도 융합연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195,226	195,226	-	-	195,226	194,792	-	434	247,439
주요사업비	180,545	180,545	-	-	180,545	180,545	-	-	232,197
융합연구	153,072	153,072	-	-	153,072	153,072	-	-	203,30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기관”이라 함)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융합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4개의 융합연구 과제를 지원하였음.

동 사업 예산은 2023년 820억 3,100만원에서 2024년 1,530억 7,200만원으로 71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내용이 조정되면서 기존 융합연구단 및 창의형융합연구의 예산은 축소되고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 예산 1,00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50) 일반회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연구성과혁신관)

[융합연구사업 예산의 2023년 대비 2024년 주요 변경 내역]

※ 계속 연구개발비 863억원 → 500억원으로 축소(△363억원) - (융합연구단) 계속·종료과제(11개) 총 연구비 546억원 대비 60% 편성(328억원) - (창의형융합연구) 계속과제(23개) 총 연구비 317억원 대비 54.3% 편성(172억원)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 신설 1,000억원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기준으로 융합연구 사업의 과제는 ①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과제, ②융합연구단 과제, ③창의형 융합연구 과제, ④선행융합연구 과제, ⑤융합클러스터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융합연구 사업 과제 유형별 비교표]

과제유형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융합연구단	창의형 융합연구	선행융합연구	융합클러스터
목적	미래선도 기술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현안 해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실패 허용 연구문화 조성	융합연구 주제 및 해결 아이디어의 사전 실증적 검증 지원	연구자 간 연구교류 지원 및 융합연구 기획 유도
지원규모	연 100억원 이상	연 65억원 내외	연 20억원 내외	연 2억원	연 5천만원
지원기간	2+3년	3+3년 or 3년	2+3년 or 3년	1년	2년 or 1년
기관부담	면제	30% 이상	면제 또는 30% 이상	면제	면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여 과제에 참여하여도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데, 과제의 중요도나 규모를 고려할 때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의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과제당 연간 지원예산이 최소 160억원에서 최대 260억원이고, 각 과제의 총 지원금은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으로 모두 대규모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과제 선정 현황]

과제명	수행기관 (총괄기관)	참여기관(출연(연)) (주관 및 공동기관)	총 연구기간 (연구개시일~연구종료일)	2024년 지원금 (총 지원금)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선점을 위한 초격차 이차전지 융합 플랫폼 개발	화학연	전기연, KIST, 에기연, 생기원, ETRI, 기계연 등	2024.6.1.~ 2029.5.31.	260억원 (1,300억원)
희귀·난치질환 극복 글로벌TOP K-유전자치료기술 개발	생명연	화학연, 독성연, 표준연, 기초연, ETRI 등	2024.6.1.~ 2029.5.31.	170억원 (850억원)
가상원자로 슈퍼컴퓨팅 플랫폼 개발	원자력연	KISTI, ETRI 등	2024.6.1.~ 2029.5.31.	205억원 (1,025억원)
초거대 계산 처리를 위한 차세대 컴퓨팅 반도체 개발	KIST	ETRI, 표준연, 재료연, 기초연 등	2024.6.1.~ 2029.5.31.	160억원 (800억원)
고효율·고안전 차세대 화학적 수소 저장·활용 기술개발	KIST	생기원, 에기연, 녹색연, 화학연, 기계연 등	2024.9.1.~ 2029.8.31.	170억원 (85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으로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이하 “3책 5공”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과제별 몰입도가 저하되어 과제수행 성과가 저조할 우려가 있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경험이 많은 연구자가 계속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진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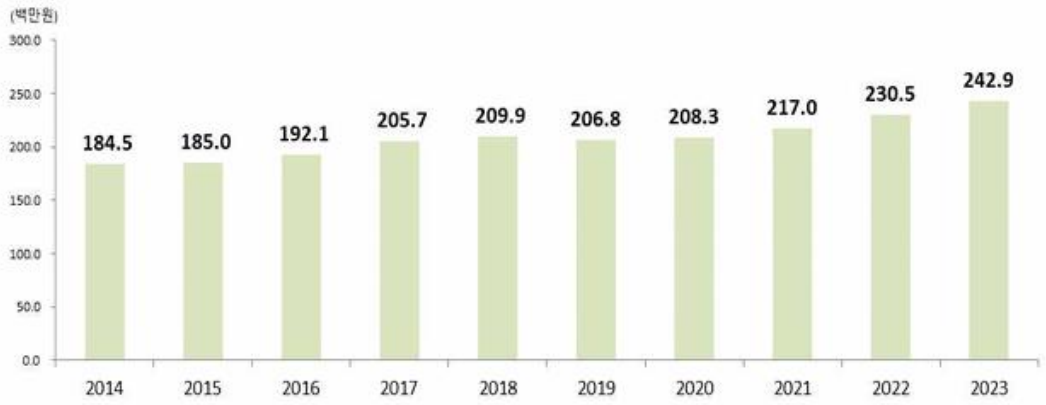
그런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는 국가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미래선도 기술 분야에서 전(全) 출연연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도가 높음.

또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각 과제별 참여연구자의 1인당 연구개발비가 최대 2억 1500만원까지 집계되고 있는데,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2억 4,288만원 수준[52]임을 고려하면 그 규모도 상당하므로 연구자의 성실

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2)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확인 가능함.

<우리나라의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책 5공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글로벌 TOP 과제 참여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과제명	2024년 연구비	참여연구자 수	1인당 연구비 (해당 과제 한정)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선점을 위한 초격차 이차전지 융합 플랫폼 개발	26,000	187	139
희귀·난치질환 극복 글로벌TOP K-유전자치료기술 개발	17,000	79	215
가상원자로 슈퍼컴퓨팅 플랫폼 개발	20,500	303	68
초거대 계산 처리를 위한 차세대 컴퓨팅 반도체 개발	16,000	114	140
고효율·고안전 차세대 화학적 수소 저장·활용 기술개발	17,000	120	14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기준

특히 2024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과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 32명 중 11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5개를 넘어서거나 연구책임자인 과제 수가 3개를 넘어서고 있는데, 각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 중에는 글로벌 TOP 과제와 같이 3책 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어 3책 5공 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몰입 저하가 우려됨.

[글로벌 TOP 과제의 총괄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 현황]

(단위: 개)

과제명	과제 구분	연구책임자의 참여 과제수	연구책임자인 과제 수
총괄		1	1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선점을 위한 초격차 이차전지 융합 플랫폼 개발	1세부	5	3
	2세부	4	3
	3세부	5	**5**
	4세부	**7**	**4**
	5세부	3	2
	6세부	4	**4**
	7세부	**8**	3
희귀·난치질환 극복	1세부	5	**5**

(단위: 개)

과제명	과제 구분	연구책임자의 참여 과제수	연구책임자인 과제 수
글로벌TOP K-유전자치료기술 개발	2세부	3	3
	3세부	3	1
	4세부	3	2
	5세부	**11**	**4**
가상원자로 슈퍼컴퓨팅 플랫폼 개발	1세부	4	2
	2세부	3	2
	3세부	2	2
	4세부	3	3
	5세부	2	1
	6세부	3	3
	7세부	4	2
	8세부	3	2
	9세부	1	1
초거대 계산 처리를 위한 차세대 컴퓨팅 반도체 개발	1세부	3	1
	2세부	3	3
	3세부	5	**5**
	4세부	5	3
	5세부	1	1
고효율·고안전 차세대 화학적 수소 저장·활용 기술개발	1세부	2	2
	2세부	**7**	**4**
	3세부	**7**	**7**
	4세부	**6**	1
	5세부	**7**	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기준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 과제 참여 비중이 높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 창출 과제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융합연구 과제 참여도가 낮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회는 과기출연기관의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융합연구 사업을 통하여 매년 융합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설립(2014년) 이후 각 과기출연기관의 융합연구 과제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과기출연기관별 융합연구 과제 수행 현황]

(단위: 개)

기관명	융합연구 과제				
	성과 창출형[2]		기획형[3]		
	참여수(A)	비중(A/C)	참여수(B)	비중(B/C)	참여수 (C=A+B)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5	26.9%	122	73%	167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	16.7%	10	83%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25.9%	43	74%	5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2	26.5%	61	73%	8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	25.5%	38	75%	51
한국한의학연구원	8	30.8%	18	69%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	17.9%	87	82%	1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	26.9%	68	73%	9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25.0%	6	75%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10.9%	57	89%	64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10.5%	17	89%	1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3	26.7%	63	73%	86
한국식품연구원	5	29.4%	12	71%	17
세계김치연구소	-	0.0%	4	100%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23.7%	29	76%	38
한국기계연구원	18	22.8%	61	77%	7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	22.5%	55	77%	71
한국전기연구원	9	18.8%	39	81%	48
한국화학연구원	19	26.4%	53	74%	72
국가독성과학연구소	7	21.2%	26	79%	33
한국원자력연구원	15	21.7%	54	78%	69
한국재료연구원	14	31.1%	31	69%	45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	24.0%	19	76%	25
총 과제수	**99**	**22.8%**	**335**	**77.2%**	**434**

주 1) 하나의 과제에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게 되므로 각 출연연 참여과제 수의 합은 총 과제 수보다 큼
2) 성과 창출형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과제, 융합연구단 과제 및 창의형 융합연구 과제를 의미
3) 기획형은 선행융합연구 과제 및 융합클러스터 과제를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각 과기출연기관의 참여과제 중 기획형 과제와 성과창출형 과제의 비중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 성과 창출형 과제의 비중이 11% 이하로 평균(22.8%)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고, 세계김치연구소의 경우 성과 창출형 융합연구 과제 참여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그러나 기획형 과제는 연도별 국비 지원 규모가 5,000만원 ~ 2억원으로 그 내용도 과제의 기획이나 사전 실증 검증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나, 성과 창출형 과제는 연도별 국비 지원 규모가 20억원 ~ 100억원이상으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형 과제 수행이 성과 창출형 과제 수행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들에 대하여는 성과 창출형 과제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23개의 과기출연기관의 융합연구 과제 참여 수는 최소 4개에서 최대 167개로 분포하고 있어 과기출연기관의 융합연구 과제 참여 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과기출연기관의 규모나 연구 분야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과기출연기관법」제21조의2는 연구회가 과기출연기관의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거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통합하는 현 체계를 마련한 것이 기술분야 간 융합·협력 연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김치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융합연구 과제 참여 수가 적은 과기출연기관에 대하여도 융합연구 수요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53)54)]

53)「과기출연기관법」
제21조의2(협동 · 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 ·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 · 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54) 현 출연연 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동 보고서 2번 목차의 개요 부분을 참고

11.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해외우수과학자의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18억 1,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55]

[2024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재활용확산지원	48,141	48,141	-	-	48,141	48,141	-	-	54,449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31,817	31,817	-	-	31,817	31,817	-	-	38,81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과제는 BrainPool(단기), BrainPool(장기), BrainPool+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규모와 기간에 차이가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지원내용]

유형	BrainPool		BrainPool+
	단기(2023년 종료)	장기	
초빙대상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 단,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산업체 5년 이상 경력도 인정		
지원기간	6~12개월 ※ 산업체: 3~12개월 지원 가능	1년~3년	최장 10년(4+6)
지원금액	최대 3.5억원 내외/년		6억 원 이내/년
지원내용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등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 경비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일반회계-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미래인재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도포기로 인하여 계획대비 성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통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해외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2020년에 선발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33.8%가 과제를 중도 포기하였고, 2021년 이후 매년 선발된 해외우수과학자의 10% 이상의 중도 포기를 하고 있음.

2024년에 선발된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2025년 6월 30일 기준 포기 비율이 5.9%로 최근 5년간 평균 포기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수행 중인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중도 포기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56)]

[최근 5년간 중도 포기 현황]

(단위 : 명, %)

사업상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합계
해당 연도에 선발된 해외우수과학자 수	157	152	144	183	119	755
종료(중도 포기 제외)	100	128	122	69	10	429
수행 중	4	4	4	88	102	202
중도 포기 수[1)]	53	20	18	26	7	124
조기중단[2)]	27	12	15	10	5	69
국내 취업·임용	9	6	4	6	5	30
일반중단[3)]	26	8	3	16	2	55
포기 비율	33.8	13.2	12.5	14.2	5.9	16.4

주 1) 해당 연도에 선발된 해외우수과학자 중 협약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과학자 수
2) 조기중단 : 초빙과학자의 국내외 타 연구개발기관 취업 및 이직 등으로 인한 중단
3) 일반중단 : 건강이상 등의 개인적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 수행 불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6.30. 기준

이와 같이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계획 대비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이 중도포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취업·임용 등에 따른 조기중단과 건강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본국으로 복귀하는 일반 중단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함.

연구자가 국내 취업·임용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외의 과제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유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국내 잔류여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잔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해외의 우수한 과학자를 국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에 유치함으로써 해외우수과학자와 국내 연구자간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외 우수과학자의 국내 정착 유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종료 후에도 국내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착하지 않은 해외우수과학자를 대상으로는 그 사유를 점검하여 사업의 내용에 환류시킬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1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년 응답자 수의 비율도 60% 이내로 나타나는 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지원대상자 국내 잔류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2021	2022	2023	2024
조사대상 및 방법	해외 우수 과학자 및 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내용	과제 종료 후 해외 우수 과학자의 현 소속기관 및 직위, 현 체류국 등			
조사기간	2021.7.30.~2021.8.6.	2022.8~10월	미실시	2024.10.16.~10.23.
대상과제 수(A)	336	429		791
응답자 수	133	294		421
국내 잔류자(B)	79	92		153
잔류비율(B/A)	23.5	21.4		19.3

주) 2021년 이후부터 설문조사를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2023년에는 설문조사를 미실시하였음[5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 2023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적조사는 법상 (혁신법 제17조 5항)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2021년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해외과학자가 사업 종료 후 국내에 잔류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간 실시한 설문조사는 그 내용이 해외우수과학자의 현재 진로 현황에 대한 조사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우수과학자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약 90%를 대학이 차지하는 등 참여기관이 학계에만 집중되고 있으므로, 산업계나 연구계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의 최근 10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별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90%가량의 기관이 대학으로 집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현황]

연도	대학	기업	연구기관	총계
2015	49개(82%)	-	11개(18%)	60개(100%)
2016	44개(88%)	1개(2%)	5개(10%)	50개(100%)
2017	41개(89%)	-	5개(11%)	46개(100%)
2018	65개(82%)	4개(5%)	10개(13%)	79개(100%)
2019	197개(90%)	4개(2%)	17개(8%)	218개(100%)
2020	140개(89%)	4개(3%)	14개(8%)	158개(100%)
2021	135개(89%)	5개(3%)	12개(8%)	152개(100%)
2022	128개(89%)	5개(3%)	11개(8%)	144개(100%)
2023	162개(88%)	8개(4%)	14개(8%)	184개(100%)
2024	106개(89%)	-	13개(11%)	119개(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활동 수행기관수는 58,200개로 이 중 379개가 대학, 477개가 공공연구기관, 나머지 57,344개가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국내 대학의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58)]

설문 방식의 한계로 인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추적조사를 최종보고서 제출과 연계하여 국내 잔류 여부, 향후 진로(거치) 계획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58)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주제별통계-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것은 대학과 비교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관련 내부제도나 절차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도 연구개발의 주체로서 해외우수과학자를 유치·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연구개발수행기관 현황]

(단위: 개, %)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477(0.8%)	379(0.7%)	57,344(98.5%)	58,200(100%)

자료: 「2023년 연구개발활동조사」

12.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 사업 참여 기업 수요 저조 문제 개선 필요

가. 개 요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은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포용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1억 7,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59)]

[2024년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7,179	7,179	-	-	7,179	7,179	-	-	5,69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	5,063	5,063	-	-	5,063	5,063			3,830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100	100	-	-	100	100	-	-	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내역사업인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사업은 국내 보조기기 개발 업체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컨설팅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

59) 일반회계-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정보화)(1945-501)(정보통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수요가 저조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5개 기업을 지원하였음.

2024년 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수가 저조하여 참여를 신청한 5개 기업이 모두 선정되었고, 2021년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가 저조하여 일정한 사업참여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선정되고 있음.[60]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사업 경쟁률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온라인)	2021	2022	2023	2024
경쟁률	1.6 : 1	1.3 : 1	1.4 : 1	1 : 1	1 : 1	1 : 1	1 : 1	1 : 1
지원기업	10	8	7	10	6	12	5	5
선정기업	6	6	5	10	6	12	5	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기업의 참여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동일한 기업이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을 받는 등 별다른 경쟁없이 일부 기업에 국비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개발업체 해외수출 지원 사업 기업참가 현황]

(단위: 개)

구분	7회 참가기업	6회 참가기업	3 ~ 5회 참가기업	2회 참가기업	1회 참가기업
수	2	3	-	6	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지, 사업 구조상 기업의 참여유인이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여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0) 사업참여 기준은 장애인 및 고령층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직접 생산하며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임.

13.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가. 개 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은 전국 스마트쉼센터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전문상담 지원,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3억 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 되었음.[61]

[2024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건전정보문화조성	4,883	4,883	-	-	4,883	4,883	-	-	4,194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4,306	4,306	-	-	4,306	4,306	-	-	3,8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예산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출연하고 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교부받은 예산을 활용하여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개요]

·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 규정
    * 초·중·고교(반기별 1회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공공기관(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지원방식) 연령대별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전문강사 파견, 교원 대상 예방교육 연수 지원
· (교육내용) 과의존 현황 및 사례,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자가 진단 방법,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등
· (실적관리) 교육결과 제출(차년도 4.30.) → 예방교육 독려(차년도 5~6월)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차년도 7~8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 일반회계-건전정보문화조성(정보화)(1945-504)(정보통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연례적으로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2항·제3항·제4항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받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고 있음.[62)]

그런데 2024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기관 49,786개 중 2,120개의 기관은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중 2,063개의 기관이 어린이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대학교의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43.6%로 집계되어 다른 유형의 기관들이 모두 85% 이상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

6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 현황]

(단위: 개, %)

기관유형	대상기관	실적인정 기관	실적 인정률	특별교육 이수 기관	교육 미실시	최종 실시율
어린이집	28,814	24,923	86.5	1,828	2,063	92.8
유치원	7,954	7,930	99.7	15	9	99.9
초등학교	6,319	6,299	99.7	17	3	100.0
중학교	3,277	3,254	99.3	20	3	99.9
고등학교	2,377	2,349	98.8	24	4	99.8
특수학교	353	339	96.0	7	7	98.0
대학교	346	151	43.6	174	21	93.9
공공기관	346	297	85.8	39	10	97.1
합계	49,786	45,542	91.5	2,124	2,120	95.7

주) 2024년에는 2023년도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더 두드러지는데, 우선 최근 5년간 매년 교육 미이수 기관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9 ~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미실시 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A)	58,975	54,552	54,466	52,779	49,786
교육 미실시(B)	4,789	3,879	3,640	2,785	2,120
어린이집(C)	3,623	3,435	3,509	2,681	2,063
비율(100 x C/B)	76	89	96	96	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또한 최근 5년간 실적 인정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 기관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대학교만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9 ~ 2023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실적 인정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어린이집	68.5	76.7	84.7	85.4	86.5
유치원	61.8	83.4	99.3	99.9	99.7
초등학교	96.5	96.7	99.4	99.4	99.7
중학교	93.2	92.6	98.1	98.3	99.3
고등학교	92.0	91.9	97.3	97.9	98.8
특수학교	76.6	85.2	95.4	97.2	96.0
대학교	42.8	65.0	42.1	40.3	43.6
공공기관	63.8	67.5	70.7	81.7	85.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2항은 의무규정이므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의 기관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대학교의 경우 2021 ~ 2023년의 경우 절반이상의 기관이 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세한 어린이집의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보육교사가 소수 인원만 근무하고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등이 많아 법정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고, 대학은 초중고와 달리 학생들의 자율성이 높아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로·학점 등과 직접 관련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5년간 유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무교육인 지능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능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회계·기금의 혼용 부적정

가. 개 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9월 26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26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음.[63)6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요]

・ (일시) 2024. 9. 26.(목) ・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던 장소) ・ (참석) 정부 : 대통령(위원장),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민간 :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등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 ・ (안건) 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 (부위원장) ②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과기정통부) ③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 (SK하이닉스) ④ 산업 AX 전환 방안 (산업부) ・ (토론)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논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하여 2024년 9월 10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수행 중이던 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 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출범식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음.

63)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4) 관련사업: 일반회계-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2033-371)(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진흥기금-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방송통신발전기금-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2032-304)(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진흥기금-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2033-304)(정보통신정책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활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 명	활용예산	합계
일반회계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질서 확산	50	261.5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	50.5	
정보통신진흥기금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50	
정보통신진흥기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1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 지원을 위하여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편성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타 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립은 2024년 8월 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87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개최 필요성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논의될 수 없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 필요성과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4년 예비비로 신규 편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어야 함.[65]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0월 28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은 그 전인 2024년 9월 26일에 개최하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수행 중이던 4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의 집행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추진했어야 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동 행사와 관련이 적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66]

---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28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2024년 11월 18일에 예비비 8억 7,400만원을 배정받았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행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였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특정 행사 개최를 위해 합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 · 제35조 · 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9조 ·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5.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개발을 위한 16T급 고자기장에서의 초전도 도체 성능 시험설비를 개발·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67]

[2024년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300	300	-	-	300	300	-	-	12,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2024년 교부현액 43억 5,200만원 중 12억 300만원(최종 집행률 27.6%)이 집행되고 31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음.

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1158-425)(공공융합연구정책관)

[2024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기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300	300	300	4,052	-	4,352	1,203	3,149	-	27.6

주) 사업시행주체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이 2022년 사업시행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년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어 연례적으로 최종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16T급 고자기장에서 초전도 도체의 성능시험을 위한 실험동 건설 및 시험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성능시험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2년 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기획, 사업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검토회의 6회), 재정 당국과의 총사업비 확정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2022년에 교부된 예산 40억원 중 39억 8,300만원(99.5%)이 이월되었음.[68)69)]

68)「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69)「2022년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2쪽을 참고하였음.

[2022년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예산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액	최종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4,000	17	3,983	추진단계에서 사업기획, 전문가 의견수렴,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인하여 사업착수 지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초전도 선재[70]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3년 9월에 사업추진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음.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추진계획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사업 기간	2022. 11.~2027. 12.	2022. 11. ~2028. 12.	- 실험동 건설 일정 지연 및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설계 변경에 따른 장비구축 일정 지연
총사업비	498	495	- 2번에 걸친 총사업비 조정 협의와 낙찰차액 반영 등을 반영한 자율조정
초전도 자석 확보 방법 변경	제작 장비 구축 후 초전도 자석 제작	해외 제작 장비 활용하여 초전도 자석 제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초전도 선재 가격 급등
건축 규모	연면적 2,636㎡, 3층	연면적 1,935㎡, 1층	- 초전도 자석 제작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 수정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결과 사업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였고, 초전도 자석제작 장비 구축은 포기하여 건축 면적도 축소되었음. 또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예산현액 79억 8,300만원 중 40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2023.8월)된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2024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71][72]

---

70) 초전도 선재란 초전도체 특성을 가진 재료(Nb_3Sn, NbTi)를 넣어 제작된 가늘고 긴 전선임.

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경된 계획으로 '중간설계' 단계의 적정성 검토를 다시 진행하게 되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9월 적정성 검토 완료 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기초 및 PIT부 공사 등을 진행 중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3억원만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월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024년 예산현액 43억 5,200만원 중 31억 4,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 40억원 5,200만원 대부분이 2024년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되었음.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4,000	4,000	17	3,983	4,000	7,983	3,931	4,052	300	4,352	1,203	3,149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의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2022년 사업 추진 시부터 총사업비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　출〉

16.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 행사 확대를 위한 예산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은 학생 및 일반인 대상 과학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과학 탐구심 함양 및 과학기술·IT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7,300만원 중 7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었음.[73]

[2024년도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과학교육 (손익계정)	3,796	3,796	-	250 (+480/ △230)	4,046	3,516	-	530	4,453
과학경진대회 개최	311	311	-	462	773	752	-	21	62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립중앙과학관은 매년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을 통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개최 및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예산은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인 ‘과학원리 체험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내역조정(2억 1,200만원)을 통하여 과학경진대회 개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였음.[74]

---

7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과학교육(손익계정)(2232-407)(국립중앙과학관)

74) 참고로 국립중앙과학관은 매년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내역조정하여 전국과학전람회와 함께 개최해왔고, 2025년부터는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예산을 과학경진대회 개최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나. 검토의견

국립중앙과학관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전국과학전람회를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하여 과학경진대회 개최 사업의 예산안을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 없이 확정되었음.

이후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 4월 1일에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이유로 전시관운영(손익계정) 사업 예산 2억원과 시설관리운영(손익계정) 사업 예산 5,000만원을 각각 과학교육(손익계정)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고, 2024년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하여 본예산 3억 1,100만원에 전용액 2억 5,000만원을 더한 5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에 대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과학전람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예년과 달리 특별전시 개최 및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추가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4.1.)	전시관운영 (손익계정) (2231-402)	210-09	200	과학교육 (손익계정) (2232-407)	210-14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관련 특별전시 및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추가 예산 확보
	시설관리운영 (손익계정) (2233-411)	210-15	50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그러나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과학전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예년 수준만큼 편성되어,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과학전람회를 개최했어야 하나,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전람회를 확대 개최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전용된 예산의 기존 활용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본예산	전용예산	당초활용 계획
전시관운영(손익계정)	상설전시관 운영	805	200	전시품 및 전시시설 유지보수
시설관리운영(손익계정)	전시관 위탁운영	594	50	전시관 유지관리 용역

자료: 국립중앙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세 입〉

17.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우편사업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편사업 수입은 다시 우편영업수입(통상, 소포, 국제우편 등 우편물 취급에 따른 수입), 우편잡수입(나만의 우표 판매대금, 국제 우편물 해외정산수입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우편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우체국 시설유지 관리비, 집배업무 위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편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충당하고 있음.[75)]

[우편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손익계정) 전출 중 결손보전액	우편사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당기순이익	비고
2014	-	△20,987	114,173	
2015	20,987	△50,706	152,591	
2016	50,706	△242,792	150,193	
2017	100,193	△35,209	205,946	16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당기순이익 중 50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2018	35,209	△129,698	164,878	
2019	129,698	△31,601	239,283	

7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연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손익계정) 전출 중 결손보전액	우편사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당기순이익	비고
2020	31,601	△125,345	313,277	
2021	125,345	98,285	1,575,502	
2022	-	119,769	△16,596	
2023	-	△117,685	143,537	
2024	117,685	△124,187	183,688	
2025 (E)	124,187			

주) 당해연도 결손보전액(당기순이익과 결손발생액 중 작은 금액)은 다음 연도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사업 환경변화 및 별정우체국 공무원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지원 등으로 인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인 우편사업 수익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편영업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약 3조원 내외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통상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2016년 이후 급증하던 소포 물량의 증가세가 정체됨에 따라 향후 우편사업 수입의 확대는 제한될 것으로 보임.[76)]

[2020~2024년 우편사업 수익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우편영업수익	**30,892**	**31,868**	**29,488**	**29,465**
통상	17,951	19,160	17,596	17,727
소포	9,461	9,619	8,928	9,015
국제	3,481	3,089	2,964	2,724
기타(자산수익 등)	**1,920**	**1,981**	**1,913**	**2,211**
수익 계	**32,812**	**33,848**	**31,401**	**31,676**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 우정사업본부는 일반통상 물량이 ('15) 35.3억 → ('17) 31.9억 → ('19.) 28.0억 → ('21.) 23.5억 → ('23.) 20.8억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포 물량은 2016년 2억 1,800만통에서 2020년 3억 1,900만통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2022년 3억 1,800만통 2024년 3억 500만통으로 증가세가 정체되었다고 설명함.

반면 우편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데, 원가 상승분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은 계속하여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2021~2024년 우편사업 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인건비성 경비 (A=B+C-D)	**20,238**	**20,830**	**23,099**	**22,966**
인건비(B)	22,581	22,815	23,146	23,832
민간위탁업무 인건비(C)	3,792	4,080	6,232	5,975
예금·보험 비용정산(D)	6,135	6,065	6,279	6,841
우편 사업비 (E=F-G)	8,635	8,612	6,228	6,094
사업비(F)	9,879	9,931	7,580	7,539
예금·보험 비용정산(G)	1,244	1,319	1,352	1,445
시설비(H)	1,549	3,371	1,937	2,051
합계(A+E+H)	**30,422**	**32,813**	**31,264**	**31,111**

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예금·보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처리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관련 비용을 이전받고 있어 해당 부분은 경비에서 제외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2027년에는 별정우체국 공무원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7년부터 우편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77]

[별정우체국 연금 수지 적자 전망]

(단위: 억원)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418	460	487	514	558	587	616	672	736	803	874	937	994	1,039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
1,082	1,123	1,164	1,192	1,218	1,230	1,238	1,244	1,267	1,240	1,230	1,238	1,222	…

주)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2022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기준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이 계속하여 확대된다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당기 순이익만으로는 결손액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18.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투자개시 필요

가. 개 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 제작을 위해 투자 제한 없는 새로운 민간 중심의 콘텐츠·미디어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시장을 공략할 핵심 흥행 작품(텐트폴 콘텐츠) 및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35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78]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35,000	35,000	-	35,000	35,000	-	-	5,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억원, %, 개)

지원 분야		모펀드		지정출자	모펀드 출자비율	목표 결성금액	운용사수	조성목표
		재정	비재정	산은				
블라인드 펀드	IP확보	200	300	-	40% 이내	630	2	1,260
		160	240	-	40% 이내	1,000	1	1,000
	기술심화	160	40	200	40% 이내	500	2	1,000
프로젝트 펀드		280	20	-	40% 이내	100이상	4~5	740
합계		800	600	200				4,000

주)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은 50% 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 방송통신발전기금-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1131-308)(방송진흥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이 민간 출자자들과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2025년 7월 현재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인데, 2025년 내에는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각각 950억원 및 550억원을 출자하여 총 1,500억원의 국비를 출자하고 모펀드 결성과 자펀드 결성 시 민간 출자자를 모집하여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2024년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예산 450억원을 더한 800억원의 정부출자와 1,200억원의 민간 출자를 합친 2,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자펀드 조성 단계에서 매칭자금 4,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4년 4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한 이후, 민간 출자자들과 출자 규모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출자 800억원에 민간출자 600억원을 더한 1,4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1월 재정 모펀드가 결성된 이후 민간기업의 이사회 출자 승인, 계약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 2025년 3월 비재정 모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음.

그리고 2025년 2월부터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IP 확보 분야의 경우 2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모집하였으나 한 개만 선정되었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하여는 5월에 재공고를 거쳐 2025년 6월 17일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IP확보 분야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일정	비고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12일	・목표: 1,000억원 1개, 630억원 2개
모펀드 출자	2025년 3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4월 10일	・선정: 1,000억원 1개, 630억원 1개
자펀드 운용사 모집 재공고	2025년 5월 2일	
자펀드 운용사 추가 선정	2025년 6월 17일	・선정: 630억원 1개
자펀드 결성	2025년 10월 ~ 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화 분야의 경우 당초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 1개를 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목표결성금액을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내부수익률(IRR)을 기존 7%에서 5%로 하향하는 내용의 재공고를 거쳐 2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였음.

[기술심화 분야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일정]

사업 추진 내용	일정	비고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	2025년 2월 12일	・목표: 1,000억원 1개
모펀드 출자	2025년 3월	
자펀드 운용사 모집 재공고	2025년 4월 16일	・목표수정: 1,000억원 1개 → 500억원 2개 ・내부수익률(IRR) 하향: 7%→5%
자펀드 운용사 선정	2025년 5월 27일	・500억원 2개
자펀드 결성	2025년 12월 이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실제 투자는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가 약정한 금액을 유치하여 조합을 결성한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도 예산의 투입효과는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펀드운용사가 기한 내(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을 결성하여 2025년에는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 운용사 선정 현황]

(단위: 억원, %, 개)

지원 분야		모펀드		지정출자	모펀드	자펀드 별	운용사수
		재정	비재정	산은	출자비율	목표 결성금액	
블라인드 펀드	IP확보	200	300	-	40% 이내	630	2
		160	240	-	40% 이내	1,000	1
	기술심화	160	40	200	40% 이내	500	2
프로젝트 펀드		280	20	-	40% 이내	100	1

주) 2025.7.20. 기준 자펀드 운용사 선정 현황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수시모집을 진행 중으로 현재 1개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나, 프로젝트 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 목표는 4~5개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성장금융(모펀드 운용사)은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문에는 프로젝트 펀드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자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및 실제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79]

79)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운용사가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7월에 선정된 1개 운용사가 10월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므로, 다른 자펀드 운용사도 선정되면 6개월보다 짧은 시간 내에 자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2025년 중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출>

19.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종료): AI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기업 관리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은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AI 바우처, 고성능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 AI 개발 인프라 지원 및 AI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196억 2,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0]

[2024년도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119,623	119,623	-	119,623	119,623	-	-	-
AI바우처 지원	42,500	42,500	-	42,500	42,500	-	-	27,625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55,800	55,800	-	55,800	55,800	-	-	35,640

주 1) 2025년에는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사업은 종료되고 내역사업은 각각 다른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음
2)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AI바우처 지원’**은 기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혁신을 위한 AI 솔루션을 지원하여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AI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425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초거대AI 독점에 국내 스타트업 등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초거대AI 언어데이터 및 AI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558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80) 정보통신진흥기금-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인공지능기반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바우처 지원 사업의 과제평가 결과 및 실제 참여의사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POOL을 관리하여 양질의 AI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업의 AI 솔루션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AI 솔루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AI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을 통하여 국내 수요기업에게 AI바우처를 지원하면, 수요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AI 솔루션을 판매하는 공급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AI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해당 AI 솔루션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면, 이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급기업 POOL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기업 POOL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되는 기업 없이 추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매년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좋지 않은 공급기업은 POOL에서 제외하는 등의 공급기업 관리 조치를 통하여 양질의 AI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공급기업 POOL 현황]

(단위: 개,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급기업	553	991	1,553	2,093	2,482
과제수행 기업	147	163	242	189	154
과제수행기업 비율	26.6	16.4	15.6	9.0	6.2

주) 매년 공급기업 제외 없이 추가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공급기업 POOL에 속한 기업 중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급기업 POOL이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4년 AI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I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AI 솔루션을 구입한 기업 중 66.4%가 현재도 AI 솔루션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33.6%는 AI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I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26.8%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16.7%는 활용방법이 까다롭거나 호환성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요기관의 AI 솔루션 활용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81]

[AI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한 AI 솔루션 활용 현황]

(단위: %)

구분	활용	비활용	효과 없음	활용 방법 어려움	호환성	업종 전환	추가 비용 요구	기타
전체비율 (비활용 중 비율)	66.4	33.6	(26.8)	(8.9)	(8.2)	(7.8)	(5.9)	(4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AI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보고서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제선정 시 수요기업의 AI 솔루션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요기업이 과제종료 후 AI 솔루션을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82]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거대 AI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 시 각 과제의 종료 시점을 연말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제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 충분한 과제 수행기간이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어 과제 선정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초거대 AI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공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 구축기관을 선정하고, 별도로 품질검증기관을 선정하여 각 구축기관이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품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AI-허브에 업로드하여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고를 세 번 진행하였는데 1차 공고는 3월, 2차 공고는 5월, 3차 공고는 8월에 이루어졌음. 그런데 각 과제의 협약기간을 과제 선정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제별로 수행기간에 차

81) 참고로 42.4%는 기타 사유, 8.2%는 업종전환, 5.9%는 추가비용을 요구받아 AI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82)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는 기업 중 AI솔루션 성능 추가, 변경 현황을 제출한 기업 중 검증받은 기업만 당해연도 AI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POOL을 별도로 관리하고 AI 솔루션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과제 수행기간 현황]

수행기간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과제수(개)	28	4	10	3	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이 2개월로 짧게 부여되었는데, 이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품질검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른 과제에 비하여 충분히 부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과제 수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제 선정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 SW중심대학 사업: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SW중심대학’ 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AI·SW중심으로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AI·SW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925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3]

[2024년도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106,241	106,241	-	106,241	106,241	-	-	110,186
SW중심대학	92,500	92,500	-	92,500	92,500	-	-	97,5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하여 실습환경·인프라 구축, 교과과정 개발·운영, 산학협력 중점 교수 등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당 연간 10억원(특화트랙) 또는 20억원(일반트랙)이 지원되고 있음.

[트랙별 지원내용 비교표]

구분	일반트랙	특화트랙
지원금액	• 대학당 연 20억원 내외(1년차 10억원내)	• 대학당 연 10억원 내외(1년차 5억원내)
지원기간	• 최장 8년(4+2+2년)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학 재선정시 6년(2+2+2년)	• 최장 6년(4+2년)
지원조건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10%(대학 현금)	
지원내용	• 실습환경·인프라 구축, 교과과정 개발·운영, 산학협력 중점 교수 등 교원 채용, 기자재·장비 구입, 연구 활동비 등 대학 SW인재양성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정보통신진흥기금-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2232-342)(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중심대학 사업의 예산규모와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을 통한 ICT 분야 인력 확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의 ICT 분야 종사 현황 등의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SW중심대학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었는데, 2024년 기준 58개 대학에 총 92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5년도 기준 8개 대학에 총 56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SW중심대학 투입예산 및 지원대학 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5,600	20,500	33,200	47,000	67,000	80,000	72,000	76,500	83,800	92,500
계속대학		-	8개	14개	20개	30개	40개	32개	35개	38개	41개
신규대학	일반트랙	8개	6개	6개	10개	10개		7개	7개	11개	15개
	특화트랙							2개	2개	2개	2개
종료대학		-	-	-	-	-	-	8개	6개	6개	10개
합계		**8개**	**14개**	**20개**	**30개**	**40개**	**40개**	**41개**	**44개**	**51개**	**58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SW인재양성 교육생의 만족도 및 SW인재양성 취업률로 되어있는데 SW인재양성 취업률의 경우 해당 대학 전체 졸업생 취업률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SW중심대학 사업 자체만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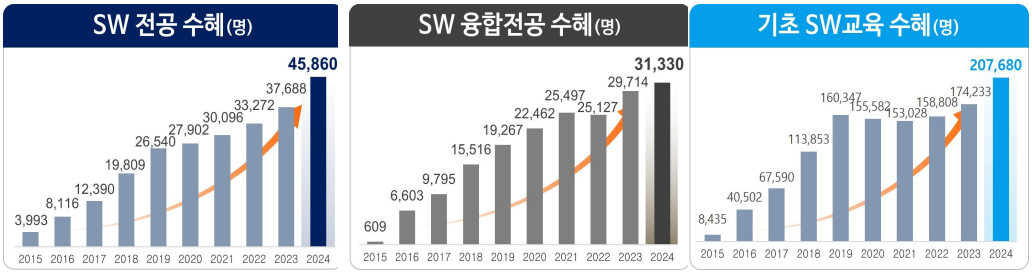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5.2	85.2	85.2	85.2	85.2	최초 목표 설정 당시('21년) 최근 3개년 ('18~'20) 기준 목표 대비 실적 비율(1.32%)을 기존 포화지표에 반영하여 산정된 수치(85.1점) 대비 상향설정	Σ(내역사업별 교육생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 내역사업별 예산) / 전체 사업예산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89.2	86.0	89.5	집계중	-			
	달성도	104.7	100.9	105.0	집계중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W인재양성 취업률 (단위: %)	목표	67.2	67.9	67.9	67.9	67.9	’18~’20년 대학 졸업생 취업률 (취업통계연보 활용) 산술평균값에 7% 상향하여 설정	Σ(SW중심대학별 취업률(100% 만점)) / 전체 SW중심대학 수	취업통계 연보
	실적	69.1	68.8	68.4	집계중	-			
	달성도	102.8	101.3	100.7	집계중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지표 외에 이 사업의 성과를 SW 및 SW융합 전공 수혜 인원수, SW교육 수혜인원 등 정량적인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어 사업의 정성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과계획서 외 별도로 활용 중인 성과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사업의 명확한 효과 점검 없이 사업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 방식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의 목적이 AI·SW전문 융합인재 양성인 점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중심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양성된 인재의 ICT 분야 종사 비율 변화와 산업 기여도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확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후대응기금】

<지 출>

21.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은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4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84]

[2024년도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400	400	-	400	400	-	-	1,703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R&D 사업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교부현액 4억 4,400만원 중 3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6%)되고 7,3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 (이화대학교 등 2개 기관) ※3개 과제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400	400	400	44	0	444	371	73	-	83.6

주) 연구개발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 기후대응기금-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R&D)(6431-308)(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성과나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예산을 2024년에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축소하였다가 2025년에 일부 복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과제 중단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부 과제는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재개되는 등 연구과제 수행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문제가 있음.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3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억원, 2023년에는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2024년 계획액이 4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감액되면서 국비 지원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음.

[바이오매스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사업 과제별 국비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원스텝-원팟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	667	1.334	133.4	568
2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	666	1.332	133.2	567
3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 기술개발	667	1.334	133.4	568
합계		2,000	4,000	400	1,70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에 따라 각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동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 대부분이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음.

① 원스텝-원팟 기반 차세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공미생물 플랫폼 원천 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2개의 공동연구과제와 2개의 위탁연구과제가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②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3개의 공동연구과제와 1개의 위탁연구과제 중 공동연구과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③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용 바이오락톤 소재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2023년까지 추진 중이던 공동연구과제 4개가 모두 중단되었고, 주관연구과제의 연구목표가 축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예산 축소로 인하여 중단된 공동·위탁 연구과제에서 수행하던 연구 일부에 대하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이어가거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이관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거나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이관받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고, 특정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중이던 연구가 일부 중단됨에 따라 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요 연구목표가 축소되거나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사업 효과가 저해된 문제가 있음.

또한 2024년에 중단되었던 '석유계 가소제 대체 100%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가소제 생산기술 개발과제의 위탁과제'는 2024년에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재개되기도 하였는데, 2023년까지 추진되던 과제가 2024년에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가 1년 만에 다시 추진 필요성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동 과제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2.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공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시정요구 105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7건·주의 52건·제도개선 3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7	52	37	1	105
예비비	-	-	-	-	-	-	-
합계	-	-	17	52	37	1	105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시정요구사항 105건에 대해 8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8.1%)하고 2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05	82	78.1	23
예비비	-	-	-	-
합계	105	82	78.1	23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라는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나, 2025년도에도 공모 없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지원, 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 및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18,844	18,844	-	18,844	18,844	-	-	19,684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1,710	1,710	-	1,710	1,710	-	-	1,71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용도별로 수행 기관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각 과제마다 매년 같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을 공모 절차 없이 선정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수행기관 현황]

내역사업	연구개발과제 명	수행 연구개발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지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과학기술단체 융합협력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치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사업수행 시에도 여전히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므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조치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18)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공모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공모 필요성 점검회의(2024.9.20.) 및 전문가 자문(2024.10.29.) 실시 - 연차컨설팅 시 사업성과 점검을 통해 계속 여부를 엄격히 평가, 사업계획 심의(2025.2월 중) 강화 추진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협력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공모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2024.10.29.) ①기존 수행기관의 전문성 ②사업 수행을 대체할 기관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공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간 공모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현재 수행 중인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 지원이나 여성과학기술단체 간 융합협력 지원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도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젠더혁신분석연구 지원의 경우 대학이나 다른 여성단체에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모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29억 7,700만원(△3.2%)이 적은 9,866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75억 4,500만원(△16.0%)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산	30,584	30,584	5,575	△25,009	30,844	30,844	8,075	△22,769	2,500
기금	1,480,802	1,480,802	1,168,663	△312,139	1,252,674	988,826	978,618	△10,208	△190,045
총수입	1,511,386	1,511,386	1,174,238	△337,148	1,283,518	1,019,670	986,693	△32,977	△187,545

주) 방송통신발전기금(방통위, 과기부 공동관리) 결산액은 기금 전체 금액임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7억 7,600만원(△0.7%)이 적은 2,484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8,500만원(△2.4%)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9,323	49,323	47,187	△2,136	49,118	49,118	48,006	△1,112	819
기 금	211,396	211,396	207,482	△3,914	201,142	201,142	200,478	△664	△7,004
총지출	260,719	260,719	254,669	△6,050	250,260	250,260	248,484	△1,776	△6,1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08억 4,400만원으로, 892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0억 7,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되고 774억 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8억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0,844	30,844	-	30,844	89,283	8,075	77,408	3,800
합 계	30,844	30,844	-	30,844	89,283	8,075	77,408	3,800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92억 5,100만원으로, 이 중 480억 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3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9억 2,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9,118	49,118	133	±145	-	49,251	48,006	317	928
합 계	49,118	49,118	133	±145	-	49,251	48,006	317	92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9,888억 2,600만원으로, 2조 1,146억 7,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조 1,113억 5,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33억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방송통신발전기금	1,252,674	988,826	2,114,672	2,111,359	3,313	-
합 계	1,252,674	988,826	2,114,672	2,111,359	3,313	-

주) 수납액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체 금액이며, 총계 기준으로 작성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01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2,004억 7,8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7%)되고 6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방송통신발전기금	1,252,674	988,826	176	989,002	978,618	-	1,392
(방통위 소관)	201,142	201,142	-	201,142	200,478	-	664
합 계	201,142	201,142	-	201,142	200,478	-	664

주) 합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금액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44억 8,200만원이 감소한 44억 3,2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0억 3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억 7,200만원, 무형자산이 3억 4,0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 감소한 6,200만원으로 유동부채 4억 2,000만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0억 6,200만원이 감소한 43억 7,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4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5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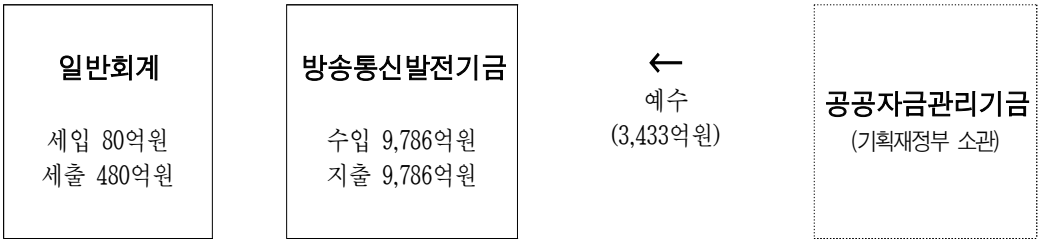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432	8,914	△4,482	50.3 %
		유동자산	2,658	6,661	△4,003	60.1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967	1,139	△172	15.1 %
		무형자산	770	1,110	△340	30.6 %
		기타비유동자산	37	4	33	825.0 %
	부 채		62	482	△420	87.1 %
		유동부채	62	482	△420	87.1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4,370	8,432	△4,062	△48.2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637	16,314	△1,677	△10.3
	재정운영순원가		55,650	53,640	2,010	3.7 %
	재정운영결과		55,650	53,640	2,010	3.7 %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흐름도]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관리 기금으로 지출액 9,786억원 중 사업비는 9,000억원이며,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는 2,005억원임
2)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65개 세부사업에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입항목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세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독촉 및 압류·추심 등을 통해 수납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가등급이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위해 4개월 간격의 여론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공익광고 제작 편수 또한 각 여론조사 및 주제선정 회차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가. 개 요

‘벌금 및 과료’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33억 1,100만원 중 3,900만원이 수납(수납률 0.29%)되고, 128억 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2)]

‘과태료’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법」 위법행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403억 2,800만원 중 33억 2,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23%)되고, 351억 2,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3)]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306억 600만원 중 1억 9,700만원이 수납(수납률 0.64%)되고, 289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4)]

---

2) 세입목명 : 벌금 및 과료(56-561)(기획조정관)

3) 세입목명 : 과태료(56-563)(기획조정관)

4) 세입목명 : 가산금(58-581)(기획조정관)

[2024년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 (A)						
벌금 및 과료	6	6	13,311	39	12,817	455	0.29	6
과태료	4,022	4,022	40,328	3,321	35,121	1,886	8.23	4,077
가산금	141	141	30,606	197	28,950	1,459	0.64	1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편 2024년 총 미수납액(768억 8,800만원)의 98.9%인 760억 5,100만원은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수입항목별 미수납액 비중은 벌금 및 과료 100.0%, 과태료 98.2%, 가산금 99.3%임.

[2024년 미수납액 중 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관련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구분	미수납액(A)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B)	비중(B/A)
벌금 및 과료	12,817	12,817	100.0
과태료	35,121	34,485	98.2
가산금	28,950	28,749	99.3
계	76,888	76,051	98.9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입항목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세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독촉 및 압류·추심 등을 통해 수납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 760억 5,100만원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되고 있는 장기 부실채권은 총 590억 1,200만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고, 5~10년 기간으로 체납되고 있는 부실채권도 119억 7,000만원으로 15.7%임.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0년 이상 (~'14.12월)	5년~10년 ('15.1월~'19.12월)	5년 이내 ('20.1월~'24.12월)	합 계
벌금및과료	12,817	-	-	12,817
과태료	23,127	7,322	4,036	34,485
가산금	23,068	4,648	1,033	28,749
합계	59,012 (77.6%)	11,970 (15.7%)	5,069 (6.6%)	76,051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 징수업무를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 신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이관받을 당시부터 미수납액이 많았고, 미수납액이 대부분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부실채권인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업무 이관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임.[5)6)]

그러나 전체적인 과태료 등 수납실적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법 및 불법행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통위에 이관(2018.9.28.)한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107,529	45,264	45,726	16,53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6) 2019~2024년 최근 6년간 당해연도 발생한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년도 징수율 (당해연도징수액/징수결정액)	58.7% (27억원/46억원)	57.5% (23억원/40억원)	68.8% (25.1억원/36.5억원)	67.9% (23.3억원/34.3억원)	66.0% (24.5억원/37.1억원)	71.6% (17.4억원/24.3억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위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서의 의무이행 유도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과태료의 미수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추심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7)]

7)「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출〉

2.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미흡 등

가. 개　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활동과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이용자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4억 9,900만원 중 24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4년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9	2,499	-	-	2,499	2,497	-	2	1,940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역량강화 및 보호	1,376	1,376	-	-	1,376	1,376	-	-	1,376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62	62	-	-	62	62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과 이용자 보호활동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3억 7,6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은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8) 일반회계-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미흡, 보통 등급을 받은 서비스 중 2024년에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서비스가 1개밖에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가결과가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9)]

2024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을 통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보조되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4년 이동통신 및 SNS 등 13개 분야의 46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3년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를 진행하였음.[10)]

그런데 2023년도에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서비스의 2024년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서비스가 한 개밖에 없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자도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음.

---

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0) <2024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개요>

· 평가대상기간: 2023.1.1. ~ 2023.12.31.
· 평가대상: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마켓, 검색, SNS, OTT 등 13개 분야의 46개 서비스(6개는 시범평가 대상)
· 평가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②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④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대분류로 구성
· 평가결과: 매우우수(950점 이상) 10개, 우수(900~950점) 17개, 양호(850~900점) 5개, 보통(800~850점) 3개, 미흡(800점 미만) 5개

자료 : 2024년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사업 최종실적보고서

[2023년도에 미흡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서비스의 2024년 평가 결과]

서비스	2023년	2024년
A	보통	보통
B		보통
C		미흡
D	미흡	양호
E		보통
F		미흡
G		미흡
H		영업중단
I		영업중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처럼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가 매년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 및 불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관리 시 금지사항 적발 후 개선율과 같이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광고를 배포 · 게시 · 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11)]

1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전액 보조하였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3년 방문자 수 기준 상위 뉴스/미디어 웹사이트, 모바일 앱 그리고 2022년 ~ 2023년 행정지도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의 PC/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내의 불편광고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350개 중 6개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확인하였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금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에 근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이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2)]

[금지행위 모니터링 후 개선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모니터링	126	120	300	350	350
위반사항 확인	25	17	35	31	6
시정요구 (개선계획 제출 요구)	25	17	35	31	6
제출	25	17	34	29	6
미제출	-	-	1	2	-

주) 개선계획 제출 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6) 광고를 배포 · 게시 · 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12)「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금지행위의 중지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예산과 인력의 투입만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인터넷 불편광고 측정률(조사건수/조사목표건수 x 100)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금지사항 적발 시 위반사항 개선율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3)]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021	2022	2023	2024		
인터넷 불편광고 측정률(%)	목표	120	300	350	350	(불편광고 측정건수/불편광고 측정목표치) *100	결과보고서
	실적	120	300	350	350		
	달성도	100	100	100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13)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는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과지표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편광고 측정률을 별도의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음.

3.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은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행위 상시 모니터링·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및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9,800만원 중 20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1%)되고 1,800만원이 불용 되었음.[14)]

[2024년도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98	2,098	-	-	2,098	2,080	-	18	2,705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489	1,489	-	-	1,489	1,489	-	-	1,502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 체계 운영	92	92	-	-	92	74	-	18	12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는 통신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차별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및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4억 8,9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은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시정을 통한 공정경쟁 시장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4%)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14) 일반회계-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2141-302)(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을 통하여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모니터링 방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함) 제13조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의무,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의무 등의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동통신 지원금 모니터링,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음.[15)]

그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하는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은 저가 요금제 가입 제한 여부, 공시 지원금 게시 여부, 추가 지원금 한도 준수 여부, 불공정 계약 강제 여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금 공시 및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된 지원금의 15% 이내)에 관한 규제 등이 폐지되었음.

---

15)「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폐지법률이 2025.1.21.공포되어 2025.7.22.에 시행)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 제3항, 제8조제1항 · 제3항 · 제4항 또는 제9조제2항 · 제3항 · 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 ·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 이유 ·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 · 은닉 ·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이동통신 분야 주요 규제]

<table>
<tr><th colspan="2">현행 단말기 유통법</th><th colspan="2" rowspan="2">개정 전기통신사업법
('25.7.22. 시행)</th><th rowspan="2">시행령 등 개정 및 이관</th></tr>
<tr><th>주요 조항</th><th>내용</th></tr>
<tr><td rowspan="3">지원금
차별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3조)</td><td>가입유형별 차별금지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td><td>폐지</td><td rowspan="3">수정
이관</td><td rowspan="3">(신설) 거주 지역, 나이,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 및 기준</td></tr>
<tr><td>요금제별 차별 금지</td><td>폐지</td></tr>
<tr><td>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차별 금지</td><td>유지</td></tr>
<tr><td rowspan="2">지원금 공시
(제4조)</td><td>이통사 지원금 공시 의무</td><td colspan="2" rowspan="2">폐지</td><td rowspan="2">시행령 및 고시 폐지</td></tr>
<tr><td>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이통사 지원금의 15% 이내)</td></tr>
<tr><td>지원금연계 개별 계약
체결제한(제5조)</td><td>불법지원금과 결부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의 개발계약 금지
(개별계약은 무효)</td><td colspan="2">폐지</td><td></td></tr>
</table>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에 따라 기존의 지원금 공시 위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공시된 지원금의 15% 이내) 위반 등 지원금 과다 지급 중심의 모니터링 방향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차별 행위나 알뜰폰 이용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 이동통신시장 불공정행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환될 필요가 있음.[16]

그러나 관련 법률이 2025년 1월에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14일 현재까지 시장모니터링 방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히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17]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국외업무여비를 최근 5년간 매년 전액 불용하고 있으므로, 국외 조사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수행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 유통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시정 및 과징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16) 국회의 관련 법률 폐지 및 개정 논의 당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문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가입유형이나 요금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하되,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속시켜 특정 이용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음.(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및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을 참고함)

17)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는 모니터링 방식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이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 조사가 제한되어 예산을 불용했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국외업무여비	8	-	5	-	5	-	5	-	5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감소하였으므로,[18] 해외사업자 또는 국내 법인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통지[19]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외 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를 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의 편성과 불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국외 조사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음.

19)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 ·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4.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회차별 공익광고 제작 편차 축소 필요

가. 개 요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방송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공 실천의식 확산을 유도하며,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및 공익광고 활용교육 등을 통해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고취와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5억 9,2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0]

[2024년도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2,449	2,449	-	2,449	2,449	-	-	1,932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1,592	1,592	-	1,592	1,592	-	-	1,075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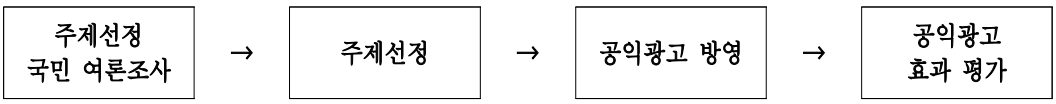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업무를 수행하였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위하여 4개월마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각 부처로부터 공익광고 주제에 대한 신청을 받아 공익광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광고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21]

20)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3134-303)(방송기반국)

이후 선정된 주제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 및 방영하고 각 회차별로 효과평가 조사를 통해 주제의 적절성, 타 공공기관 공익광고 대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의 효과 비교 등을 수행함.[22]

[공익광고 제작 및 평가 절차]



21) <2024년 주제선정 국민여론조사 개요>

· 조사목적: 공익광고 주제선정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주제 발굴
· 조사대상: 전국 만 15~64세 남녀, 3회(회당 3,000명, 총 9,000명)
· 조사방법: 뉴스 및 SNS 버즈량 분석을 통해 후보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조사시기: 2024년 5월, 8월, 12월

자료 : 2024년도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최종실적보고서

22) <2024년 공익광고 효과평가조사 개요>

· 조사목적: 개별 공익광고물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 조사대상: 전국 7대 도시 만 15~64세 남녀(편당 1,000명, 총 7,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기: 매 공익광고 방영 후
· 조사내용: 주제의 적절성, 사회적 기여 및 공익성, 타 공공기관 공익광고와의 효과 비교 등

자료 : 2024년도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제작 편수를 각 여론조사 및 주제선정 회차별에 상응하도록 균등하게 분배하여 시의적절한 공익광고가 제작·방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공익광고 방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4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고, 2024년 5월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1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으며, 2024년 9월에 이루어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개의 주제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였는데, 장애인을 주제로 제작된 공익광고의 경우 해당 주제는 2024년 1월에 선정되었으나 방영은 2024년 10월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2024년도 공익광고 주제선정, 제작·방영 및 효과평가조사 현황]

구 분	수행시기	비고
전년도 주제선정 국민여론조사(3차)	2023.12. ~ 2024.01.	2024년 공익광고 활용
공익광고협의회- 주제 선정(1차)	2024.01.	공공매너, 장애인, 다문화Ⅰ,다문화Ⅱ
공익광고 방영 시작 - 저출생극복	2024.02. ~ 2024.04.	2023년도 3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1차 조사 - 저출생극복	2024.04.	
공익광고 방영 시작(1차-1) - 공공매너	2024.04. ~ 2024.06.	2024년도 1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2차 조사 - 공공매너	2024.06.	
공익광고 방영 시작(1차-2) - 다문화Ⅰ	2024.06. ~ 2024.08.	2024년도 1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3차 조사 - 다문화Ⅰ	2024.08.	
공익광고 방영 시작(1차-3) - 다문화Ⅱ	2024.08. ~ 2024.09.	2024년도 1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4차 조사 - 다문화Ⅱ	2024.09. ~ 2024.10.	
주제선정 국민여론조사(1차)	2024.05.	
공익광고협의회- 주제 선정(2차)	2024.05.	청소년도박예방
공익광고 방영 시작(2차-1) - 청소년도박예방	2024.09. ~ 2024.10.	2024년도 2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5차 조사 - 청소년도박예방	2024.10. ~ 2024.11.	
공익광고 방영 시작(1차-4) - 장애인(발달장애 등)	2024.10. ~ 2024.12.	2024년도 1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6차 조사 - 장애인(발달장애 등)	2024.12.	
주제선정 국민여론조사(2차)	2024.08. ~ 2024.09.	
공익광고협의회- 주제 선정(3차)	2024.09.	환경보호, 저출생극복
공익광고 방영 시작(3차) - 환경보호	2024.12. ~ 2025.02.	2024년도 3차 주제
공익광고 효과평가 제7차 조사 - 환경보호	2025.02.	
주제선정 국민여론조사(3차)	2024.12. ~ 2025.01.	2025년 공익광고 활용

주) 2024년도 3차 주제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저출생극복'은 2025년도 공익광고 제작 시 활용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바코 자체 재원으로 제작되는 공익광고 3편에 대하여 제작 및 확산 용역사업을 통합 발주하기 위해 제1차 주제선정 시 4편(국비 지원 1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 재원 3편)을 일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함.[23]

그러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4개월마다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의 최근 관심사가 반영된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제작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각 회차별로 균등하게 공익광고를 방영하여 각 시기별로 방영되는 공익광고에 국민의 관심사가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4]

23) 매년 제작되는 7편의 공익광고 중 4편은 국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고 3편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작되고 있음.

24)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에는 통합 발주를 미실시하여 회차별 주제를 분산하여 선정 중에 있고 이후에도 회차별 주제를 분산하여 선정하겠다는 입장임.

5.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종료): 사업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발생

가. 개 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은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 및 관련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억 5,7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6%) 되었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1,027	1,027	-	1,027	939	-	88	475
팩트체크 활성화	357	357	-	357	270	-	87	-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와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재)팩트체크넷이 2023년 1월 25일에 해산하면서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여 2023년 계획액 3억원 전액이 불용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음.

[(재)팩트체크넷 해산 이후 팩트체크 플랫폼 등 권한 이관 절차]

구분	내용
2023.1.25.	(재)팩트체크넷의 이사회 개최 결과 법인 해산 의결
2023.2.28.	팩트체크넷 서비스 종료
2023.8.31.	잔여재산 인도를 위한 실무작업 종료 잔여재산 처분 최종 허가(방통위원장)

25) 방송통신발전기금-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구분	내용
2023.10.31.	(재)팩트체크넷, 팩트체크 플랫폼 등 잔여재산 미디어재단에 기부
2023.12.29.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플랫폼 및 모바일앱 자산등재
2024.1.22.	(재)팩트체크넷 청산인, 청산종결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팩트체크 수행 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에 활용중이던 팩트체크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편향성·전문성에 대한 외부의 지적 등을 이유로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당시 교부 전이었던 8,700만원은 교부하지 않고 불용하였고, 기 교부된 예산 2억 7,000만원 중 인건비, 서버유지 수수료 등으로 활용한 1,200만원을 제외한 2억 5,800만원은 실집행 단계에서 불용되었음.

[2024년 팩트체크활성화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불용액	최종 집행률 (B/A)
357	270	87	270	12	258	3.4

주) 2024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결과적으로 2024년 6월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2024년 집행예산 1,200만원은 매몰비용이 되어 예산을 낭비하였고, 그 외 3억 4,500만원은 불용하게 되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지적 관련 조치 미흡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7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건·주의 8건·제도개선 1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	8	15	-	27
예비비	-	-	-	-	-	-	-
합계	-	-	4	8	15	-	27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27건에 대해 20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4.1%)하고 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7	20	74.1	7
예비비	-	-	-	-
합계	27	20	74.1	7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방송통신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2023년도 결산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 결산 기준 총 19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3,430	13,430	-	13,430	13,430	-	-	12,070
국악방송 지원	5,842	5,842	-	5,842	5,842	-	-	5,258
합계	**19,272**	**19,272**	**-**	**19,272**	**19,272**	**-**	**-**	**17,328**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그런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만 지원함에 따라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불일치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사업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수하고 있고,[26]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방송

26)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공자기금예수금	509,164	310,075	343,30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발전기금의 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도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내용은 2023회계연도 결산 외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에서도 조치예정일을 미정으로 제출하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27)]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 문제 관련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26)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ㅇ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조치상황	조치중
조치결과	ㅇ 2025년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10%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 -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기재부,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미정

자료:「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7)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대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2024년 3월, 2025년 4월에 각각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함.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 실적〉

일자	참여부처	내용
2024.3월	방통위, 기재부	소관불일치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문체부로 예산이관 필요성 설명
2024.10월	방통위, 문체부, 기재부	소관불일치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문체부로 예산이관 필요성 설명
2025.3월	방통위, 기재부	소관불일치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문체부로 예산이관 필요성 설명
2025.5월	방통위, 기재부	소관불일치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문체부로 예산이관 필요성 설명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92억 8,000만원(△2.7%)이 적은 3,35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4,700만원(1.1%)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771	1,771	2,130	359	1,840	1,840	2,167	327	37
기 금	309,895	309,895	329,824	19,929	343,041	343,041	333,434	△9,607	3,610
총수입	311,666	311,666	331,954	20,288	344,881	344,881	335,601	△9,280	3,647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2억 6,300만원(△2.4%)이 적은 4,678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3,100만원(△1.2%)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3,270	143,270	143,530	260	136,045	136,045	134,389	△1,656	△9,141
기 금	309,895	309,895	329,824	19,929	343,041	343,041	333,434	△9,607	3,610
총지출	453,165	453,165	473,354	20,189	479,086	479,086	467,823	△11,263	△5,53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8억 4,000만원으로, 22억 4,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1억 6,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5%)되고 7,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840	1,840	-	1,840	2,246	2,167	79	-
합 계	1,840	1,840	-	1,840	2,246	2,167	79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60억 4,500만원으로, 이 중 1,343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16억 5,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36,045	136,045	-	-	-	136,045	134,389	-	1,656
합 계	136,045	136,045	-	-	-	136,045	134,389	-	1,656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430억 4,100만원으로, 3,335억 6,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334억 3,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6,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6,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43,041	343,041	333,563	333,434	60	69
합 계	343,041	343,041	333,563	333,434	60	69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430억 8,000만원으로, 이 중 3,334억 3,400만원이 지출(집행률 97.2%)되고 3,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43,041	343,041	39	343,080	333,434	-	38
합 계	343,041	343,041	39	343,080	333,434	-	3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45억 2,900만원이 증가한 2,182억 8,3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560억 4,9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603억 3,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4억 4,7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6억 3,300만원 증가한 495억 9,3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61억 9,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1억 400만원이 감소한 1,686억 9,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319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372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8,283	213,754	4,529	2.1
		유동자산	142,902	82,565	60,337	73.1
		투자자산	72,288	128,337	△56,049	△43.7
		일반유형자산	498	531	△33	△6.2
		무형자산	451	624	△173	△27.7
		기타비유동자산	2,144	1,697	447	26.3
	부 채		49,593	42,960	6,633	15.4
		유동부채	6,633	6,199	434	7.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42,960	36,761	6,199	16.9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68,690	170,794	△2,104	△1.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31,973	241,841	△9,868	△4.1
	재정운영순원가		284,263	260,024	24,239	9.3
	재정운영결과		137,291	126,128	11,163	8.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1개 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4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일반회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세입 22 세출 1,344	수입 3,334 지출 3,33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신규 원전에 대한 심·검사 증가에 대해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규제 강화,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체계 선제적 준비, 현장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및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47개의 세부사업에서 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안전연구,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도 2024년 결산 기준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규모(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 없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대상 공항 및 항만을 안전관리 대상이 수입되는 공항·항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을 통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시설·장비 관리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공무원이 각 지휘센터 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동시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대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2]으로, 「원자력 진흥법」 제17조[3]는 원자력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금의 계정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원자력사업자가 납부하는 보상료 등을 재원으로 하며, 원자력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4]

---

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4년 결산 기준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규모(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5]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의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6] LS전선의 민간출연금 1,000억원 납부계획 이행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7]

---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 지정 · 승인 · 등록 · 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소요 증가 등 규제 업무량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함.

7) 2013년 JS전선이 품질서류가 위조된 불량제어 케이블을 원전(신고리 1·2·3·4, 신월성 1·2)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JS전선의 모회사인 LS전선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2014년 1,000억원의 출연계획 발표 및 2017년 원안위와의 출연 협약 체결 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출연금 납부 중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민간출연금, 법정부담금 수입 및 여유자금운용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계획액
민간출연금	8,000	10,000	10,000	10,000	15,000
법정부담금	111,668	112,256	118,118	118,546	123,165
여유자금운용	131,253	182,440	204,781	208,598	252,000

주) 2022년 과징금 수입이 339억 5,300만원 발생하면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기 납부받은 과징금을 반환하고 재처분하면서 159억 4,800만원의 음의 수입이 발생하여 여유자금 증가폭이 감소하였음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2024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2,085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 규모(1,235억 1,300만원)의 1.7배 수준인데,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여유자금 2,085억 9,800만원 중 495억 9,300만원(23.8%)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납부한 보상료를 적립해 놓은 것으로 추후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력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보유·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8] 나머지 1,590억 500만원(76.2%)은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금은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경우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 통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와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는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관 규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자금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8)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원자력기금 용도 별 관련 사업 현황]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일반회계 세출사업	기금 지출사업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자력 안전규제(1702-401) · 원자력 안전기반조성(1701-401)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방사선 안전규제(1702-402) · 방사선 안전기반조성(1701-402)
3. 원자력 통제		· 방사선 안전규제(1702-402)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 방재환경기반구축(1402-402)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1403-301)	· 방사선 안전규제(1702-40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분석		· 원자력 안전기반조성(1701-401)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1705-401)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방사선 안전기반조성(1701-402)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1501-407)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1501-408)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1501-409) ·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1501-410)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원자력 안전기반조성(1701-401) · 방사선 안전기반조성(1701-402)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 원자력 안전기반조성(1701-401)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 원자력 안전기반조성(1701-401) · 방사선 안전기반조성(1701-402)
11. ~ 15. (생략)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으로 기술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일반회계】

〈세 출〉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감시기 설치·운영 대상 확대 필요

가. 개 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감시기 설치·운영,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9억 8,000만원 중 59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980	5,980	-	-	5,980	5,904	-	76	5,382
감시기 설치·운영	3,598	3,598	-	-	3,598	3,522	-	76	3,442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1,937	1,937	-	-	1,937	1,937	-	-	1,5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감시기 설치·운영’**은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유통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5억 9,800만원 중 35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내역사업인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 생활방사선법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9억 3,7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9) 일반회계-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1402-401)(방사선방재국)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 없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운영 대상 공항 및 항만을 안전관리 대상이 수입되는 공항·항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10)]

이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감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을 ①「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②「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규정하고 있음.[1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하여 공항 및 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시기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감시기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8개중 3개의 공항과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31개의 무역항 중 15개의 무역항에만 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만 감시기 설치 현황('24.12월 기준)]

구분	항만 (15개)[1]															공항 (3개)[2]		
	경인	광양	군산	대산	동해묵호	마산	목포	부산	삼천포	울산	인천	장항	진해	평택당진	포항	인천	김포	김해
설치	2	9	11	2	4	1	3	44	1	7	29	1	1	9	3	22	2	1
미설치	-	-	-	-	-	-	-	-	-	-	-	-	-	4	-	13	-	-

주 1) 그 외 16개의 무역항에 대하여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음
2) 그 외 5개의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에 대하여는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음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관리 대상[12]이 아닌 여객전용, 어패류·식품 등이 수입되는 공항·항만에 대하여는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들 공항·항만에도 여전히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터미널 등이 존재하며,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도 안전관리 대상 등 방사선·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관련 법령에서도 안전관리 대상이 수입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대하여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해외로부터 방사능 농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조사·분석하고 필요 시 보완·반송 등의 조치를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해외로부터 방사선·방사능 방출 물질이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전부에 대하여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 대상이 수입되지 않는 공항·항만에 대하여도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1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및 재활용고철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음.

3.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사업: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별 파견 공무원 지정을 통한 동시 사고 대응능력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은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센터 시설·장비 관리,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운영·관리,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9억 3,8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3)]

[2024년도 국가방사능방재체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방재환경기반구축	9,005	9,005	-	-	9,005	9,005	-	-	8,670
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	4,938	4,938	-	-	4,938	4,938	-	-	4,63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별로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공무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동시 사고 발생 시 평시에 훈련을 받은 인력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응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1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현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는 고리(부산), 월성(경주), 영광(전남), 울진(경북), 울주(울산), 대전에 구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13) 일반회계-방재환경기반구축(1402-402)(방사선방재국)

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성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음.[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1회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구성 인력의 재난대응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있음.[15]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파견 대상 공무원을 1~2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별로 파견 인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 지역에 방사능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사능방재훈련을 거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함.

[중앙행정기관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대상 공무원 수]

(단위: 명)

구분	교육	과기	국방	행안	문체	산자	보건	여가	국토	해수	식약	소방	원안
파견대상 공무원 수	1	-	5	9	2	2	1	-	2	1	-	3	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군 · 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 ·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 · 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 · 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 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

그러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난발생시 업무를 교육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한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러 지역에 방사능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훈련을 거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속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13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파견하여야 함.[16)]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파견 대상 공무원 목록을 확인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로 파견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

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②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며, 현장지휘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관계관"이라 한다)을 파견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군·구
16. 지정기관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에서 해당 부처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에 파견 대상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고 해당 공무원을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9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 주의 1건 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	1	5	-	8
예비비	-	-	-	-	1	-	1
합계	-	-	2	1	6	-	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9건에 대해 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8.9%)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	7	87.5	1
예비비	1	1	100	-
합계	9	8	88.9	1

우주항공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순증된 25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되었음.[1)]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2,566	2,566	2,566
총수입	-	-	-	-	-	-	2,566	2,566	2,566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순증된 3,717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되었음.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371,758	371,758	371,758
총지출	-	-	-	-	-	-	371,758	371,758	371,75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5억 6600만원으로 전액 수납(수납률 100%)되었음.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2,566	2,566	-	-
합 계	-	-	-	-	2,566	2,566	-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53억 800만원으로, 이 중 3,717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0%)되고 23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11억 8,100만원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	-	-	395,308	-	395,308	371,757	2,368	21,181
합 계	-	-	-	395,308	-	395,308	371,757	2,368	21,18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우주항공청 자산은 개청일(2024.5.27) 대비 158억 2,100만원이 증가한 395억 9,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5억 4,3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51억 4,600만원, 무형자산이 31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90억 5,0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개청일 대비 100만원 증가한 100만원으로 유동부채 1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조직개편일 대비 158억 2,000만원이 증가한 395억 9,7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420억 5,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617억 9,000만원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개청일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9,598	23,777	15,821	66.5
		유동자산	72	1,615	△1,543	△95.5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3,477	18,331	5,146	28.1
		무형자산	3,168	-	3,168	100
		기타비유동자산	12,881	3,831	9,050	236.2
	부 채		1	-	1	100
		유동부채	1	-	1	1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39,597	23,777	15,820	66.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42,056	-	342,056	100
	재정운영순원가		361,790	-	361,790	100
	재정운영결과		361,790	-	361,790	10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일반회계
세입 25
세출 3,953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던 관련 사업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었음.

2024년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인력양성·산업 생태계 구축 및 우주위험대비, 우주수송 역량 확충 및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 조성,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 확대,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추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50개의 세부사업에서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우주수송 발사체 개발, 위성 핵심기술 확보, 미래항공 핵심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한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 예산, 사업계획 및 결산서 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회계감사, 기관평가 등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우주항공청은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우주항공청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의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향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몰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우주항공진흥기금: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함) 제17조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주항공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기술료·다른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우주항공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2)]

---

2)「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豫受金)
7.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 · 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 ·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 · 출자 및 투자 또는 융자
3. 제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사업
4. 정부의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우주항공청장이 운용 · 관리하되,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주항공청법」에 규정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178호)에 있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조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2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3)]

우주항공청은 현재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임.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 관련 과제 현황]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12.~'25.12.	9,0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진흥기금의 고유재원을 발굴하는 등 기금을 별도로 설치·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는 특정자금으로서, 「국가재정법」 제70조는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의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금에 대하여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기금은 쓰고 남은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할 수 있어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유리하다는 장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있음.

다만 이와 같은 기금의 자율적인 운영은 국회의 통제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기금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간의 칸막이가 발생하여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기금 설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3호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의 신설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신설 시에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음.[4)5)]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을 살펴보면, 재원은 ①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②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③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④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⑤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⑥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⑦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⑧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성됨.

우주항공진흥기금 운용 초기에는 ①정부의 출연금, ⑥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⑦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자체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178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시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우주항공분야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술료 수입은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재원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6)]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진흥기금의 고유재원을 발굴한 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이나 산업 육성 지원 등이 예산이 아닌 기금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성이 큰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매년 기술료 수입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2020	4,981	4,981	4,025	4,025
2021	5,736	5,736	4,415	4,415
2022	5,394	5,394	1,639	1,639
2023	4,788	4,788	1,039	1,039
2024	4,066	4,066	227	227

주)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은 사업 종료, 기업부담 기술료 감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경상기술료 방식 전환 등으로 감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주항공청 소관 직할연구기관: 관리·감독 체계 및 특례 근거 보완 필요

가. 개 요

우주항공청 소관 직할연구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총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에서 「우주항공청법」으로 변경되었고, 소관부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변경되었음.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은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연구운영비 및 시설지원 예산액은 2024년 1,114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1,087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6%)되었음.

[2024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및 시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구운영비 지원	100,165	100,165	-	-	100,165	97,523	-	2,642	108,886
시설 지원	11,253	11,253	-	-	11,253	11,253	-	-	14,600
합계	**111,418**	**111,418**	**-**	**-**	**111,418**	**108,776**	**-**	**2,642**	**123,4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대형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개발, 우주환경감시 기술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연구운영비 및 시설지원 예산액은 2024년 563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560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었음.

[2024년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및 시설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연구운영비 지원	54,984	54,984	-	-	54,984	54,688	-	296	62,535
시설 지원	1,355	1,355	-	-	1,355	1,355	-	-	1,355
합계	**56,339**	**56,339**	-	-	**56,339**	**56,043**	-	**296**	**63,89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 예산, 사업계획 및 결산서 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및 회계감사, 기관평가 등의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우주항공청은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또한 연구회로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에 대한 기관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우주항공청법」에는 이와 같은 정관 변경 승인, 예산·결산 관련 서류의 승인이나 감사·회계감사 또는 기관평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참고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시행되면서 근거 법률이 「과기출연기관법」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으로 변경되었고, 소관 부처도 해양수산부로 바뀌었는데, 이 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정관 변경 승인, 예산·결산 관련 서류의 승인 및 감사·회계감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우주항공청법」 제정 전후 관리·감독 규정 비교]

관리・감독 규정	「우주항공청법」 시행 전	「우주항공청법」 시행 후	(참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변경 승인	연구회 승인을 거침 (「과기출연기관법」 제9조)	규정 없음 ※ 첫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작성 (「우주항공청법」 부칙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5조)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점검	연구회 제출 및 승인 (「과기출연기관법」 제13조)	규정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및 승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4조)
결산서 점검	연구회 제출 및 승인 (「과기출연기관법」 제15조)	규정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및 승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4조)
감사	연구회의 감사를 받음 (「과기출연기관법」 제16조)	규정 없음	임원으로 감사를 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7조)
회계감사	연구회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 공표 (「과기출연기관법」 제16조)	규정 없음	임원으로 감사를 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7조)
기관평가	연구회가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 (「과기출연기관법」 제28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4년 1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음.

이로 인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직할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운영 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훈령은 행정규칙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다면 행정조직 내부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직할 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7]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훈령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우주항공청법」 개정을 통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기본사업 수행의 특례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그 기획·과제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음.[8)9)]

그러나 「우주항공청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은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예고, 사전기획, 공모, 선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기관의 기본사업이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부칙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의2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재도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자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10)]

---

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9)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그러나 「과기출연기관법」 제5조의2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과기출연기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정관변경 승인,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점검 등의 관리·감독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이 여전히 연구회 소속으로서 연구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와 같은 해석은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관 부처 변경 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주항공청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부칙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사업 추진 시 자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으로 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기본사업 추진의 자율성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주항공청법」 등 다른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

10) 「우주항공청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부칙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④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항공우주연구원 및 천문연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일반회계】

〈세 출〉

3.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신규): 예비비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

가. 개 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은 우주항공분야 중장기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임무 설정을 위한 선행·탐색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0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1]

[2024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	-	-	-	8,000	8,000	8,000	-	-	9,6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이 산·학·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우주·항공분야 기본계획의 달성률 제고 및 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한 탐색·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임.

한국연구재단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80억원 전액을 각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하였고, 2024년 교부현액 80억원 중 9억 6,400만원이 집행(최종집행률 12%)되고 70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음.

11) 일반회계-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우주항공임무본부)

[20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우주항공청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기관							
예비비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8,000	8,000	8,000	8,000	8,000	-	-	8,000	964	7,036	-	12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함에 따라 최종집행률이 12%로 집계되는 등 예산의 연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27일 개청한 이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의 과제기획 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말에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과제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고서 상 2024년 10월 하순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었음.

이후 선정평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제 선정이 지연되었고 28개 과제 중 1개의 과제는 11월에, 27개 과제는 모두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종집행률이 12%로 집계되는 등 예산의 연내 집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남.

[20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과제선정 현황]

과제 현황	공고 일자	공고서 상 협약 시기	실제 협약 시기	2024년 연구수행기간	2025년 연구수행기간
28개	2024.8월	2024.10월	- 1개 과제: '24.11월	2개월	10개월
			- 27개 과제: '24.12월	1개월	11개월

자료: 우주항공청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탐색연구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야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음.

그러나 과제 착수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그 종료시점도 2025년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어 2025년에 정책계획을 수립하거나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탐색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신규): 집행관리 철저 및 시설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0억원 중 95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1%)되고 4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10,000	10,000	-	-	10,000	9,510	-	490	2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①민간발사장, ②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③우주환경시험시설, ④위성개발혁신센터 ⑤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⑥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청은 사업단 운영을 위한 예산 5억원 중 1,000만원을 기획평가관리비로 활용하고 4억 9,0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각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 95억원은 연구개발기관에 교부하였음.

각 연구개발기관의 2024년 교부현액 95억원 중 9억 500만원이 집행(최종집행률 9.5%)되고 85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음.

12) 일반회계-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우주항공산업국)

[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우주항공청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10,000	9,510	9,500	-	-	9,500	905	8,595	-	9.5
민간발사장 구축	2,000	2,000	2,000	-	-	2,000	109	1,891	-	5.5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00	1,500	1,500	-	-	1,500	81	1,419	-	5.4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00	2,500	2,500	-	-	2,500	411	2,089	-	16.4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500	1,500	1,500	-	-	1,500	-	1,500	-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2,000	2,000	2,000	-	-	2,000	304	1,696	-	15.2
사업단운영	500	10	-	-	-	-	-	-	-	-

주) 사업시행주체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추진이 계속하여 지연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기본계획 수립 후 착수될 예정이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6,161억원 규모로 기획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 ·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2023년 8월),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쳤음.[13)]

1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

우주항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를 3,808억원으로 확정한 후 2024년 10월 및 11월에 사업시행주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25년 7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일자	내용	비고
2022년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지정	총사업비 1조 406억원 규모
2023년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사업비 6161억원으로 조정
2023년 9월 ~ 2024년 7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3,808억원 확정
2024년 10월 ~ 11월	내역사업별 사업시행주체 선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내역사업은 공모 진행 그 외는 정책지정
2025년 1월 ~ 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민간발사장 내역사업: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예정(2024.12. ~ 2025.6.)
2025년 3월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 심의	민간발사장 내역사업: 중간보고결과 활용
2025년 5월 ~ 6월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협의 및 확정	민간발사장 내역사업: 6월에 수립 완료 후 기재부 협의 진행예정(7월~8월)
2025년 7월 ~	기본·실시 설계 공고 등 시설 구축 추진	민간발사장 내역사업: 9월 예상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 시설 구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후 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설계 및 건축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둘째,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이후 시설운영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8월에 수립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기획보고서에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할 계획인 민간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등에 대한 운영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6,161억원 → 3,808억원)되면서 시설 운영 관련 예산이 모두 감액되었음.

그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시설 구축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데,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인 민간발사장 및 우주환경 시험시설 등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므로, 민간기업의 활용도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이 시설 구축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 구축 이후 운영이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14]에 따라 구축된 시설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및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15]들에 대하여는 우주항공청이 장기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근거도 없으므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설 구축 이후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동 사업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민간발사장 구축) 외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환경시험 시설 구축), 재단법인경남테크노파크(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및 한국과학기술원(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이 있음.

5.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동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연계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은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75억 9,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6)]

[2024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27,591	27,591	-	-	27,591	27,591	-	-	26,3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이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과 발사체중점기술개발 및 위성중점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는 형태로 수행됨.

각 연구개발기관이 2024년 교부받은 예산 275억 9,100만원에 2024년 매칭자금 88억 5,900만원 및 전년도 이월액 11억 800만원을 합한 교부현액 375억 5,800만원 중 319억 8,600만원이 집행(최종집행률 85.2%)되고 5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음.

16) 일반회계-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1337-303)(우주항공산업국)

[2024년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기관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매칭 (D)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27,591	27,591	27,591	1,108	8,859	37,558	31,986	5,572	-	85.2

주) 사업시행주체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개발성과가 추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제안요구서에는 목표체계 및 성과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예정인 위성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활용 계획]

구분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개발일정)	연계 대상(안) (중점기술 적용시점)
발사체		공통격벽 추진제 탱크	엔디티엔지니어링(주) ('21.6.~'26.12.)	민간 소형발사체 및 공공목적의 중형발사체 (체계적용 논의중, 민간기업과 MoU 체결('24))
		에비오닉스 통합 기술	단암시스템즈(주) ('22.3.~'27.12.)	
		단간 연결 엄빌리칼	한양이엔지(주) ('22.3.~'27.12.)	
위성	본체	저장성 이원추진제 추력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6.~'25.12.)	천리안위성 5호 ('25 착수) (체계연계 선정 검토 중)
		200mN급 고추력 전기추진시스템	에이피위성주식회사 ('21.6.~'26.12.)	천리안위성 6호 (예타기획 연구 중, 활용 가능성 검토)
		고속 고기동 위성의	엘아이지엑스원(주)	차세대중형위성 5호 ('27) 이후 위성

구분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개발일정)	연계 대상(안) (중점기술 적용시점)
		제어모멘트자이로	('21.6.～'27.12.)	(국가계획에 따른 활용 가능 체계 검토 중)
		실용급 위성 다중 광학머리 별추적기	㈜쎄트렉아이 ('21.6.～'25.6.)	천리안 위성 5호 ('25 착수) (체계연계 선정 검토 중)
		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두시텍 ('21.6.～'24.12.)	천리안 위성 5호 ('25 착수) (체계연계 선정 검토 중)
		실용위성급 광학형 자이로	㈜파이버프로 ('21.6.～'25.12.)	천리안 위성 3호 ('27) 이후 위성 (국가계획에 따른 활용 가능 체계 검토 중)
		ASIC 기반 멀티코어 컨트롤러	제이엘텍코오퍼레이션 ('23.6.～'28.12.)	기술검증 플랫폼 (필요성 요청 중)
	탑재체	전자광학탑재체용 구동부	㈜져스텍 ('21.6.～'25.11.)	천리안 위성 6호 (예타기획 연구 중, 활용 가능성 검토)
		2차원 다채널 적외선 검출기	아이쓰리시스템 ('21.6.～'26.12.)	정지궤도 조기경보위성, 저궤도 정찰위성 등 활용 가능 체계 검토 중
		Ka 밴드 송신기 및 Ka 밴드 능동형 어레이 안테나	루미르 주식회사 ('21.6.～'25.11.)	다목적실용위성 9호 ('31년 착수) (선행 준비연구 진행 중)
		항법위성용 코드/메시지 생성기	㈜엘아이지넥스원 ('23.6.～'26.12.)	KPS ('27 발사) (체계연계 선정 검토 중)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준광학 안테나시스템 및 저잡음수신기	'26년 선정예정	차세대중형위성 5호 ('27) 이후 위성 (국가계획에 따른 활용 가능 체계 검토 중)
		SAR 탑재체용 디지털 빔포밍 기술	'26년 선정예정	차세대중형위성 4호 ('25) 이후 위성 (국가계획에 따른 활용 가능 체계 검토 중)

자료: 우주항공청

그런데 동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게 되므로, 추후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 협상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견해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계되는 다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동 사업의 목적인 우주전략기술 자립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약서에 기술료 과다 요구 방지 또는 기업 폐업 시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우주항공청은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운영비가 매년 4억원 이상 이월되고 있고, 일부 예산이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으므로, 향후 이월액 및 인건비 등 운영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각 과제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단 개요>

· 연구개발기간: '21.3~'30.12
· 인력규모: 42명(항우연 내 전문인력 31명* 포함)
  * 중점기술개발 세부과제 및 체계연계 지원을 위해 위성연구소(25명), 발사체연구소(5명), KPS개발사업본부(1명)참여연구원으로 진행중
· 지원 예산액 : 총 160억 2,000만원
· 수행업무 :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운영관리지침 제6조
  1. 사업의 세부과제 기획, 공고, 선정, 정산지원
  2.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안요구서(RFP) 제시
  3. 과제별로 도출된 기술들의 통합 관리 및 종합 실증·시현
  4.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
  5. 우주분야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6. 사업성과에 대한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연계
  7.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지식재산권 관리
  8. 사업단 조직·인력 구성 및 운영
  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우주항공청

그런데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운영지원 사업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교부한 운영비 중 4억원 이상이 이월되고 있는데, 주로 인력 채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음.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교부액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교부액(재단→사업단)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재단→사업단)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교부액(재단→사업단)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1,820	1,893	1,475	418	2,000	2,418	1,858	560	2,100	2,660	2,191	469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은 이월된 운영비를 과제진도점검, 학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비용 등 과제관리에 활용하였는데, 차년도 예산에도 과제관리를 위한 필요금액이 반영되어 있었으므로,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인력 채용이 지연되어 활용하지 못한 인건비는 기간이 도과했기에 불용 또는 반납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예산만큼 감액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

그렇게 하지 않고 잔여 인건비를 사업운영비로 활용하게 되면, 사업단이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인력 채용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부풀려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월 1일에 사업단운영비 내역사업 예산액 2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내역조정을 거쳐 위성중점기술개발 내역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비로 지원하기도 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 등 운영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내역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4.1.1.)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1337-303)	360-05 ※사업단 운영비	15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1337-303)	360-05 ※위성중점기술개발	세부과제 연구개발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제10회 사업추진위원회 '23.12.26.)

자료: 우주항공청

6.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등

가. 개 요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은 자체중량 150kg을 초과하는 특수목적(군사·재난·의료 등)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8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17]

[2024년도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3,850	3,850	-	-	3,850	3,85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원주시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 3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기관으로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시설 및 장비 구축 업무를 수행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3월에 38억 5,0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교부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관리비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37억 4,000만원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교부하였음.[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24년 교부받은 국비 지원액 37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3,600만원을 더한 교부현액 41억 7,600만원 중 9억 8,100만원이 집행(최종집행률 23.5%)되고 31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음.

17) 일반회계-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1339-301)(우주항공산업국)

18)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사업 이관은 2024년 10월에 이루어졌음.

지방비의 경우 2024년 6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8억 2,500만원을 더한 교부현액 100억 7,500만원 중 3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97억 7,300만원은 이월되었음.

[2024년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C)	교부 현액 (E= B+C+D)	최종 집행액 (F)	이월액	불용액	최종 집행률 (F/E)
국비	3,740	436	4,176	981	3,195	-	23.5
지방비	6,250	3,825	10,075	302	9,773	-	3

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최종집행률은 2024.12.31. 기준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한 시험평가센터 개소 일정이 상당 기간 연기되었음에도 출연금을 모두 교부하여 교부한 출연금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4년 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시험장비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1월 기반공사 진행 중 건축 예정부지에서 암반 구간이 발견되면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2024년 3월에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음.

부지가 변경되면서 이에 맞추어 건축설계 변경(2024년 4월 ~ 2024년 9월)이 이루어졌고 2024년 10월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음. 그런데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사업지연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출연금을 모두 교부하였고, 교부한 출연금 대부분(76.5%)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건축부지 변경에 따른 건축일정 수정 현황]

내용	당초계획	수정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2022년 11월 ~ 2023년 8월	(좌동)
건축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	2023년 9월 ~ 12월	(좌동)
건축부지 변경	-	2024년 1월 ~ 3월
건축설계 변경	-	2024년 4월 ~ 9월
건축공사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2024년 10월 ~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이 사업을 통하여 구축할 예정인 시험센터 및 시험장비는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이므로, 우주항공청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프라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항공청은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될 예정인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는 구축 이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할 계획으로, 우주항공청은 시험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 이후 운영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추진 계획은 수립 중이라는 입장임.

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수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등을 통해 센터 운영비용을 확보할 계획이고, 운영 실적 등의 관리 방안에 관하여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다만 우주항공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시험평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19)20)]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9)「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 · 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 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0)「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종료):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매몰비용 재발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은 고중량 화물 탑재 및 장거리 ·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중형 드론 개발로 화물차에 의한 육상 물류 배송 대비 공중을 활용한 고속 배송으로 운송시간 절약을 통해 물류시장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5억 7,300만원 전액이 불용(집행률 0%)되었음.[21)]

[2024년도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2,573	2,573	-	-	2,573	-	-	2,573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부처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교부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2024년 4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에 대한 단계평가위원회’ 결과 ‘중단(성실)’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음.[22)]

---

21) 일반회계-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1733-306)(항공혁신부문)

2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4(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정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의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목표 달성이 불가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몰비용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은 2021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카고드론의 기본·상세설계, 제작 및 구성품 시험을 수행한 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연구개발을 통하여 비행체/지상체 총조립 및 통합시험을 수행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1단계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상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한 성능시험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고(2022년 1월~2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엔진이 개발될 경우 이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검토하였음.

그러나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엔진은 개발되지 않았고, 이에 2단계 연구비용 및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단계평가 결과 2024년 예산이 삭감된 점이나 관련 표준과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저조한 점 등을 이유로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이 종료되었음.[23)]

[사업 수행 중 엔진활용 방안 수정 경과]

일자	엔진 활용 방안	변경사유
제안 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 예정인 150kW급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를 계획, 확보 불가 시 해당 기업의 NEXO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하여 부분 성능 구현	
2022년 5월	NEXO 수소연료전지 성능부족 식별, 수소연료전지 Case Study 및 업체 협의를 통한 대안 물색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 지연 확인 및 NEX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성능시험 수행 결과 목표한 요구도 만족이 불가함을 확인
2022년 6~10월	체계 요구사양을 충족하기 위하여 드론에 최적화된 경량 수소연료전지 직병렬연결 '개발'로 연구개발 방향 변경	대안 물색 결과 활용 가능한 연료전지가 부재하여 직접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함

23) 자동비행과 원격조정 비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반 VTOL 방식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 개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단계평가 종합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상용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처음부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개발목표를 조정하였다면, 과제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정부출연금 총 160억 7,300만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단계/연도	1단계			2단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출연금	5,524	5,754	4,795	- (2,573)	-	16,073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함

특히 동 사업의 과제지원 공고서의 지원대상 분야 중 국비가 지원되는 기술개발 분야에는 '카고 드론 운용시간 증대를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수소연료전지 확보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24]

둘째, 우주항공청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의 1단계 수행 과정에서 구축된 UAM실증진흥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국비 지원을 통하여 구축된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 사업은 카고드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UAM[25]실증진흥센터를 구축하여 필요한 성능시험이나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24) 2021년도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문 및 품목요약서를 참고함.(아래는 공고문에서 해당 부분 발췌)

1-2. 지원 대상 분야
○ (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중형 카고 드론 기술개발
- 탑재중량 200kg급, 최대속도 100km/h급 카고 드론 시제기 개발
- 카고 드론 운용시간 증대를 위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 (기반조성) 카고 드론 실증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지자체 매칭)
- 카고 드론 시험장비 및 시뮬레이션 등 유사 실증 기반구축
- 기체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기업의 산업화 지원

25)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 항공 교통 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도심 교통체계를 뜻함.

〈UAM실증진흥센터 개요〉
・위 치 : 광주 북구 삼소로 270번길 25(광주 북구 월출동 987)
・건축규모 : 1개동, 지상 2층(부지 5,313m2, 연면적 2,308.18m2)
・건축기간 : 2022.02. ~ 2023. 11.(기본/실시설계 용역 기간 포함)
・소유 및 운영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기 능 : 미래항공모빌리티 新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집적화 등 컨트롤타워 역할

자료 : 우주항공청

그에 따라 1단계(2021년 ~ 2023년)에서 UAM실증진흥센터 및 실증장비를 구축하고, 2단계(2024년 ~ 2025년)에서는 추가 실증장비 구축 및 센터운영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 이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UAM실증진흥센터 구축 및 일부 실증장비 구축만 완료되었음.

이후 UAM실증진흥센터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UAM실증진흥센터에 구축된 시험장비 12종 중 10종이 국비 지원을 통해 구축한 장비임에도 우주항공청은 해당 장비의 활용현황이나 실적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이 종료(2024년 5월 20일)된 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았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UAM실증진흥센터에 구축된 장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방안이 별도로 검토되거나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UAM실증진흥센터에 구축된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활용 성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나,[26]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전담 부처로서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7조제1항・제5항[27]에 근거하여, 장비 활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6)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3조(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성과를 매년 점검할 수 있으며, 공동활용 성과가 우수한 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대상 선정 시 동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8.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은 소형발사체 개발에 도전하는 민간기업이 단계적 경쟁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인증시제급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6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8)]

[2024년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형발사체개발 역량지원	2,600	2,600	-	-	2,600	2,600	-	-	4,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3단계(1단계 기본설계 → 2단계 상세설계 및 일부 부품 제작 → 3단계 QM(Qualification Model, 인증모델)급 상단 엔진 제작 및 연소시험·평가)로 이루어진 경쟁형 R&D 사업[29)]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개 기업에 대하여 1단계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2개 기업에 대하여 2단계 지원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개 기업에 대하여 3단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구조표]

[1단계] ‘22~’ 23		[2단계] ‘24~’ 25		[3단계] ‘26~’ 27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업체 선정 엔진 SDR 수행 및 평가	엔진 PDR 수행 및 평가	엔진 CDR 및 핵심 부품 제작	핵심 부품 제작 시험	엔진 조합체 제작 시험	엔진 총조립 및 연소시험
3개 기업 지원		2개 기업 지원		1개 기업 지원	

28) 일반회계-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1433-302)(우주수송부문)

29)「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이 사업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단계평가결과 탈락한 기업이 자체예산으로 후속 단계 개발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음.[30]

나. 검토의견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2024년에 절반가량으로 축소되면서 연구개발 목표 또한 축소되거나 연기되었는데, 우주항공청은 이로 인하여 최종 목표달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4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55억원) 대비 29억원 감액된 26억원만 편성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규모를 과제당 21억원에서 11억원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국비지원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연구개발 목표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체투자 규모 확대를 통하여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였음.[31]

그러나 2024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금은 확대되지 않았고, 결국 2024년 11월에 연구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연구목표 일부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였음.[32]

---

30) 실제로 1단계에서 탈락한 기업 중 하나는 자체투자를 통해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음.

31)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 2024년도 추진계획」 4쪽을 참고함.(아래는 해당 부분 발췌)

○ **정부예산 및 시험설비 지원계획의 변경**을 고려하여 **과제별 정부 지원을 조정**하되, 기업의 자체투자 확대로 **'24년도 연구개발 목표는 유지**

주관연구개발기관	'24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당초계획	반영예산	증감
퍼스텍에어로스페이스	21	11	△10 (△47.6%)
이노스페이스	21	11	△10 (△47.6%)
항공우주연구원	13	4	△9 (△69.2%)
총계	**55**	**26**	**△29 (△52.7%)**

32)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기관의 투자 확대는 해당 협약과제에 직접 대응되는 기관부담금 확대가 아닌, 설비 개선 등 기관 차원의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임.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2024년도 연구내용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연구 내용	엔진시스템 및 구성품 규격 확정 및 **상세설계 수행**	**4차년도 수행**	구성품 규격 확정 및 상세설계 검토 일정 조정
	일부 엔진 구성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일부 엔진 구성품에 대한 **초도품 제작** 및 시험	엔진 구성품 초도품 제작 및 기능 확인 시험

자료 : 우주항공청

이후 2025년 국비지원액은 1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당초 지원 규모였던 30억원에 비하여 작은 규모로 2025년에는 일부 연구개발 목표가 삭제되거나 3단계 추진으로 연기되었음.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 2025년도 연구내용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연구 내용	엔진 시스템 실물 형상 목업 제작	엔진 시스템 실물 형상 목업 제작 (**삭제**)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개발비 운용계획 변경
	엔진 시스템 목업을 활용한 기능 시험 수행	엔진 시스템 목업을 활용한 기능 시험 수행 (**삭제**)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개발비 운용계획 변경
	4차년도 종료 전 엔진 핵심 부품 제작 및 단품 성능시험에 대한 평가 진행	4차년도 종료 전 엔진 핵심 부품 제작 및 단품 성능시험에 대한 평가 진행 **(3단계 진행)**	예산 감액으로 기능 시험 및 성능시험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 가능

자료 : 우주항공청

이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 경쟁형 R&D 사업으로 2024년 및 2025년에 2단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감액으로 인하여 2단계에서 달성해야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단계평가도 기능시험 및 성능시험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임.

그런데 이 사업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상단 QM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계평가를 통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목표 달성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구 실패로 인한 국가예산과 연구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와 같이 단계목표를 하향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2024년 및 2025년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2단계 연구개발 목표 및 단계평가 범위 축소로 인하여 최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는 없는지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는 개발·제작 완료된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조기에 우주임무 수행에 투입하기 위한 대체발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0억원 중 24억 4,700만원이 집행(집행률 40.8%)되고 3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33)]

[2024년도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19,126	19,126	-	-	19,126	15,573	-	3,553	18,974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6,000	6,000	-	-	6,000	2,447	-	3,553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3) 일반회계-차세대중형위성개발(R&D)(1533-303)(인공위성부문)

나. 검토의견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내역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률이 8.2% 수준에 머무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우주항공청은 향후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는 당초 러시아의 발사업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른 발사업체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체발사 용역업체 제안서 접수 및 환경조건 검토를 거쳐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고,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협상을 거쳐 2023년 11월 러시아 발사업체와 종결합의 및 새로운 대체발사 용역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음.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사업 추진 경과]

추진내용	일정
본체 조립 완료	2019년 12월
선적전검토회의수행 완료	2021년 1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2022년 2월 ※당초 2022년 하반기 발사예정
대체 발사업체 입찰의향서 접수	2022년 5월
러-우 사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수립	2022년 7월
대체발사체선정·평가 계획(안) 수립	2022년 12월
대체발사 용역업체 제안서 접수 및 환경조건 검토	2023년 1월 ~ 7월
대체발사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완료	2023년 7월
우선협상대상업체 협상(기술 및 계약조건)	2023년 7월 ~ 11월
러시아 발사업체 종결합의 완료 및 대체발사 용역업체 계약	2023년 11월

자료 : 우주항공청

이와 같은 사업추진 경과에 비춰볼 때, 2023년 7월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거치는 중에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2024.9.1.)되었으므로, 예산안 제출 전에 차년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예산액 60억원 중 35억 5,300만원(약 59.2%)이 불용된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34)]

34)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불용액 규모가 2024년 대체발사 예산대비 59.2% 수준이지만, 대체발사에 소요된 전체예산(2023년 및 2024년 예산의 합)인 116억 100만원과 비교하면 30.6% 수준으로, 2024년 예산은 환율변동 등 변수를 고려하여 여유있게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교부된 예산 24억 4,700만원 중 4억 9,000만원만 집행되고 19억 5,700만원은 이월되었는데, 이는 발사시점이 2026년으로 예정되면서 그에 수반하는 대체발사 용역 잔액 대금 및 그 부수비용이 이월된 것임.

결과적으로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액 60억원 중 35억 5,300만원(약 59.2%)이 불용되었고, 집행된 24억 4,700만원도 최종집행단계에서는 19억 5,700만원이 이월되어 사실상 4억 9,000만원(60억원의 약 8.2%)만 연내 활용되었음.

[2024년 차세대중형위성 2호 대체발사 사업 최종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기관			
본예산 (A)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최종 집행액 (B)	이월액	최종 집행률 (B/A)
6,000	2,447	3,553	2,447	490	1,957	8.2

주) 2024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만 작성한 것임
자료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2023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구체적인 발사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발사시점이 2025년 하반기로 결정되었다가 다시 2024년 11월에 2026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해외 발사업체의 발사 일정 변경에 따라 발사 시점이 변동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확한 발사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가능성을 파악하여 출연금을 교부했어야 하는 만큼, 향후에는 불용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사전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률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시정요구 8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3건·제도개선 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3	4	-	8
예비비	-	-	-	-	-	-	-
합계	-	-	1	3	4	-	8

우주항공청은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 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0%)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	6	75.0	2
예비비	-	-	-	-
합계	8	6	75.0	2